

78-6460000-000415-01

[illegible]

농민운동



[illegible]

윤수종

목 차

해방직후 전남지역의 농민운동	05
1. 머리말	05
1) 8.15 직후의 자생적인 농민운동	05
2) 10월항쟁과 양곡수집반대 투쟁	06
3) 농지개혁과 토지요구	06
2. 전남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농민조직	07
1) 전남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	07
2) 전남지역의 농민조직	11
3. 소작쟁의(소작료 인하 및 불납, 소작권이동반대)	15
4. 양곡공출반대투쟁	19
1) 1946년 추수봉기	19
2) 1947년 양곡공출반대투쟁	25
5. 토지회수(탈환)운동과 농지개혁	30
1) 하의도의 소작료거부투쟁과 농지탈환투쟁	31
2) 나주 공삼면(영산강유역) 농지탈환투쟁	33
3) 농지개혁	35
6. 결론	40
참고문헌	42
 1970-80년대 전남지역 농민운동	46
I. 전국 농민운동 : 농민운동의 성장과 전농 결성	46
1. 1970년대 농민운동	46
1) 농민교육 및 농민운동조직의 발전	46
2) 농민운동의 새로운 전개	48
2. 1980년대 농민운동	49
1) 농민운동의 재활성화	49
2) 농민운동의 대중적 전개	50
3. 농민운동조직의 성장과 통일	53

1) 농민운동조직의 성장	53
2) 농민운동조직의 통일	55
II. 1970-80년대 전남지역 농민운동	57
1. 1970년대 농민운동	57
1) 가톨릭농민회의 현장활동	57
2) 전남기독교농민회	64
3) YMCA 농촌사업	68
2. 1980년대 농민운동	71
1) 농민운동의 재활성화(1980-1984)	71
2) 농민운동의 대중적 전개(1985-1989)	87
3. 여성농민들의 투쟁과 조직화	187
4. 전남농민운동조직의 통일	199
참고문헌	206

1990년대 전남지역 농민운동 209

1. 머리말	209
2. 1990년대 전농의 농민운동	211
1) UR협상 저지투쟁	212
2) 농정개혁투쟁	213
3. 전농(광주전남도연맹과 각군농민회) 활동	214
4.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 연합회)의 활동	248
5. 맺는말	259
참고문헌	260

해방직후 전남지역의 농민운동

1. 머리말

1) 8.15 직후의 자생적인 농민운동

8.15 직후 시작된 농민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생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의 농민운동은 정치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국가수립운동으로 새로이 계승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주소작관계를 개혁하여 농업·농민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려는 농민들의 자주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었다. 특히 소작농민들은 소작료불납, 일본인소유지 점유관리 등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생적인 움직임은 건국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점차 농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농민조직 결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농민들의 토지요구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자극받아 더욱 활발해졌다. 농민대중의 자발적인 역량표출을 배경으로 출현한 농민운동조직은 농민위원회, 농민조합, 농민연맹, 노농연맹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농민운동은 1945년 12월에 통일된 전국조직인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의 결성으로 이어진다. 전농은 188개의 군 단위 조직(면 단위 1,745개, 마을 단위 2,588개)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가입한 조합원도 약 330만 명에 이르렀다. 전농은 농업·농민문제의 본질이 일제와 민족반역자에 의해 유지되어 온 반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전농은 밖으로는 식민지 잔재 청산을 통해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에 참여하면서, 안으로는 토지혁명에서의 최종적 승리를 위해 빈농을 중심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해나가려고 하였다. 전농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향해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운동에 적극 뛰어들었으나, 미군정의 전농에 대한 검거선봉과 우익조직들의 공격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¹⁾

1) 이혜숙, 「미군정기 농민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문학과 지성사, 1988), 229-278쪽.

2) 10월항쟁과 양곡수집반대 투쟁

1946년 6월에는 대홍수가, 그리고 7-8월에는 농촌의 식량부족이 농민생활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식민지하에서조차 없었던 하곡수집이란 제도를 통해, 미군정은 전국의 식량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하곡수집기간 동안 각 정미소나 심지어 가정에서의 도정조차 금지하였다. 심지어 이 과정에 친일경찰까지 동원하였다.

미군정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농민들은 양곡(추곡)수집 반대투쟁으로 나아갔고, 양곡수집에 대비하여 미리 벼를 베는 등의 합법적·반합법적인 투쟁을 계속하였다. 특히 강제적인 양곡수집은 농민조합과 전농으로 조직화되어 있던 농민대중을 적극적인 항쟁에 나서게 한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

10월 항쟁은 1946년 10월 1일의 대구봉기를 시작으로 곧바로 경북지역의 항쟁으로 점화되었으며, 이는 전국의 각 군으로 전파되었다. 처음 대구봉기에서 경찰의 탄압을 피해 인근 농촌지역으로 진출한 좌익단체 성원들과 지역 인민위원회 및 농민조합조직,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의 농민들은 일제히 집회를 열고 농기구로 무장한 뒤 경찰서·면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을 접수하려 시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지주부호·우익인사·경찰·관리의 집을 공격하여 이들을 살해하였으며, 나아가 신한공사와 양곡창고를 습격하여 양곡수집기록을 불태우고 쌀을 분배하였다. 이에 대해 군정청은 경찰과 우익단체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검거와 색출을 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은 진압작전을 편 결과 봉기는 곧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10월항쟁은 10월 7-8일경부터는 경남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쌀을 요구하는 마산·통영 지역의 시위가 대중적인 항쟁으로 전화하자, 진주·하동·의령 등지에서는 대중시위와 경찰서 습격이 잇달았다. 이어 1946년 10월 중순부터는 경기도의 개풍·광주와 황해도의 연안·백천, 그리고 충청도의 예산 등의 지역에서 치열한 항쟁이 벌어졌다.

전국 각지의 항쟁이 강원도 횡성·목호에서의 산발적인 소요양상 외에는 거의 진압되어가던 10월 말에 이르러, 전남지역의 농민항쟁이 대규모로 폭발했다.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배고픔을 호소하는 시위를 출발점으로 시작된 전남지역의 농민항쟁은 민중들의 시위에 미군정과 경찰이 발포하는 양상이 무려 50여 차례나 반복될 정도로 치열하였다. 그 후 이 지역의 항쟁은 전북의 남원·순창에서의 산발적인 소요를 끝으로 다시 잠잠해지기는 하였지만, 일제가 물러간 이후 식량의 안정적 획득을 바랬던 농민들은 미군정의 양곡수집에 대하여 이처럼 거칠게 항의하였다.

3) 농지개혁과 토지요구

10월항쟁의 패배로 변혁운동의 세력기반이 크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이를 틈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민당과 우익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이 그들의 정치적·계급적 거점을

실질적으로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토지를 둘러싼 농민의 투쟁은 날로 거세져갔다. 소작농민들은 지주의 소작지 방매에 따른 소작권이동에 대해 항의하고 소작료불납동맹 등을 결성하며 신한공사의 소작료 징수에 항의하였다. 미군정은 이제 직접 나서서 농지개혁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혁명을 예방하는 길은 그것 밖에 없었던 것이다.

10월항쟁 이후 합법활동을 계속해 온 전농은 ‘무상몰수·무상분배’ 안을 가지고 농민들의 토지요구를 제기하였다. 이 당시 전농은 정치적인 투쟁 끝에 비록 합법적인 조직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그 활동이 전면적으로 봉쇄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불법단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한 우익진영은 1947년 8월 30-31일에 반공청년단체들을 모체로 한 ‘대한독립촉성 농민총동맹(농총)’을 결성하였다. 이 관제단체는 앞장서서 ‘유상몰수·유상분배’의 토지개혁안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5·10선거’에 농민을 동원하기 위해 선전 계몽하는 일을 떠맡았다.

한편, 전농과 그 산하의 농민위원회 조직이 대거 파괴되어가자,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을 예견한 지주들의 토지방매가 이루어졌다. 미군정은 1948년 3월부터 귀속농지에 대한 분배를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1948년 9월부터 농지개혁법 제정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21일에야 국회를 통과하여, 1950년에 들어서 비로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농지개혁을 지향하는 농민투쟁은 점차 정치적인 색채를 띠어갔고 마침내는 본격적인 유격투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농민운동 상황과 견주어 전남지역의 농민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2. 전남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농민조직

1) 전남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

식민지시대 말기로 내려오면서 가속된 일제의 침탈에 의해 전남지역사회는 더욱 몰락해 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8·15를 맞게 되었다. 8·15는 전남사회에 일제의 지배와 폭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왔지만, 이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안겨주었다.

해방(8·15) 이전인 1943년 전남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총 4만 5천여(451,483)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일본인은 98.5%를 차지하여 외국인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일본인들이 해방과 더불어 4만 4천여 명이 퇴각하였다. 조선 거주 일본인이 주로 지배관료이거나 지주·자본가였던 점에서 관료의 임용, 일본인 소유 재산의 분배 등의 문제를 남겼다. 또한 1946년 말에 전남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5만 5천여명의 귀환동포 때문이었다. 외국인(주로 일본인)이 빠져 나갔어도 21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해방직후 전남지역은 지배자였던 일본인 관료·지주·자본가 등의 퇴각과 해외동포의 귀환 등으로 사회구조의 전반적 재편성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었다.²⁾

전남사회 각 분야의 사회구조 재편성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있는 부분은 농촌사회의 재편성이었다. 전남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분야가 주종을 차지하는 농촌사회였으며, 1946년말 전남지역의 전체 호수(573,283호) 중에서 농업호수가 377,804호(전업: 328,853, 겸업: 48,951)로 65.9%(전업 57.4%, 겸업 8.5%)³⁾를 차지하였다. 전남지역 2부 21개 군 중에서 목포부와 광주부를 제외한 지역의 인구의 6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남지역의 농산, 임산, 수산, 공산 산업부문의 생산총액에서 농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컸다(1946년 60.1%).

그렇다면 전남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어떠하였을까? 먼저 1946년말 경지면적 중에서 자작지면적과 소작지면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경지면적의 자작지면적과 소작지면적 비교(1946년말)⁴⁾

총경지	3,208,646(논 2,025,968/밭 1,182,678)	100%
자작지	1,254,044(논 683,447/ 밭 570,597)	39.1%
소작지	1,954,604(논 1,342,521/밭 612,083)	60.9%

1946년말 전남지역의 경지면적 중에서 자작지는 39.1%이고, 소작지는 60.9%였다. 특히 논·소작지 비율이 높아 66.3%에 달했다.

다음으로 전남지역 농민가구의 자소작별 비율을 보자. 〈표-2〉에서 보듯이, 1946년 전남지역 농민구성은 자작농 13.9%, 자소작농 18.3%, 소자작농 19.8%, 순소작농 42.9%로, 소작이 주된 농가가 전체 농가의 약 63%를 차지하였다.

〈표-2〉 농민가구의 자소작 비교(1946년말)⁵⁾

구분	호수	비율
총 호 수	377,804 (전업 328,853 겸업 48,951)	100%
자작	52,661 (전업 45,001 겸업 7,660)	13.9%
자작겸소작	69,099 (전업 59,041 겸업 10,058)	18.3%
소작겸자작	74,881 (전업 64,544 겸업 10,337)	19.8%

2) 손형부, 「해방직후 전남지역의 농민운동」,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지음, 『전남사회운동사 연구』 (한울, 1992), 169~170쪽.

3) 『全羅南道勢一斑』(1948년 출간), 47~51쪽의 〈農業戶數表〉.

4) 앞의 책, 41~47쪽, 〈농업: 경지면적〉과 〈자작·소작면적〉.

5) 전라남도, 47~51쪽의 〈農業戶數表〉와 〈營農種別農業戶數〉(서기 1946년말 현재).

소작	161,992 (전업 148,782 겸업 13,210)	42.9%
기타	17,171 (전업 11,485 겸업 5,686)	4.5%

이상과 같이, 전남지역은 농민의 숫자가 인구의 66%(호수로 추정)였고 또 농업부문의 생산량이 많은 비중(60.1%)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농민의 81%가 소작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소작지를 주로 경작하는 농민이 6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순소작농이 42.9%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주민들은 대부분 고용노동자로서 농촌에서는 머슴이었다.

더욱이 전남지역은 전북지역 다음으로 일본인소유지가 많았다. 미군정은 1946년 2월 군정법령 제2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설치하고 일인 소유의 농지를 여기에 귀속시켰다. 따라서 전남지역의 일본인 토지도 여기에 귀속되었다. 1948년 2월 당시 신한공사에 점유된 전남지역 농토와 그 점유 비율은, 논이 55,068정보(전체 205,890정보, 26.75%), 밭이 17,663정보(전체 125,115정보, 14.1%)로서, 논밭 합쳐서 72,731정보(전체 331,005정보, 22%)였다. 미군정이 설치한 신한공사는 전남지역 전체 농토 중의 약 22%를 차지하였다. 미군정은 일본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의 소작농민 중에 신한공사의 소작농가로 된 숫자는 총 농가호수 412,774호 중에서 172,300호로 전체의 42%나 되었다. 1948년 3월 22일 농지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미군정은 일본인을 대신하여 전남지역에서 거대한 지주로 존재하였다.⁶⁾

이처럼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전남지역 농민들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을 비롯한 우익세력의 권력장악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좌절되어 가자 농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하고 저항하였다.

미군정하에서 농민에게 고통을 준 것은 소작지 문제와 더불어 양곡공출제(糧穀供出制)를 들 수 있다.

미군정의 농업정책 중 식량·미곡정책은 1945년 10월 5일 미곡의 자유시장에 관한 일반고시 제1호를 발표함으로써 ‘건준’ 때 조직된 식량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일제하의 배급제 폐지 및 미곡 자유판매주의를 선언하면서 출발한다. 그러나 일본으로의 미곡 밀수출, 귀환동포의 증대에 따른 수요증대, 투기꾼의 매점매석으로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미군정청은 1945년 12월 19일 미곡 소매 최고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고시 제6호로써 ‘미곡 통제’를 실시했고 1946년 1월 16일에는 식량난의 해결을 위한 농촌 쌀 강제징수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1월 25일에는 법령 제45호로써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였다.

미군정은 〈미곡수집령(米穀收集令)〉을 포고하여 1946년 2월 1일부터 1945년산 미곡을 수집하였다. 그 뒤로도 1946년 8월 12일 중앙식량행정규칙 제2호를 포고하여 1946년산 미곡을 수집하였으며, 1947년 9월 27일에는 과도입법의원(過渡立法議員)에서 제정 발표한 법률 제6호로서

6) 손형부, 앞의 글, 172~173쪽.

1947년산 미곡을 수집하였다.

전남지역과 관련된 미곡 및 하곡 수집 결과는 <표-3>, <표-4>와 같다.

<표-3> 1945~1947년산 전국 전남지방의 미곡수집 실적표 (단위:천석(千石))

연도	범위	생산예상고(1)	수집계획(2)	수집실적(3)	비율	
					1/3	2/3
1945년산	전국	12,849	5,511	681	5.3	12.4
	전남	2,433	651	110	4.5	16.9
1946년산	전국	12,047	4,295	3,532	29.6	82.9
	전남	2,176	750	653	30.0	87.1
1947년산	전국	—	5,156,000	5,004,859		97.1
	전남	—	820,000	813,848		99.2

※ 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앞의 책, I-244~245쪽에 있는 <표-7, 8-1, 2, 11>에 의거 작성함.

1) 단위가 정석(精石)임.

2) 잡곡 2,744 정석(精石)이 포함됨.

<표-5>에서 보듯이 1945년산 미곡수집 결과는 생산 예상고에 비해 수집실적은 5.3%에 그쳤으며, 수집계획에 대해서는 수집 실적이 12.4%에 그쳐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패 원인을 수집의 최적기인 1945년 11월과 12월을 놓치고 1946년 2월에 가서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⁷⁾

한편 1946년과 1947년에는 미곡수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들의 총력전, 그리고 조기공출 농가에 대한 보상 장려책 등으로 각각 82.9%, 97.1%의 실적을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1946년산 미곡공출자별 수집상황을 보면 지주미는 20.2%, 소작미는 61.4%, 일인(日人) 소작미는 18.1%, 압수미는 0.2%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작미가 높은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

이렇게 계속되는 미곡수집에도 식량난이 해결되지 못하자 1946년 10월말까지 미국산 보리 등의 양곡을 수입하나 해결하지 못하였다.⁹⁾

그리하여 하곡(夏穀)마저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다수 농민들이 큰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다. 미군정의 하곡수집은 1946년 5월 29일 포고한 중앙식량규칙 제1호 <하곡수집>에 의거 1946년산 하곡의 수집을, 두 번째로는 1947년 4월 19일 과도입법의원(過渡立法議員)에서 제정 발표한 1947년산 하곡의 수집을 단행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실적을 올렸다.

7) 조선은행조사부, 앞의 책, I-242쪽.

8) 조선은행조사부, 앞의 책, I-245쪽 있는 <표 8-2> 참조. 이동언, 「해방직후 전남지방의 농민운동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93, 37쪽에서 재인용.

9) 조선은행조사부, 앞의 책, I-249쪽에 있는 <표 9> 참조.

〈표-4〉 1946~1947년산 전국 전남지방의 하곡수집 실적표

(단위:석(石))

연도	범위	생산예상고(1)	수집계획(2)	수집실적(3)	비율	
					1/3	2/3
1946년산	전국	4,963,478	1,289,000	612,272		48.0
	전남	1,541,920	363,000	40,532		11.2
1947년산	전국	3,714,000	706,500	699,246		98.9
	전남	810,000	163,000	160,578		98.5

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앞의 책, I-248~249쪽에 있는 〈표-16, 17, 18〉에 의거 작성함.

1946년에는 대홍수에 의한 생산감수로 하곡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¹⁰⁾ 48%의 실적 밖에 올리지 못하였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수집계획의 11.2%만을 수집하였다.

전남군정청에서는 미곡수집을 통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민중들에게 현재의 상태를 홍보하고 미곡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농민들에게 미곡의 초기(早期) 공출을 장려하고자 전남식량과(全南食糧課)에서는 여수 천일고무화(靱)회사의 협력을 얻어 상으로 고무신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수집미가(收集米價)가 시장가격의 30%에도 못 미쳤기¹¹⁾ 때문에 미곡수집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1945년산 미곡수집 성적이 〈표-5〉에서 보듯이 수집계획의 16.9%에 불과하여 도시지역의 주민들의 기아 현상은 계속되어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쌀을 달라는 민중들의 요구시위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더욱이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징수와 경찰, 군인을 동원한 강제적인 양곡공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다.

2) 전남지역의 농민조직

해방직후부터 농민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였다. 농민들의 조직활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¹²⁾

전남지역에서 농민단체의 조직은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그것은 일제 식민지시대에서부터 농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에서 기인하였다. 전남의 농민조합 등 농민단체는 이미 일제하

10) 조선은행조사부, 앞의 책, I-248쪽.

11) 수집미가와 시장미가의 차이: 1946년 수집미가는 시장미가 7,200원의 29.2%인 2,100원, 1947년의 경우 수집미가는 시장미가 12,300원의 18.7%인 2,300원, 1948년의 수집미가는 시장미가 17,600원의 25%인 4,400원이었다. 농협중앙회, 『한국의 농업』, 1963, 82쪽. ; 이우재(1991: 117)에서 재인용.

12) 해방직후에 전국에서 나타났던 농민조직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농민의자발적 준조직의 형태로 이는 건준의 활동과 연결되면서 농민조직의 형태로 체계화되었다. 둘째는 일제하 농민운동의 활동가나 건준에 의해 석방된 정치사상범들이 건준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농민을 조직화한 형태이다. 셋째는 조선공산당과 직접적 연결을 갖는 사회주의자들이 농민을 조직화한 경우였다(박혜숙, 「미군정기 농민운동과 전농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366~367쪽).

1920년대 전후로부터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탄압정책에 눌려 활동이 중단되거나 조직이 해체되었다. 그런데 일제하에서 활동하였던 농민단체의 운동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해방과 더불어 기존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활동을 재개하였거나, 또는 농민조합을 새로 결성하였다.

여러 농민단체들은 이후 농민조합으로 전환하고 1945년 12월 8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하 전농)을 결성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전남 각 지역의 농민단체들이 농민조합으로 결성된 것은 대개 전농이 결성되는 1945년 12월 8일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 농민조합의 조직에 앞서 전남농민조합연맹이 형성되어 그 대표가 결정되어 있었음도 주목된다. 이것은 “전남도도는 애초에 각 부락마다 농민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면·군단위로 조직을 두었으나, 나중에 군단위 농조로 개편되었으며 도에는 연맹을 두었다”¹³⁾ 고 하는 농민조합 전남 대표 유혁의 말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농의 결성이 임박해지자 아직 농민조합으로 전환하지 않은 농민단체를 인민위원회와 도연맹에서 주도하여 농민조합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⁴⁾ 또한 전농에서는 1946년 5월 이래로 농민단체의 형식에 따른 대립이 일어나 10월 10일 전농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민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부락을 단위로 지주만을 제외한 전농민을 총집결시킬 수 있는 농민위원회로 개조하였다.

전국적으로 농민조합은 1945년 11월 중에 군단위 188개, 면단위 1,745개, 마을 단위 2,588개가 조직되었고, 가입 조합원이 약 33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남지역은 도연맹 아래 부·군·도 지부를 합쳐 14개 지부가 결성되고 면지부가 110개, 그 아래 3,109리, 부락반이 조직되어 369,414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¹⁵⁾

전남 각 군에서는 주로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각 군 농민조합이 결성되었는지를 <표-5>를 통해 살펴보자.

<표-5> 전남지역 농민조합 주요 지도자의 해방전후 활동상황

지역	성명	활동상황
무안군	김광조 강영수	공산주의자로서 무안, 목포지역 농민조합 지도, 목포상업고등학교 독립만세시위로 투옥.
영암군	조시원 유혁 최형동	영암 농민회 조직(1926) 일제시대에 소작쟁의, 소작인 상부회 조직 활동, 조선공산당 전남도 선전부위원등 활동. 곽인섭, 유근옥과 함께 농민조합 활동.

13) 전국농민조합총연맹서기국,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회의록』(조선정판사, 서울, 1946).

14) 손형부, 앞의 글, 178쪽

15)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해방연보』, 1946.

고흥군	이상곤 김감년	농민회와 인민위원회 활동. 전남운동협의회 사건 관련.
담양군	박대규 임종대	담양군 핵심당원으로 농민운동 주도. 미군정 때 구속. 성진회 사건으로 징역 1년(1931), 전남노농협의회 사건 관련. 남로당 담양군당위원장, 농민운동 주도.
영광군	조용남	인민부위원장 지냄. 농민운동 주도.
구례군	김동호 나정운	인민위원회 활동, 농민조합 활동. 인민위원회 활동, 농민조합 활동.
완도군	이사열 윤인옥	농지개량과 적산의 토지몰수 및 분배운동 주도. 전남사회운동협의회 사건 투옥, 이사열 이후 군농민운동 주도
광주부	윤석원 정후균	건준 농민부장. 항일운동가, 전남사회운동협의회 사건 투옥, 농민조합 활동.
함평군	이 광	군내 노동, 농민운동 지도, 건준 총무부장, 농민조합 결성.
나주군	나재기 김창룡	농민위원회위원장으로서 토지운동 전개. 신간회 나주지회장, 건준 위원장, 일제시대에 소작료 투쟁.
보성군	김용규	목포상고 재학 중 1940년 항일사건에 연루되어 옥고, 울어면 농민조합 결성.
광산군	조철성 이강목	농민조합 의장 농민조합 부의장
순천군	정태중 정흥모	인민위원회 활동, 군농민조합 대표. 인민위원회 활동, 순천읍 농민조합 대표.
곡성군	정동화	조선공산당 조선국내 공작위원, 전남청년연맹위원(1929).
광양군	정진무 박영재 정용재	3인 모두 일제시대부터 농민운동 주도, 농민조합 결성, 인민위원회 활동
해남군	오장록	공산주의자, 농민위원회 조직 활동.
진도군	곽재필	진도청년동맹(1932), 진도농민조합 결성(1934)

1.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1(실천문화사, 1991), 77~149쪽.
 2. 김점숙, 「1930년대 전남지방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 손형부, 「해방직후 전남지역 농민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한울, 1992).
 3. 『독립운동사 자료집』 14권(대중투쟁사 자료집), pp. 218~220, 246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 * 이동연(1993, 27쪽)에서 재인용.

〈표-5〉에서 보듯이 해방후 전남지역에 조직된 농민조합(농민위원회)은 대부분 일제치하에서 농민운동을 주도해온 인물들이나 해방후 건준(建準), 인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농민운동을 주도해온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에 의해 각 군에서 조직된 농민조합, 농민회, 농민위원회

등이 전남도연맹을 조직하고 1945년 12월 8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식에 거의 모든 군이 군 대표를 파견하게 된다(〈표-6〉).

〈표-6〉 전농결성대회에 참가한 전라남도 대의원 명부

지역	참가대의원 이름	인원수
도연맹	유혁(柳赫), 조롱남(趙龍楠), 태형옥(太衡玉)	3
화순군	주승석(朱承錫), 공준(孔濬) 송세진(宋業振)	3
해남군	윤인석(尹仁錫), 임건호(林建鎬), 김신휘(金信輝택?)	3
무안군	정종섭(鄭宗燮), 강영수(姜永秀)	2
광주부	정후균(鄭後均)	1
광주군	장일봉(張一峰)	1
광양군	박춘성(朴春晟), 김영선(金營善), 최영근(崔永根)	3
완도군	윤인옥(尹仁玉), 차용헌(車用憲), 곽사길(郭士吉)	3
영암군	최형동(崔亨東), 객인섭(郭仁燮), 류근옥(柳根旭)	3
진도군	곽재필(郭在必), 이철호(李喆鎬)	2
함평군	강두원(姜斗遠達?), 진국진(陳國振), 박종호(朴鐘胡)	3
여수군	김서옥(金瑞玉), 김경영(金京永), 서정일(徐廷一)	3
강진군	윤순용(尹淳用), 이상묵(李相默)	2
영광군	정태송(鄭泰松), 김은환(金殷煥), 김영민(金寧珉)	3
광산군	안녹익(安錄翊), 서재호(徐在皓), 장현근(張鉉近)	3
장성군	김무염(金武炎), 김장환(金章煥), 김홍빈(金洪彬)	3
나주군	이기득(李气得), 나석현(羅碩鉉), 이용근(李龍根)	3
순천군	서정섭(徐正燮)	1
곡성군	정동화(鄭東華), 한덕명(韓德明), 윤일섭(尹日燮)	3
보성군	손진흥(孫珍興)	1
구례군	선동기(宣東基), 정경렬(鄭慶烈), 구한영(具漢英)	3

고흥군	김감년(金甘年), 송석용(宋錫鏞)	2
담양군	임종대(林鐘大), 고재국(高在國), 손영석(孫泳錫)	3
장흥군	장희진(張禧鎭), 정이섭(鄭二燮)	2
총계	도연맹과 1부 22군 지역	59

자료 :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 회의록」, 김남식, 『남로당 연구』 3(자료편)(돌베개, 1988), 144쪽.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에서는 도연맹 대표를 비롯하여 제주, 목포를 제외하고 전군에서 농민대표를 파견하였다.

농민조합을 결성하여 그 지역의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일제치하 민족독립운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사람들이었고 해방직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과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었다.

3. 소작쟁의(소작료 인하 및 불납, 소작권이동반대)

해방을 맞이한 농민들은 일제하에서 지주에 의해 고율고액의 소작료를 징수당하여 피폐해진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농민들은 농민조합 등의 조직에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지주와 그 대변인인 친일파 관리들을 압박하였다.¹⁶⁾

농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소작료불납 행동에 나서거나 단체 등을 만들어 불납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 전남지역에서 “처음에는 소작료 불납운동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극좌적 경향이요 과오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고쳐서 3.7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도연맹에 있는 지도자의 노력이 있었으나 말단의 농민은 오히려 불평이 많았다.”¹⁷⁾는 기록에서 보듯이 해방 직후 농민들은 소작료를 내는 것조차 불만이었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북지역 다음으로 동척 등 일본인 소유지가 많았던 탓에 소작료불납의 움직임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또는 일본인회사)이 남기고 간 농지에 대해서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농민들은 신한공사가 일제 때 보다는 완화된 3.1제 비율이지만 소작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였다. 그리고 3.1제라고 하지만 하곡소작료까지 받음으로써 소작인들의 불만은

16) 그 사례로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전남대표로 참가하여 전남 지방 정세를 보고한 최인식에 의하면 “전남에 있어서 정치 사상범 검거의 장본인으로 많은 혁명 동지를 박해한 광주 노경시, 목포 김계명 두 사람은 청년지사의 손에 총살 당하고 말았고 소작료 3.7제를 부인하고 5.5제를 고집하던 오동복 지주는 농민들에게 습격을 당하였다.” 이우재, 『한국농민운동사』 (한울, 1986), 148~149쪽.

17) 김남식, 앞의 책, 173쪽.

더욱 컸다.

또한 일반인 소작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소작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종 선물을 지주에게 바쳤으며 지주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3.1제 실시 규정에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구속력이 약했기 때문에, 지주들은 소작지와 관련된 각종 권리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지주들은 북한에서의 토지개혁과 미군정의 농지개혁 의지에 농지개혁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토지를 미리 방매하거나 소작권을 박탈하여 자경하거나 가족, 친족에게 경작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소작료 징수, 소작권이동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어 갔다. 해방후 전남지역의 지주-소작인 사이에 소작쟁의가 일제시기 보다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7〉을 보면 해방 직후 소작쟁의 건수가 1939년에 비하면 무려 3배 이상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방공간이라는 완화된 조건에서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정에 들어갔지만 조정이 안 된 것이 거의 10%에 달할 정도이다. 그만큼 갈등이 심각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7〉 1946년 소작조정 사건수와 해방 이전과의 비교

연도	신립건수	권해전 취하	권해		조정전 취하	조정	
			성립	불성립		성립	불성립
1935	1,350	456	694	197	61	78	58
1936	1,544	567	729	191	64	96	30
1937	1,803	705	826	240	84	136	9
1938	2,337	911	1,122	227	94	116	7
1939	1,758	565	912	127	39	66	12
1946	5,611	438	1,825	830	322	1,958	527

자료 : 전라남도, 『전라남도세일반』 (1948), 51~53쪽.

다시 시군 단위로 나누어서 보면, 쟁의 신립건수로는 나주가 1,200건이 넘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산, 강진이 500건이 넘으며, 여수, 구례, 순천이 300건이 넘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수로는 광산, 보성, 여수 등이 많다.

〈표-8〉 소작조정사건수(小作調停事件數)(1946년도)

부군도명	신립건수	권해전 취하	권해		조정전 취하	조정	
			성립	불성립		성립	불성립
목포	2	2	—	—	—	—	—
광주	157	36	51	70	15	25	30
광산	589	23	18	282	78	42	157
담양	90	16	40	34	15	7	12
곡성	157	7	145	5	1	3	1
구례	321	—	15	6	50	220	30
광양	146	55	84	7	—	—	—
여수	371	3	3	—	2	267	65
순천	302	35	158	37	3	31	38
고흥	28	6	7	6	4	44	1
보성	207	30	40	20	7	100	100
화순	150	2	18	130	—	18	—
장흥	203	50	83	70	—	—	—
강진	502	9	417	—	—	41	35
해남	278	16	25	11	2	224	—
영암	80	—	62	20	14	3	3
무안	81	7	33	41	5	32	4
나주	1,213	35	120	30	111	893	24
함평	242	30	82	114	—	3	13
영광	23	6	14	3	—	—	—
장성	117	45	28	22	10	—	12
완도	110	35	50	15	5	5	—
진도	242	—	220	20	—	—	2
합계	5,611	438	1,825	830	322	1,958	527

자료 : 전라남도, 『전라남도세일반』 (1948), 40~41쪽.

이러한 소작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신문에 드러난 기사들을 보면 지주의 일방적인

소작지 매매로 인한 소작권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⁸⁾ 특히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실시의 발표가 신문지상에 잇따라 보도되고, 남한에서도 미군정의 농지개혁 의지와 농민들의 토지요구에 불안감을 느낀 지주들이 임의로 소작지를 방매함으로써 일어났다.

지주의 토지매매에 대해서 담양군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지주토지매매'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례도 있었다. 담양 월산면 한 지주가 땅을 매매하려 하자, 인민위측은 '경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이 땅을 매매할 수 없다'며, 집단으로 몰려가 팔려던 지주의 논 위에다 동물을 잔뜩 부어버렸다.(광주전남현대사1, 60쪽) 이러한 일은 여러 곳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전농이 제기한 3.7제와 미군정이 실시한 3.1제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3.7제 소작료 실시를 농민운동의 당면 과제로 제기한 것은 「현정세와 우리임무」라는 박헌영의 8월테제 중 '우리의 당면 임무'에서 "소작료를 3할대7할제로 인하하고 이것을 화폐지대로 정할 것이요, 소작권계에 있어서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자!"¹⁹⁾ 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터다. 이것을 전농에서는 '당면 요구조건'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아닌 조선인 지주의 소작료는 3.7제로 하되 원칙적으로 금납으로 한다"²⁰⁾ 라고 계승하여 각 지방의 농민조직 중심으로 지주에 대한 소작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²¹⁾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최고 소작료 건>을 발표하여 3.1제 소작료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지주 계층에게 지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한국 지주와의 소작료 운동은 물론 점차 각 지방에서 농민운동을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미군정과 힘의 대결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소작제가 아무런 변화나 장애 없이 유지되었다.

어쨌든 전농은 이후 전남 각 군에서는 대부분 농민조합이나 농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작료불납을 지양(止揚)하고 지주의 3.1제 소작료에 반대하며 3.7제 소작료를 화폐로 낼 것을 지도하고 있었다.²²⁾ 3.1제는 현물납을 골자로 하고 있었고 이는 작익의 금납에 비해 실질 부담이 더 컸다. 뿐만 아니라

18) 동광신문에 난 다음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에서 지주-소작인 간에 소작답 매매로 언쟁이 시작되어 지주 김연수가 절명됨"(1947.1.25.), "나주에서는 토지분배 문제로 지주들이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쟁의가 9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먼 토지는 매매하고 가까운 토지는 지주가 자작함으로써 둘째, 귀환전재(歸還戰災)동포가 토지를 사서 자작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임 ..."(1947.4.15.), (3) "광산군(光山郡)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취급한 사건만 하여도 22건이며 그 조정이 매우 곤란한데 이 소작쟁의의 원인은 소작인의 소작권 포기 승락도 없이 매매한 것이 큰 원인임."(1947.5.30.), (4) "본도 농업경지와 발표에 의하면 본년도 도내 소작쟁의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1만 7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비하면 1만여건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원인은 작권이동(作權移動)이 주원인(主原因)임."(1947.8.23.) (5) "나주군 산포면 산제리에서 소작쟁의가 주원인이 되어 윤씨 문중 내에서 원한의 칼부림이 발생함."(1948.11.12), (6) "장흥군 안양면(安良面) 간척지 소작쟁의 확대 원인은 작권(作權)을 임의이동한 때문임."(1948.5.28.)

19)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523쪽.

20) 김남식, 『남로당연구』 3(자료편) (돌베개, 1988), 209쪽.

21) 이동언, 1993, 30쪽.

22) 여천지방 농민위원회의 경우 "...군정에 의해 규정된 소작규정을 붕괴시키기 위한 선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정책은 군정에 의해 설정된 것과 같은 농민들의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총 수확량의 1/3 대신에 30%를 지불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군정정보보고서(G-2)』 제7편 (일월서각, 1986), 90쪽.

소작료 이외에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에 대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미군정의 입장은 이를 부인하는 좌익의 3.7제보다 소작농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²³⁾ 소작료율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3.1제는 미군정과 지주의 입장으로, 3.7제는 좌익의 주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3.7제 소작료 운동이 탄압 받은 사례가 있었다.²⁴⁾

또한 신한공사 소속 농지를 소작하고 있는 소작농민들과 미군정 사이에 소작료불납으로 충돌이 일어났다. 미군정이 실시한 3.1제 소작료는 전농의 3.7제에 비해서 너무나 농민에게 불리하여 종전의 "5.5제 보다 가혹한"²⁵⁾ 것으로 인식되어 농민들의 저항은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한공사에서 실시한 하곡소작료 징수는 강제성을 넘어서 매우 폭력적이었다. 특히 하의도와 나주 공삼면 같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던 지역에서 농민들의 소작료불납의지는 강했고 그에 따라 미군정과 충돌이 더욱 격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부분 소작료 징수는 처음에 신한공사 직원이 징수하다가 농민의 저항이 완강하면 경찰, 미군을 동원하여 강제 징수하여 갔으므로 갈수록 대다수 농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적 요구를 탄압해 오는 미군정과 경찰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어갔고, 저항 방식도 서서히 폭동화 되어 간 것을 보여 준다.

4. 양곡공출반대투쟁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징수와 경찰, 군인을 동원한 강제적인 양곡공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다. 더욱이 식량난과 맞물려 대구·경북지방에서 시작된 10월 추수봉기²⁶⁾의 바람이 전남지역에까지 이어져 1946년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 지역 농민들은 농민조합, 인민위원회, 청년, 학생 조직과 연계를 맺으면서 추수봉기를 전개하였다.

1) 1946년 추수봉기

(1) 추수봉기의 전개과정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1946년 11월 농민운동 내용을 발생일과 지역별로 나타내면 <표-9>와 같다.

23) 양지은, 2000, 51쪽.

24) 순천농민조합(順天農民組合) 대표 2명이 구속당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민보』, 1945. 12. 15.

25) 『조선인민보』, 1946. 5. 30.

26)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정해구, 『10월 인민항쟁 연구』(열음사, 1988); B. Cumings,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하, 208-246쪽.; 성한표, 「9월총파업과 노동운동의 전환」,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9), 377~401쪽.; 박해숙, 앞의 논문, 390~402쪽 참조.

〈표-9〉 전남지역 1946년 11월 농민운동 일자별 · 지역별 사건내용

월일시		지역	사건내용	경찰피해		농민피해	
				사 망	부 상	사 망	부 상
10.30.	16:00	광주	광주의 식량시위에 참가하고자 화순으로부터 약2천~3천 명의 군중이 넘어옴. 광주시 위에는 한국여성조합, 광주노동조합원이 참가함.				
		화순	화순광부들은 식량부족에 화가나 집결함				
10.31.	06:00 ~ 10:00	목포	수십 명의 군중이 남교, 산형동, 대성동 파출소를 차례로 습격함. 목포역전에 중학생 2천여 명이 시위행진을 하고 경찰서를 습격. 시위 총지휘자였던 목포민청(民靑)위원장 송재경은 광주에서 체포당함.	11			학생 다수
		무안	무안과 목포는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일어남. 삼향면 인민위원회 간부 출신인 조갑득, 김길흥, 오도근이 주도하여 삼향, 일로, 이로 지서 습격.		3		
11.1	05:50	함평	1천여 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포위, 습격함. 영광과 영산포에서도 참가. 그들은 군정부의 쌀수집계획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시내전역으로 흩어짐. 08:30에는 대동, 해보, 월야, 학교, 나산 등 6개 지서습격. 특히 나산에서는 소총 2자루, 20자루의 무기를 탈취함. 시위 총지휘자는 주포부락 출신 박흥복(조공(朝共)책임자).	1 1	3	1	다수
			나주 - 나주 근교 조포리 지서 공격으로 나주 봉기 시작 다시 - 200여명이 지서습격. 경관3명 납치. 고막원 - 7백여 명이 지서습격.		44	1 2	다수
			반남 - 지서 습격. 경관1명 납치. 2명 행방불명 세지 - 1천여 명이 지서습격, 피해불명. 공산 - 1천 여명이 지서 습격, 경관 구타하고 감금함. 왕곡 - 7백여 명이 지서습격.				
			산청 - 4천5백여 명이 지서습격 영산포 - 3천 명의 군중이 지서습격하나 실패. 경찰발포. 나주 - 7, 8천여 명이 나주경찰서를 공격하나 경찰과 미군의 강경대응으로 실패. 금천 - 3천여 명이 지서 공격. 나주봉기 종결.	2	4	9 4 25 4	31 다수 다수
	17:00	나주					

11.2	01:00	화순	5백여 명의 화순광부가 광주로 행진할 목적으로 집결하자 미군이 출동하여 18:00에 해산됨.		
11.3		광주	광주학생기념일 행사가 저지당하자 수천 명의 학생이 시가지에서 반대시위. 경찰의 발포로 학생부상		3
	11:00	광산	칠석리	200여명의 군중이 지서공격, 점거, 소각함. 서장집 공격하여 창고안의 식량 약탈함.	
	04:00		서창	100여명이 지서와 유치장 공격, 점거하여 모든 기록물을 불태움.	
			화정	약 380여 명의 군중이 화정에 있는 신한공사 창고를 점거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록물을 불태움. 송정리에서 파천된 경찰에 의해 4명 체포됨.	
			송정리	200여 명이 경찰서를 공격하자 경찰 발포로 해산됨.	5 7
			지산리	군중 지서습격, 불태우고 주요 사무실 공격, 발포.	1 1
	14:00		극락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미곡수집(米穀收集)에 관한 서류일체 태움.	6
		영광	영광읍	6, 8백 명의 군중이 경찰서 공격, 경찰 발포, 6개의 공격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명환이 주도함.	4 5
			포천리	지서습격. 경찰발포.	1 4 7
	10:30	무안	홍농	3백여 명의 군중이 지서습격 방화. 서류문서 탈취. 지서장 심하게 구타당함. 군일대에 폭동이 일어나 경찰과의 충돌로 24명 검속하고 계엄령 내림.	7 5
		함평	포천리	천여 명이 지서를 공격, 경찰의 발포로 해산됨.	4
11.4	03:00	무안	일로 - 20여 명이 지서 습격. 임성 - 2백여 명이 역공격. 4명의 목포경찰 심하게 구타당함. 철도경찰의 출동으로 해산.		4 다수
		함평	수침리 - 지역확인 안됨. 농기구, 곤봉, 돌로 무장한 군중이 지서 공격하자 경찰 발포로 해산. 19명 체포.		2
	04:00	화순	화순 탄광노동자 천여 명이 소요 주동자 5명을 CIC와 경찰이 체포하여 가려 하자 항의하는 가운데 경찰과 충돌.		다수
11.07	02:00	보성	득량 - 50~100여 명의 군중이 득량면장 자택을 습격하여 일본도로 난자하고 마천리 구장과 동네유지를 깔로 찢러 중상을 입히고 03:00경에는 지서를 습격하여 독립촉성청년단 2명 살해. 1명 중상입힘.		2 1
		목포	미력 - 05:00경 30여 명이 지서습격, 인근 풍량(?)에서 지서 습격하여 경찰을 고문살해하고 면장도 군도로 중상 입힘.		3

11.9. 11:00	장흥	관상	천여 명의 군중이 지서 습격, 경찰발포로 해산	3	1
11.10. 10:00	나주	운봉	미확인 군중이 지서 습격, 경찰 3명 구금 후 풀려남. 소총과 무기 10자루 도난당함		
11.11.	해남		화산 - 지서습격 방화 송지 - 지서습격 점거, 면장집 월송 - 지서습격 현산 - 지서습격 북평 - 지서습격 방화 재일 - 지서습격 점거 파괴	1 1 1 3 5 2	2
11.11. 23:30	해남	옥천	3백여 명의 군중이 지서습격, 경찰발포		
11.12. 01:00	해남	계곡	4백여 명이 지서 공격, 경찰발포	1	다수
11.16. 01:00	강진	대구	2백여 명이 대구지서 습격, 교전 후 해산함	2	
11.17.		수동	일제소총 5정과 권총, 5천발 탄약으로 무장한 군중이 지서 습격, 경찰발포로 해산. 나중에 12명의 시위자를 발견 추적하여 발포, 60여 명 체포하여 광주에서 수사중	1	1
11.20.		함평	조성리의 한 산에 약 400명이 집결. 경찰의 발포로 6명 사망.	6	

자료 : 『미군정정보보고서(G-2)』 제3권 (일월서각, 1986), 191~27 4쪽. ; 『한성일보』, 1946.11.2~11.10일. ; 『독립신보』, 1946.11.5~6일. ;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1 (실천문화사, 1991), 235~267쪽을 참고하여 작성함.

보통 전남지역의 11월 추수봉기를 이야기 할 때 10월 3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미 10월 초순부터 도시빈민들과 농민들의 식량요구와 경찰서 습격이 있었다.²⁷⁾ 그러니까 대구·경북 지역에서 봉기가 있던 시기에 이 지역에 봉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남 지역 11월 봉기의 날짜별 특성을 보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봉기가 주로 일어난 곳은 목포와 인근지역, 나주와 인근지역, 그리고 광주와 인근지역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봉기가 많았던 곳은 목포, 나주, 광산이었다. 11월 5,6일 잠시 뜸 하다가 7, 9일에는 고흥, 보성, 장흥 등 남부해안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11월 17일 사이에는 해남, 강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해남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11월 봉기가 있었던 군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전남 전체 2부 21개 군 가운데 2부 12개 군²⁸⁾에서 봉기가 있었고, 9개 군에서 봉기가 없었다. 전남지역 11월 봉기는 주로 전남의 광주와

27) 10. 2. 능주, 순찰대와 200여명의 군중과 조우하여 해산시킴. 10. 3~4. 신북, 1,000명 군중이 경찰서로 행진하다가 순찰대 34명 도착하여 80명을 체포함. 10. 3. 광주근처, 식량요구 시위, 사고 없이 해산. 10. 9. 무안, 망운에서 민청과 공산주의자 200명의 군중이 경찰지서를 습격. 헌병순찰대가 3명을 체포함. 10. 14. 영암, 주민 1천여 명이 경찰서 습격, 경찰의 피신으로 사고 없이 끝남. 순행부(1991: 189)에서 재인용.

28) 59회의 봉기를 지역별로 보면, 화순(4회), 목포(8), 무안(4), 영광(2), 나주(7), 함평(3), 광산(8), 영광(5), 장성(3), 장흥(2), 보성(1), 고흥(1), 해남(8), 강진(3) 등 2부 12개 군에서 일어났다.

나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방, 그리고 해남과 보성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서 일어났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좌익세력들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좌익세력이 약하거나 온건하고 타협적인 순천, 여수 등 동부지방과 진도, 완도 등 도서지방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²⁹⁾

(2) 추수봉기의 성격

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좌익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우익세력은 좌익에 대항할 만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봉기를 지시한 것은 조선공산당 전남도당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시를 받아 군중을 동원하고 시위에 앞장선 것은 주로 인민위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청년동맹(혹은 치안대)의 조직원이었다. 즉 이 지역의 봉기는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시위의 구체적 양상을 보면, 전남의 봉기가 계속되는 동안 경상도 지역과 전북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봉기도 없었다. 경북은 10월 상순에, 경남은 10월 중순 이후에 봉기가 있었고 11월 들어서는 소강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좌익이 강한 전북에서 단 한 건의 봉기도 없었다. 봉기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전남지역 봉기의 권역별 양상을 정리해 보자.

목포권역에서 우선 목포는 10월 31일 새벽 청년동맹원에 의한 파출소 습격이 있었지만, 다음 날인 11월 1일 오전 목포전화국의 전화교환수들의 파업으로 통신두절이 된 상태에서 학생과 청년들의 시위행진이 있었다. 무안에서는 10월 31일부터 소요가 시작되었고 11월 4일에는 1천여명이 무안경찰서를 공격하였다.

나주권역에서 우선 나주는 10월 31일 시작되어 밤부터 인근의 산에서 북소리를 울리며 11월 1일 아침 지서습격과 경찰서 습격을 하였다. 나주 안의 6개 지서를 공격하였으며 3천여명이 영산포에 집결하여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나주읍내로 몰려든 군중의 수는 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나주의 봉기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컸고 다른 시군에 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중들은 각 동리별로 모여 다시 면단위로 집결하였고, 오후에는 나주 읍내로 동시에 진출하는 일사분란함을 보였다. 또 다른 지역의 봉기가 대개 밤이나 이른 새벽에 소규모 군중이 지서를 습격하는 데 그쳤던 반면, 나주의 봉기는 낮 시간에 대규모의 군중이 동원되어 움직였지만 인명살상은 거의 없었다. 함평에서는 11월 1일 읍내와 초포리에서 봉기가 있었고 이 지역의 마지막 봉기로 기록되는 11월 20일 조성리 야산에서 400여명이 집결하여 경찰과 대치하다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영광에서는 영광읍, 흥농면, 군남면에서 상당히 큰 시위가 있었고 군중 12명이 사망하였다.

29) 박찬승, 「1946년 전남지방 11월 봉기의 전개과정」, 『아시아문화연구』 2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50~51쪽.

광주권역의 봉기는 화순에서 시작되었다. 화순탄광 광부들은 8월 15일 광주에 까지 진출하여 도심에서 시위한 적이 있었다. 10월 30일에도 파업에 들어간 1,500명의 광부들은 광주로 행진하면서 쌀(임금인상과 옷도 요구함)을 요구하였다. 파업노동자들이 주춤한 사이, 11월 4일과 6일 미군의 두 차례 습격이 있었고 많은 노동자가 체포되고 화순탄광노조조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광주에서는 미군정의 강력한 통제 아래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사전에 봉쇄되고 학생들과 일부 군중의 소규모 시위만이 있었다. 그에 비해 인근 광산에서는 시위가 상대적으로 격렬하였다. 11월 3일 송정리를 비롯한 7개리에서 새벽에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 광산 봉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찰지서 외에 면사무소, 신한공사창조, 면장집 등을 공격하였고 그곳에 있던 문서들도 불태웠다는 점이다. 광산과 이웃한 장성에서는 11월 4일 삼서와 사창리에서 봉기가 있었는데 경찰지서 습격으로 그쳤다.

보성권역은 11월 7일에 봉기가 일어났다. 보성의 경우 이미 8월 15일 읍내에서 2천여명이 봉기한 적이 있고 11월 7일에는 보성읍과 득량면, 미력면에서 봉기가 있었으며 상당히 격렬하였다. 장흥에서는 11월 7일 장흥읍 주변에 집결하다 미군의 감시로 해산하였고, 11월 9일 관산에서 오후 1시에 1천여 명의 군중이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 고흥에서도 11월 7일 봉기가 있었는데, 군중이 새벽에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

해남권역의 봉기를 보면, 해남에서는 11월 11일 밤 읍내와 7개 면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12일 밤, 13일 새벽까지 장소를 달리하며 이어졌다. 5개 면의 지서를 전소시킬 정도로 격렬하였다. 강진에서도 11월 11일 봉기가 일어났는데, 해남의 봉기에 비해 소규모였다. 11월 17일 대구면의 수동리에서 200명의 군중이 새벽에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군중이 총을 지니고 경찰지서 공격시 먼저 발포하였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봉기는 전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먼저 목포권역에서 시작하여, 나주권역, 광주권역, 그리고 보성권역, 해남권역 순으로 순차적으로 봉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전남지역에서도 봉기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미군정과 경찰은 좀더 쉽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의 1946년 11월 봉기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농민이었고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해방 직후 건준(建準)이나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등에서 활약한 인물이었다.³⁰⁾ 운동의 주체들은 다수가 농민위원회 조합원인 농민이었고 좌익계열의 청년조직, 학생, 부녀자들이었다. 그러나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시위군중이 모두 순수한 농민일 수는 없고 농민과 그 주변의 도시노동자, 청년조직, 학생층이 결합되었을 것이다.

봉기의 양상을 보면, 군중이 돌과 곤봉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군중은 경찰관을 구타하거나 살해하기도 하고 경찰지서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30) 대표적인 예로 해남지방에서는 오장록(농민조합 대표), 조동선(화산면 치안대장), 김정수(군인민위원장)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전남일보·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1 (실천문화사, 1991), 252쪽.

시위군중이 경찰지서 등을 공격한 시간은 보통 새벽이었다. 밤 12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주로 공격하였다. 시위군중의 규모는 100~500명 사이가 가장 많았고 나주에서는 5천명 이상이 집결하기도 하였다. 시위군중은 경찰지서 외에도 면사무소, 신한공사 창고 등을 공격하여 이곳에 있던 여러 문서를 태우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곡물수집기록을 불태워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위군중이 미군에 대해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미군이 시위저지에 나서면 군중은 대체로 해산하였다. 화순탄광 노동자들은 노조지도자들이 미군에 잡혀가자 사격을 가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전남지역의 11월 봉기에서 군중은 지주나 우익인사를 습격하든가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봉기의 목적이 미군정의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 탄압, 식량공출정책 등에 항의하고 경찰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좌우익 간의 투쟁이나 지주-소작인 간의 계급투쟁이 아니라, 미군정과 그 대리인인 경찰에 대한 민중의 항쟁이었다.³¹⁾

미군정이나 경찰 측에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화나 타협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거의가 해산 명령을 어길 경우 군중에 발포하여 사상자를 내고 있어 군중의 폭력성을 부추기는 진압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해당 경찰력으로 진압이 되지 않을 경우 타도의 경찰력과 미군 전술부대의 힘을 이용하였다. 농민들의 시위예방 방법으로는 야간통행 단속, 전술부대의 야간순찰, 그리고 해당지역에 계엄령을 내림으로써 치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농민 대중이 각 지방에서 봉기하고 있을 때 ‘전농’은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하여 전국 동시가 아닌 지역단위 농민조합이나 인민위원회에 의해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총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²⁾

결과적으로 전남지역에서 1946년 11월 추수봉기는 농민조합의 역량 부족과 미군정, 경찰을 비롯한 보수우익의 철저한 탄압으로 실패로 돌아가, 이후 농민운동의 공개적 조직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경찰, 미군정의 끈질긴 추적과 탄압으로 11월 봉기를 주도한 주모자가 검거되어 농민운동은 계속되지 못하고 사전에 봉쇄되어 차단되기에 이르렀다.³³⁾

2) 1947년 양곡공출반대투쟁

이러한 약조건 아래에서도 농민들은 미군정과 경찰, 관리들의 탄압정책에 맞서 1946년 추수봉기 보다는 약하지만 1947년에도 계속 양곡공출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47년 군정은 전남도지사를 통해 전남지역에 할당된 하곡수집 목표량(16만 3천석)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도내 농민들에게

31) 박찬승, 앞의 글, 52~55쪽.

32) 이동연, 앞의 글, 45쪽.

33) 그 사례로는, “10월 31일 광주역 소요사건 주모자 채흥근 체포.”(『한성일보』, 1946. 11. 15.), “보성 조성리 야산에 곤봉, 죽창으로 무장한 400여명이 집결하고 있음을 수사하기 위해 20여명의 경찰이 파견되었다. 교전 끝에 6명의 폭도가 죽고 더 이상 희생은 없었다.”(『미군정정보보고서』 제3권 (일월서각, 1986), 320쪽.), “해남군 청신리 부락 산중에 이번 소요사건 군중 400여명이 은신하고 있는 것을 탐지한 경관대가 출동하여 조사 중 쌍방의 충돌로 군중의 6명이 즉사하고 경관 피해는 없음.”(『독립신보』, 1946. 11. 23.) 등을 들 수 있다.

호소하였다.³⁴⁾ 또한 하곡수집 시기에는 한 달 동안 이동방송대(移動放送隊)를 편성(編成)하여 도내 일원을 순회하기까지 하였다.³⁵⁾ 이처럼 총력전을 펼쳐 양곡수집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미군정은 잘못된 식량정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식량정책과 식량분배, 현실에 맞지 않은 공출가격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무리한 공출정책은 도내 각지에서 농민들과 미군정, 경찰, 관리들 사이에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1) 양곡공출과 남평 농민사건

미곡수집령의 내용은 첫째, 농가 매호당 1석의 100분의 45인 67.5kg을 상주하는 가족인원수로 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가질 수 있다. 둘째, 이것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관에 내야 하고, 셋째, 기관장은 수확량과 가족수와 저장위치, 종자의 수량까지 보고하고, 넷째, 보고작성의 태만, 수집태만, 명령 없는 반출, 명령집행의 태만·거부·선동 행위나 협박 등의 법령 위반시는 엄중 처벌한다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불완전하게 수립 시행되어 도시에서는 식량부족 사태를 가져오고 농촌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강제공출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을 야기시켰다.³⁶⁾

특히 미군정은 강압적으로 식량공출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차츰 미잉여농산물을 수입하였다.(1946년 5월 소맥 8천 톤 수입) 또한 식량사찰본부를 설치하여 가두에서도 식량사찰을 강화하고 가택수색을 하거나 독려반을 만들어 공출을 독려하는 등 선전을 강화하였다. 더구나 지역에서는 식량공출미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없는 강제공출이었다. 실제로 당시 전남 농촌에서는 아예 보상도 못 받고 강제 공출당하거나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출당하기가 일쑤였다.³⁷⁾

당시 나주 남평면의 식량공출 상황은 이러했다. 1946년도 가을걷이가 끝나기도 전에 전남도 농무국 양정과에서는 각 도·면의 곡물할당량을 결정하고 이를 시달했다. 이에 따라 남평면장 이하 23명의 면 직원은 각 지역을 분배받고 벼이삭이 패고 있는 들판에 나가 생산고 조사(각 논·밭의 품·흉작에 따른 등급을 매기는 것)에 나섰다. 등급정도에 따라 식량공출량의 다가가 정해지다 보니 자연 해당지역 농민과 마찰이 없을 수 없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면 행정산업계에 보고가 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남평면 전지역의 곡물수집 할당량이 정해지면 다시 각 면직원들은 추수가 끝난 곡식에

34) 『동광신문』, 1947. 8. 23.

35) 『동광신문』, 1947. 8. 6.

36) 『광주전남현대사』, 1991, 186.

37) 다음의 기사는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산읍에 있어서는 대개 2천 리나 3천 리를 가서 수집장소에 집적하는데 한두 가 마니 팔아서는 왕복비용도 안되어 운반차는 인부에게 잔액을 지불한데도 듣지 아니한다고 하니 농가의 수입은 짐작될 일이다.”(민주조선, K기자, ‘미곡수집과 농촌여론’, 48년 1월) 1946년도 가을부터 1947년 봄까지 남평면 우산리 4개 마을(인암, 문무, 우진, 사산)의 식량공출 징수에 나섰던 당시 면직원 송병섭(宋炳燮)의 증언은 이렇다. “보상은 뭘 놔의 보상이며, 시안(겨울)에 먹으려고 남겨둔 곡식까지 싹 끊어갔구면. 일제 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 일제 때 당하던 공출을 미군정하에서 똑같이 당하니 기가 막혀 한숨만 나왔어.” 『광주전남현대사』, 188쪽.

대한 식량공출에 나섰다.³⁸⁾

남평면 우산리 지역의 4개 마을에 대해 500-600석의 나락공출이 할당되었다. 당시 4개 마을의 총가구가 대략 200가구로 평균 한 가구당 2,3석의 나락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농사를 못 짓는 빈농이 태반이어서 자연 반소·자작농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원래 지주와 소작농은 각각 반반씩 공출을 물게 되어 있었는데 지주는 토지를 미끼로 소작농에게 공출량을 미루기가 다반사였다. 소작농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라, 다시 지주의 공출까지 합한 공출량을 내라, 이중부담으로 고통을 받았다.³⁹⁾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곡수집 상황 역시 초기에는 부진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미군을 직접 식량공출에 개입시키고 이 와중에서 대량의 양민을 구속, 투옥, 처벌하였다. 남평에 거주하는 김정렬씨의 부친인 김용기(金龍基)씨의 총격 사망도, 바로 그런 강압적 식량공출이 빚어낸 사건이었다.

김용기(당시 37세)씨가 식량수집차 내려온 미군에게 사살된 1947년 1월 24일은 나주 남평면 일대에서 미군에 의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있었던 날이었다. 미군은 20여 대의 트럭과 수대의 지프에 분승하고 와 아침부터 식량공출의 독려에 나섰다. 20여 농가가 살았던 오계리 오룡마을 그 벽지에 미군 10여 명이 총칼로 무장하고 나타났을 때 마을주민들은 놀라 산으로 달아나거나 아무도 감히 문 밖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 밖으로 나왔던 김용기 씨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⁴⁰⁾⁴¹⁾ 당시 미군은 산으로 달아나는 주민들을 향해 공포를 마구 쏘아 댔고, 식량공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갔다.

그리고 1947년 2월 12일 진도에서는 미곡수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총이 발사되어 한 여인이 부상당하는 사건⁴²⁾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군정치의 한반도 지배 속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증거였다. 그리하여 해가 갈수록 농민들의 반미군정(反美軍政) 감정은 증폭되어 갔다.⁴³⁾

38) 『광주전남현대사1』, 188쪽.

39) 『광주전남현대사1』, 189쪽.

40) 미군정정보고서에는, 나주에서 1947년 1월 24일(음력 정월 초사흘) 미곡수집 담당자인 미군정 관리가 미곡수집 할당량을 회피하는 농부 3명을 체포하려 하자 농민들이 곤봉으로 위협하자 총을 쏘 농부 1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미군정정보고서』 제7권, (일월서각, 1986), 204쪽.

41) 당시 동광신문 사회부 기자로서 이 사건을 취재했던 위민환(魏民煥)의 증언은 이렇다. “호남신문의 김남중씨(당시 편집국 차장)와 광주신보의 최수형(崔守衡) 기자와 함께 세 개 신문사가 합동취재 했었지. 봉산마을에 하루 머물며 여러 사람을 면담한 결과 미군의 고의성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나 딱히 정확한 목격자가 없어 현장 그대로만 묘사하여 독자가 판단하도록 기사를 썼지. 그런데 호남신문 편집국장 박영중(朴永鍾)씨가 사건에 미군정정에 알리는 바람에 결국 신문에 실지 못했어. 실으면 무기징역을 때리겠다는데 별수 있겠나. 지금도 코흘리개를 업고서 면사무소, 신문사로 찾아다니며 설원에 달라고 애걸복걸하던 부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 『광주전남현대사1』, 186쪽.

42) 『미군정정보고서』 제7권, (일월서각, 1986), 246쪽.

43) 『미군정정보고서』 제2권, (일월서각, 1986), 608쪽에 보면 미군정에 대한 불만도가 38%에서 47%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양곡공출반대투쟁

앞의 <표-3>을 보면 1946년산 전남지방 추곡수집은 87.1%로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나 1946년에는 대홍수와 전국적인 콜레라로 1946년 8월 현재로 전국 사망자 총 5,209명 중 전남에서 299명이 사망하여 민심이 흉흉했으며 여에 일반 서민들은 기아 현상까지 겹쳐 아주 어려운 해였다.⁴⁴⁾

이것을 감안한다면 혹독하게 공출을 해갔음을 알 수 있다. 1946년산 미곡수집에서 전남은 11.2%로서 전국 평균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1947년산 하곡수집 상황은 98.5%로서 양호하다. 이러한 공출 실적은 가혹한 공출방법이 전제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1947년 전남지역에서 농민운동은 양곡공출반대투쟁⁴⁵⁾이 전국 May-Day 행사와 연결되면서 전개되었다.⁴⁶⁾

<표-10> 전남지역 1947년 양곡공출반대투쟁

년월일	지역	사건내용
1947.1.11.	능주	쌀수매계획을 늦추기 위한 철도태업 움직임이 있어 명단을 파악 수사하고 있음.
1947.3.1.	목포 영암	11:00경 약 20여 명의 거지들이 쌀창고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자 경찰이 모인 군중과 함께 해산시킴 3천여 명이 경찰서 공격, 2명 사살, 5명 부상. 13:00에는 4천여 명이 경찰서 공격, 1명 부상, 3명 체포
1947.5.1.	나주 무안 남면 담양 광양 기타	왕곡면에서 3백여 명의 군중이 지서 공격, 경찰 발포하여 1명 부상, 17명 체포. 미화인의 군중에 의해 교외의 지서 습격, 경관 1명 중상 미화인의 군중들이 돌로 지서 공격, 경찰 발포하여 4명 사살, 3명 부상 12:00에 1천여 명이 노래하면서 경찰서로 행진, 발포로 해산시킴, 3명 사살, 16명부상 2천여 명의 군중이 경찰서로 행진하자 발포하여 해산함, 3명 부상 기타 그 외에도 영광, 곡성, 여수, 광양(광천리), 장흥에서도 지서 습격이 있었음
1947.5.21.	함평	경찰이 마을 사람 10명을 체포하자 그들 중 2명이 경찰을 공격하자 경찰이 발포하여 1명 사살함
1947.7.17.	나주	문평면 안영리에서 구장과 농민위원회의 주동이 되어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하곡 창고를 파괴하고 식량을 절취하자 경찰이 동원되어 구장을 연행하여 취조하자 부락 민 5백여 명이 농기구로 무장 위협하고, 면장집을 파괴하고 가족을 구타하고 면사무 소를 습격하여 군직원 2명과 신한공사 직원 2명을 납치하여 산중에서 심하게 구타함
1947.7.18.	고막원	고막원 2백여 명의 군중이 정부창고를 부수고 곡식을 약탈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곡식을 회수하자 지서 공격함
1947.7.27.	무안	무안비금도에서 하곡수집 독려자 출장중인 후생과장이 국민학교에서 하곡수집강연 도중 농민 이백여 명이 폭동 일으킴. 경관 3명 중상당하고 10명 체포함

44) 『미군정정보보고서』 제2권, (일월서각, 1986), 538쪽.

45) 전국통계지만 미곡공출에 불응(不應)하여 구금(拘禁)된 농민은 총 8,631명이라고 미군정 당국은 발표하고 있다. 『독립신보』, 1947. 3. 21.

46) 이동연, 1993, 47쪽.

1947.8.13.	광산	공출독려원을 촌민들이 난타함
1947.8.22.	담양	산업과장집에서 공출반대 전단 발견

자료 : 『미군정정보보고서』 제7권, (일월서각, 1986), 175~564쪽. ; 『동광신문』, 1947. 7. 22일, 8월 1일, 8월 13일, 9월 11일자 참고하여 작성함.

〈표-10〉을 보면 농민들이 직접 정부 보관의 쌀 창고를 습격, 파괴하여 식량을 탈취하였으며 이를 방해하는 경찰관들에게 사상(死傷)을 입히고 지서 등을 공격하여 방화하였다. 그리고 미곡수집원 또는 미곡수집 독려차 파견된 관리들을 촌민들이 집단 구타하거나 납치하는 등 농민들의 행동이 점점 무장, 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948년 전남지역의 봉기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정치상황은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전개되었다. 또한 국내의 이승만과 한민당은 미군정의 후원 아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쪽으로 정국을 이끌어 감으로써 이것에 반대하는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었다. 전농도 1947년 12월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단정단선 분쇄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결의하고 1948년 2.7구국 총파업에 전농 및 그 산하의 농민위원회도 구국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하였다.⁴⁷⁾

그러나 2.7구국 투쟁은 좌익 산하의 대중조직들이 불법화되고 그 조직역량이 거의 파괴된 조건 아래 진행된 것으로 1946년에 비하면 대규모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저항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그 이후 미군정의 일방적인 3.1제 소작료 시행과 양곡수집, 그리고 식량분배 및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에 대한 불만이 5.10선거 반대 투쟁과 맞물려 일어났다.

그러면 1948년에 일어난 전남지역 봉기양상을 일자별,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표-11〉 전남지역 1948년 봉기양상

년월일	지역	사건내용
1948.2.13.	나산	남로당과 민주애국청년조합 2백여 명이 지서를 공격하여 경관 2명 죽이고 6명 부상시킴
1948.3. 2.	진도 자은	13:00에 3백여 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공격, 발포로 2명 사살 수백 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공격, 경찰이 심하게 다침
1948.3. 5.	도내	3.1절을 전후로 도내 각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인명 사상자수가 52명이라고 전남 경찰청에서 발표함

47) 박혜숙, 앞의 책, 402쪽.

1948.3.16.	삼도	군중에 의해 지서 불탐. 2명의 경관이 구타당하고 무기 도난당함
1948.3.17.	보성	울어와 검백면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지서와 면사무소를 죽창, 곤봉,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여 공격, 8명 중경상 당함
1948.3.26.	봉황	나주 봉황에서 30여 명의 군중이 지서를 공격하여 방화함.
1948.5. 8.	기타	화순, 보성, 광주, 순천, 송정리에서 전화선 절단사건 발생함
1948.5.17.	봉황	14:00에 100여 명이 지서를 공격하여 경관 3명 죽임.
1948.6. 7.	나주	곤봉, 칼로 무장한 5명이 3명의 우익지도자 집을 공격하여 그 중 자위단 의장이 죽고 2명은 중상당함

주 : 1) 『미군정정보보고서』 제8권 (일월서각, 1986), 383~508쪽.

2) 『동광신문』, 1948. 3월 5일과 3월 17일자 참고.

2.27구국투쟁으로 전개된 전남지역의 봉기는 3월에 들어 확산되었다. 그 이후에도 간간히 공격이 있었다. 1948년에 일어난 전남지역 봉기에서 농민들의 공격대상은 농민들의 일상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경제적 고통을 안겨 준 지주나 우익지도자, 친일경찰 등이었다. 그리고 미군정의 농업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 수행한 면사무소나 경찰서도 주대상이 되었다. 다른 점은 경찰서의 방화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에 참여하는 농민수와 운동 발생 빈도가 줄어 들고 있는 점이다.⁴⁸⁾ 그러나 운동 방법에서는 통신수단을 절단한다거나 무기 뿐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까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5.10선거 이후 단독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전농 중심의 농민운동은 그 공개적인 활동은 크게 제약받았다. 특히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차 유격대적인 무장의 폭동 형식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전남지역에서 1946년 11월 추수봉기 이후 좌익 세력과 결합한 농민운동은 미군정과 우익의 탄압 속에서 점차 격렬해 졌고 폭동의 형태를 띠면서 무장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5. 토지회수(탈환)운동과 농지개혁

소작지 문제는 결국 소작농민들에게 농지를 자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소작농민들은 소작료인하 및 불납, 소작권이동반대 투쟁을 넘어서 농지를 점유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의 실시는 이러한 의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미군정 마저도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8) 이동언, 앞의 글, 51쪽.

어쨌든 토지와 관련한 농민들의 궁극적 요구는 자신의 당에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오랜 동안의 지주소작 관계 속에 있던 소작농민들은 지주들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일제가 물러가자 지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 나갔다. 특히 일본인 지주가 지녔던 소유지에 대해서 소작농민들은 점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설립하여 일본인 소유 농지를 신한공사 소속으로 하였고 3.1제 기초하여 소작료를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곡 소작료까지 수집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농민들이 있었다.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농민들로서는 빼앗긴 땅을 되찾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곳이다. 그 두 곳은 바로 하의도와 나주 금삼면이다. 이 지역 농민들은 내 땅을 빼앗겼다는 의식이 강한 상태에서 이미 예전부터 토지회수(탈환)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해방이 되자 당연히 자신들의 토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군정이 일제와 거의 비슷한 태도와 행동으로 나오자 거칠게 저항하였다.

1) 하의도의 소작료거부투쟁과 농지탈환투쟁

신안군 하의도의 농지 일부는 농민들이 개간하여 경작하던 것인데, 조선왕조 시절 선조가 공주에게 하사한 후 공주와 결혼한 홍씨가 장악하고 도세를 거두어갔다. 그 후 홍씨는 권력을 행사하여 하의도민이 개간한 다른 땅들도 장악하여 하의도의 모든 땅이 홍씨의 땅이 되었다. 그 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해방 직전에는 일본인 도쿠다(徳田彌七)의 소유로 있다가 신한공사로 이관되었다.

하의도 농민들은 380여년 동안 농지를 찾으려고 투쟁해 왔다. 일제시기에도 농지탈환을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의도농민들은 해방이 되자 이제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빼긴 땅을 되찾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의도에서 1946년 2월21일 미 군정청 법령 제52호에 따라 '신한공사 하의출장소'가 도쿠다 농장사무소에 설치되었다.

결국 일본인 지주 도쿠다에서 미 군정청의 신한공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하의도 농민들은 소작인 그대로였다. 미 군정청의 하의도 농지소유권 장악에 따라 하의도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미 군정청에서 제정한 '3.1소작제'는 일제시대의 소작료보다 낮았다. 그러나 하의도 농민들은 해방과 동시에 땅은 당연히 농민의 소유로 돌아올 줄 알았고, 자기들 소유 농지이므로 소작료는 없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공사 직원들은 1946년 초 도민들에게 몇 차례 소작료 독촉과 협박을 시도하였으나 농민들의 거부 태세가 완강하였다.

따라서 소작료를 납부하게 되면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1946년 7월 15일~16일 양일간에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신한공사에 납부할 소작료와 양곡공출에 불응하기로 결의했다.

1946년 7월 17일 하의면 상태도 닭머리 도선장에서 도민들이 소작료 징수 및 하곡공출 독려차

상륙하려던 신한공사 직원을 상륙하지 못하게 하여 신한공사직원들의 하곡수집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상태도 하곡성출 방해사건).

몇 차례의 독촉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소작료 징수에 실패하나 신한공사 하의지부 직원들은 1946년 8월 2일 경찰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작료 합동징수 작전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무리한 소작료 강요와 충격에 분노한 오림리 주민들이 경찰들과 신한공사 직원들을 구타하고 무기를 압수하는 일이 벌어졌다(오림리 사건). 다음날인 8월 3일 목포경찰서에서 30명의 경찰들이 증원되어 50여명의 경찰이 오림리 주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농민들이 운집하자 경찰은 체포한 주민 3~40명을 포승줄에 묶어 배를 타고 떠났다. 떠나면서 충격을 가해 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고, 분노한 도민들 500~600명은 하의지서와 신한공사 하의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하의도민들은 이날 밤 면민대회를 열고 다음날 미군정청에 항의사절단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 날이 음력으로 7월7일이어서 7·7봉기(하의도 7·7농민봉기) 또는 칠월칠석봉기라고도 한다.

1946년 8월4일 미군정은 이러한 농민봉기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무자비한 폭동집안작전에 나섰다. 무장경찰 50명과 미군 20명이 6일 동안 도민들을 무차별 체포하여 폭행하였고 그 가운데 90여명을 목포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연행된 90여명의 도민들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1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옥사하는 사람까지 발생하였다.

하의도 농민들의 이런 거센 소작료거부투쟁은 농지탈환투쟁의 일환이었다.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연히 소작료를 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소작료거부 투쟁을 했던 것이다. 소작료 인하 및 소작권이동반대 투쟁과는 결을 달리 하는 것이었다.

하의도 농민들의 농지소유권 문제는 미군정이 종식되고 나서야 비로소 실마리를 찾게 된다. 1949년 7월 하의3도 농민들은 하의면민대회를 개최하고, 하의3도 토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무안군수와 전라남도지사에게 하의3도 농지를 무상환원해 주도록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즉시 제출했다.⁴⁹⁾

7월 21일 전라남도는 하의3도 토지투쟁위원회가 제출한 진정서를 받아들여 하의3도 농지를 농민들에게 무상환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하의도민들은 억울하게 빼앗긴 농토를 되돌려달라고 제헌국회에 청원했다.

정부수립 후 제헌국회는 이 문제를 다루어 1950년 2월 13일 하의도 농지 1,500정보를 하의도 농민에게 무상반환 하기로 결의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여 무상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56년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행정기관에서 부담토록하기 위해 유상분배의 방안으로 정보당최소한인 200원씩을 농민들이 부담토록 하였다. 그래서 결국 하의도의 농지는 농민들의 손으로 돌아갔다⁵⁰⁾.

49) 김학운, 『하의도농민운동』 (책과 함께, 2006), 220쪽.

50) 행정상의 실수로 늦어져 1999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일부 남아 있는 농지는 2006년 국유로 하였다. 손형섭, 「해방 후 하의삼도 농민들의 농지탈환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18-2 (한국도서학회, 2006), 83~85쪽.

2) 나주 공삼면(영산강유역) 농지탈환투쟁

나주 공삼면 토지탈환운동은 1888년 가뭄을 계기로 경저리(京邸吏) 전창석(全聖暢)이 공삼면의 민유지를 침탈하면서 시작되어 민유지→궁방토(한말-경선궁)→동척 소작지→신한공사 귀속농지로 이른바 소유자가 바뀌면서 계속 토지소유권 분쟁을 일으켜온 대표적인 사례이다.⁵¹⁾

공삼면의 토지분쟁은 봉건지배층이 불법적으로 공삼면 토지를 궁방전에 편입시켜 발생하였고, 동척은 농민과 국가 간에 분쟁이 벌어진 농지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농지를 확대하였다. 농민들은 3.1운동과 함께 토지탈환운동을 전개하였고 1925년에는 농민회와 토지회수운동동맹을 결성하여 동척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그 결과 1926년 동척은 택지와 묘지 일부만 무상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유상반환이 결정되었으나 농민들은 상환액을 제대로 내지 못해 일제말기까지 농지소유권은 동척에 있었다.⁵²⁾

이러한 이력을 가진 공삼면 농민들은 해방 직후에는 동척의 소유농지를 관리하는데 주력하였다. 공삼면 농민위원회(소작인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이전의 소작실태를 조사하였다.⁵³⁾ 자주관리하면서 일부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농지를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특히 공삼면 지역의 건준 지부와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7천여명의 농민들을 규합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어 1945년 9월 25일 농민들은 1만여명의 참가한 공삼면민대회를 개최하고 ‘공삼면농민회’를 결성하고 그 안에 ‘공삼면 청년자위대’를 두었다. 자위대의 활동은 일제하 소작인 조합장(동척의 마름)의 횡포에 대처하고 응징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이 1945년 9월 25일 동척 소유였던 공삼면 농지를 적산(귀속농지)으로 규정하였다. 1944년말 남한에 있는 귀속농지 총 219만 1,546정보 가운데 전남지역에 33만 1,005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동척의 소유농지는 총 4만6,265정보 가운데 전남지역에 8,157정보가 있었는데, 공삼면에서 귀속농지에 편입된 면적은 2,591정보로 동척이 전남에 소유하고 있던 귀속농지의 30%가 넘는 규모였다.⁵⁴⁾

미군정이 공삼면 농지를 귀속농지로 규정하자, 1945년 10월 15일 공삼면 청년자위대는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미군정(전남군정청)에 ‘공삼면농지는 적산이 아니므로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진정서에서 농민들은 ‘공삼면 농지 4만5천두락과 벼 28만9천석 그리고 양도지대 45만 8,500원(1926년 총독부의 조종안에 따라 해방 이전까지 농민들이 납부한 농지대금)을 동척에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농민회 대표들은 분쟁사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국문과 영문으로 만들어 서울에 올라가

51) 박이준, 「미군정기 나주 공삼면 농지탈환운동의 전개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6-1(역사문화학회, 2003b), 197-198쪽.

52) 이규수, 「일제하 토지회수운동의 전개과정 - 전남 나주군 공삼면의 사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1), 233-267쪽.

53) 함한희, 「미군정의 농지개혁과 한국농민의 대응」, 『한국문화인류학』 31-2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425쪽.

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5 (서울, 1989), 92쪽.

홍보활동을 20여일간 하고 내려왔다.

1945년 12월경 미군정 관계자는 공삼면 농민회 사무실에 찾아와 농민회 활동을 무조건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돌아갔다. 이후 미군정과 농민회 사이에 큰 마찰이 없었다. 그러다가 1946년 8월 15일 해방기념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미군정은 이 시위를 진압한 뒤 공삼면농민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추석(음력 8월 15일)을 전후 하여 미군정은 무장한 경찰부대를 동원하여 농민회사무실을 급습하고 농민회간부들을 ‘적산관리유용’ 혐의로 체포, 구속하였다. 이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후 추수봉기로 이어진다.

1946년 10월 하순 귀속농지에 대한 미군정의 소작료징수결정이 내려지자 전국적으로 추수봉기가 벌어졌다. 공삼면 농민들은 11월 1일 나주 지역(영산포, 세지, 왕곡, 다시, 봉황)의 봉기에 대거 참여하였다. 이후 미군정은 농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였고, 공삼면 농지탈환운동은 정부수립 시기까지 부분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7년 5월1일 메이데이 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질 때, 공삼면 농민들 약 300명이 집회를 갖고 왕곡지서를 포위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경찰과의 충돌과 발포로 경관2명과 군중 21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냈다.⁵⁵⁾

미군정은 농민들의 저항과 북한의 토지개혁 등에 밀려 농지개혁을 시도하였다. 귀속농지에 대하여 1948년 3월부터 분배를 시작하였는데, 공삼면 농민들은 귀속농지 분배거부와 함께 소작료불납운동으로 맞섰다. 신한공사에서도 공삼면 농지에 대한 실사를 하고 신한공사 사장은 ‘공삼면 농지는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군정장관에게 제출할 정도였다. 따라서 당시 공삼면 농지는 ‘보류대상’이었다. 농민들은 정부수립 후 무상반환 될 것을 믿고 농지분배를 받지 않았다. 사례조사에 의하면⁵⁶⁾ 일부 농지분배가 있었고 실제 가격을 낮게 책정하였으나 농민들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정부수립후 공삼면농민회는 국회정원운동을 벌인다. 1950년 2월 13일 제헌국회는 공삼면 농지(하의면 농지도 포함)를 농민들에게 반환하고 전에 낸 상환금을 되돌려주도록 (무상반환) 결의하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전쟁 당시 공삼면에서는 양민 집단학살이 있었고 이어진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는 농지탈환운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휴전협정 직후 1953년 8월 농림부는 귀속농지 분배 조건으로 하의도와 공삼면의 농지를 분배하기 시작하였다(유상반환). 공삼면의 일부 농민들은 분배상환금을 납부하고 있던 반면, 농민회 활동을 하던 농민들을 포함한 일부 농민들은 농림부 방침을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1958년 조직적으로 대응한 농민들과 당국의 교섭이 실패로 끝나면서 농지탈환운동은 약화되었다. 공삼면 농민들은 상환액 납부를 부분적으로 거부했다. 1970년이 되어서야 상환액은

55) 박이준, 「나주 공삼면 농지탈환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a, 118~140쪽.

56) 함한희, 「조선말 · 일제시대 공삼면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 변화」, 『한국학보』 18-1 (일지사, 1992), 2-52쪽.

완료되었다.

이러한 귀속농지 분배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은 머슴, 지정인부, 계절농업노동자, 도는 비공식적으로 재소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⁵⁷⁾ 이들은 농지개혁을 통한 자작농화에 끼여들 수 없었다.

3) 농지개혁

해방 직후 전국민의 7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45년말 총경지 226만 정보 가운데 64.2%인 145만 정보가 소작지였으며 논은 126만 정보 가운데 72.1%인 89만 정보가 소작지였다. 그리고 조선인 소유 소작지 가운데 약 반인 57만 정보를 5정보 이상을 소유하는 5만호가 소유하고 있었다.

〈표-12〉 남한의 토지소유상황(1945년말) (단위 만정보)

	논	밭	합계
총경지	128	104	232
소작지	89	58	147
전 일본인소유지	18	5	23
조선인소유지	71	53	124
자작지	39	46	85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년표』, 1948년판, I-29쪽.

1945년말 206만 농가 가운데 49%의 농가가 순소작농이고 35%가 자소작농이었다. 지주를 포함한 완전한 자작농은 28만4천호로 전농가의 1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노동자, 영세소농(빈농)의 토지요구는 거세었고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1946년의 토지개혁의 영향으로 남한에서 농민들의 토지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농민들의 혁명적 분출을 막기 위해서는 농지개혁이 필요하였고 이것이 바로 혁명을 예방하는 길이었다. 즉 예방혁명으로서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1950년이 되어서야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에 지주들의 소작지 방매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1945년말의 소작지 147만 정보 가운데 (귀속농지 불하 포함)농지개혁이 이루어진 소작지는 60만 정보에 지나지 않았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농지가 소작농들에게 이전되었다.

57) 함한희, 앞의 글, 1992, 52쪽.

(표-13) 전국 분배농지상황(단위: 정보) (1970.12.31.)

농지종류	논	밭	합계(정보)	분배농가(호)
일반농지	233,089	109,276	324,365	1,016,238
귀속농지	262,502	188,746	73,756	655,032
합계	421,835	183,032	604,867	1,671,270

자료: 『농지개혁사연구』, 661쪽.

이러한 농지이전 과정의 이면에는 앞에서 살펴본 소작료불납이나 일본인소유토지 분배투쟁 등 농민들의 토지요구가 분출되었다. 겉모습은 국가기관에 의한 조치로서 실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농민들의 토지요구가 일차적인 추동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귀속농지 분배

정부수립 이후 '농지개혁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단계인 미군정하에서의 농지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자.

1946년 2월 21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52호 '신한공사 창립'을 공포하고 미군정 직속의 특수기관으로서 신한공사를 설치, 과거 동척을 비롯한 전 일본인 소유지를 미군정이 지배했다. 이 지역 신한공사 지점은 목포에 있었는데 당시 목포지점에서 관리했던 전남지역 농지경지면적과 소작농가는 다음과 같다. 즉 전체 농가 41만 2,774호 중 신한공사 관리농지 소작농가 17만 2,300호, 비율로 보면 약 42%에 해당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전북(43%)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경지면적은 전체 32만 865정보 중 신한공사 관리농지면적은 7만 5,685정보로서 24%에 해당된다.⁵⁸⁾ 다시 말해 이 지역 농민의 42%가 신한공사 관리농지에서 소작을 했으며 전체 농지의 4분의 1에 가까운 농지가 신한공사 소유였다.

일본인이 떠나고 나자 그들이 남겨놓고 간 집, 농지들이 여기저기 많았고 동척 소유 농장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더러는 떠나면서 함께 살던 한국인에게 집, 토지를 되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적산재산 소유권에 대해 분쟁도 심했고 인민위원회에서는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토지 등은 농민들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인들이 직접 자작했던 농지, 소유토지, 가옥 등은 대부분 일본인 아래서 경작을 해오던 소작인들에게 되돌아갔다. 가옥 역시 일본인 집에서 일을 돌봐주던 한국인들이 차지했다. 따라서 적산농지, 가옥 등 일차적으로 소유 일본인과 연고가 있는 한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당시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산재산과 관련 소유권문제로 분쟁이 붙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58) 농림신문사편 『농업경제연보』 참조.

비밀비재했다. 또한 적산가옥 중 가옥의 규모가 큰 것들은 해방 후로부터 정부수립, 인공시절에 걸쳐 경찰지서나 행정기관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다.⁵⁹⁾

그런 와중에 신한공사가 들어와서 동척소유 농지 및 기타 재산과 일본인 소유의 소작농지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일제 때의 공출, 소작료 징수와는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3.1제 소작료 징수를 실시했다.

1948년 3월 귀속농지분배가 시작되었지만 행정적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귀속농지 분배가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농지 분배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⁶⁰⁾

신한공사는 미군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었으며 그 조직에서 실제로 상환료를 매기고 거둬들이는 업무는 대부분 그 지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목포에 당시 신한공사의 전남지점이 있었고 그 밖의 시·군·면 단위에도 농장 및 사무실이 있었다. 나주 지역에서 당시 신한공사 남평농장 사무소에 갖다 내는 상환료 부담이 꽤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⁶¹⁾ 당시 상환료를 남평 소재 사무소에 내고 나면 면사무소, 신한공사, 개인 보관용 전표 3장을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신한공사와 행정처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⁶²⁾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이루어진 적산(일본인 소유지)농지 분배 및 과도입법위원회의 토지개혁안의 성립, 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 등 일련의 변혁과정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안겨준다. 지주들에게는 3정보 이외의 토지가 지가증권으로 바뀌는 '유상몰수' 바람이 부는가 하면 소작농들은 경작권을 인정받으면서 일정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료 지급형식의 유상분배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전남지역은 귀속농지의 분배량(6만여 정보)이 일반농지 분배량(3만6천여 정보) 보다 많았으며 분배받은 농가는 19만 3,522 농가에 달했다.

〈표-14〉 전남지역 농지분배상황

(단위: 정보) (1970.12.31.)

농지종류	논	밭	합계(정보)	분배농가(호)
일반농지	25,962	10,209	36,171	156,678
귀속농지	39,307	20,826	60,133	193,522
합계	65,269	31,035	96,304	350,200

자료: 『농지개혁사연구』, 661쪽.

59) 전남일보 ·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편, 앞의 책, 70~71쪽.

60) 양지은, 「농지개혁과 한국농촌사회변동 - 전라남도 담양군 사례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58쪽.

61) “홍년이 들어서 상환료가 밀려 내지 않고 있으면 면직원과 신한공사직원들이 나와서 창고를 뒤져 곡식을 끄집어내 가 저가기도 했제 아마.” 전남일보 ·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편, 앞의 책, 68쪽.

62) 전남일보 ·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편, 앞의 책, 69쪽.

이 와중에서 지주들은 농지개혁이 일어날 것을 예상, 소작인에게 미리 농지의 일부를 강매, 권유 등의 수법으로 팔아넘겼다. 한편 일부 중·소지주들 중에는 농지를 방매하지 않고 있다가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2) 대한민국 정부의 농지개혁

전남지역에서 이루어진 농지개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담양지역의 농지개혁 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⁶³⁾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 21일 공포되고 그 후 개정(1950년 3월 10일)을 거쳐 시행령까지 마련하여 개혁준비를 공식적으로 완료한 것은 1950년 3월 25일이었다. 많은 지방에서 실제 농지개혁작업(대상농지의 매수와 분배)이 시행령 공포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하며 농림부도 농지개혁작업이 '1950년 4월 15일까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담양군에서 농지개혁 사업은 1950년 3월 1일을 기해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매수분배농지와 귀속농지를 구분하여 시작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최초 공포일 보다 늦고 개정법이나 시행령 발표일 보다는 이른 시기였다. 실제 지역에서 농지개혁작업이 법개정이 완료되지도 않고 시행령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 진행되고 있었다.

담양군의 농지개혁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이 시기에 매수분배농지와 귀속농지에 대한 분배가 동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미군정에서 농지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앙토지행정처가 이관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서는 귀속농지의 분배사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은 채 중단되었다. 그 후 매수분배농지 개혁에 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방과 논쟁이 일었고, 결국 담양군의 귀속농지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각 읍, 면, 마을에 까지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으로 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가 소작료 지불 여부를 따져 수용여부를 결정하였다. 위토 등이 분재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땅주인들은 소작지가 아니라며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담양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사례들은 대부분 분배대상으로 판정되어 분배되었다.

1950년 7월 23일 인민군이 담양에 진입했을 때 농지분배 업무는 농지소표(필지별로 소작지를 확인하고 표로 만듦)작성 단계에 있었다. 8월 12일 행정업무 이양을 시작한 인민군은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 개혁을 공언하였다. 이 때 머슴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인민군이 제기한 빈농과 고농 중심의 농지개혁은 농민 대다수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예를 들어 자작과 소작을 겸하고 있던 농가에 농지를 분배하기 보다는 이미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포함한 가산 전체를 주변의 빈농 및 고농과 반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자소작농이나 소작농가를 우선으로 한 한국의 농지개혁은 안정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지 빈고농과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민군의 농지개혁은

63) 양지은, 2000, 앞의 글, 57~81쪽.

구두로 단행되었다. 그런데 7월 23일에 진입한 인민군은 9월 들어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혁은 구두에 그치고 말았다.

1950년 9월 22일 담양군 수복이 이루어진 뒤 곧이어 10월 3일부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농지개혁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수배자는 5년에 걸쳐 균분상환 하도록 하고 지주에게는 국가에서 지가증권으로 5년 균등보상을 약속하였으며, 5년 후인 1955년 10월부터 상환완료자에게는 무료등기권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상환기간 5년 안에 상환량의 98%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 5할대에 육박하던 소작료에 비해 상환액은 3할 수준이었다.

물론 지주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피해 나가려 하였다. 담양의 사례에서도 농지개혁 이전에 이루어진 자손들에 대한 토지의 분할로 농지소유를 분산시키거나 농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구례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연구에 따르면,⁶⁴⁾ 구례군에서도 농지개혁은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미군정의 귀속농지 불하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일반매수농지의 분배가 그것이다.⁶⁵⁾ 구례군에서도 평야부에서 농지개혁이 주로 이루어졌고 산간계곡 마을은 상대적으로 개혁 규모가 작았다. 문제는 1946년 조사된 소작지의 35% 정도만이 개혁대상으로 되었다. 논은 경우 40%, 밭의 경우 23%만이 불하 혹은 분배되었다. 영세지주가 농지를 직영하게 되었거나 일부농지를 묘위답으로 처리하는 등 개혁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도 있었겠지만, 지주와 소작인 간에 토지매매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지주는 서둘러 방매에 나섰고 결국은 팔리지 않았던 척박한 토지가 주로 개혁대상이 되었다. 광산군 지역의 사례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⁶⁶⁾ 사전방매나 분산소유, 분할상속 등을 통해서 지주들이 농지개혁 이전에 개혁대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게다가 방매대상자가 소작인인 경우도 있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재촌지주의 경우 마을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원매자라 생각되면 대상에 관계 없이 토지를 팔았다. 또한 토지를 실제로 방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 빌리고 소유권을 지주가 그대로 지닌 경우도 있었다.⁶⁷⁾

전남지역에서 조선인지주 소유지의 농지분배량은 논 2만 5,962정보, 밭 1만 209정보, 합계 3만 6,171정보였고 분배받은 농가는 15만 6,678호에 달했다.

미군정의 농지불하, 한국정부의 농지개혁, 지주의 방매 등을 통해 대규모 지주소유지가

64) 이종범, 「20세기 중반 농지개혁과 농촌사회변동 · 전라남도 구례군 사례」, 『전남사학』, 19집, (서울, 2002), 419-442쪽.

65) 구례군에서는 귀속농지 436.8정보, 일반농지 881.4정보, 합계 1,318.2정보가 소작농민에게 불하 또는 분배되었다. 관계된 농가는 귀속농지 1,483호(평균 885평), 일반농지 3,620호(평균 722평), 합 5,103호였다. 1956년 12월 농지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구례군의 전체농가 8,637호 가운데 거의 절반의 농가가 분배나 불하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66) 이종범, 「1915~1945년대 농지소유구조의 변동 · 광산군 하남면의 사례」,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서울, 1990), 844쪽.

67) 최원규, 「해방후 농촌사회의 정치적 변동과 지주제 · 광주 · 해남을 중심으로」,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서울, 1990), 884쪽.

소작농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물론 영세경영체제를 극복할 수는 없었고 머슴이나 소작지도 없는 영세빈농의 경우 개혁에서 제외되어 한국전쟁 기간에는 분출하기도 하였다. 어 든 제도적 개혁과 매매라는 형식을 띠었을지언정 농민의 토지요구가 관철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권력의 입장에서는 ‘예방혁명’으로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요구실현’으로서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6. 결론

지금까지 해방직후 전남지역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알아보았다.

해방직후 전남지역에서 농민조합(농민위원회)을 조직하여 농민운동을 주도한 간부급 인사들은 대부분 일제하에서 민족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여기에 가입한 농민들은 그들의 지도하에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주와 미군정 세력에 대해 소작료 인하 및 소작료불납, 소작권 이동 반대 등 소작관련 투쟁을 벌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지주소작관계에 기초한 갈등의 연속이었다. 오히려 소작관련 투쟁이 해방공간이라는 완화된 조건에서 더욱 분출되었다. 특히 지주의 일방적인 소작지 매매로 인한 소작권 이동을 둘러싸고 소작인들의 거센 항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신한공사 소속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과 미군정 사이에 소작료불납을 둘러싼 싸움이 전개되고 신한공사에서 실시한 하곡소작료징수는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여전한 고율의 소작료징수와 경찰과 군인은 동원한 강제적인 양곡공출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하였다. 전남지역에서 1946년 11월에 일어난 추수봉기는 전남의 중서부와 남부 지방에서 광범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미군정에 대한 불만과 반대도 점점 더해갔다. 1947년에도 미군정은 무리한 양곡공출을 강제하면서 1946년의 추수폭동 보다는 약하지만 광범위한 공출반대투쟁을 가져왔다.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띠어가기도 하였다.

1948년 들어서는 우익지도자나 친일경찰에 대한 공격이 나타났고 미군정의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일선 기관이나 경찰서를 공격해 나갔다. 전남지역에서 1946년 11월 추수봉기 이후 좌익세력과 결합한 농민운동은 미군정과 우익의 탄압 속에서 점차 격렬해졌고 폭동의 형태를 띠면서 무장대로 이어지게 되었다.⁶⁸⁾

해방 직후 이러한 농민운동의 배후에는 일제 강점기의 지주소작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농민의 토지요구가 있었다. 전면적 토지개혁의 실시 등을 요구하는 농민 특히 빈농, 농업노동자의 목소리는 농지개혁으로 진정되었다. 그럼에도 과거에 농민들의 농지를 강탈한 지역에서는 소작료거부투쟁과 토지탈환투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일선 농민들의 농지개혁과정에서 토지매입과 분배참여는 농민운동의 개량적인 성과이기도 했다.

68) 전남지역 무장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정관호, 『전남유격투쟁사』, (선인, 2008).

해방직후 이렇게 분출된 농민운동은 1950-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부터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자료 및 도서〉

- B. Cumings, 김주환 역(譯), 「한국전쟁의 기원, 상.하」 (청하, 1986).
- G. Meade, 안종철 역(譯), 「주한미군정연구」 (공동체, 1993).
- 광주부(光州府), 「해방전후회고」 (돌베개, 1984).
-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제2권, (광주, 1980).
- 김남식 편(編), 「남로당 연구」 2.3(자료편) (돌베개, 1988).
- 김남식, 「남로당 연구」 1 (돌베개, 1984).
- 김준엽, 김창순 공저(共著),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4권(대중투쟁사자료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출판부, 1979).
- 김학운, 「하의도농민운동」 (책과 함께, 2006).
- 나주시 문화원, 「항일의 역사, 궁삼면토지회수투쟁 자료집」 (내일미디어, 2000).
-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 「농지개혁사(상)」 (서울, 1970).
- 미국무성 비밀외교문서, 김국태 역(譯), 「해방 3년과 미국」 (돌베개, 1984).
- 민족문화편집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집(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法令集)」 (국문판) (서울, 1987).
- 민족주의 민족전선 편집(編輯), 「해방과 조선」 1.2 (과학과 사상, 1988).
- 안종철, 「미군정정보보고서와 전남지방」 (전라남도, 1993).
- 안종철, 「광주전남지방 현대사 연구 - 건준 및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울, 1991).
- 역사문제연구소, 「해방3년사 연구입문」 (까치, 1989).
- 이우재, 「한국농민운동사」 (한울, 1986).
- 이우재, 「한국농민운동사연구」 (한울, 1991).
- 전남일보 ·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편, 「광주전남 현대사」 1.2 (광주, 1991).
- 전라남도, 「전라남도세일만(全羅南道勢一斑)」 (광주, 1948).
- 정관호, 「전남유격투쟁사」, (선인, 2008).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서울, 1948).

「미군정정보보고서(美軍政情報報告書, G-2 Report)」, 1.2.3.7.8 (일월서각, 1986).

〈논문〉

B. Cumings,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해방」, 프랭크 볼드윈 편(編), 「한국현대사 1945~1975」(사계절, 1984), 31-91쪽.

G. Meade, 「미군정의 정치경제적 인식」, 서대숙·이정식 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돌베개, 1982), 54-144쪽.

강인호, 「미군정하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 농촌계급관계와 토지개혁요구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김광식, 「해방전후의 농민운동에 관한 일고찰」, 「연세」 제19호(서울, 1984).

김낙중, 「한국농민운동소사」, 「한국농업의 새로운 인식」(돌베개, 1984), 243-305쪽.

김남식, 「박헌영과 8월테제」, 「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 1985), 104-210쪽.

김동노, 「미 군정기 농민조직과 농민운동 - 민중의 사회세력화와 그 좌절」, 「사회와 역사」 54집(한국사회사학회, 1998), 121-164쪽.

김성철, 「미군정기의 농민운동과 농업정책의 분석」,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김점숙, 「1930년대 전남지방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지음, 「전남사회운동사연구」(한울, 1992), 31-64쪽.

김종선, 「하의3도 농지분쟁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 도서지역의 농지분쟁 및 소작쟁의에 관한 연구(2) - 하의3도 농지분쟁을 중심으로」, 「목포대학논문집」 제7집(인문사회과학편), 1986.

김창진, 「8.15직후 광주지방에서의 정치투쟁」, 「역사비평」 1(형성사, 1987).

김창진, 「해방후 농민운동」, 「고대신문」, 1986. 6. 15.

류승렬·이시중, 「해방직후 노동·농민운동」, 「한국현대사」 1(풀빛, 1991).

박이준, 「나주 궁삼면 농지탈환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a.

박이준, 「미군정기 나주 궁삼면 농지탈환운동의 전개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6-1(역사문화학회, 2003b), 197-223쪽.

박찬승, 「1946년 전남지방 11월 봉기의 전개과정」, 「아시아문화연구」 2(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31-55쪽.

박찬승, 「조선후기~일제하 하의3도의 농지탈환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역사문화학회, 2002) 183-242쪽.

박혜숙, 「미군정기 농민운동과 전농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한길사, 1987), 353-412쪽.

- 손형부, 「해방직후 전남지역의 농민운동」,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지음, 「전남사회운동사 연구」 (한울, 1992), 168-191쪽.
- 손형섭, 「해방 후 하의삼도 농민들의 농지탈환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18-2 (한국도서학회, 2006), 75-89쪽.
- 손형섭 · 박찬승, 「하의삼도 농지탈환운동의 전개과정」, 「하의삼도 농지탈환운동자료집」 신안군, 1999.
- 송보영, 「미군정기 식량통제정책과 농민운동연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신기현, 「미군정기 정당 · 사회단체의 토지개혁 인식」, 한국사회사연구회,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 (문화과 지성사, 1988), 279-323쪽.
- 안종철, 「해방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 櫻井浩, 「한국 농지개혁의 재검토」,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362-430쪽.
- 양동주, 「해방후 좌익운동과 민주주의민족전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76-139쪽.
- 양지은, 「농지개혁과 한국농촌사회변동 - 전라남도 담양군 사례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오연호, 「미군정 신한공사와 하의도 7·7항쟁」, 「말」 통권 32호, 1989년 2월호, 1989.
- 유인호, 「해방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1989), 395-477쪽.
- 이경숙, 「한국 농지개혁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해방후 한국농촌의 계급관계와 변혁운동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이규수, 「일본인 지주의 하의도 토지수탈과 토지회수운동」, 「하의3도 토지탈환운동자료집 (신안군 ·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소, 1990).
- 이규수,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집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0), 185-221쪽.
- 이규수, 「일제하 토지회수운동의 전개과정 -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사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1), 233-267쪽.
- 이규수, 「일제하 토지회수운동의 전개과정 - 전남 무안군 하의도의 사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2), 259-288쪽.
- 이대근, 「미군정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사 연구」 1, 한길사, 1983.
- 이동연, 「해방직후 전남지방의 농민운동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93.
- 이시중, 「해방직후 좌익계열의 토지개혁 검토」, 건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우재, 「8·15 직후 농민운동 연구」, 「한국농업 · 농민문제연구Ⅱ」 (연구사, 1989), 189-287쪽.

- 이우재, 「미군정기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한국현대정치사』 1 (실천문화사, 1989), 279-316쪽.
- 이우재, 「한국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민족민주운동」, 『한국민족주의 운동과 민중』, 두레, 1987.
- 이종범, 「1915-1950년대 농지소유구조의 변동-광산군 하남면 사례」,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826-853쪽.
- 이종범, 「20세기 중반 농지개혁과 농촌사회변동」 전라남도 구례군 사례, 『전남사학』, 19집, (서울, 2002), 419-442쪽.
- 이혜숙, 「미군정기 농민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8), 229-278쪽.
- 이혜숙, 「미군정기 일본인 재산의 처리와 농업정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 23 (문학과 지성사, 1990), 260-359쪽.
- 장상환, 「농지개혁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292-358쪽.
- 장안영, 「나주 궁삼면 토지회수투쟁(상,중,하)」, 『예향』, 1990년 4~6월.
- 정영일, 「전후 한국 농지개혁에 관한 일 고찰」,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6-2 (서울, 1967), 77-112쪽.
- 주봉규, 「미군정하의 귀속농지(歸屬農地) 분배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5-2 (서울, 1986), 221-232쪽.
- 최원규, 「해방후 농촌사회의 정치적 변동과 지주제 - 광주·해남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 논총-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울, 1990), 854-921쪽.
- 한송주, 「하의도 농토탈환투쟁(1)」, 『예향』, 1989. 9월.
- 함한희, 「조선말·일제시대 궁삼면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 변화」, 『한국학보』 18-1 (일지사, 1992), 2-52쪽.
- 함한희, 「해방이후의 농지개혁과 궁삼면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23-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1), 21-62쪽.
- 함한희, 「미군정의 농지개혁과 한국농민의 대응」, 『한국문화인류학』 31-2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407-437쪽.
- 황남준, 「전남지방 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9), 413-494쪽.
- 황한식,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 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251-291쪽.
- 황한식, 「미군정하의 한국농업」, 한국농업정책학회, 『농업정책연구』 8-1 (한국농업정책학회, 1981), 105-134쪽.

1970-80년대 전남지역 농민운동

I. 전국 농민운동 : 농민운동의 성장과 전농 결성

1. 1970년대 농민운동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거치면서 농업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정책 제시 및 정책비판의 차원을 넘어 농민들의 주체적 움직임에 근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식인들의 인식과 종교계의 협력에 의하여 농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¹⁾ 특히 이 시기에는 종교계의 농민교육활동을 통하여 농민운동 활동가 자원이 배출되게 되었다.

1) 농민교육 및 농민운동조직의 발전

1958년에 발족되어 산업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안에 농촌출신성원들이 많았고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던 관계로 농촌청년부가 1964년에 만들어졌다. 농촌청년부는 1966년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라는 보다 적극적인 농촌청년운동조직으로 독립, 발전하였다. 이 조직은 가톨릭 교회의 조직형식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생산협동사업, 신용협동사업, 농업기술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후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활동으로는 농업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농업문제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 4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는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로 조직을 개편하고 ‘농민권익의 옹호’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가농은 농민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창립 초기에는 농협의 반농민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열었으며 농민교육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 들어서는 특히 농업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쟁점들(농지임대차, 쌀생산비, 비료수급, 농협단위조합)에

1) 농민운동 이념의 변화과정에 관해서는 김태일, 『한국의 농민과 국가, 1964-1990』(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1991: 4장)을 참조.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를 홍보자료로 사용하면서 운동을 활성화해 나갔다.²⁾ 독재정권의 탄압이 심해지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가농은 오히려 농민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였고 다양한 권익실천 활동을 하였다. ·

또한 기독교계의 움직임도 이어져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농민교육 프로그램과 ‘YMCA연맹’의 농촌개발사업이 실시되었다.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크리스찬아카데미)은 1974년 발족했으며³⁾, 노동·여성·농민 등의 분야에 관한 강좌를 실시하였다.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실시된 농민교육은 농민운동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민주적 정치역량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5년 넘게 진행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약 800여 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였다. 농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서로 ‘동지’라고 부르며 대안적인 농업관련 교육에 참여하였다.⁴⁾ 교육 후반기에는 부락개발교육, 농촌신협교육, 농촌여성교육도 실시하였다.⁵⁾ 가농은 가농회원을 크리스찬아카데미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⁶⁾ 이 시기의 농촌청년활동가들은 농민교육을 통해서 연결망을 만들어 갔고, 이것이 나중에 농민운동의 지역적 전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⁷⁾ 같은 시기에 ‘YMCA연맹’도 ‘농촌신용협동조합’운동과 ‘부락개발사업’을 전개하여 농민들의 인식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교육받은 농촌청년들과 농촌지도자들 및 대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나중에 농민운동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이들 이외에도, 천주교 원주교구가 실시한 부락개발사업, 충북육우개발협회가 충북지역에서 실시한 부락개발사업, 그리고 농촌신용협동조합운동과 양곡조합운동, 개별분산적으로 활동하면서 농민운동을 갈망하던 각종 농사기술보급운동 참여자들도 농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⁸⁾

이러한 교육을 받은 농촌청년들은 가톨릭농민회와 나중에 결성된 기독교농민회에 활동가로 참여하여 농민운동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가농이 이미 활동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독교농민회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가농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

가농은 창립 초기에는 투쟁 목표를 농협의 민주화, 농촌의 민주화에 맞췄다. 이는 일선 행정기구나 농협 등 농업단체들에 의해 자행되는 관료주의의 횡포에 맞서 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가농은 1970년대 중반 들어 농업농민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후반 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

1978년 3월에는 전남기독교농민회가 창립되어 기독교 농민운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가농이나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농촌청년들이 해남과 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농에서 활동하다가

2) 정호경, 「현대 한국 천주교회와 농민운동-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박현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 2』 (돌베개, 1986), 270-271쪽.

3) 이 조직은 1979년 국가의 정치적 압력 속에 이른바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을 통해 강제로 폐쇄되었다.

4) 장상환, 「1970년대 사회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 『이론과 실천』(서울, 2001), 3-5쪽.

5) 이우재,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아카데미 농민교육」, 『한국농민운동사연구』(한울, 1991), 222쪽.

6)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 1966-1996』(한국가톨릭농민회, 1999), 49-50쪽.

7) 조영욱, 「1970년대 합평 농민운동의 연결망과 의미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 1998).

8) 이우재, 앞의 글(1986), 90-91쪽.

기독교농민을 조직화할 필요성에서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 농민운동은 1982년 3월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기농)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농민운동 조직의 틀을 세우게 된다.

2) 농민운동의 새로운 전개

1970년대의 농민운동은 아무래도 가농의 활동과 관련이 많았다. 종교에 의거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농민운동은 가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

가톨릭농민회는 1972년 명칭변경과 동시에 농민운동을 위한 농민교육, 조사활동, 조직강화를 해 나갔고, 197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농민권익실천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농협민주화운동과 쌀생산비보장운동(1977-1979), 그 외 다양한 협동활동과 농정시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나중에 기독교농민회로 묶인 사람들이 가농 안에서 활동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권익실천에 나서고 독재정권과 부딪치면서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0년대에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벌인 운동으로는 ‘함평고구마 사건’을 들 수 있다.⁹⁾ 1976년 발생한 함평 고구마사건은 고구마 수매를 둘러싸고 농협의 수매약속과 책임회피, 그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보상대책위 활동, 그리고 2년여만의 보상으로 특징지어졌다. 함평고구마사건은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농협의 횡포에 대응하고, 피해조사를 하고 농민들의 결집을 실험한 최초의 시도로서 남아 있다. 물론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의 활동이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면서 독재정권은 가농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1978년 2월 가농 춘천지부의 활동을 핑계삼아 지부 뿐만 아니라 전국 본부 회원까지 구속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1979년에는 경북 영양군의 농민들이 감자피해보상 활동을 벌였다. 보상이 마무리된 뒤에 정권은 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오원춘)을 납치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가농 간부들을 구속하여 이른바 ‘오원춘사건’으로 비화하였다.¹⁰⁾

1970년대의 농민운동은 농협강제출자, 신품종 강제경작, 주택개량사업강제, 부당농지세부과, 경지정리피해보상 등 말단 행정기관의 부정에 대처하는 운동과 이를 지원하는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적 권리요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운동방법도 부분적으로는 투쟁적인 것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진정서, 건의서 제출 등 청원방식 내지는 교회에서의 기도회, 농성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농민운동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농민운동의 담당인자를 배출하고 지역에 뿌리 내려갔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독재정권으로 표상되던 유신체제의 몰락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10.26사건(대통령피살사건) 이후 열린 공간 속에서 농민회원들과 농민단체들은 농업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화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

9) 조영호, 「함평군 고구마사건」, 한승헌 외,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춘추사, 1984), 172-185쪽.

10) 한국가톨릭농민회, 앞의 책(1999), 49-50쪽.

2. 1980년대 농민운동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방농업정책’으로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농산물 가격이 동결되거나 폭락하는 가운데 농민의 가계비 지출은 늘어만 갔다. 이렇게 농가경제가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농민운동은 1980년 5.17쿠데타 이후 잠시 침체 상태에 빠졌지만 곧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 농민운동의 재활성화

지역단위에서 농민들의 구체적 요구에 입각한 경제투쟁이 전개되면서 농민운동은 곧 재활성화되었다. 여러 지역에서 농민들의 다양한 투쟁이 있었지만 주로 사건화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1982년에 일어난 충북 음성 농민들의 부당농지세시정 투쟁은 억압적인 상황에서 대중적인 경제투쟁으로서 농민운동의 새로운 고양을 알리는 신호였다.¹¹⁾ 음성의 고추재배농민들은 1981년 말부터 부당농지세제시정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1982년 3월 부당농지세시정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농민대회에는 2,000여 명의 농민들이 결집하여 농지세 개정요구를 하였으며 그후 국회에서의 농지세제개정을 이끌어 냈다. 물론 각 지역에서 부당농지세제 시정운동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1983년 가농은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농협은 농민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독점자본의 편에 서서 농민을 수탈하는 기관이어 왔다. 이 서명운동은 일반농민들에게 농민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84년 들어 농민운동은 더욱 투쟁성을 띠어 갔다. 1983년 가을 추곡수매가가 동결되고 시중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몇몇 지역¹²⁾에서 수매량 확대 시위를 전개하게 되었다. 추곡수매량 확대요구투쟁은 수세현물납부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농지개량조합의 부당한 수세부과에 대한 항의가 계속 되던 와중에 농민들은 경운기에 벼를 싣고 농지개량조합에 현물납부하는 운동을 벌였다.¹³⁾ 특히 수세현물납부투쟁은 전국조직의 지도 없이 지역활동가들이 전개하였고 경운기를 가지고 시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후 농민운동에서는 시위형태의 투쟁방법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1984년 여름에는 기농과 가농이 농가부채탕감을 요구하는 전단을 만들어 대량 살포하면서 부채문제를 여론화시켜 나갔다. 특히 장터에 나온 농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였고 홍보·선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이후 군단위로 농민운동관련 회보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어서 1984년 9월 2일 전남 함평에서 열린 ‘함평·무안 농민대회’는 농민운동 발전의 또 다른 전기였다. 함평·무안 지역 농민들은 지역적 요구들(양파에 대한 율류농지세 철폐,

11) 최재영, 「82년도 음성 부당농지세 시정운동」, 장상환 외, 『농촌현실과 농민운동, 현장4』(돌베개, 1985), 203-221쪽.

12) 전북 임실, 전남 무안·함평·구례, 경남 진양, 경북 청송 등.

13) 엄영애, 『한국여성농민운동사』(나무와 숲, 2007), 197-206쪽.

생고구마전량수매, 농지개량조합비 특별부과 철회)과 농가부채탕감, 농축산물 수입금지, 수매가인상, 비농민소유토지 농민환원 등의 전농민의 일반적인 요구, 그리고 대통령의 방일반대, 지방자치제 실시 등 정치적 요구도 내걸었다. 가농, 기농과 지역 활동가들이 3개월여에 걸친 치밀한 조직작업을 통해 계획하고, 농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를 이용하여 700여명의 농민들이 모인 상태에서 목적의식적인 대회를 개최하였다.¹⁴⁾ 더욱이 농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요구들이 점차 관철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농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이 대회는 농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비농민의 동의를 끌어내고 정치적인 구호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농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이었다.

이어서 가농과 기농에서는 농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가농은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11월에 전국 7개 지역에서 연인원 1만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대회가 끝나고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기농은 충남북 지역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농민의 주장’을 발표하였다.¹⁵⁾

2) 농민운동의 대중적 전개

함평·무안 농민대회에서 제기된 농축산물 수입금지 요구는 1985년이 되면서 농민들의 전국적인 투쟁 목표가 되었다. 1980년대 들어 늘어나기 시작한 농축산물 수입이 이 시기에 수백 품목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는 복합영농이란 취지 아래 농민들에게 소를 키울 것을 권장하였는데, 쇠고기 수입을 늘려 소값 폭락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1985년 4월 기농은 미국 농축산물수입요구 반대규탄대회를 열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수입개방요구 반대시위를 전개하였다.¹⁶⁾ 이 시위는 이후 소값피해보상운동(소몰이 시위)의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 소몰이 시위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소값피해보상운동은 ‘소몰이’ 시위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농민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게 되었다. 가농과 기농이 함께 참여하여 전개하였다. 7월 1일 고성군에서 소 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소를 몰고 장터를 도는 ‘소몰이’ 시위 투쟁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이후 두 달 동안 전국 20여 개 군¹⁷⁾에서 2만여 명의 농민들은 소를 앞세워 경찰저지선을 돌파하였고 소와 함께 걸어서 장터나 지역을 순회하였으며 경운기 시위도 벌이고 국도도 차단하였다.¹⁸⁾ 투쟁이 진행될수록 일반 농민대중의 참가가 늘어났고 여성농민들의 참가가

14) 박연섭, 「80년대 농민운동의 비판적 고찰」, 『해방 40년의 재인식 2』(돌베개, 1986), 299-305쪽.

15) 엄영애, 앞의 책(2007), 206-212쪽.

16) 박연섭, 앞의 글(1986) 305쪽.

17) ‘소몰이 시위’ 형태로 소값피해보상운동이 일어난 곳은 경기 안성, 강원 홍천·춘천·원주, 충북 괴산·청주·진천·음성, 충남 당진, 전북 완주·진안·임실·부안, 전남 무안·함평·해남·강진, 경북 의성·안동, 경남 고성·진양 등 20여개 군이었다.

18) 한국가톨릭농민회, 『'85 소값피해보상 및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 자료집』(한국가톨릭농민회, 1987).

두드러졌으며, 농민들의 요구도 단순한 소에 대한 문제에서 미국 농산물 전반에 대한 수입저지로 한 단계 더 발전해 갔다. 정권을 미국의 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화 요구도 제기해 나갔다.¹⁹⁾

소몰이시위 투쟁이 전국적으로 일반 농민대중의 광범한 참여 속에 전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기존의 종교단체의 형식을 빌린 농민운동 조직으로는 이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 신부들이나 전국조직 간부들이 농민의 적극적인 시위 방식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9월 들어 소값피해보상운동은 농민대회를 통해 정리되어 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종교계의 제지로 농민들의 투쟁활동이 제약되기 시작하였다. ·

1985년에는 농축산물 수입반대 및 소값피해보상운동 이외에도 불량종자피해투쟁과 간척지 소작료 인하 및 분배 요구투쟁이 전개되었다. 불량종자문제를 제기하면서 씨앗값만의 보상이 아니라 농민들의 재배피해까지 보상받는 진전을 이루었다.²⁰⁾ 또한 농지개혁 당시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간척지의 토지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더욱 확대되고 있던 소작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

(2) 대중투쟁 조직의 결성

정권은 소몰이 시위를 통해 농민대중의 항의가 거세어지자 1985년 후반기부터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농민운동은 점차 정치적 요구를 진전시켜 나갔다.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투쟁위원회들이 지역과 전국 단위에서 결성되었다.²¹⁾ 상반기에는 이들 지역단위 투쟁조직들에 의한 정치투쟁이 전개되고, 하반기에는 지역단위의 운동노선을 수립하면서 전국규모의 투쟁조직이 결성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²²⁾ ·

지역 투쟁에는 가농, 기농이 함께 하고 독자적인 농민조직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지역투쟁 사례로는 ‘강진지역 농협문제대책위원회’의 농협쇠뿔물투척사건, ‘수입개방저지 및 미국예속정권타도를 위한 무안농민 투쟁위원회’의 선전활동과 농민대회 개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미농축산물 수입저지실천대회’가 가농에 의해 전국 및 도 단위에서 개최되었다. 기농은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신민당(당시 야당)사 농성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농민운동은 점차 대중적 선전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가농 군 협의회나 기농 군 농민회에서는 독자적인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내기 시작했으며, 전남 무안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선전방법으로 페인트로 주장을 주요 건물의 벽이나 길가 농가의 담벼락에 쓰는 운동이

19) 각 지역의 활동사례와 각 농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가톨릭농민회(1987)의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관방원예작목회, 「농민운동의 새로운 기수가 되어」, 장상환 외, 『농촌현실과 농민운동, 현장4』(돌베개, 1984), 190-202쪽.

21) 이정찬, 「자주·대중노선의 정착과 농민운동의 전국단일조직 건설」,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죽산, 1990), 183-221쪽.

22) 허현중, 「농민운동: 대중노선에 입각한 대중조직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전환』(사계절, 1987), 235쪽.

전개되었다.²³⁾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는, 1986년경부터 종교단체의 형식을 빌리지 않은 자주적인 농민조직들이 군 단위에서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인 전국 단위의 농민운동 조직을 세울 것을 주장하여 이들 가운데 일부가 1987년 2월 ‘전국농민협회’ (전농협)를 창립하였다.

(3) 대중투쟁의 고양

1987년 들어서는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농가부채 공청회’라는 새로운 투쟁방식에 의하여 부채농가들이 결집하였다. 또한 자본 중심의 토지개발정책 및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투쟁도 벌여 나갔다. 특히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농민운동을 크게 고무하였다. 6월항쟁 기간에는 각 지역의 농민들이 ‘독재타도’와 각종 농민요구를 내걸고 시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6월항쟁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당시의 연합조직에 전국농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참여하였다.²⁴⁾

그러나 정부는 1986년 이미 9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물무역 완전자유화를 위한 무역협상을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농업포기정책을 노골적으로 취하기 시작하였고 골프장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갔다. 이에 농민들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요구들로 폭발하기 시작했다.²⁵⁾ 특히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자주적인 농민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해 졌다.

1987년에는 소작답 양도투쟁이 더욱 강화되어 일부 유상양도를 쟁취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서 토지투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투쟁도 전개되어 주요한 지역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수세납부거부운동이 점차 해남, 나주 지역의 농민들을 선두로 수세폐지투쟁으로 발전하였다.²⁶⁾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투쟁은 더욱 강해졌고 더불어 농산물제값받기 투쟁이 고추생산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농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는 의료보험문제를 제기하고 의료보장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기 시작하였다.²⁷⁾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걸친 투쟁들이 ‘농민대투쟁’이라 할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1988년 한 해 동안 무려 350여 회, 연인원 20여만 명의 농민들이 각종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참가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가농, 기농, 전농협, 그리고 다른 독자적인 농민회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기본적으로 외국농산물 수입 저지 및 농산물 제값받기 투쟁이 주조를 이루면서, 다양한 투쟁영역들이 등장하였다. 투쟁영역별로 보면, 대규모간척농지의 분배요구투쟁과 토지수용반대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토지투쟁, 품목별 지역별로 농민운동단체와 생산자조직이

23) 박연섭, 앞의 글(1986), 315-316쪽.

24) 허현중, 앞의 글(1987), 242-251쪽.

25) 이호철, 「1980년대 농민운동의 전개와 그 과제」, 『경상논집』(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3) 21-1, 77쪽.

26) 김준, 『수세폐지 운동의 조직론적 연구 -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91).

27) 이정찬, 앞의 글(1990), 199-205쪽.

결합해서 벌였던 외국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투쟁, 양담배수입으로 담배농가의 고추생산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추값 폭락과 그에 대한 농산물제값받기투쟁,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시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수세폐지·농조해체 투쟁, 그리고 의료보장쟁취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운동방식은 점차 격렬해 졌다. 집회를 넘어서 점거방식이 등장하였고 트랙터, 경운기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투쟁에 참여하는 농민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투쟁이 연중 끊임없이 전개되었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²⁸⁾

1989년에 들어서 열린 ‘2.13 여의도 농민대회’는 농민운동 역사상 대중조직이 움직인 최초의 행사였다. 가농과 기농을 중심으로 한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이 개최했는데, 수세폐지, 고추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1989년 들어서도 이들 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민운동의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농민들의 투쟁이 지역에서 전국으로, 일회성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농민운동의 전국 조직이 가농, 기농, 전농협 등으로 분열된 폐해가 발생하였다. 사업이 중복되고, 조직 간에 소모적인 갈등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민대중들로부터 전국조직을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농민대중의 요구는 사실 이미 1986년경부터 대중적인 투쟁이 전개되면서 내부로부터 제기되어 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쟁과정에서 내재적으로 실현되어 오기도 한 것이었다.

3. 농민운동조직의 성장과 통일

이상에서 보았듯이 대중적 투쟁이 점차 확산되면서 1986년부터 1987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투쟁위원회들이 만들어 지고 밑으로부터 군단위 조직화가 시작되었다. 87년 민중항쟁에 뒤이어 1988년 농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개되었고, 이와 더불어 각종 농민대회를 통해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1) 농민운동조직의 성장

1972년부터 가톨릭농민회는 농민권익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농민운동을 주도해 왔다. 교구(도단위)를 중심으로 연합회가 결성되어 교회의 공식단체로 활동하였다. 1973년에 경기연합회, 1974년에 전남연합회가 결성된 뒤 1976년과 1977년에 다른 연합회들이 대부분 결성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 부녀부를 두어 여성농민의 농민운동 참여를 촉발하였다. 즉 가농은 1977년에 들어 전국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조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6년의 함평고구마 사건에서부터 1970년대의 운동에 대부분 개입하였고 1980년대 전반기의 농민운동 현장에서 농민들을 각성시켰고 농민활동가들을 만들어 냈다. 조사연구활동을 하면서 농협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독재정권 시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에도 억압적인 상황에서 투쟁을

28) 장상환, 「농민운동의 현대화와 과제」, 『현 정세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두리, 1989), 109-132쪽.

여어냈으며 특히 소몰이 시위에서 가농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대중적인 농민투쟁 시기에 다양한 운동에 개입하여 투쟁을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역별로 전국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였다.²⁹⁾ 그러나 대중적인 농민투쟁이 활성화되던 와중인 1987년 주교회의 과정을 통해 신자만을 농민회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1989년 이후 농민운동통일과정에서 ‘전국농민운동연합’을 거쳐 전국농민회총연맹에 통합되었다.³⁰⁾ 그 이후 가농은 신자들만을 위한 운동으로 전환하였고 생명공동체운동을 중심으로 우리밀살리기운동, 귀농운동 등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70년대 후반 농민교육을 받은 농촌청년들이 해남과 무안, 강진 등에서 활동하면서 1978년 ‘전남기독교농민회’를 결성하게 된다. 그 후 활동을 넓혀 1980년에 전북기농이, 1982년에 충북, 경북기농이 만들어지면서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 (기농)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조직 초기에는 조직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면서 농축산물수입개방저지 투쟁을 선도하였고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투위 등을 만들어 나가면서 가농과 함께 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³¹⁾ 19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지역단위에서 농민들의 운동이 활발해 지긴 했으나 기농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상층의 선도적 투쟁에 기운 측면이 있었다. 농민운동의 조직적 통일과정에서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결합하였고 그후 ‘한국기독교농민회’로 이름을 바꾸어 평신도농민선교단체로서 새롭게 활동해 왔다. ·

농민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던 1985년 함평농우회의 창립과 농민대회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농민조직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히 다양한 쟁점별 운동이 전개되면서 농민운동에서 생활권 및 지방권력에 대응한 농민조직의 기본단위로서 군농민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1986년과 198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군농민조직들이 결성되었다.³²⁾ 물론 면단위,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는 모임들이 나타났고 그러한 단위에서의 소식지들이 발간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위에서 10여개의 군농민회 조직들이 1987년 초에 ‘전국농민협회’ (전농협)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 대중노선에 따라 농민운동을 조직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갔다. 전국농민협회는 축산이나 특작이 아닌 일반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의 회비로 재정을 충당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작부체계가 유사하고 동일한 행정관청의 통제 아래 놓임으로써 단일한

29)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 30년사』(마산, 2009);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안동가농 30년』(안동, 2011);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30년사』(원주, 2009).

30) 한국가톨릭농민회, 앞의 책(1999).

31) 정명재·민상기·최경환, 『주요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59-84쪽.

32) 경남의 의창·함양·거창, 전남의 담양, 전북의 김제·부안·순창, 충남의 예산, 충북의 청원·보은·음성, 경기의 포천·화성, 경북의 예천 등지에서 종교적 색채를 벗어난 자주적인 대중조직들이 결성되어 일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정찬, 앞의 글(1990), 198쪽.

구조 아래 농업정책이 수행되는 군을 기본단위로 하여 면과 마을에 하부조직을 갖는 자주적 농민조직들이 속속 생겨났다. 자주적인 농민조직들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1988년 말 지역 농민조직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39개 군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농민운동조직이 있는 군의 수는 101개에 이르렀으며, 군단위 조직의 수는 가농의 군협의회가 6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국조직에 미가입한 자주적 농민회가 40개에 이르렀다. 군단위 기독교농민회가 16개 군에 있었고 전국농민협회에 가입한 군조직의 수는 19개 군이었다.³³⁾ 각종 농민운동조직을 합하면 137개에 이르렀다. 지역 단위에서의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농민조직들의 결성은 조직적 농민운동 흐름의 통일을 촉진하였다. ·

2) 농민운동조직의 통일

가농과 기농이 운동을 주도하던 가운데 1985년 함평군농우회의 창립 이후 다양한 독자적인 농민회들이 창립되었다. 특히 1986년 각종 투쟁위원회 형식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교조직의 틀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7년 초 ‘전국농민협회’가 출현하면서 농민운동의 단일조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국적인 통일조직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것은 1988년 11월의 ‘농축산물수입개방저지’ 농민대회였다. 전국의 14개 농업농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 대회가 계기가 되어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어서 1998년 말부터 가농, 기농, 전농협 등이 전국적 단일조직 설립을 논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989년 3월 가농과 기농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군농민회가 참여하는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이 결성되었다. 10월 들어 전농연과 전농협이 공동으로 ‘쌀값보장과 전량수매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단일조직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구체적인 조직통일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1989년말 양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자농조직’들이 단일조직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자 통일작업은 속도를 내게 되었다.³⁴⁾ 준비작업을 거쳐 1990년 4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결성되었다.

농민운동의 조직통일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

33) 장상환, 앞의 글(1989), 133쪽.

34) 정명재 외, 앞의 책(1995), 89쪽.

〈그림 1〉 농민운동조직의 발생과 통합과정



자료: 정명채 외, 1995: 90.

1980년대 농민운동을 결산하는 의미를 지닌 전농의 결성은 기존의 운동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조직적 결론이었다. 대중들의 활발한 투쟁을 상향식으로 조직화하여 각종 분열된 농민운동조직을 통일한다는 것은 분열지배를 획책하는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농민적 대항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

전농 스스로 자신을 1980년대 자주적 농민운동의 결실이라고 보며, 기존의 분립된 전국조직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군 단위 대중조직에 기초를 둔 전국농민조직으로 규정하였다.³⁵⁾

이제 농민운동이 전농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전농조직이 투쟁단위가 되어 갔다. 전에는 각종 투쟁위원회 등의 활동이 활발했던데 반해 농민운동의 각종 활동들이 점차 전농의 계통조직(전농 중앙-도연맹-시군농민회-읍면지회-마을분회)을 통해 이루어졌다. ·

35) 신연관, 「‘전농’ 결성의 의의와 과제」, 『농어촌사회』(농어촌사회연구소, 1990년 여름), 19-37쪽.

II. 1970-80년대 전남지역 농민운동

1. 1970년대 농민운동

1) 가톨릭농민회의 현장활동

(1) 가능 농민조직의 성장 : 전남연합회, 군협의회(농민회), 분회.

가톨릭농민회는 1972년 4월 5-7일 왜관 피정의 집에서 전국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공식출범하게 된다. 회장 이길재는 호남지역 조직책임자로 나서 지역농민을 조직하는데 힘썼다.

전남지역에서 가톨릭농민회 현장활동은 1970년 12월 분회가 처음 조직된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의 향진회(분회)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5년까지 여러 지역(나주 계량분회, 함평 대동분회, 곡성 원달분회, 구례 구만리분회, 함평 외대화분회, 무안 상조분회)에서 분회가 조직되었다. 1976년에서 1979년 사이에는 한해 평균 10개의 분회가 각 지역에 창립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창립된 가톨릭농민회는 함평 14개, 무안 7개, 보성, 구례, 영광이 각각 4개, 고창 3개(광주교구에 포함되어 있었음), 나주, 곡성, 강진, 광산이 각각 2개, 신안이 1개였다.

이러한 분회 조직에 기반을 두고 1973년 8월 20-21일에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가톨릭농민회 전남지부'³⁶⁾가 결성되어 조직확산에 나서게 되었다. 회원(분회)확대 노력으로 회원이 31명에서 1974년 68명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1974년 12월 가톨릭농민회 전남지부가 '가톨릭농민회 전남지구연합회'³⁷⁾로 발전하였다.

전남연합회의 결성은 본격적인 지역활동의 결과였다. 1974년에는 연합회(지부) 단위로 총 20여회의 각종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전개하였다(집회교육 2회, 조사연구사업 2회, 보고대회 2회, 파견교육 3회, 분회단위교육 2회, 현지 집회 농민회 소개교육 3회, 현지 집회 신협교육 8회). 3월 8일에는 전남지역 농촌지도자 훈련회(1차 훈련회)를 광주가톨릭센터에서 30여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그리고 8월 26-30일에는 호남지구 지도자 훈련회(2차 훈련회)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전남에서는 12명(총 28명 가운데)의 농민이 참가하였다. 그 외에도 12월 18-22일 경북 왜관에서 열린 중견간부 연찬회에 3명이 참가하였고,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실시된 농촌지도자 지도력 개발과정 교육에도 참가하였다(11월 11-15일 교육 2명 참가, 12월 7-11일 교육 4명 참가).

1979년 들어서는 지역조직을 강화하게 되었다. 함평, 구례, 무안, 보성(지부) 지역에서 협의회(임의조직)가 구성되었다. 각 협의회의 조직을 강화하여 분회-협의회-연합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단위 조직의 활성화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었다. 또한 협의회 간의 연대활동도 전개되었다.³⁸⁾ 그런데 1979년에는 가톨릭농민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거세지면서 분회활동이

36) 회장 전광식, 총무 김동혁.

37) 회장 김동혁, 총무 서경원.

38) 함평, 무안 협의회가 4월 22일 공동으로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수입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

위축되기도 하였다. 안동 오원춘 사건³⁹⁾을 계기로 정권이 가톨릭농민회를 좌경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기관의 적극적인 회유공작이 거세졌다. 이로 인해 무안군 일로면의 영화분회, 상조분회, 덕우분회, 해남군 황산면의 연당분회 등 상당히 많은 분회들이 해체되었다.⁴⁰⁾ 또한 무안군의 유월분회(1977년 창립) 같이 주도적 인물이 기능으로 옮겨가 분회 자체가 기능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1979년에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교육(34회, 440명), 분회교육(16회, 185명), 지역교육(5회, 345명), 도단위 교육(7회, 311명)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농촌문제, 농민운동, 가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강사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가농조직에서 활동해 오던 활동가들이었다. 기초교육은 함평과 무안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분회교육은 함평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사제연수회, 조사원교육, 부녀교육, 지도자교육, 지도자훈련회, 임원연수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하였다. 그리고 가농활동가들 가운데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1차 3명, 2차 6명)과 신헌중앙회 교육(2명)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교육 및 조직활동은 농민문제를 의식하고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농민운동의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그 이후의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농민회원들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가농에 대한 공신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신헌을 축으로 이루어진 협동적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탄생하고 있었다.

(2) 쌀생산비조사와 쌀생산비보장운동

가농은 본격적인 활동을 해 나가기에 앞서 다양한 조사연구를 기획하였다. 그 첫 과제로 1974년에 농지임대차관계 및 비료수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전남 지역에서는 농지임대차관계실태조사(2월 28일-7월 10일)와 협동적 지역개발 활동에 관한 사회경제적 분석작업(3월 10일-4월 10일)이 진행되었다(2개 시 8개 군).

1975년 들어서는 1970년대 농민운동의 한 획을 긋는 '쌀생산비조사'가 시작된다. 이 조사는 그후 몇 년간 계속되며 쌀생산비보장운동으로 이어진다. 첫 해에는 도내 3개 농가가 생산비조사에 나섰다. 이들 농가는 조사원교육을 받고 각자 농사를 지으면서 농수산부의 생산비조사 기준에 의거한 지출비 항목에 따라 생산비를 계산해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전국 8개도 28농가에 대한 결과는 10월 28일 발표). 이어 1976년에는 조사농가수를 5배로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전국 111농가). 전국 단위에서는 쌀생산자보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전남의 가농회원들과 조사원들이 참여하였다.

1977년에는 전남 지역에서는 26농가(전국 146농가)가 쌀생산비조사를 완료하였고 쌀

39) 1979년 5월 안동가톨릭농민회 오원춘을 중앙정보부가 납치,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두고 벌어진 사건.

40) 1982년 이후 몇몇 지역에서 분회복원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생산비보장요구 서명운동에 9개군에서 2,039명이 참여하였다. 1978년에는 전남지역(전국 190농가)에서 2월 28일 지구조사원 교육을 통해 16개 분회 소속 48명의 조사원과 산재회원 및 비회원 23명의 조사원을 선정하여 쌀생산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명운동에는 지역사회의 유관 인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8,921명 서명). 이러한 움직임은 '78년 쌀생산자대회 및 추수감사제'로 이어져 11월 27-28일 광주(계림동 성당)에서는 호남지역 1,3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어졌다. 1979년에는 전남지역(전국 208농가)에서 66농가가 쌀생산비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농민회 탄압으로 조사원들이 탈락하고 이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24농가만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서명운동도 1979년 들어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2,234명 서명) 부마사태와 10·26사태(박정희 피살)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3) 농협민주화 및 농정시정 운동

가농은 1970년대 초반부터 농협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남지역현장에서는 1976년부터 농협출자강요, 비료불량품배급(함평 향진회분회), 추곡수매강요(구례 구만리분회) 등의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구만리 분회 농민들은 추곡수매강요에 대한 항의 뿐만 아니라 갑을류농지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농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대전 대흥동성당)에서 가농 전남연합회는 바자회를 열어 농민회원이 모두 출품하도록 하였고, 농협강제출자를 소재로 한 단막극을 공연하였다(곡성 원달분회).

1977년 들어 가농은 각종 교육을 통해 농협민주화 활동을 펼쳐 나갔다. 전남지역 분회에서는 본부에서 제작배포한 '농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팸플렛 등으로 학습하고, 비료의 조직적 구입, 수매시 출자강요 거부, 비료 조별판매 시정, 농약 강매 거부와 반납, 추곡수매대금의 20% 6개월 예금요구 거부, 출자동의서 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0개 분회(향진회, 마량, 상록수, 외대화, 구만리, 원달, 신기, 유월, 가덕, 노동 분회)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봄 맥기비와 봄 누에고치 수매시 강제출자를 완전 거부하고 비료를 조직적으로 구입하였다.

농협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으로는 함평고구마 사건을 들 수 있다. 함평고구마 사건은 1970년대에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벌인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1976년 발생한 함평 고구마사건은 고구마 수매를 둘러싸고 농협의 수매약속과 책임회피, 그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보상대책위 활동, 그리고 2년여만의 보상으로 특징지어졌다. 함평고구마사건은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농협의 횡포에 대응하고, 피해조사를 하고 농민들의 결집을 시험한 최초의 시도로서 남아 있다. 물론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의 활동이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부각되었다.

함평 고구마 사건 발생 당시인 1976년 전남 해남군과 무안군은 고구마 주산지로, 생산된 고구마는 농협에서 수매하고 일부는 상인들에게 직접 팔기도 했다. 1976년에 농협은 고구마 수매 가격을

41) 조영호, 앞의 글(1984), 172-185쪽.

상인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게 (상인=한 포대당 1,100-1,200원, 농협 수매가=한 포대당 1,317원) 책정하고 생산된 고구마 전량을 수매한다고 발표했다. 수매할 고구마는 농협에서 나누어 준 포대에 담아서 도로변에 쌓아 놓으면 농협에서 수집해 갔다. 그런데 1976년에는 일부 소량만 거두어 가서 길거리에 쌓아 놓은 고구마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농민들은 썩어 버린 고구마에 대해 농협에 가서 항의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함평군내 9개 마을, 160개 농가 피해). 하지만 농협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에 가능 회원들은 11월 17일 함평읍내에서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에 찾아가 항의했다. 대책위원회가 피해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농협측은 피해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회유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는 1977년 4월 각계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보내고 광주 계림동 성당에서 '고구마 피해 보상을 위한 기도회'⁴²⁾를 열어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그 결과 농수산부에서 피해조사단이 파견되어 피해액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농은 1978년 4월 광주북동성당에서 다시 기도회를 열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즈음 함평 고구마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단식투쟁 8일만에 농협은 피해액 309만원을 보상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감사원은 1978년 2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농협 4개 도지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단위 농협이 중간상인들(주정회사)과 결탁하여 상인에게 산 것을 농민에게 수매한 것처럼 하여 농협 자금 80억 원을 유용한 대규모 부정사건을 밝혀냈다. 함평 고구마 사건은 관제 농협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보상을 받음으로써 농민이 승리한 사건이었다.⁴³⁾ 이 투쟁은 전남지역은 물론 사회운동권 전체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농민인권위원회를 탄생시켰다.⁴⁴⁾

1978년 들어 농협민주화 활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전남연합회에서는 각종 자료를 공급하였으며, 4월 3일-7일에 농협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6개 지역 분회장이 이수하게 되었다. 각 분회(16개)에서는 전국본부에서 제작한 '농협법규집', '총대선출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자료로 학습을 실시하였다. 비료공동 구매시에 불필요한 비료를 끼워서 파는 조별판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시정하였으며(외대, 향진회 분회), 농민회원들이 시장과 연결하여 농협에서 파는 소금 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는 활동(노동 분회)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5개 분회에서 영농자금 대출시 출자금을 비료와 연관시켜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시정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1978년에 정부당국의 횡포에 대한 항의운동으로는 노풍피해보상운동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가농은 1978년 말 들어 전국적으로 노풍피해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가 신품종으로

42) 당시 정부에 대해 비판 · · 요구 등의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회뿐이었다(엄영애, 2007: 100).

43) 가톨릭농민회, 앞의 책(1999), 221-222쪽.

44) 가톨릭농민회 광주연합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광주본부 · 천주교광주교구 농민사목, 『한국가톨릭농민회 · 우리농촌 살리기운동본부 40년사, 1-2』(광주, 2013), 1권 19쪽.

강제한 노풍이 병충해를 견디지 못하여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농은 1978년 12월 6일-1979년 1월 10일 사이에 노풍피해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전국 241농가)를 실시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보성협의회가 노동분회, 조성분회, 영동분회 120여 농가를 대상으로 1979년 1월3-5일에 걸쳐 노풍피해 조사활동을 하였다. 노풍피해보상운동은 보성 뿐만 아니라, 광산, 강진, 나주, 함평 등(마량분회, 청류분회, 만년분회, 북성분회)에서도 전개되었다. 농민들은 이 활동을 통해 정부의 공정한 피해를 조사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정부의 허구적 보상과 행정체계의 난맥상을 지적하였다.

1979년 들어서 농협민주화 활동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분회단위의 활동은 ‘조합운영의 민주화’ 관련 활동과 ‘강제판매(비료조별판매) 시정’ 등이 있었다. 상반기에만 20여개의 분회가 각 지역의 조합장 및 참사를 상대로 농협사업에 관한 대화를 가졌으며, 강제출자문제, 비료조별판매문제, 영농자금배분문제 등을 내용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합의 실태를 파악하여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벌였다. 청계분회는 단위조합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 서명운동을 하여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였으며, 함평, 구례, 신안, 영광 등지에서 조합원 스스로 총대를 선출하였다.

1980년 들어서도 가농 분회들은 농민들에게 농협교육을 실시하고(15개 분회), 강제출자를 거부하고(14개 분회), 농협 사업을 공동이용하는 활동을 하였으며(7개 분회), 총대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였다(5개 분회).

(4) 권익활동

가농 본부에서는 1975년에는 구례(광의면 구만리)와 함평(대동면 금산리)에 연구마을을 추진하였다. 이는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주권재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농민의 권익운동을 통해 민주국민의 모범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1976년에는 구만리에서 경지정리 피해보상투쟁, 갑을류농지세 문제제기 등의 활동을 해 나가게 된다.

1977년 들어 가농이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안 객토자금 횡령사건, 무안 해제면 사료부정사건, 원달 전기 가설공사 노임 부정사건, 구례 구만지구 경제 제2경지정리사건, 원달분회 대전 쌀생산비보고대회 참가자 탄압사건, 함평 외대 지붕개량 사건 등이 터져 나왔다. 농협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의 횡포 앞에 농민조직이 만들어진 분회에서는 농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1978년에는 구만리 분회에서는 경지정리 제2차 자갈단지 피해를 입은 4개 리, 98호 농가가 참여하여 교육과 총회를 개최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곡성 행정분회에서는 고속도로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해 주민들이 사업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특히 외관만을 바꾸려는 행정당국의 의도에 맞서 강제지붕개량

거부에 나섰다.

1979년 들어 정권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농정행정이 극에 달했고 농민들에 대한 다양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게 되어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 강제농정의 형태는 벼 신품종(노품) 재배강요, 비료조별판매 및 자재강매, 지붕개량 강요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각 분회의 거부 및 보상 운동이 있었다. 권익침해에 대한 권익실천활동으로는 경지정리(광산)나 객토사업(구례) 등의 부조리와 각종 수매 부조리(영광, 강진, 무안)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 특히 함평(노품피해 보상운동, 수리조합비 부당징수, 임목벌채 사건, 도로부실공사, 농산물수입반대서명운동, 신품종강제권장, 을류농지세 부당과세, 조합장이 새마을지도자 구타)과 무안(종자공 착복사건, 극빈자 구호양곡 착복사건, 영세농 연탄보조비 착복사건, 하곡수매 부정, 을류농지세 부당징수)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터지고 그에 대한 농민회원들의 대응활동 또한 활발하였다.

또한 당국의 탄압이 현장에서도 드러나기도 했다. 별교분회, 만연분회, 청류분회, 무안지역 등지에서 지역협의회 구성모임에 대한 경찰의 방해와 농민의 회원가입 방해가 있었다. 마을 이장이 농민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간첩 운운하고 마을지도자가 조합에서 강제출자요구를 시정하다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협동활동

가농은 분회 일선회원들에게 협동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미 1974년부터 가농은 ‘농업협동화’를 내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러한 경제사업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활동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용협동사업 및 협동화사업과 분회협동이 있었다. 1974년에 신용협동사업으로 6개 조합(목포, 나주2, 함평, 구례)이 창립하였으며 전남연합회 산하 분회 2개 지역, 준분회를 2개소에 추진하였다. 또한 가농본부에서는 농업협동화사업으로 작목별 협동사업을 협력·지원하였다. 그에 따라 분회의 작목별협동조직 사업이 진행되었다(양천리분회의 비옥우사업, 다시분회의 양돈사업, 구례 구만리분회의 솔밭울공작품제작활동). 또한 곡성 원달분회의 교육훈련, 나주 산포분회의 협동사업, 함평 대중분회의 신휴조직사업 등이 전개되었다.

1977년 들어 가농이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면서 전남지역에서도 다양한 협동사업이 전개되었다. 생산농민들을 중심으로 신용, 구판, 생산과 관련한 협동활동을 벌여 나갔다. 여러 분회(반월, 덕우, 구만리, 원달, 외대, 장연)가 분회단위의 공동작업(공동모내기, 품앗이, 비료공동구입, 보리타맥 등)을 해 나갔다. 이 외에도 분회간 신품종교환 및 우수품종 육성 경험 교환, 효소농법 보급 및 효소 판매, 경제작물공동재배(구만리), 압해면 지하수개발 협력 등도 전개해 나갔다. 신용협동으로는 7개 분회(구만리, 양천리, 가덕, 신기, 유월, 산포 노동)가 신용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그 외에 마을금고(덕우, 마량), 구판사업(상록수, 구만리, 신성, 마량),

양곡사업(덕우, 마량, 원달, 상조회)을 마을이나 공소 단위의 회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해 나갔다. 어떤 분회는 몇 가지 사업을 벌여 나갔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농민들은 이러한 활동 외에도 친목도모 활동도 하고 바자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협동활동과 경제사업은 1978년에도 이어졌다. 생산관련 협동사업으로 양파(또는 파)공동생산을 하고(마량, 구만리, 외대) 경운기를 공동이용하고 농로확장 작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그리고 신탁활동, 구판매사업, 마을금고, 양곡조합 등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더 나아가 마을에 상비약을 설치하고 효소농법 등의 활동을 하였다. 덕우분회는 감자, 오이 등을 효소 효과 시험재배를 시도하였다.

더욱이 봉사활동을 활성화 해 나갔다. 주민보건을 위한 공동소독 실시, 마을대청소, 회원 출타시 가사돕기, 모내기 봉사, 노동력 없는 가정 돕기 등의 노력봉사를 했으며 마을 경로잔치를 열기도 하였다. 이처럼 농민회원들은 회원간 협동활동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정치적 탄압이 강화되는 속에서 오히려 농민들의 협동활동은 더 확산되어 갔다. 1979년에는 가농 34개 분회에서 다양한 협동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생산협동으로는 수도작에서 공동품앗이(가덕, 만년, 유산, 그리고 구만분회는 공동논갈이)를 하거나 양파공동생산(외대), 해태공동생산(장감리), 닭 공동사육(입석) 등을 해 나갔다. 신용협동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14개 분회가 참여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기금이나 계 형식을 운영하였다. 구매협동에서는 자재(장감리)나 종자(외대)를 염가로 구입하거나 농기계공동이용이나 양계공동사업을 위한 농기계(구만리)와 닭 구입(입석)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강제출자를 거부하면서 비료를 공동구입하는 활동(만년, 청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동활동은 판매협동으로도 이어졌으며, 닭, 추곡, 양파의 공동판매(입석, 구만리, 외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동활동은 다양한 권익실천활동으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봉사활동이나 문화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신일분회에서는 민원사무 봉사활동으로 마을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무를 면사무소를 상대로 해 주었으며, 외대분회에서는 마을 관혼상제시 협력하고 마을비료를 공동구입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농민회원들은 회원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한 활동도 해 나갔다. 특히 구만리 분회에서는 정월대보름에 줄다리기, 농악놀이, 장기자랑 등을 하였고, 대촌분회에서는 새해맞이 농악놀이를 4일 동안이나 진행하였다. 농민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은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농민회원들은 마을에서 신임을 얻게 되었다.

2) 전남기독교농민회

(1) 전남기독교농민회의 조직

기독교농민회는 1970년대 중반이후 농촌교회 평신도와 농촌교회 청년세력 일부가 지역단위 농민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농민운동가를 배출하는 유일한 농민교육기관인 크리스찬아카데미 농민교육을 통해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농민대중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농민운동 전개를 통해서 농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가톨릭농민회에 참여하거나 지역단위에서 자발적으로 농민소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농촌분과위원회와 연결을 갖고 활동하는 기장, 예장, 감리교 농촌청년들이 지역에서 농촌청년활동을 하는 가운데 기독교농민회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러다가 1977년 전남지역에서부터 농민운동의 역량강화 및 농민운동세력의 양적 확산을 통해 전체 농민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독교농민회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남지역 농민운동 내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즉 당시 농민운동 상황에서 보다 많은 농민대중의 양적 확보를 통하여 농민운동의 저변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농민운동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당시 농민운동 내부의 현실적 요구에 기초하여 기독교농민회는 민중신학의 현장적 실천을 매개하면서 전체 기독교민주운동세력의 지원을 받아 농촌교회 평신도와 농촌교회 청년, 그리고 일반농민대중을 농민운동세력으로 발전시켜 전체 농민운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민운동세력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전남 내 무안, 해남, 강진, 보성 등지에서 농민운동에 선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촌교회 평신도와 농촌교회 청년활동가가 모여 기독교농민회의 조직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직적 태동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전남지역 기독교농민회의 주도세력들은 전체 기독교민주운동세력과의 연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서울 선교교육원에서 민중신학자, 기독교교수, 기독교인권운동세력, 기독교청년, 농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촌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기독교농민회 조직체의 필요성과 의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전체 기독교민주운동세력과 함께 기독교농민운동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지원과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1978년 2월에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농촌분과위원회의 지원으로 농촌청년교육을 선교교육원에서 실시하였고, 이 교육과정에서 기독교농민회의 필요성과 조직화의 당위성을 교육하면서 농촌청년들의 인식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이 교육 이후 선교교육원에서 "전남기독교 농촌청년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남지역에서부터 기독교농민회 조직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전남기독교 농촌청년회 준비위원회는 2월중에 몇 차례 조직준비모임을 갖고 창립준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농민회를 출발부터 청년층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계층의 농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청년조직보다 농민조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전남 기독교농민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기독교농민회 조직 논의는 1977년에 조직된 '해남농민회'⁴⁵⁾를 비롯해 무안·강진·보성 등지의 농촌 교회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1978년 2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농촌분과위원회의 주선으로 기장 선교교육원에서 실시된 농촌청년 교육에서 '전남기독교농촌 청년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립 준비 모임을 몇 차례 가졌다.

'전남기독교농민회'(약칭 : 전남기농)는 1978년 3월 8-9일 해남 신월교회에서 무안·해남·강진·보성·영암 등지의 농민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기독교 농촌청년회 발족을 위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⁴⁶⁾ 임원 선출과 사업·예산안 심의는 경찰의 방해로 지역 대표에게 위임했다. 지역 대표들은 3월 9일 장소를 광주(동국여관, 중국음식점?)로 옮겨서 전남기독교농민회 발족모임을 갖고 임원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등을 확정지었다. 초대 임원으로 회장은 배종렬(무안), 부회장은 문경식(보성), 황연자(해남), 총무 정광훈(해남), 서기 김정순(강진) 등이 되었으며, 상임위원들은 서기를 뺀 전체 임원과 정광식(해남), 윤기현(해남), 박상문(무안), 손옥자(무안) 등이었다. 그후 전남기독교농민회는 전국단위 기독교농민회 발족을 위한 모임을 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3차례 가졌다. ·

전남기농은 교육을 통해 마을과 군 단위의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주로 마을 단위의 기초 교육에서 기독교농민회 소개, 농민문제의 본질, 마을 활동의 방법과 사례 등을 교육하면서 마을 안에 있는 교회의 청년회집회 등을 교육으로 활용하면서 지회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교육 및 지회 조직에 치중하였고, 1978년에 '무안지역협의회', 1979년에 '해남지역협의회'를 비롯해 16개의 지회를 조직했다. 지회는 읍, 면, 또는 마을 단위로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 협의회는 3개 이상의 지회를 가진 군단위에서 구성하였다. 농민회 조직은 '전남기독교농민회-군단위 지역협의회-지회-회원'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특히 전남기농은 '지회학습회운영지침서'를 만들어 현지 농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운영지침서는 농민의 자기의식화를 위해 학습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협동사업, 권익실천 및 마을민주화활동, 봉사활동 및 문화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

전남기농 활동가들은 전국단위 기독교농민회 조직에도 기여하였다. 1978년 여름 전북 송광사 냇가에서 교육겸 전국기농 준비위원회 모임을 만들기 위해 모여 논의를 하였고,⁴⁷⁾ 1978년 12월에

45) 해남 YMCA는 1976년부터 농촌사업을 벌여 신협, 양곡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시범부락사업을 해 왔다. 그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은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해남 YMCA 농촌개발연구회'를 신협과 별도로 조직하여 농민들을 결속시키는 작업을 해 왔다. 이 농촌개발연구회 성원들 가운데 일부가 기독교농민회를 구성하였고, 정광훈, 윤기현, 정광식 등이 중심적인 지도력을 맡았고 김남주, 황석영 등도 가세하였다고 한다.

46) 이 때 이우재, 심상봉, 서경원, 배종열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47) 1978년 여름 전북 송광사 냇가에서 교육 겸 전국기농 준비위원회가 모였다. 전국에서 1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닷도 몇 마리 잡아 모임을 갖고 있는데 경찰들이 알고는 여러 대의 지프차로 다가와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모두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는 등 막무가내였다. 배종렬 장로가 자기만 대표로 보여주겠다고 하니, 경찰들은 모두 보이라

전남·전북·경북·경남 등지에서 모인 농민운동 활동가 10여 명이 전주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기독교농민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배종렬 전남기농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초창기 기능활동은 관의 감시와 탄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전남기독교농민회는 그후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약칭 기농) 창립에도 힘을 쏟았다. 1982년 3월 18일 영등포 산업선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다른 지역 농민회와 함께 참여하였다.⁴⁸⁾ 창립 총회에서 배종렬(전남기농회장)이 회장을 맡게 되었고,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709호실에 연합회 사무실을 열었다. 1983년에 사무국이 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초대 사무국장은 나상기가 되었다.

(2) 전남기독교농민회의 활동⁴⁹⁾

초창기 전남기독교농민운동은 주로 교육활동을 통한 마을과 군단위 조직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활동은 마을단위 기초교육에 치중하여 기농소개, 농민문제의 본질, 마을활동방법과 사례 등을 교육하면서 마을단위 지회조직 및 지역단위 기독교농민회의 기초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농촌교회청년회 집회를 활용하여 농민운동과 농민선교, 기농소개, 농민문제 본질 등을 교육하여 마을내에 있는 농촌교회를 통하여 지회조직을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1978년에 무안지역협의회, 1979년에 해남지역협의회를 조직하였고 지회 16개를 조직하였다. 또한 전국기독교농민회 조직을 태동시키기 위하여 1978년 12월 전주에서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지에서 10여명의 농민운동활동가들이 모여 “전국기독교농민회 준비위원회”(위원장 : 배종렬 전남기독교농민회장)를 결성함으로써 전국단위 기독교농민회의 조직준비를 시작하였다. 전남 기독교농민회는 이러한 조직화 활동을 주도해 나갔다.⁵⁰⁾

권익실천활동은 농민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운동, 농협강제출자거부, 을류농지세 시정, 수세시정, 경지정리 부실공사 시정, 노풍피해보상투쟁 등 마을주민들의 부당피해에 대한 보상투쟁과 농협민주화 투쟁을 현장단위에서 주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농민운동세력과의 연대투쟁으로서 함평고구마사건 기도회 및 단식투쟁, 광산 삼도단지 경지정리사건 및 벌교토지투쟁,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생산자대회 참석, 오원춘씨 사건 기도회 참석 등 가톨릭농민회와 지역단위 권익투쟁에 함께 하였다. 투쟁방식은 군수, 면장, 조합장의 면담과 항의를 통한 시정과 질의서나 건의서를

는 것이었다. 이때 여성회원인 조정렬씨가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선창을 따라 모두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두들 다시 용기가 생겼다. 농민회원들이 강하게 나가니까 결국 경찰들이 물러났다. 한국기독교농민회, 『기농10년사』(서울, 1992), 15쪽.

48) 전남기독교농민회(1978년 3월 9일 창립), 전북기독교농민회(1980년 5월 2일 창립), 경북기독교농민회(1982년 3월 19일 창립), 충북기독교농민회(1982년 2월 15일 창립)의 임원단 및 주요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49)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기농』, 각년호의 '활동보고' (1982-1991) 참고.

50) 그리고 1979년부터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농촌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기독교농민회 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전북, 경북, 강원, 충북, 충남 등지에 농민교육을 실시하여 타지역 농민운동활동가들을 양성하였다. 그 결과 1980년 5월 2일 전북기독교농민회가 전주 성광교회에서 40여명의 농민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되어 전북지역에서 기독교농민회가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발송하여 행정적으로 시정하는 등 낮은 차원의 시정·요구 방법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였고, 지역단위에서 기도회나 단식투쟁에 동참하는 등 연대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비교적 제도개선 투쟁으로서 시정·요구투쟁과 옥내집회, 기도회 등 농민대중의 생활상요구에 기초한 경제투쟁 위주로 권익실천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익실천활동을 해 나가면서 조사활동을 병행하였다. 가농이 해오던 쌀생산비조사 활동에 협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들에 대해 조사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마늘, 양파, 고추, 보리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신품종 벼 강제경작 및 피해에 관한 조사활동, 농민생활 의식조사, 농촌교회 평신도 의식조사 등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의 주변 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였다(전국단위에서 주도).

마을 단위의 조직기반이 생겨나가면서 대중활동의 일환으로 농민문화활동도 전개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학습회를 정례화하고 특히 간부활동가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각종 사회과학과 농민문제, 농민운동에 관한 학습활동을 하였다. 특히 성서연구, 민중신학 학습 등을 통해 농민운동이 교회운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성서적 실천과도 합치한다는 점을 농민활동가 스스로 각인시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농은 농촌목회자와의 유대관계를 깊이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 ·

이러한 기독교농민회의 발전을 위한 현장 단위교육 및 조직화, 권익실천에 농민 스스로 참여하기하기 위하여 학습자료와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민선교자료집, 농촌근대화 촉진법, 수세자료, 농협의 운영과 역사, 농협정관(예), 농지세 해설, 지회운영지침서 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육, 조직, 권익실천활동을 지역단위에서 전개하였지만,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농촌교육담당자 구속사건과 경북가톨릭농민회 간부 오원춘씨 구속사건을 통해 농민운동을 좌경용공 불순세력으로 선전하는 등 독재정권에 의한 농민운동의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에 기독교농민회 역시 그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단위 조직화 및 실천활동의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암살사건으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한 상황이 전개되어 기독교농민회는 전체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세력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장의 교육과 조직화는 물론, 강제농정 철폐, 농협민주화 등의 권익실천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당시 헌법개정운동에 발맞추어 전국농민단체들의 공동연대활동으로서 1980년 4월 대전에서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 및 농업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공청회에 전남기독교농민회가 참여하였다. 이때 기독교농민회 활동세력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전국적 활동에 처음으로 연대하여 참여함으로써, 전국적 농민운동세력으로서 전남기독교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3) YMCA 농촌사업

YMCA 농촌사업은 이미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광주YMCA에서도 1933년에 농업실습학교를 운영할 정도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1930년대 중반 위축되다가 1930년대 말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방 후 광주YMCA는 이미 1950년대에 농촌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량종자 개량과 보급 및 농업기술지도 등을 해 왔다. 특히 1964-65년에는 전남4-H 기술교환훈련에 개입하기도 하고 기술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 들어 전국YMCA의 농촌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전남지역은 YMCA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업이 전개되었다. 한국YMCA는 1974년을 기점으로 농촌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농민조직사업(신용협동조합, 양곡은행, 축산협동반)과 농민지도자 교육이었다. 예를 들면 양곡은행은 쌀값이 비싼 춘궁기에 대여했다가 쌀값이 가장 싼 늦가을에 반납케 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생활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농민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YMCA가 양곡을 무상대여해 주기 때문에 영세한 농민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목표였다. 즉 절량 농가와 고리채 농가를 조절하고 자립안정 농가를 육성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농민의 합리적 사고와 경영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토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였다.

광주YMCA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열며 자주적인 소그룹 개발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72년부터 1976년 4월까지 화순, 보성, 승주, 구례, 광주, 나주, 신안, 함평, 여천 등에 신용협동조합(9개)이 세워졌고 시범지역 사회개발지역이 조직되었다. 이어서 해남YMCA도 1976년에 7개의 신탁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순천, 여수 등 YMCA가 있는 지역에서 신탁이 만들어졌다.⁵¹⁾

YMCA 농촌사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해남Y를 들 수 있다. 해남Y는 최우열 총무의 주도 아래 1972년 9월에 YMCA 신탁을 조직하여 창립총회를 실시하였다. 1975년부터는 본격적인 농촌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신탁 외에도 양곡조합, 시범부락개발 사업 등을 벌이기 시작했다.

해남Y는 신탁과 양곡조합 조직 사업 뿐만 아니라 농촌 청소년들을 농촌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YMCA 농촌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해남지역에는 기존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농민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광훈, 홍영표 씨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최우열 총무는 이들과 접촉하여 해남YMCA의 농촌사업을 벌여 나갔다. 그리고 농촌사업만을 위해서 '해남YMCA 농촌개발연구회'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신탁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농촌개발연구회가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농촌개발연구회는 지역 안에 먼 단위

51) 광주 YMCA 역사편찬위원회 편, 『광주 YMCA 90년사: 1920~2010』(광주, 2010).

대표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다.

1976년에 신탁조직이 재개되었을 때 해남Y는 몇 차례 조합원 교육을 위한 강습회를 갖고 신탁을 창립하였다. 1976년 한 해 동안 6개, 1977년에 4개가 설립되어 이전에 있던 것과 합하면 1977년말 12개의 신탁이 조직되었다. 삼산면 감당리(대표 홍영표)를 시범부락으로 선정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양곡조합을 조직하면서 협동경작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부분협업적인 경작을 하는데 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1977년 2월에 해남Y는 신탁교육을 중심으로 한 해남지역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탁이 협동운동의 기초조직으로서 갖는 의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이것이 농민들의 결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었다.

1977년 하반기에 들어오면 해남YMCA에서는 이제까지의 신탁조직을 근간으로 하여 농민대학을 개최한다. 해남YMCA 농촌개발연구회(당시 회장, 홍영표)가 농민대학의 내용을 준비하였다. 제1회 농민대학은 1977년 7월 28일에 해남YMCA 강당에서 열렸는데, 신탁교육 중심의 지역교육과는 달리 한국농촌의 문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주 프로그램⁵²⁾으로 담고 있었다. 최초의 농민들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농촌개발연구회는 월례회로 모였으며 1977년 8월에는 모임의 주제로 “농민운동과 전략”을 다룰 정도로 농민운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1978년 2월에는 제2회 농민대학이 열리는데 이때는 1회 농민대학과 비교하여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하려 했다. 우선 교육의 일정이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로 3박 4일로 늘어났고 강의시간도 훨씬 늘어났으며, 사례연구와 함께 과제연구를 제시하여 농민운동의 과제를 참가농민들이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3회 농민대학 프로그램은 농촌사정에 따라 단기현장교육으로 대체되었다. 1978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계곡 신평교회에서 열린 부락현장교육은 신용협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교육을 가졌으며, 그 내용은 해남YMCA와 농촌운동, ‘농촌문제와 그 해결방안’, ‘협동조합론’이라는 제목의 강의와 ‘농협문제의 해결’, ‘농업세계문제 해결’ 등의 사례발표, 과제 연구로는 ‘부락단위 농촌운동의 과제와 방법’이 다루어졌다. 참가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4회 농민대학은 1978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해남읍교회 교육관에서 열렸다. 협동조직체의 건설과 농민지도력의 육성이라는 YMCA 농촌사업의 의도에 어울리는 교육내용이었다.⁵³⁾ 강의와 사례연구, 토의 등과 함께 명상, 노래공부, 운동, 친교의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제4회 농민대학 직전에는 농민축제가 펼쳐졌는데 농악과 군무, 판소리 공연이 있었으며 5백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52) 당시의 강사진은 이우재, 장두석, 황석영, 최우열 총무였으며, 주제 강의의 제목은 “농촌지도자의 자각과 그 역할”, “한국농촌 당면문제”, “협동조합론” 등으로 되어 있었다.

53) 농촌선교와 농민운동, 농촌지도자론,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개발, ‘계획, 실천, 평가’, 농촌문제의 본질, 농촌문제의 과제, 농업협동조합론, YMCA 농촌운동과 부락개발 등의 주제로 강의를 있었다.

함께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해남Y의 신탁조직은 농민운동의 기초조직 육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잘 활용되었다.

그러나 1978년 9월은 해남Y로서는 한 차례 진통의 시기가 있었다. 이때 기독교농민회가 창립(1978. 9. 26)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촌개발연구회의 중심회원 일부가 기독교농민회로 가게 되었다. 이 당시 해남지역에서 기독교농민회를 창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YMCA는 운동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기껏해야 농촌사업일 뿐이지 농민운동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이에 맞서서 YMCA 고수론을 펴던 사람들은 그러한 지적이 일부 타당성은 있으나 해남지역의 경우에는 YMCA가 농촌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농민운동으로서의 자기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당시 있는 농민조직도 농촌개발연구회의 40-50명이 전부인데 기독교농민회를 창립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결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조직을 떼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농민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⁵⁴⁾ 그러나 결국 기독교농민회는 옥천면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되었으며 정광훈, 윤기현, 정광식 씨 등이 중심적인 지도력을 맡았다.

이로 말미암아 해남Y 농촌개발연구회에서 기독교적 자기지향을 강하게 갖고 있던 인사들은 대부분 기독교농민회로 빠져 나갔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기독교적 의식이 별로 강하지 않은 인사들이 남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남Y 농촌개발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해남YMCA 농민회'를 창립하게 된다.

해남Y 농민회는 1979년 2월 8일 창립되었다. 해남Y 농민회가 결성되는 배경에는 기독교농민회의 창립도 한 이유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YMCA가 전개하는 농촌사업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였다. 농민회는 이전에 존재했던 농촌개발연구회가 협의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회원조직으로 확대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은 면단위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1979년까지 해남지역에는 농촌사업의 결과로 신탁 167개, 양곡조합 1개, 시범부락 1개, 각종 교육 8회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중 양곡조합과 시범부락은 모두 감당리에서 이루어졌다. 1979년 4월에는 함평 고구마 보상운동에 따른 갖가지 행사에 20여명의 Y농민회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북일면 내동리에서 특정인에게 잃은 마을앞 갯펄을 회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찾아냈는가 하면 특정상인과 농산물 검사원과 짜고 일반 농민이 생산한 보리수매를 거부하고 상인들 것만 파주는 사례가 삼산면에서 발생하여 회원들의 즉각적인 대처로 해결하였다.⁵⁵⁾

54) 모든 조직은 조직보호본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게 되면 양자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사실 기독교농민회 창립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시인한 문제였다.

55) 대한YMCA연맹, 『1976~1991 YMCA농촌사업 보고서』(서울, 1992).

2. 1980년대 농민운동

1) 농민운동의 재활성화(1980-1984)

10.26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전남지역의 농민운동은 지속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해오던 활동들에 여러 가지 활동이 더해졌다.

1970년대에 해왔던 쌀생산비보장운동은 계속되면서 점차 농산물가격보장운동으로 나아갔다. 농협민주화운동 및 농정시정 운동도 계속되었고 조합장직선제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발전하였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나섰다. 권익실천활동과 마을민주화운동은 더욱 다양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으며, 부당농지세 시정운동도 시작되었다. 협동활동은 좀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일시적으로 농산물직매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마을 단위를 넘어선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가농과 전남기독교농민회의 기층 조직이 확산되고 여성들의 조직화도 시작되었다. 가농과 기농이 따로 혹은 협력하여 다양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였고, 무엇보다도 1984년 가농과 기농이 협력하여 ‘함평·무안농민대회’를 성사시키면서 농민운동을 한층 고양시켰다.

광주민주화운동 기간(5.18-5.24) 중에 가농회원 4명이 공수부대원의 무차별 폭력에 의해 부상당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가농회원들의 조직적인 참여는 없었다. 운동 기간 이후인 6월 8일 가농 전남연합회장이 계엄군에 의해 연행당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18-19일에는 연합회 회장단, 실무진, 지역이사 9명이 조사를 받고 나왔다. 무안에서는 이사와 협의회 총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삼척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을에서는 회원들의 모임마저 제약당한 채 의사표현을 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점차 농민운동이 재활성화되어 갔다. 1980년대 초반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조직별로 살펴보자.

(1)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와 농민운동

1981년초 대의원총회에서 지역이사 책임 아래 관할지역 분회 현황을 격월제로 파악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1개 지역만 연합회가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연합회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상황과 젊은 층의 이농으로 분회를 만들어 내기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1981년에 6개 분회가 신규로 조직되었고, 침체된 분회를 살리는데 주력하였다.

1982년에 파악된 전남연합회 분회별 회원현황을 보면, 10개 군, 32개 분회에 분회원 199명이었다. 분회수와 회원수 규모를 보면, 함평(9개 분회, 65명), 무안(9개 분회, 58명), 구례(3개 분회, 19명),

보성(4개 분회, 19명), 나주(2개 분회, 12명), 신안(2개 분회, 10명), 영광(1개 분회, 8명), 순천(1개 분회, 5명), 광산(1개 분회, 3명) 순이었다. 32개 분회에 회원수 199명으로 분회당 6.2명에 달하였다. 회원수가 가장 작은 분회는 2명이고 가장 많은 분회는 16명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개 분회가 침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82년에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가농을 비롯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 가농은 이에 농촌현장에서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며 생활운동권에 따른 협의회 조직(군)에 중점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군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전남지역에서는 1979년에 이미 함평, 구례, 무안, 보성협의회가 결성되었었는데, 1983년 들어 함평협의회가 조직의 확대를 동부와 서부로 분리되었고, 기존 협의회에 나주와 강진 지역의 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의 범위는 군에 상응한 지역으로 생활권 단위로 하였으며, 구성조건은 회원 25명이나 분회 5개 이상으로 하였다.

1983년에 전남연합회는 함평 서부협의회, 함평 동부협의회, 구례협의회, 무안협의회, 나주지역(준협의회), 강진지역(준협의회) 등의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책임제 운영을 통하여 현장의 자생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이것은 2월의 전국대의원총회에서 협의회를 육성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협의회 단위의 모든 사업추진을 자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대표 및 협의회 소속 회원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협의회 단위의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가농 농민운동기구인 ‘가농본부-도연합회-군협의회-마을분회’의 틀로 마련되어 갔다. 또한 침체된 10개의 분회를 대상으로 도연합회와 지역협의회가 함께 집중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임원을 재편하고 마을중심인물을 발굴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함평, 무안, 강진, 나주 지역에서 5개 분회가 활동을 다시 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8개 군에서 30세 이하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청년부를 구성하고 정기모임, 학습활동, 청년교육 등을 하여 조직확산과 중심인물 발굴에 힘썼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여성활동이 활성화되면서 3개의 여성분회(무궁화, 장미, 동백)가 결성되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부녀부를 신설하고 1명의 전담간사를 두게 되었다. 여성분회의 결성은 현장농민들의 농민운동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1984년 들어 가농의 조직상황을 보자.

분회조직을 만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고, 1980년에 회원 471명, 분회 48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4년에는 총등록회원이 652명(분회소속 605명, 산재회원 47명)에 달했으며 등록분회는 69개 였다. 분회의 구성단위는 마을(50개)이 가장 많았으며 공소단위(12개)로 구성된 것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분회의 회원수는 늘어나서 회원 4명 이하인 곳이 한 개 밖에 없었고 5-9명인 곳이 25개, 10명 이상인 분회가 18개에 달하였다. 또한 연합회에서는 화순, 장성, 장흥 등의 군협의회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3년에 여성분회가 세 곳에서 만들어졌다. 여성분회들은 월례회를 이용하여 학습활동을 하고 구판사업을 전개하였고 지역회원의 도움을 받아 현장교육과

함께 부녀교육 이수자들을 방문하여 개별접촉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합회는 청년분과를 청년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5월) 운영위원회와 학습 및 교육활동을 하여 지역의 청년운동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표-1〉 1984년 전남지역 가농조직현황

지역협의회	읍면	분회	분회원
함평서부협의회	6개	10개	86명
함평동부협의회	3개	6개	57명
무안협의회		7개	48명
구례협의회		4개	32명
보성·고흥협의회		7개	53명
합계		34개	276명

가농의 농민운동 전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농산물가격보장운동과 농축산물수입반대운동

1975년부터 가농이 시작한 쌀생산비조사가 1981년까지 계속되었다. 1980년에는 전남지역에서 18개 분회가 참여하여 34농가가 조사를 완료하였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쌀값보장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정부수매가 예시를 위해 준비한) 농민대회는 무산되었지만, 12월 5-6일에 200여명의 농민이 광주 호남동성당에서 '추수감사제 겸 쌀생산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쌀생산비보장운동을 추수감사제와 함께 농민대회 형식으로 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쌀생산비조사는 그 다음해(1981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해에는 전남지역에서는 28명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광주에서만 하던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1981년에는 지역별로 개최하여(11월 17일 강진, 19일 구례, 25일 나주) 지역민과 함께 쌀생산비보장운동을 추진하였다. 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농업정책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서 농산물가격 뿐만 아니라 토지문제, 수입반대, 농협민주화, 농지세·수세 불공정, 공해, 지방자치제 요구 등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였다.

1982년에는 농민회원들은 외국쌀 도입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에 대한 홍보와 외국쌀 안먹기 활동을 전개하고, 농산물수입반대와 한국농산물생산비 보장운동을 하였다. 주로 전국단위에서 나오는 유인물을 공급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전남지역 단위에서 가농과 기농의 각종 유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방농정의 여파가 현장에서 점차 농산물수입반대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1983년은 농산물가격폭락 현상이 심각하였고, 게다가 수매가동결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농산물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한 농민들은 외국농산물 도입반대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매정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하곡수매 대상에 밀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건의와 서명운동, 농협부채를 현물로 납부하는 활동, 통일찰벼 수매거부 시정활동 등 수매와 관련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또한 구례협의회에서는 추곡수매량 확대를 요구하면서 수세를 현물로 납부하는 ‘수세현물납부투쟁’을 전개하였다.⁵⁶⁾ 구례지역 농지개량조합은 여름에 가뭄으로 벼 생육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데도 관리하는 구만저수지에 물고기를 기른다고 물을 터주지 않았다. 이에 가농구례협의회에서는 200여명의 농민들이 항의하였다. 농민들은 조합장의 공식 사과와 농업용수에 전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가을 들어서 정부의 추곡 제한수매로 시장가격과 수매가(고시가격, 시장가격 보다 높음)가 차이가 나는데도 조합은 조합비를 고시가격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였으며, 일반조합비 외에 특별조합비 명목으로 평당 일정액을 추가부과하였다. 이에 몽리구역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구례협의회에서는 대책을 협의하고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12월 8일 조합비 현물납부를 결의하고 농지개량조합 마당에 야적하는 행동에 옮겼다. 조합측은 관계기관을 총동원하여 교통을 차단하고 대형트럭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행진을 막았다. 농민들은 4개 마을(구만리, 대산리, 대전리, 지천리) 200여 농가의 조합비 현물 200여 가마를 경운기에 실은 채 농성을 벌였다. 12월 23일 다시 농민들과 경찰이 충돌하여 농민 10여명이 다치고 20여명이 경찰로 연행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대표와 농민대표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어 농민들의 주장대로(현물 300가마) 받아가기로 매듭짓고, 농민탄압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공식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보상받고 끝맺었다. ‘수리세 현물납부운동’은 새로운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함평에서도 수세현물납부 투쟁이 전개되었다. (추가)

1984년에 들어 외국농축산물의 수입은 더욱 확대되었고 소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농 전남연합회 단위로 열린 추수감사제에서 농민들은 수매가 정책과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의 요구와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② 농협민주화운동 및 농정시정 운동 : 농협조합장직선제 100만인 서명운동

1980년의 공안정국 속에서 농민들의 농협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다. 농민들은 가농본부의 활동을 본받아 단위조합의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의사반영, 조합장 임명제 철폐 및 선거제 실현 등을 제기하면서 농협개혁을 촉구하였다. 연합회 단위에서도 관계 농협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56) 구례 수세현물납부투쟁은 이후 수세납부거부 및 폐지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여론형성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가농분회 단위로 농협교육(15개 분회, 31회)이 실시되었다. 현장농민(분회)들은 강제출자거부, 농협사업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활동, 농협의 부조리 시정 등 기존의 활동을 전개해 가면서도, 점차 총대 선출이나 총대 회의에 농민들이 방청하면서 총대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고 조합장 임명제를 규정한 임시조치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1981년 들어 농협민주화운동은 현장에서 강제출자거부, 대출문제 시정, 각 조합원 출자통장 갖기, 영농자재 가격조정, 부당이자 부과 시정, 농산물출하계약 시정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운동으로 나아갔다. 농협중앙회가 단협조합장을 임명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여 단협의 자주성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총대들의 임무를 제대로 실행하자는 방향을 잡아갔다. 분회 단위로 강제출자거부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총대로 들어가 조합운영에 직접 참가하였다(12개 분회). 총대로 선입되어 농협재정 공개, 인원감축, 민주농협 실천 등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1982년 들어서도 조합운영의 합리화와 조합원의 권리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1981년에 이어서 총대 바로뽑기와 농민회원들(12군데)의 총대 진출이 두드러졌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의민주화 활동도 전개되었는데, 가농농민회원들이 분회별로 농지개량조합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9개 분회에서는 ‘농지개량조합,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1983년 초(1,2월)에는 단협의 총대 및 영농회장 선거가 있었고 이어 개최된 단협총회에서 농민들은 임시조치법 철폐를 요구하고 조합운영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전국 단위에서는 ‘농협조합장 직선제 백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가농이 주도하여 7월 27일 연합회별로 추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8월1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가농 각 지역협의회와 분회에서는 서명운동에 대한 대책회의와 학습,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서명운동의 여파는 컸고 당국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장 직선제라는 화두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서명운동의 여파 속에서 1984년 들어 농민들은 조합장 후보선출과정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예비투표 실시, 개정된 규칙에 따른 조합장 후보 선출 실태조사, 운영상의 비리 사정, 농협 입출고료 시정 등의 활동을 해 나갔다. 협의회 단위에서는 조합장 선거 실태조사(4개 지역)를 하였고, 함평·무안농민대회,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등에서 농협문제를 제기해 나갔다. 전국단위에서는 농협문제 토론회가 열렸고 여기에 일부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③ 권익실천활동과 마을민주화운동 : 부당농지세 시정운동

1970년대의 다양한 권익실천활동들이 198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에서도 현장 농민들은 농정당국의 강제행정과 농협 및 관련조합의 횡포와 부조리를 시정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1980년대 들어 갑을류농지세, 수세, 재산세 등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시정활동과 국유지 토지의 불하관계, 간척지소유권 분쟁, 토지수용, 경지정리피해 등 토지에 관련된 사건들을 둘러싸고 현장농민들의 실천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농민들의 구체적인 이해를 침범하는 것들이었다. 1981년에는 심한 흉작에도 불구하고 전년 보다 더 많은 농지세가 부과되어 몇몇 분회에서는 을류농지세⁵⁷⁾를 거부하여 읍면사무소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1982년 들어서 함평에서는 함평농조가 농민들의 토지를 아무 근거 없이 농조 소유로 이전한 것을 되찾는 운동을 하였고(1983년에도 이어짐), 무안의 망운에서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핑계로 개인재산을 철거하도록 하는 압력에 보상요구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구례에서는 농지개량조합의 과중한 수리세 부과에 대해 항의하였다. 농민들은 서명을 받고 각계에 건의하는 등, 세금 문제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키워 나갔다. 구례의 수리세 항의 운동은 1983년 후반 이후 '현물납부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함평과 무안 지역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권익보호 활동을 벌였다. 1984년 9월 2일 함평, 무안 지역 농민들은 과중하게 부과된 을류농지세 철회와 생고구마 전량수매, 농가부채 탕감, 전두환 방일반대까지 외치는 농민대회를 성사시켜 나갔다.

그러면 '함평·무안 농민대회'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전남 함평·무안 지역 농민들은 1984년 9월 2일 오후 2시에 함평 장터에서 이 지역 농민들의 심각한 문제인 양파에 부과된 과중한 을류 농지세 문제, 생고구마 수매 문제, 외국소 도입으로 인한 소사육 농가의 피해 문제, 영세농가의 과중한 부채 문제, 추곡수매가 문제, 농협 민주화 문제, 도시 자본의 토지 투기, 소작 문제와 전두환씨 방일 문제 등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가난과 소외로 몰아가는 현안들에 대하여 농민들의 입장을 밝히고,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함평·무안 지역 현장문제 대책위원회 등의 공동주최로 '함평·무안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농민 700여 명이 참가했다.

정부는 군청 직원, 면사무소 직원, 농지개량조합과 농협 임직원, 전투경찰, 사복 경찰 등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 집회를 폭력적으로 방해했다.

농민들은 새벽부터 함평 장터로 몰려왔으나 당국은 전투경찰 500여 명을 동원하여 함평읍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차량을 검문검색하며 모여드는 농민들을 강제로 귀가시켰다. 농민들이 "우리들의 자주적인 모임을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전투경찰들이 폭행하는 가운데 60여 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의 저지를 뚫고 장터에 온 농민들 중 500여 명을 검문검색에서 붙잡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서 귀가시켰다. 농민 200여 명은 오후 3시에 함평천주교회에 다시 모였다.

교회에 모인 농민들은 부당한 탄압에 분개하면서 폭행 경찰을 규탄하고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후 4시경 다시 대열을 정비했다. 농민들은 '양파에 부과된 을류농지세

57) 벼를 생산하는 농지를 갑류, 벼 이외의 을류농지세의 경우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못했다. 더욱이 인정과세를 하여 부당한 세 부담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과세에 대한 시정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납부거부', '농가부채 탕감', '외국농축산물수입 반대', '추곡수매가 보장', '전두환 방일 반대'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함평천주교회를 출발하여 평화적 가두시위를 하며 150여 미터 앞까지 나아갔다. 이때 "차로 밀어 버려!", "무조건 두들겨 패!" 하는 명령과 함께 400여 명의 정·사복 경찰들이 달려들어 농민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농민들은 온몸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대열을 흩트리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은 방해하지 말라", "경찰은 누구의 경찰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00미터까지 나아갔다.

경찰은 차량으로 길을 막고 계속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농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의 폭력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가까이 가두시위를 벌인 농민들은 거의 모두 잡혀서 40여 명은 연행되고 나머지는 버스터미널에서 강제로 귀가 조치되었다. 오후 6시 30분경 연행된 40여 명 중 7명은 불법 구금되고 나머지는 훈방조치로 풀려났다.

불법 연금당한 농민들 가운데 배종렬(기농 회장)과 노금노(가농 전남연합회 총무)는 광주경찰서로 넘겨져 9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즉심에서 25일간 구류형을 받아 광주유치장에 간헐고, 주근호·김성태·박상문·백종덕·신기철 등 5명은 9월 3일 오후 6시경 석방되었다. 그런데 신기철이 불법 구금되어 있는 동안 무안 망운지서장이 마을에 와서 확성기를 통해 "신기철 나와라"는 등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마치 불온한 사람인 것처럼 선전하고 마을을 공포 분위기로 만든 사실을 알고는 이익택·박승민·박재신 등과 함께 지서에 찾아가 항의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경찰은 이들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무안경찰서로 연행하여 9월 5일 6시경 29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게 했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 부당한 폭행과 연금, 구류 처분에 대하여 대책위원회측은 9월 3일과 4일 30여 명의 농민이 함평에 모여 '불법 연행한 농민들 석방',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폭력 경찰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을 면담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수도 없고 치료비도 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교사위원회' 소속목사 20여 명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9월 3일 오후 6시경 함평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이 한 시간 가량 함평읍내에서 "경찰서장 나와라", "죄 없는 농민을 왜 연행하느냐", "불법 구금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시위를 벌이자 당황한 경찰서장이 8시경에야 나타났다. 목사들은 농민들에 대한 불법 연행과 폭력 행위를 규탄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9월 5일 낮 12시경에는 무안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신기철 등 네 명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광주도경찰국을 방문하여 항의했다.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와 전남기독교농민회는 9월 20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함평·무안사건 보고대회'를 열었다. 200여 명의 농민들이 참가했으며, 함평·무안 농민운동 탄압 사건에 대하여 ① 농민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를 정부 당국이 폭력적으로 짓밟았고 ② 경찰 폭력으로 빚어진 부상자

및 구속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③ 함평·무안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인 양파의 율류 농지세 철회, 생고구마 전량 수매 등 농민의 현안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폭력으로 무마하려는 당국의 자세를 규탄한 후, 함평·무안 농민들의 튼튼한 연대로 발전적 시도를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를 했다.⁵⁸⁾

함평기독교농민회·함평농우회·무안기독교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개최한 ‘함평·무안 농민대회’는 요구 내용과 투쟁 방법에서 농민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소극적인 옥내 집회 방식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정보 유출로 지도부가 사전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농민들이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요구와 전 농민의 일반적 요구, 그리고 정치적 요구를 주장했다. 그 결과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요구를 거의 관철시켰고 광범위한 농민대중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등 대중적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함평무안농민대회는 ‘농민대회’라는 형식을 운동방식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다.

1984년 여름에는 기농과 가농이 함께 부채탕감문제를 쟁점화 해 나갔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 농민들은 마을민주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농협 문제 뿐만 아니라 마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장 등을 맡아 활동하기도 하였다.

1984년 말에 들어 가농은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개최한다. 이제 농민들의 모임은 점차 농민대회라는 형식을 띠어간다. 가농은 ‘전남농민대회’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하였다. 11월 23일 오전 11시 광주시 임동천교회에서 가농 전남연합회가 개최한 ‘전남농민대회’에는 2,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했다. 경찰과 행정 공무원이 위협과 공갈 등으로 끈질기게 농민대회 참석을 방해했으나 각 지역별로 버스를 대절하여 마을주민 전체가 참석하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 강론에서 대주교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농민운동을 용공불순 운운하면서 탄압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우민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농민운동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서 농민운동 탄압 사례를 고발했다. 이어 벌어진 농민잔치에서는 농업희생정책과 이에 대하여 농민생존권을 지키려는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을 소재로 한 마당극이 공연되었다. 그리고 농업희생정책 장관인 농수산부장관의 허수아비와 각종 농민들의 주장과 구호를 붙인 꽃상여를 메고 상여놀이를 벌인 후 화형식을 가졌다. 각종 농민희생정책을 불태운 농민들은 만장을 앞세우고 4~5회에 걸쳐 가두 진출을 시도했으나 기동경찰의 저지로 다수의 부상자를 낸 채 뜻을 이루지 못했다.⁵⁹⁾

④ 협동활동

가농의 각 분회들은 여러 가지 협동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미 1980년에 분회들에서 신용협동사업(9개 분회), 구매협동사업(11개 분회), 생산협동사업(7개 분회), 공동판매활동(3개

58) 엄영애, 앞의 책(2007), 194-197쪽.

59) 엄영애, 앞의 책(2007), 210-211쪽.

분회) 등을 하였다. 연합회는 생산협동사업을 하는 7개 분회에 협동사업을 지원하고 수시로 현장에 출장하여 사업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한 활동을 하였으며, 자연농법 개발을 위해 호소 600여 봉을 각 분회의 신청에 의해 공급하였다.

1981년에도 이어서 분회에서는 다양한 협동활동을 하였다. 분회는 1회 이상 공동품앗이, 구매사업, 이용사업 등을 과제로 채택하여 실천하였다. 경운기공동이용(구례 구만리, 강진 만년, 무안 강정), · 오이 생산 판매활동(대산, 유산), 양계 공동 사육(영광 입석), 산림 활동(보성 조명), 딸기 공동 재배(강진), 양파 공동 생산(함평 외대), 공동 모내기과 비료 공동 구입(가덕), 란우 사육(신기), 신헌사업(마량), 해태 공동 생산(강진 장진) 등 분회 단위로 다양한 협동활동을 전개하였다.

1982년에 가능 분회들이 해낸 협동활동을 보면, 생산협동 활동으로 19개 분회에서 축산, 보리베기, 탈곡, 모내기, 논밭농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헌협동 활동은 6개 분회에서 마을과 지역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조직 · 운영하였다. 농기계 공동이용 활동은 5개 분회에서 경운기, 거적 찌는 기계, 농약기계 등을 공동으로 구입 이용하였다. 또한 9개 분회에서 농기계, 공동품앗이, 문화활동, 모내기, 월별출자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였다.

1983년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작업 품앗이(만년, 송죽, 외대), 공동재배 및 공동생산(장전, 영동, 가덕), 공동축산(둔대, 감산), 농기계 공동 이용(구만리, 신기), 공동기금 조성(청류, 마량), 신용협동(양천리, 대촌), 공동구입, 우량종자 보급 등의 활동을 하였다. 협의회 단위로는 운영기금 확보를 위하여 지역단위별로 규모 있는 공동구입 사업(함평 서부, 양파 종자 구입 및 농약 공동 구입), 신용사업 확대(함평 동부, 무안, 청계지역), 대형농기구 구입을 토대로 농번기 작업지역 확대(구례)를 추진하였다.

1984년에도 공동모내기, 농번기 공동작업, 공동축산, 공동판매, 공동기금 조성, 농기계 공동이용 등을 중심으로 분회들의 협동활동이 이루어졌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필품 및 생산자재 공동구입, 공동작업, 품앗이 등의 활동에 연합회 산하 32개 분회가 참여하였다. 협의회 단위로는 함평 도부, 무안 청계 지역의 신용조합을 통한 협동활동,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함평 서부의 양파 종자 공동구입 활동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분회단위에서는 농기계 공동이용(구만리, 신기, 대촌, 청계), 농지 공동이용 및 작물 협동생산 판매(장전, 외대, 망운, 가덕), 농번기 공동작업(만년, 가덕, 동백), 공동축산(둔대, 두평, 감산), 신용협동(양천리, 문장공소), 공동기금조성(기동, 청류, 가작) 등 활동을 하였다. 구만리 분회의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은 경제사업을 통한 주민 신뢰도 확보와 함께 조성된 자금으로 토지공동구입, 생산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러한 협동활동과 더불어 1982년 5월 직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호남동 성당에 자리를 두고 100여명이 참여하여 개점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쌀, 보리, 보리쌀, 마늘, 고추, 참쌀, 현미 등을 판매하였으나, 판매원의 업무 능력 부족과 가을이 아닌 5월에 시작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구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1983년에는 전담기구인 운영소위원회가 매월 회합을 통하여 경영상태를

분석하였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자금규모를 대폭 확장했으며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운용하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진 개편을 단행하였다. 생산자 조합과 소비자조합 구성을 위해 가능성 여부 타진 등 연구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조합 발기위원회를 추진하였다. 소비자 확보와 물량 증가는 1982년에 비해 200% 증대되었으나 적자폭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84년 한 해 더 운영하다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영 적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2월 이사회에서 사업장을 폐쇄하고 투자자본 회수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다.

(2) 전남기독교농민회와 농민운동

농민운동 세력은 1980년 5월에 함평고구마사건 2주년을 맞이하여 5월 19일 광주에서 전남가톨릭농민회, 전남기독교농민회, 해남YMCA농민회 등과 연대로 농협민주화 투쟁을 계획하였으나, 전두환·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군부독재세력에 의한 5.17비상계엄확대조치가 발동되어 2,000여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만행이 자행되었고 모든 민주운동세력을 연행 구속하고 민주운동단체 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기독교농민회도 거의 활동중지 상태에 들어가면서 주로 현장단위교육과 조직적 기초를 다져 나갔다.

1978년 12월 전주에서 “전국기독교농민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전남기독교농민회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기독교농민회 조직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및 조직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1980년 5월에 전북기독교농민회가 조직된 뒤에는, 전남기독교농민회와 전북기독교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타지역 조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1982년 3월에 경북기독교농민회와 충북기독교농민회를 조직함으로써 전국기독교농민회 조직의 지역단위 토대를 확보하였다.

이어서 1982년 3월 18일 영등포산업선교회관에서 전남기독교농민회, 전북기독교농민회, 경북기독교농민회, 충북기독교농민회의 임원단 및 주요 활동가 5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⁶⁰⁾를 정식으로 창립하였다.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전남기독교농민회장인 배종렬이 선출되었다.

전국단위 기독교농민회의 초창기 활동은 전남기독교농민회의 활동역량을 기반으로 하며 타지역 기독교농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과 이를 통한 조직활동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농민교육은 지역단위에서 마을기초교육의 일상화, 문화교육, 1차 농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전국단위에서는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2차농민교육, 간부양성을 위한 3차농민교육, 조직가들을 위한 지회장교육, 과제교육으로서 농가부채교육, 그리고 기독교농민회의 지지 기반 확보를

60)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군단위 이상의 농민단체로 구성되며 각도, 군 기독교농민회는 지회로 구성한다”고 하여, 초창기 지역단위 기독교농민회의 중심조직인 군지역협의회를 군 기독교농민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군단위 독자적 농민회를 조직하여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조직원칙을 가졌다.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는 기독교농민운동의 중심조직을 군단위 농민회로 함으로써 군단위중심의 지역농민운동조직원칙을 갖는 것이다.

위한 농촌목회자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농촌교회 평신도와 농촌교회 청년 및 일반농민들을 농민운동세력으로 양성하고 농민활동가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조직활동은 주로 군농민회 조직과 마을단위 지회구성을 위주로 하며 도단위 농민회 건설에 진력하였다. 그리하여 1982년에 전남 해남기독교농민회와 마을단위 지회 16개를 조직하였고, 1983년에 강진기독교농민회, 함평기독교농민회와 마을단위 지회 12개를 조직하였다. 총연합회에 여성농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직하였는데 여기서 무안여성농민협의회(2개 지회)를 조직하여 여성농민들의 자주적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직활동과 운동양상을 연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82년에는 이미 있던 해남기독교농민회에 무안군기독교농민회가 조직되었다. 1982년 무안군기독교농민회의 활동을 보면, 연중 봄과 가을에 야외에서 단합대회 및 친목을 도모하는 야유회를 가졌다. 5월에는 망운 톳머리에서 무안지역 가톨릭농민회와 함께 모여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야유회를 가졌다. 기농과 가농의 활동가들⁶¹⁾과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활동가들의 강의를 듣고 농악놀이를 즐겼다.

운영과 관련해 보면, 각 지회장과 마을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매월 각 지회장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였으며, 모임에서 각지회 활동보고와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며 매월 약간의 회비를 걷어 군농민회 자립기반을 닦고 있었다.

권익실천활동을 보면, 장흥농민 탄압사례 공개사과 건, 이방의 재해보상 사건, 신만리 염전으로 인한 염해 피해 보상 사건, 무안 해제면의 방위병에 의한 농민회원 신원조사 사건, 불량 보릿겨 사건, 규산질 강매 사건, 강제출하 및 농협직원의 조합원에 대한 폭언 사건, 무안 해제면 오류리 농협총대 선거불법 시정 등을 해결하거나 제기하고 부당농지세에 대한 정정 등의 활동을 하였다.

군사정권은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모두 공산당이나 간첩으로 몰았다. 기농에 대해서도 그들은 마찬가지로였다. 농민들이나 교회에다 기농에 대해 갖은 모략과 악선전을 해댔다. 물론 농민들은 예전처럼 당하지만은 않았다.⁶²⁾

1983년에는 전국단위에서 ‘농가부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가부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농, YMCA농촌부와 공동으로 농가부채세미나를 개최하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1983년에 시작된 농가부채대책활동은 이후에 더욱

61) 기농에서는 배종열 전국회장, 김홍재 전남 총무, 허훈순 부녀간사가 참여했고, 가농에서는 정연석 교육부장, 최성호 전남총무가 참석하였다. 여기서 배회장, 정부장, 최총무가 강의를 하였다.

62) 전남 장흥군 장동면에 살고 있는 기농회원 이흥원, 황의천씨 등은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지서장의 혼신을 들어야 했다. 내용인즉 “기농은 북한 김일성에게 자금을 받는 빨갱이 동조세력이므로 가까이하면 당신들도 큰 코 다친다”는 것이었다.(1982.5). 이에 배종렬회장과 상임위원들이 장흥으로 몰려가 지서장을 불러냈다. 지서장에게 “기농이 김일성 자금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나?”고 묻자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땀다. 그래서 회원들을 대질시켰더니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었다. 결국 지서장은 그 마을로 들어가 유지들과 마을사람들을 모아 놓고는 “기농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니 용서해 달라. 사실 알고보니 기농은 농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곳 이더라. 그러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기농 홍보까지 하고, 음료수까지 사다주며 백배사죄했다. 한국기독교농민회, 『기농10년사』, (서울, 1992), 48쪽.

발전하여 전국적인 부채해결투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전남지역에서도 부채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을 하였다.

전남에서는 1983년에 함평기독교농민회와 강진기독교농민회가 결성되었다. 강진에서는 3월 15일 강진읍 교회에서 4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회, 상임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하여 강진기독교농민회를 조직하였다. 강진에서는 울변과 덕춘에 각각 지회를 새로 두었다. 함평은 11월 21일 손불중앙교회에서 15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회, 상임위원회,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평기독교농민회를 조직하였다. 함평에서는 백옥과 수문에 각각 지회를 새로 두었다. 회원구성을 보면 전남 20, 강진 44, 무안 20, 해남 8명으로 총 92명이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단위에서 하는 교육에 지역에서 회원이나 활동가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회원교육, 임원교육, 지회장교육, 부채교육 등이 있었다. 지역교육도 실시되었는데 강진에서는 1월9일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고, 무안은 계획했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지회조직을 활성화하고 회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마을교육을 1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함평에서 한번, 무안에서 세 번, 해남에서 네 번, 강진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마을교육을 실시하여 12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⁶³⁾ 무안농민회는 5월 13일 60여명이 참여하여 회원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해남기독교농민회는 ‘추수감사제와 농민축제’를 1,200여 명의 농민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여 문화행사를 갖고 농민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해나갔다.

권익실천활동으로는 가톨릭농민회가 주도한 농협조합장 직선제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연대하여 함께 실천했다. 그리고 해남과 강진에서 저소득마을지원자금 사건에 개입하였고, 무안에서는 추곡수매가배정 요구 사건이 있었다.

1984년에는 현장실천으로서 함평무안농민대회, 무안해제협의회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전남기독교농민회는 지역운동조직인 전사협(전남사회운동협의회)에 참여하였다.

새로 결성된 지회로는 전남기독교농민회 관할 광주지회 1곳, 무안기독교농민회의 3곳(물암지회, 오류여성지회, 용정여성지회)이 있었다. 오류와 용정의 여성지회는 기농 산하 여성농민위원회를 조직해 내는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여전히 교육활동에 치중하여, 전국단위 교육에도 참여하였지만 각 농민회 단위의 교육도 있었다. 함평, 무안은 두 차례에 걸쳐(1차 24명 참여, 2차 26명 참여), 강진과 해남은 한 차례에 걸쳐(각각 5명, 8명 참여) 간부훈련을 하였으며, 무안은 간부훈련 외에도 여성교육, 문화교육, 마을교육(3회) 등을 실시하였다. 강진도 지역교육과 마을교육을 하였다. 함평에서는 3회에 걸친 학습회도 하였다.

전국단위에서 1984년에는 1983년도 활동방향을 지속하면서 특별히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63) 전남, 5월 12일, 함평 웅암리, 4명 참석, 무안, 1월 12일, 몽탄면 사창리, 13명 참석; 1월 13일, 해제면 유월리 21명 참석; 3월 24일 운남면 내리2구, 10명 참석, 해남 2월 13일, 마산 상동리, 12명 참석; 3월 5-7일, 옥천 용정리 등 3회, 20명 참석; 강진, 8월 21일, 도암 덕서리, 6명 참석, 8월 22일, 울변, 삼흥, 홍학 등 3회, 10명 참석, 9월 11일, 안풍, 25명 참석. ·

전국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농가부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가부채실태에 대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하였고 군단위 지역에서는 주로 장날 장터에서 농가부채해결을 요구하는 홍보 선전전단을 농민대중에게 배포하면서 지역여론화와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농민대책조직화에 주력하면서 농가부채해결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현장단위에서는 추곡수매가 동결과 쌀값의 하락에 저항하여 수매량확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수세현물납부투쟁도 함께 전개하였고 부실경지정리시정, 비료출고료 시정, 비료조별판매 시정을 통해 일상적 농민권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남지역에서 구체적인 권익실천활동으로는 함평에서 비료조별판매 시정 활동이 있었고, 무안에서는 수매배정량 부정 대책 및 추가수매운동, 용정리 부당을류농지세 해결, 해제면 부당버스요금 시정활동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함평·무안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과 구속에 대한 대책활동을 벌였으며, 함평무안 농민현장사건 보고대회도 개최하였다. 해남, 강진에서도 회원대회를 개최하였다.

1984년의 대표적인 현장투쟁은 함평·무안농민대회였다. 함평, 무안 지역의 기독교농민회와 가톨릭농민회 함평무안 지역 현장문제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홍재(기농 대표), 이영만(가농 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1984년 9월 2일 함평장터에서 7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함평무안 지역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의 목적은 이 지역 주산물인 양파에 부과된 과도한 을류농지세문제, 생고구마수매문제, 외국소도입으로 인한 소사육농가피해문제, 영세농가의 과중한 부채문제, 추곡수매가문제, 농협민주화문제, 도시자본의 투기로 인한 소작문제, 전두환의 방일문제 등 농민의 삶을 파괴시키고 가난과 소외 속으로 몰아가는 현안의 농민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전투경찰, 군청직원, 면사무소직원, 농지개량조합과 농협임직원 등 전행정력과 경찰력을 투입하여 대회를 무차별 탄압하였다. 함평읍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대회는 원천봉쇄하여 500여 농민이 경찰차에 태워져 강제귀가 당하고 60여 명의 농민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당국의 탄압을 뚫고 모인 200여 농민들의 시위에 대해 전투경찰은 무수한 폭력으로 농민들을 짓밟았다. 대회는 권력의 무자비한 탄압과 이에 맞서는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⁶⁴⁾

함평기독교농민회, 함평농우회, 가농, 무안기독교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개최한 함평·무안농민 대회는 요구내용과 투쟁방법에서 농민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함평농우회, 함평기독교농민회, 무안기독교농민회 중심으로 구성된 '함평·무안 현장문제 대책위원회'라는 현장대책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인 준비를 하였고 투쟁방법도 소극적인 옥내집회

64) 한국기독교농민회, 『기농10년사』 (서울, 1992), 67-68쪽. 기독교농민회의 허헌중 간사가 코빼가 부러지고 무안 농민 신기철이 사복경찰이 휘두른 사이다병으로 머리가 찢어지고 엄지발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 대회로 인해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배종렬 회장과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노금노 총무가 구류 25일을 선고받고 무안의 신기철 회원은 구류 29일의 선고를 받았다.

방식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함평·무안농민대회는 사전 정보유출로 주요 지도부가 사전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농민들이 가두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하였으며, 양파에 대한 을류농지세 부과 철회, 생고구마 전량수매, 농지개량조합 특별조합비 부과철회 등 지역현장농민들의 경제적 요구와 농가부채 탕감, 외국소 도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보상, 하추곡 수매가 인상, 비농민 토지소유의 농민상환 등 전농민의 일반적 요구, 그리고 전두환의 방일반대, 지방자치제 실시 등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면서 투쟁하였다. 그 결과 지역농민들의 경제적 요구는 거의 관철시켰고 광범위한 농민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등 큰 대중적 성과를 가져왔었다. 함평, 무안농민투쟁은 농민운동에 있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하여 농민대중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전국단위 농민운동을 전개하면서 문화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1983년부터 지역단위에서 농민의 생산문화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활동을 시작하였다. 전남에서도 농민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풍물을 배우고 난 이후, 마을과 지역에서 풍물패를 조직하여 농민문화건설에 앞장섰다.

또한 1983년부터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 사무국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사무체계를 갖추면서 전국단위운동을 보다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연합회에 홍보부가 설치되어 1984년부터 현장농민들과 회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농가부채자료, 마을활동의 길잡이, 기독교농민회 안내 팸플릿, 교육수첩, 만화로 농민문제를 정리한 농사꾼타령, 농협의 운영과 역사, 농협법규집, 농지세란 무엇인가, 기농회지, 농민시사모음, 농민선교자료집, 농업경제 I·II, 농민의 노래 모음집인 농민가락 차차차 등이었다. 그리고 여성농민 학습자료로서 다람쥐 꽃신, 어머니죄인 등 여성농민문제를 동화에 비유하여 쉽게 만들어 제공하였다. 홍보선전 전단은 ‘농가빛 탕감하라’, ‘농가부채 해소방안’, ‘빛 없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들자’, ‘외국농축산물수입 중단하라,’ ‘기독교농민 민주화선언’, ‘쌀수매에 대한 성명서’ 등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였다.

(3) YMCA농민회와 농민운동

1980년 들어 YMCA 농촌사업에 신탁과 양곡조합을 만드는 것에 축산협동조합 사업이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축산협동조합이 조직된 것은 1980년 5월 전남 승주군 학구부락에서 였으며 이들 조합원들은 순천YMCA에서 창립집회를 가졌다. 학구축산협동조합은 암송아지 13두를 구입했으며 YMCA가 구입대금의 60%를 융자하였다. 이후 1981년까지 순천, 광주, 목포에 4개의 축산협동조합이 더 만들어졌다. 쌀 수입 계획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양곡조합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양곡조합에서 축산협동조합 쪽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어서 신용사업에서 더 나아간 활동을 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만들어갔다. 1979년

호남지역협의회가 광주와 해남에서 열렸고, 1980년 5월에는 순천YMCA에서 열렸다.

시범부락개발사업으로 1981년 상반기에는 전남 승주군 서면 둔대리가 두 번째 시범부락개발의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부락은 순천Y와 대한Y연맹이 협조하여 그간 신용협동조합과 축산협동반이 조직되었으며 부락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여명으로 둔대 농민협동회(회장 김경수)를 조직하고 그 첫 사업으로 1981년 2월에 느타리버섯 공동재배 사업을 하였다.

1980년대 들어 신협의 활동이 위축되어 갔으며 특히 1981년 신협조직법이 바뀌어 1982년 6월 이후 일정규모의 신협을 인가하고 그것만 허용하게 되면서 농촌신협 조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83년 3월 말 당시 전남지역에는 8개(전국 24개)의 인가된 신협과 3개의 지도 신협이 있었다. 그런데 전남의 6개 조합(장성 마령, 해남 감당, 승주 보남, 승주 득량, 광양 섬진강, 영암 난전)은 인가조합이나 지도조합이 아닌 채 신협의 계통조직과 아무런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신협들은 이미 해산되었거나 활동이 장기간 정지되어 사실상 해산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양곡조합은 1983년 3월 당시 5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양곡조합은 고리채(장리쌀)해결을 위한 만든 것이지만 1년에 단 한번만 거래가 이루어지며 계산은 현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현금이 쌀빚을 대체해 감에 따라 양곡조합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그에 반해 축산협동조합은 축산이 가장 유망한 농가소득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관심이나 반응이 대단하였다. 이미 12개의 축산협동조합이 조직되어 경제협동사업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산동축산반과 조성축산반의 경우에는 사료의 공동구입, 축산기술강좌 등을 실시하여 협동사업의 다양화를 꾀하고 축산반의 조직확대에도 적극적이었다. 물론 학구나 마산과 같은 곳에서는 축산반의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모임이 적어서 소를 사육하지 못하게 되는 반원이 있게 되어 대부금 상환시에 소값의 폭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1983년부터 YMCA는 기존의 신협(인가받기 어려운 지역은 신영계 형태), 양곡조합, 축산협동반을 부락개발에 투입하면서 농민법률상담을 하였다. 1983년 말 ‘농민생활법률’을 발간하고 상담하기 시작하였는데, 1985년까지 해남에서 1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증가하였다.

해남YMCA에서는 농어민회가 농민운동 관련 활동을 벌여 나갔다. 물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남지역에서도 이 사건에 관련자가 많아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었다. 그리고 연맹에서는 해남Y 농민회의 활동을 조직재건이라는 측면에서 신협 등과 같은 부락개발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은 권익투쟁 일변도의 활동을 접고 ‘협동운동과 함께 농민조직화에 주력하는 한편 농민상담소 운영 및 기술교육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촌문제 해결을 꾀함과 동시에 지역내의 농협이나 수협, 군, 면 등의 관계기관과 대립적으로 보다는 상호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해남Y 농민회의 간부들은 이같은 연맹의 권고에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신흥과 같은 부락단위 활동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욕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1981년 4월 5일에 해남YMCA 농민회는 이같은 흐름에 따라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강연회는 대한Y 연맹의 강문규 총무의 강연을 포함한 내용⁶⁵⁾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에서 약 1백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⁶⁶⁾

또한 농민회에서는 1981년 5월에 송지 지역에서 1박 2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부락개발 조직을 위해 힘을 썼다. 당시의 교육내용은 농촌문화, 농업문제의 본질, 협동조합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장교육에 이어 해남Y 농민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송지면 갈두리에서 임원을 중심으로 하기수련회를 가졌다. 이 수련회에서는 향후 농촌경제의 전망에 따른 활동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감당리의 시범부락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가마니짜기는 마대의 보급문제나 정부가 양곡을 수매할 때 마대포장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의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1981년 4월에 북일면 방산리에서는 21명의 조합원이 양곡조합을 창립하였고, 1982년 3월에는 조합원 15명이 송지면 미야리에서 양곡조합을 창립하였다.

1982년 1월부터 3월까지 해남 전지역에 걸쳐 이광교씨(총무)와 박상일씨(농촌간사)를 중심으로 부락현지 상담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3월 22일에는 삼산면 어성교에서 11명의 회원이 모여 그동안 Y농민회에 대한 전체평가를 하고 각 지역활동을 모색하는 토론을 하였다.

1982년 4월에는 송지면 미하리, 동현리, 외장리에서 마늘종 경매활동을 벌여서 상인의 침탈을 막아내는 활동을 하였으며, 5월 4일에는 해남읍 고도리 세계예식장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초청 농정토론회를 갖고 각종 농수산 정책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지적, 시정요구하였다.

1982년 5월 22일에는 농민회 총회가 Y회관에서 열려 새로운 임원진⁶⁷⁾을 선출하였으며, 지역별로 지역간사를 두기로 하였다. 지역간사가 지역조직을 맡고 지역간사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명칭을 해안에 있는 4개 면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해남YMCA농민회에서 '해남YMCA농어민회'로 바꾸었다. .

1982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화원면 별암리 해변에서 회원 20여명이 모여 지역활동 방향을 중심으로 한 하계연수회를 가졌으며 8월 5일과 6일에는 임원 11명이 모여 수협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65) 강문규, “민주, 정의, 복지사회의 실현과 농민의 역할”; 홍영표, “해남Y 농민회 활동배경설명- 농촌문제”, 민병초 국회의원 당선자의 인사 및 농민회 측의 요구사항 전달(수매가 인상 및 예시가 실시,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및 세액 인하, 의료보험의 농촌확대 요청 등).

66) 사실 이같은 행사가 있기 전에 해남Y 농민회는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1981년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거의 집권당이 어느 지역에서나 1석은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해남지역에서는 당시 집권당이던 민정당의 농업정책에 항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권당이 1석도 얻을 수 없도록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민병초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당선될 수 있었고 농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시키려 했던 것이다.

67) 회장 김옥수, 간사 박상일.

가졌다. 9월 22일에는 지역간사토론회를 가졌으며, 9월 28일에는 이제까지 발행해오던 농수산물 가격정보중심의 내용을 논단, 농촌시사, 회원동정, 지역활동 소식, 해남지역 농산물 가격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60부씩 월 2회 발행키로 하였다.

1983년 2월 1일과 2일에는 각 양곡조합 임원을 초청하여 양곡조합이 부락개발사업과 운동을 위한 인력을 배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양곡조합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2월 28일에는 옥천 백호리 신탁을 해산하고 조합원 24명이 양곡조합을 조직하였다. 3월 8일에는 송지지역에서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지 미야 양곡조합에서 축산과 농지세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3월 28일과 29일에는 군단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내용은 한국농촌의 현실, 협동활동 사례발표, 농기계특강, 부락개발, 공동토론, 친목행사 등이었으며 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3월 29일에는 북평 영전리에서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기계, 공해(농약), 효소농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지역별로 자생적 소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 1983년 3월까지 해남지역에는 각 면단위로 6개의 소그룹⁶⁸⁾이 조직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양곡조합도 그룹활동으로 맥을 꾸준히 잇고 있었다. 1983년 초까지 4개의 양곡조합⁶⁹⁾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1983년 5월 17일에는 이전에 두 차례 있었던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이어서 현지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제3회 해남YMCA 대화의 모임을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1984년 1월 5일과 6일에는 해남Y 농어민회 풍계연수회 및 총회가 해남Y회관에서 열렸다. 22명의 농어민회 회원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농촌소지역단위 개발의 방향”에 대한 강의와 군단위 활동 및 지역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각 지역에서 협동활동의 기초가 닦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송지지역(양곡조합 및 송농회 활동), 둔내지역(농산물 공동판매 및 상록회 활동), 북일지역(양곡조합), 백호(양곡조합)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화원, 화산, 북평, 삼산, 마산면 등의 지역에서도 소그룹 활동이 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84년 3월에는 농어민회 임원연수회가 열렸으며 이 모임에서는 “농어민 사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농어민 사업위원회는 농어민회의 임원, 이사, 간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농어민회의 회원들이 YMCA에 회원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회관에 마련될 공판장운영을 위한 추진소위원회도 구성하였다.

2) 농민운동의 대중적 전개(1985-1989)

1985년 소몰이투쟁으로 시작된 농민대중의 분출은 1988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오면서 농민운동의 단일조직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특히 1987년-1989년 시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대통령 선거(직선제)와 1988년의 4·26총선, 한미통상협상과 양담배·쇠고기

68) 문내 상록회 - 회장 김옥수 외 7명, 송지 송농회 - 회장 김동선 외 7명, 영전 농우회 - 회장 박병준 외 5명, 미학 청년회 - 회장 천순필 외 12명, 월강 청년회 - 회장 김동선 외 21명, 가림? - 회장 맹생모 외 6명.

69) 갑당 곡협, 신탁 : 조합장 홍영표, 미야 곡협 : 조합장 정순영, 방산 곡협 : 조합장 윤중현, 백호 곡협 : 조합장 장정일.

수입 확대, 자본시장 개방, 통일운동의 확산, 서울올림픽 개최 등이 있었다. 1989년에는 전국민족 민주운동연합 결성, 2.13여의도 농민대항쟁,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 4.8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조치와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과 문익환·임수경·문규현 신부의 방북과 공안정국, 전교조 결성, 사회주의권의 변화, 전두환의 국회 증언과 기만적 5공청산 등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후반은 농촌현장에서 외국농축산물수입반대, 농가부채, 수세거부, 농산물제값받기(생산비 보장) 투쟁 등 농민생존권 싸움이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부분별, 지역별 투쟁의 열기 속에 1988년 11월 17일의 여의도집회(미국농축산물수입반대 및 농산물 제값받기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만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들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1) 농민운동 조직의 다양한 발전

① 가농 전남연합회의 조직발전과 운동

1985년

〈조직과 교육〉

1985년 4월에 보성·고흥협의회, 11월에 강진·장흥협의회가 창립하여, 이미 창립되어 활동하던 구례, 함평 서부와 동부, 무안을 합쳐 6개 협의회가 지역운동의 중심체로서 자리잡았다. 그리고 1985년 동안 나주·광산협의회가 준비하여 1986년 1월에 창립하게 되었다.

전남연합회에서는 협의회 총무들의 집중훈련을 위해 정기회의를 통한 활동점검과 관리능력 배양지도(4회), 접촉 방문을 통한 지도력 개발을 위해 수시 협력하였다. 협의회와 분회단위의 교육에 투입될 중견회원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해 중심인물 20명을 선정하여 2박 3일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회장급 이상 70명을 선정하여 연합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분임 토의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신규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을 3박 4일 실시하였다.(39명). 구례, 보고(보성·고흥), 함평, 강진, 장흥 등 지역에서는 협의회 단위의 자체 강사를 확보하여 지역 분회교육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였다. 현장교육이 여러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와 마을교육, 지역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도자교육에 신진 청년층이 대거 참여하였지만, 분회교육은 저조하였다. 교육사업을 총괄하여 살펴보면, 현장교육(총 55회)에 653명(기초교육 48회, 분회교육 7회)이 참가하였고, 지역교육은 7회에 걸쳐 195명이 참가하였다. 도단위교육은 5회에 걸쳐 163명이 참가하였고, 문화, 전국 임원연수, 여성실무자, 장기교육과견교육 등에 파견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협의회는 자립기반 조성(운영자금 확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함평서부협의회는 양파 구판사업을 실시하였고, 보고협의회는 각종 기념품과 자료를 공급하였다. 이밖에도

도농간 출신지역 인사를 연결하여 협의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였다. 지역협의회와 지역 본당의 협력 방안도 모색되었다. 보고협의회, 나주·광산협의회는 교회 안에 농민문제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였다.

가농은 지역단위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모임을 협의회, 분회 단위에서 실시하였다. 중견회원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연수, 연합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분회장 확대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각 협의회·분회마다 농한기를 택하여 단합대회 등을 하여 일반 농민대중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조직력을 강화하였다. 보고협의회의 청년회원 학습회는 타 협의회에 모범사례가 되었다.

조사활동으로는 연합회 단위 조사로서 협의회 및 분회 실태 조사(2회), 구례 사육비 피해실태 조사(2회), 외국 농축산물 도입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각 협의회 분회), 대학생 농촌활동 탄압 조사, 부채 실태조사, 바나나 수입에 따른 주민 반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협의회 및 분회 단위 조사로는 농축산물 도입에 의한 피해 실태 조사(각분회), 바나나 수입에 따른 과일재배농가 반응조사(장흥·강진협의회), 그리고 보고협의회가 실시한 것으로 조성 득량만 염수 침해 피해 실태 조사, 벌교 단협 정부 양곡 부정 실태조사, 고흥 포두 해창만 침수 피해 실태조사, 맥주맥 전량수매운동을 위한 조사, 글라디올라스 불량종자 피해농민 실태조사, 대서 송림 경찰폭행 피해조사, 동강 내대 수몰지구 피해조사 등이 있었고, 옥산분회가 실시한 조사로 경로잔치 시계판매 부정 시정 조사, 봉황옥산 인읍재 강제편입 경위 등이 있었다.

그리고 1985년에는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나주(12월 2일, 나주성당, 1,510명 참석)와 구례(11월 24일, 구례성당, 450명 참석)에서 개최하였다. 1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일반 농민대중의 의견을 집합화하는 자리였으며, 자체적으로 대본을 준비하여 마당극을 공연하였다.

〈운동〉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및 소값 피해보상운동

1985년에 두드러진 활동은 소값폭락에 따른 '소값 피해보상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한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이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대규모로 펼쳐진 이 싸움은 전 국민에게 농민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집권세력에 대해 큰 충격을 준 활동이었다.

소의 경우는 농가의 가장 중요한 부업으로 모든 농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5년간 20만 7천여 마리의 외국소와 약 90만 마리분의 쇠고기를 수입한 결과 1985년 10월 당시 국내 소값이 1983년 초보다 60-80% 가량 폭락하였다. 이 때문에 소 사육농가는 한 마리당 평균 70-80만원씩 적자로 인해 2백만 농가가 총 2조4천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

가농은 '도입우 실태조사'(3월)에 이어 수입소로 인한 소 사육 피해보상 운동의 지침을 발표하고(6월 24일) 외국농축산물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실태조사를 18개 군에서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보고대회와 정책간담회, 피해보상청구 활동 등을 하였다. 또한 '소값 피해보상활동과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가농은 각종 교육과 모임 등을 통해 외국농축산물 수입실태와 피해상황,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운동 전개를 촉구하면서 전국적인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였다.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과일재배농가 피해실태조사(보성고흥협의회), 딸기재배농가의 바나나수입에 따른 피해조사와 서명운동(강진협의회) 등이 추진되었다. 경남 고성농민(고성 두호분회)들의 첫 소몰이시위(7월 1일)를 필두로 전국 22개군으로 소몰이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농민들의 시위는 경운기와 소를 마을에서부터 몰고 나와 군·면 소재지까지 시위를 벌이거나 소 반납, 소시장에서 소를 때려죽이는 등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남연합회에서는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홍보자료 준비를 위한 조사 활동(장성, 구례, 함평, 보성 등)을 거쳐 홍보자료 5만부와 서명용 1만부를 제작하였다. 연합회와 각 협의회, 분회에 서명운동 추진위와 대책위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활동 전개하였다.

전남지역의 농축산물 수입반대 및 소값 피해보상운동은 구례의 사늑비 피해 보상요구 운동(4월), 무안의 농축산물 수입반대 농민대회 개최, 벌교 두정분회의 맥주맥전량 수매요구 및 외국농축산물 수입 반대 가두 시위, 나주 양천리분회의 소 용자금을 소로 반납(8월), 함평협의회의 우시장 소 살해 후 가두시위(7월), 강진협의회의 가농기농 연대 가두시위(9월), 전주 중앙성당 농민대회 참가(9월, 135명), 벌교 두평분회와 나주 옥산분회의 마을 진입로 외국농축산물 도입반대 플래카드 설치, 각 협의회 분회의 시장, 예비군 교육장, 각종 행사 시 선전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무안, 강진은 기농과 연대활동을 전개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하였다. 구례 사늑비 피해보상요구, 벌교 두평분회 맥주맥 전량수매 요구 및 외국 농축산물 도입반대 가두 시위는 일반농민 대중의 요구를 수렴하여 일반 농민 대중과 같이 투쟁함으로써 요구를 관철시켰다. 함평 우시장 소살해사건, 나주 양천리의 소로 용자금을 반납하려던 사건은 소값폭락을 언론에 호소함으로써 충격을 주었고 사건 발생 후 가두시위 및 농성을 함으로써 사건을 일반화하여 사회문제화 하였다.

피해보상·시정 운동

보성·고흥(보고)협의회에서는 벌교 단위농협의 정부 양곡 부정 횡령 폭로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유인물 500매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으로 조합장 공개 사과(6월 9일)를 이끌어냈고, 보고협의회 두평분회의 맥주맥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경운기 시위(7월 24일)를 전개하여 당국으로부터 맥주맥을 전량 수매하기로 각서를 받아냈다.(이후 전 지역전량 수매함). 피해보상운동도 전개하였다. 고흥군 동강면 내대분회의 수몰지구 침수피해 보상 요구 운동(6월) 과정에서 피해 주민과 농민회원 40명이 고흥농조를 점거, 농성하였다. 농성 5시간 만에 피해보상을 약속 받고 해산하였다. 또한

보성군 조성면의 득량만 침수 피해 보상 요구 운동(7월-12월)을 전개하여 800만원을 보상받았다. 나주협의회는 노안 양천리분회는 8월 16일, 소값 폭락에 항의하여 용자금을 소로 반납하기로 결의하여 군수 면담을 요구하고 항의 농성을 하였다.(소값피해보상운동). 구례협의회는 사늑비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보상을 받았다(4월). 나주협의회 옥산분회는 경로잔치에서 행해진 시계 판매부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유인물 500매를 배포하였으며(10월), 11월에 피해액 전액을 보상 받았다. 또한 마을저수지인 인읍재 강제 편입 시정요구 운동(11월)을 전개하였다. 유인물 1,5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요구를 계속하면서 농조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였다.

분회활동

분회단위에서 마을대동제, 주민야유회, 공동세배, 경로잔치, 노약자 가정 못자리, 모내기 해주기, 마을게시판 설치, 농민상담소 개설, 헌옷 장보기(도시본당과 협력), 아동문고 설치, 농약병 수거, 들·마를 환경정비, 공소교리교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정월대보름 달맞이 놀이, 사물놀이 교육과 풍물패 조직을 통해 풍물놀이, 줄다리기, 마당극 공연 등 문화활동도 확대해 나갔다.

또한 현장 분회의 요구에 의해 기독교민중문화선교원, 민중문화연구회 등과 협력하여 풍물기능 습득을 위한 활동을 분회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 풍물 기능 전수훈련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자체 풍물패를 육성하였다(망운, 가덕, 동백, 만년, 대덕, 함평청년, 화순 등). 이를 기반으로 여러 분회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덕, 화순, 망운, 만년, 대덕)가 실시되었고, 망운분회에서는 회원들이 풍물 기능을 습득하여 추수감사제 시 자체적으로 마당극을 공연하였다.

경제적 협동활동으로는 분회별 실정에 맞는 구매, 판매, 신용·생산 등을 시도하였다. 공동구매, 농번기공동작업(가덕, 동백, 마랑, 옥산, 입석, 구만, 대산), 공동판매(망운, 동백), 농기계공동이용(구만리, 옥산, 신기, 청계), 신용협동(양천, 청계, 구만), 영농회 운영, 농사조합, 공동답경작, 공동축산 등을 하였다. 구례 구만분회는 농번기 공동작업을 통해 공동자금을 조성하여 분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했고, 신규분회인 옥산분회는 농번기 공동작업, 일일찻집 운영을 통해 농민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마을민주화와 권익실천활동으로는 우편물 검열 및 개봉배달 문제 시정, 정부대여곡부당수수료 환불, 산림행정의 반농민 횡포 시정, 불량고추종자 피해보상, 규산질비료 강매시정, 간이급수시설 문제점 시정, 이·동장의 민주적 선출 및 마을회의의 민주화,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운동, 수매계약 불이행 시정활동 등을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동참 속에 전개하였다.

여성농민활동

여성 농민들은 하반기에 있었던 함평, 무안 소싸움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싸움을 전개하였다. 함평 동백분회는 협동 구매 구판사업, 공동작업, 공동기금 조성 등을 꾸준히 실천하였고,

월례회, 분회교육, 야유회, 대보름놀이 등을 통하여 분회의 결속도를 높였다. 새로 구성된 나주의 옥산분회와 입석 도동분회는 공동작업이나 공동기금 조성 등을 해 나갔으며, 월례회와 학습회도 해 나갔다. 조직확대 대상지역으로 나주, 무안, 함평 동부, 구례를 상정해 6회에 걸쳐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나주지역에서 분회가 구성되었다.

1986년

〈조직〉

협의회 조직강화와 확대

나주·광산협의회가 나주의 양천리(계량), 옥산, 잉읍(여성) 분회와 광산의 송계분회를 중심으로 2월 4일에 창립되었다. 또한 1986년 한 해 동안에 나주·광산협회에 알뜰(여성), 금암, 봉황, 장성리분회, 강진협회에 부춘분회, 구례협회에 수한(여성), 이평, 산동(현촌·원촌)분회, 고흥·보성협회에 웅치분회 등이 창립하였다. 웅치분회는 웅치면 전체 각 마을 청년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면농민회 성격이 강했다.

협의회별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구례협의회는 협의회장이 분회장을 중심으로 분회를 관리하였고, 신규분회 2개와 20명의 회원가입을 이뤄냈다. 비록 하반기 싸움으로 인해 지역교육 실시가 어려웠지만 7회에 걸쳐 분회교육을 실시하여 78명이 참가하였다. 과제실천을 위해 프랑카드 내걸기(수한, 산동분회), 경제활동(구만, 대촌분회)과 대보름놀이 문화행사 등을 실천하였다. 일부 활동가들이 이탈하여(다른 조직으로 옮겨가) 조직운영과 관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조직이 침체되었다. 협의회는 각 분회장 중심의 조직관리와 마을교육(6회) 및 분회별 실천을 독려하였다. 경제활동(신기, 마량, 가덕), 문화활동(가덕, 마량), 봉사활동(가덕), 권익실천활동(청류, 신기)이 분회별로 전개되었지만, 이전 해 보다 많이 침체되었다.

무안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상임위 체제로 개편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재정자립을 위해 모금, 문화행사를 하고 회비로 협의회 운영비를 충당하였다. 연합회는 7월에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였는데, 실무위원회는 조직훈련위, 문화선전위, 청년위, 재정위로 구성되었다. 분회활동의 위축으로 침체분회가 많아져서 교회(공소) 중심의 조직관리가 되었다. 무안협의회는 1986년에 많은 투쟁을 펼쳐 선전활동과 문화활동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었으나, 조직관리 부분에서는 지역농민대중과 괴리되는 선도투쟁으로 인해 고립되어 있었으며, 청년과 장년의 운동론 차이로 화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선전활동으로 플랑카드 내걸기(망운), 농민의 소리 방송(망운), 협의회지 3회 발행, 분회지 1회 발행, 벽서 쓰기 등을 실천하였고, 문화활동(망운, 무안), 권익실천활동(망운, 무안, 청계, 기동), 봉사활동(망운, 청계, 무안) 등을 각 분회에서 전개하였다.

보성·고흥(보고)협의회에서는 마을교육(8회), 지역교육(1회), 학습(농정, 웅치)을 실시하고, 협의회 총무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조직관리에 힘써 신규분회 1개와 회원 12명이 새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유인물 제작 배포(오월리, 협의회)와 벽서 쓰기(두평, 농정)를 하였고, 문화활동(대보름놀이 행사), 권익실천활동(조성, 오월리, 농정), 부락민주화활동(두평, 농정, 웅치) 등을 하였다.

나주·광산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지도부가 분회장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회장, 총무가 분회를 순회하면서 관리하였다. 공소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분회 5개(잉읍, 알뜰, 봉황, 장성리, 금암 분회)를 창립하고 30여명의 회원이 새로 가입하였다.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하였으며, 마을교육(3회), 지역교육(3회)과 권익실천(옥산, 장성, 금암 분회), 경제사업(옥산, 알뜰, 장성리 분회), 문화활동(옥산분회) 그리고 프랑카드 내걸기(옥산, 금암, 장성리 분회) 등을 하였다.

장흥·강진협의회에서는 '강진농민에게 드리는 글'(5,000 부), '천관산의 메아리'(회지, 2,000부)를 제작배포하고 벽서 쓰기(3회) 등을 통해 선전활동을 하였고, 마을교육(8회)과 지역교육(1회)을 실시하였다. 관할 지역이 넓어 조직관리가 힘들었지만 회장, 총무 등 집행부가 조직 확대를 위해 지역회원들을 방문하는 등 노력으로 분회(부춘분회)를 1개 확대하고 15명의 회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강진농협 신축건물 항의(쇠뚝물투척사건), 장흥 회진농협 신축건물 항의 유인물 살포, 강진 월남 수몰지구 피해보상운동 지원활동 등 권익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지역협의회 총무단 회의(3월 5일과 5월 9-10일)를 통해 협의회 간의 경험을 교류하고, 현안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분회활동

1986년도 분회실태조사에 의하면, 활동 중인 분회는 총 60개(남 55개, 여 5개)⁷⁰⁾로 파악되었다(총 등록분회 97개, 정리분회 37개). 연합회와 지역협의회는 분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이 가능한 분회와 활동이 미약한 분회를 구분하여⁷¹⁾ 미약한 곳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많은 분회⁷²⁾에서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였고, 분회원의 교육을 위해서 산동, 농정, 웅치, 영광(남·여), 망운, 무안분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습모임을 가졌다.

옥산(고추모 공동경작, 못자리 공동경작, 이양기 공동이용), 알뜰(300평 협업경영), 입석(이양기, 콤팩인 공동이용), 구만리(농기계 공동이용), 대촌(농기계 공동이용), 신기(이양기 공동작업), 청계(신협 운영), 양천(신협 운영)등의 분회가 경제협동활동을 하였다. 입석, 두평, 망운 분회는

70) 여성분회는 나주 잉읍, 함평 동백, 나주 알뜰, 영광 도동, 구례 수한분회이다.

71) 조직활동이 가능한 분회는 구만, 대촌1, 대촌2, 수한, 수한(여), 현천, 웅치, 옥산, 망운, 가덕, 마량, 입석, 노동, 광주, 이평, 당촌, 조성, 양천리, 송계, 장성, 청계, 대덕, 회진, 답골, 동백, 신기분회, 오월리, 두평, 전동, 농정, 금암, 잉읍, 오정리, 무안, 도대, 장전, 부춘, 고양촌, 청류 분회 등이었다. 침체로 인해 활동이 미약한 분회는 지천, 유산, 대전, 노동, 도화, 마서, 알뜰, 강정, 평림, 청수, 만년, 보전, 송죽, 가곡, 정류, 신기, 답골, 외대화, 향진회, 문장, 관교, 절산 분회 등이었다.

72) 구만리, 대촌, 수한, 산동, 이평, 수한(남·여), 농정, 웅치, 조성, 가덕, 마량, 동백, 망운, 무안, 옥산, 장성, 금암, 노안, 송계, 회진, 대덕, 영광, 입석(남·여) 분회.

지역문화패와 연결하여 풍물 기능을 습득하였고, 망운, 가덕, 입석, 두평, 대산, 마량, 옥산 분회는 마을행사를 주관하였다. 이밖에도 입석(마을회의 민주적인 운영), 구만(이장 민주적인 선출), 능정(장년층과 청년층의 대화), 옥산(이장 선출), 웅치(이장 선출), 두평(회원 개발위원 선출) 분회 등에서도 마을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망운(농협 부정 시정, 간척지 토지문제 해결), 조성(영수 침해 피해보상, 농협 부조리 시정), 오월리(수몰지구 피해보상), 능정(강제잡부금 시정), 청류(강제객토사업 시정), 옥산(영농후계자 처우 개선, 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신기(시청료, 잡부금 거부), 담골 분회 등에서 여러 가지 권익실천활동을 하였으며, 망운, 입석, 옥산, 가덕, 동백, 구만, 대산, 웅치, 무안, 마량, 송계, 양천리, 알뜰, 이평, 광주분회에서는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가덕(자연건강 보급), 망운(수지침 의료봉사), 광주(자연건강) 분회에서는 주민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밖에도 분회지 발간(무안 망운분회, 장흥 대덕분회)과 농민의 소리 방송국 운영(망운분회) 등 다양한 활동들이 분회별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1986년 활동이 전반적으로 대중투쟁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분회활동이 침체되었다. 전체 분회에 대비해 활동비율을 보면, 월례회의(40%), 학습회(10%), 경제활동(15%), 문화활동(13%), 마을민주화(10%), 권익실천(15%), 자립기금조성(25%) 등으로 분회활동이 저조하였다.

분회와 협의회, 연합회 단위에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분회들은 공동작업, 문화행사, 회비납부 등으로 공동기금을 확보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였고, 협의회는 성금(보고, 구례, 나주 광산, 무안, 함평 · 강진, 장흥), 특별회비(나주광산, 무안, 보성 · 고흥), 문화행사(구례, 보성 · 고흥) 등으로 재정을 조달하였으나 운영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연합회도 재정자립을 위해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특별회비 납부, 기념품 및 각종 자료 판매, 모금운동으로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였다.

여성농민활동의 활성화

1985년에 연합회에서 도 단위 여성교육을 남성회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여성회원 스스로 여성들만의 모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1986년에 잉읍(나주 봉황), 알뜰(나주 다시), 수한(구례 광의), 도동(영광읍)분회 등에 20여 명의 회원들이 4개 분회를 조직하였다.⁷³⁾ 여성분회에서는 마을 기초교육(4회), 입회자 교육(1회), 중심인물 육성을 위한 파견 교육(3명)을 실시하고, 각종 학습자료를 배포하고 학습일지를 기록하였다. 잉읍, 동백, 도동분회(학습회 포함)에서는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동백, 잉읍, 도동분회의 공동작업과 알뜰분회의 논농사 협업화 등 생산활동과 도동, 동백분회에서 야유회 겸 단합대회가 있었다. 동백분회는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경로잔치를 열었다.

73) 전남연합회에 소속된 여성분회는 1983년에 조직된 동백분회(함평), 장미분회(함평), 무궁화분회(무안)와 1988년에 만들어진 나리분회(진도)를 포함하여 총 8개 분회가 활동하였다.

〈운동〉

1월 22일, 강진군 농협지부 개관식에서 농협건물 신축공사에 항의하여 쇠팅을 넣은 계란을 투척함으로써 반농민적인 농협 운영을 규탄하였다. 이 사건으로 강진협의회 정종범 회장 외 2명의 구속으로 재판 참여 및 구속 농민 석방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에도 민주헌법쟁취, 농가부채 탕감, 수입개방 저지 시위투쟁을 2차례 계속하여 연 인원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하였다.

2월에는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스티커(민통련 제작)를 각급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부착하였다. 이 활동으로 보고협회의 정길현 총무가 연행되어 구류 7일을 받는 등 민주헌법 쟁취운동이 현장에서 작게나마 이루어졌다.

3월 30일, 광주 금남로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된 '민주개헌 쟁취대회'(직선제 개헌 1천만 서명운동)에 전남 도민 30여만 명이 모인 가운데 각 협의회와 분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가농회원 100여명)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수십 명이 연행되었다. 가농은 장흥협의회 위의원 회장과 연합회 주향득 간사, 국승보 회원 등 3명이 구속되고 노환길 회원이 구류 10일을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투쟁을 벌였다.

4월 19일, 가농 무안협의회는 기농과 연대하여 수입개방 저지 및 미국예속정권타도 무안농민실천대회를 무안 버스정류장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저지로 무안제일교회에서 장터 입구까지 가두시위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 32명이 연행되고 무안 기농회장이 구속되었다. 이때 연행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무안 천주교회에서 농민운동 탄압과 폭력경찰을 응징하는 가두방송을 겸한 농성투쟁을 무안천주교회와 제일교회에서 24일까지 전개하였다. 25일에는 15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고 집회와 가두시위 투쟁을 하였다.

4월 26일, 무안 망운분회에서는 망운농협조합장의 마늘 판매 이익금 부정을 폭로하면서, 마늘생산비 보장과 농가부채탕감, 민주농협쟁취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유인물 제작 배포와 가두방송, 시위 투쟁을 5월 12일까지 17일간 계속하였다. 강진 쇠팅물 투척사건(1월)을 계기로 민주농협 쟁취운동이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5월 들어 농민생존권과 민주헌법 쟁취운동을 각 협의회와 분회에서 전개하였다. 구례(산동면 소재지 뒷산, 150명 참석, 대회 끝나고 경운기, 오토바이 가두시위), 함평(손불면 야산에서 민주농정쟁취대회 개최 후 손불면사무소까지 가두시위, 100명 참석), 보성·고흥(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가두시위, 19명 연행), 강진·장흥(강진성당에서 민주농정쟁취대회, 50명 참석) 등에서 대중집회와 가두방송, 시위투쟁을 각 지역 현장 역량에 맞게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속 3명, 구류 2명, 연행자 19명 등이 있었다.

5월 16일, 광주민중항쟁 계승을 취한 5.16 광주 남동천주교회 추모미사에 참여하여 광주대교구 가톨릭농민회, JOC(노동청년회), 가청(청년회), 가대연(대학생회) 등 천주교사회운동단체가 연대하여 5.18에 즈음한 연합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미사가 끝나고 "5월의거 계승하여 민주화로 매진하자" 등의

프랑카드를 내걸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위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34명의 연행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남로 가톨릭센터 액션단체회의실에서 "5.18광주민중항쟁 6주기에 즈음한 5월 의거 계승하여 민주화로 매진하자" 등의 프랑카드를 내걸고 연행자 석방요구 농성투쟁(오후 2시 - 오후 7시 30분까지)을 벌여 34명 전원이 석방되자 농성을 풀었다. 이 대회에서 "살인농정 책임지고 군사독재 물리가라"라는 성명서 1,500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7월 4일, 무안협의회는 무안 천주교회에서 '마늘생산비 보장 및 살인 농정철폐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김만제 부총리 화형식을 마치고 광목간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투쟁을 하였다. 경찰과 몸싸움으로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고 신기전 외 2명이 연행되었다.

7월 9일, 구례협의회는 '민주헌법과 농민생존권 쟁취대회'를 개최하고 경운기, 오토바이 등을 동원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7월 14일, '3.30광주민중헌법쟁취대회'로 구속된 주향득(연합회 간사)의 재판이 끝나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에 항의하는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였다. 서경원 전국회장 외 15명이 광주경찰서로 연행되어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광주경찰서 앞에서 연좌 농성(오후 9시-다음날 새벽 3시까지)을 하였다.

7월 15일에는 '3.30 민주헌법 투쟁대회' 시 구속된 주향득의 재판과정에서 서경원 전국회장이 검찰에 항의하여 법정구속 되자 이에 항의하여 미일외세배격, 군사독재 타도, 성고문 폭로, 구속자 석방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 본부 서경원 회장이 20일 구류를 받았다.

8월 19일, 나주 장성리분회에서 마을입구에 "예속정권 타도하여 민주농정 쟁취하자"는 프랑카드를 내걸고 경찰과 수차례 대치하였다.

8월 29일 국치일을 맞아 전남에서는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전남지부' 결성식을 가졌다.(전국본부와 각 도단위 연합회에서 같은 날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9월 1일, 가농은 이날 전국 3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남연합회에서도 구례, 보성, 고흥, 함평, 강진, 장흥, 무안, 나주, 광산, 광주 등지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였다. 경운기를 대량동원하였고 동시다발로 각지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연인원 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위투쟁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회원이 연행되었다. 투쟁이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전개되던 이전과 달리 농촌지역인 읍면단위로까지 확장되었다.

12월 5일에는 '86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평 천주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지역 농민대중의 정치의식 고양과 과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페인트 벽서 쓰기(입석, 망운, 두평), 플래카드 내걸기(옥산, 두평, 망운, 수한, 금암, 장성이, 대덕, 오월리, 산동), 벽보 붙이기(각 분회), 옥외 확성기 가두방송(망운), 유인물 제작 배포(대덕, 회진, 강진협의회, 무안, 보고, 함평, 마량, 망운 11종 45,000장 배포), 본부와 연합회 유인물(12종 60,500장), 타 단체 유인물 등을 장터, 예비군교육장,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투쟁과정에서 구례협의회는 경운기에 확성기를 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선전을 하였고, 함평협의회는 손불면 소재지 야산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지역 농민들에게 선전 작업을 하였다. 더욱이 망운분회는 공소에 '농민의 소리' 방송국을 개설하여 정기적인 방송을 실시하였다.

농민들의 투쟁이 광범하게 발생하면서 각 농민운동단체들 간에 연대활동도 전개되었다. 가농, 기농, Y농 등 농민운동 단체가 '지역 농민운동의 발전을 위한 농민위원회'라는 협의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수차례 모임과 공동으로 신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각 기구운동의 운동론 차이를 해소하고 통일적인 운동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과 세미나를 수차례 갖고 각기 조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천주교 내 사회운동단체의 연대를 위한 모임을 수차례 갖고 5.18민중항쟁 추모식에 즈음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연대투쟁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전남지역 운동단체의 모임(전사협)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과 통일적인 운동방향을 모색하였다. 강진, 나주, 함평, 영광, 무안 등의 지역협의회는 다른 운동단체와 현장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군 단위 지역운동을 정착시켰다.

1987년

〈조직〉

협의회별 활동

연합회는 다양한 회의와 교육 등을 담당하였는데 조직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 일을 이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역협의회 활동을 보면, 강진·장흥협의회는 1987년에 회원 12명, 분회 2개가 증가되었고, 마을교육 8회와 학습을 실시(부정기적)하였다. 협의회 소식지 '천관산의 메아리' 1-3호를 발행하였고, 수세거부 전단 2회, 장흥 민중의 소리 1회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실천활동으로는 지서 부지대와 부당세금 철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수세거부 대회를 개최하였다.

강진·장흥협의회는 2개 군의 광범한 지역에 걸친 조직관리가 힘들어 강진군, 장흥군이 각각 분리되어 가동되었으며, 강진은 농민위원회 중심으로, 장흥은 국민운동본부 지부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구례협의회에서는 회원 9명, 분회 2개가 증가되었고, 마을교육 8회, 지역교육 1회를 실시하였다. 농가부채탕감 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700여 명 참여), 국공유지(하천답) 측량비 부당징수 철회를 요구하였다.

나주·광산협의회는 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조직관리가 되었다. 회원 38명, 분회 8개가 증가하였고, 마을교육 7회, 지역교육 2회를 실시하였다. 수세거부와 농가부채탕감 투쟁을 전개하고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소식지인 '나주광산지역 농민소식'과 수세거부투쟁을 선전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였다. 나주광산협의회는 8월 10일에 남평 드들강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가졌다.

무안협의회는 농민위원회 중심으로 기농과 연대하여 많은 투쟁 경험과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무안지역은 선거국면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수배, 구속 등으로 지도력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 교육활동으로 마을교육 7회, 지역교육 1회를 실시하고, 소식지인 '무안농민신문'(5회)과 각종 전단(12회)을 제작, 배포하였다. 또한 농민위원회 주최로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대회와 고문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고흥협의회는 읍·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2개 군에 조직이 걸쳐 있어 조직관리가 어려웠다. 한 해 동안 회원 16명이 증가하고, 마을교육 9회와 지역교육 1회를 실시하였다. 민주농협쟁취, 수세거부 농민대회, 해창만염수침해 피해보상 투쟁을 전개하고, 성명서(3회)를 발표하였다.

영광협의회는 1987년 11월 6일 창립(회장 정병온, 총무 정종관)하고,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조직 확대와 지도부 구축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였다. 1987년에 회원 36명과 분회 5개가 증가되었으며, 마을교육 7회, 지역교육 1회를 실시하였다. 수세거부 대회와 추수감사제 및 창립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소식지 '영광 농민의 소리'(2회)를 발행했다.

진도협의회는 1987년 8월 7일에 창립하였다(회장 박종구, 총무 김재옥). 공소를 중심으로 분회가 만들어졌으며 회원 31명, 분회 5개로 구성되었다. 진도천주교회에서 실시한 농민교육(5월 7일)에 참가하려는 신자들과 교육팀을 상대로 행정 당국이 탄압하고, 교육 참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지역교육 1회를 실시하고, 소식지 '진도 농민의 소리'를 발행했다. 진도협의회 창립 및 농민대회(8월 7일)를 진도천주교회에서 400여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1부 농민대회, 2부가두시위(마늘 양파 생산비 보상을 위한), 3부 문화행사 순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12월 5일에는 진도 수세거부 농민대회를 경운기 15대, 농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군청 앞에서 개최하고 경운기 가두시위 투쟁을 벌였다.

함평협의회는 농가부채 공청회(함평천주교회, 4월 6일)와 마늘·양파 생산비보장대회(함평 가덕, 7월 11일)를 개최하였다. 경찰의 원천봉쇄와 주요간부의 가택연금 등의 탄압으로 회원들과 경찰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농민운동 탄압 저지 농성투쟁으로 이어졌다. 마을교육(3회)과 지역교육(1회)을 실시하였고, 소식지 '함평 농민의 소리'(1회)와 투쟁속보, 성명서 등을 제작 배포하였다. 그리고 각 마을에 '쌀생산비 보장과 농협민주화' 현수막 28개를 내걸었다.

그 외에도 해남협의회(회원 7명, 분회 1개), 곡성협의회(회원 35명, 분회 5개), 신안협의회(회원 20명, 분회 1개), 승주협의회(회원 5명, 분회 1개) 등에서도 회원과 분회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분회활동

월례회의는 구만, 대촌, 수한, 산동, 이평, 능정, 웅치, 조성, 가덕, 마량, 동백, 신기, 망운, 무안, 청계(지역위원회 결성), 옥산(남·여), 장성, 양천, 송계, 봉황(지역위원회), 회진, 대덕(장흥지역위원회), 영광 입석(남·여), 부춘, 진도(진도읍, 마산, 나리, 신동, 정자) 등의 분회에서 실천하였다. 학습회는 능정, 웅치, 영광(여), 옥산(여), 망운, 무안, 산동 분회에서 정기·부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기금을 조성한 분회는 입석, 망운, 옥산(남·여), 가덕, 동백, 구만, 대산, 수한, 웅치, 마량, 송계, 양천, 장성, 알뜰, 광주 분회 등이었다.

옥산(고추모, 못자리 공동경작, 이양기 공동이용)와 알뜰(300평 논 협업경영), 입석(이양기 콤바인 공동이용), 구만(농기계탈곡기 공동이용), 대촌(농기계 공동이용), 신기(이양기 공동작업), 청계(신헌), 양천(신헌), 가덕(모내기작업) 분회는 경제협동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한 옥산과 장성, 웅치부춘, 두평, 구만, 대산, 능정, 입석, 부춘, 송계, 양천, 가덕, 마량 분회 등에서는 마을민주화활동을 실천하였다. 대덕분회에서는 강제잡부금 징수 철회를 요구하였고, 옥산분회에서는 병막걸리⁷⁴⁾ 시정을 위해 여성회원들이 앞장섰으며, 회진(지서부지대징수 철회), 구례(하천담 측량비 부담징수 시정) 등 분회는 권익실천활동을 하였다. 쌀 생산비 보장과 수세투쟁을 위한 선전활동으로 옥산, 장성, 입석, 두평, 전동, 양천, 수한, 능정, 송계, 산동 분회에서는 선전물(벽보), 프랑카드를 마을에 설치하였다. 이밖에도 풍물 기능 습득을 위해 웅치, 산동, 망운, 무안 분회에서는 회원들이 풍물교육을 실시하였고, 옥산, 가덕, 마량, 입석, 장성, 알뜰, 대산, 망운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마을대동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체 분회 가운데 각 실천활동을 한 분회들의 비율은 월례회의(40%), 학습회(10%), 경제협동활동(15%), 문화활동(13%), 마을민주화(25%), 권익실천(15%), 자립기금조성(28%), 선전물(10%) 등이었다.

여성 활동과 관련하여 보면, 교육사업으로는 마을교육 6회, 입회자 교육 28명, 여성연수 120명, 중심인물 육성을 위한 여성 장기교육(1차 3명, 2차 5명), 파견교육과 각종 학습자료 배부 등을 실시하였다. 잉읍과 도동분회는 자체적으로 학습모임을 가졌다. 연합회 단위의 여성분과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잉읍, 동백, 도동, 장미, 알뜰 등 여성분회에서는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가졌다. 생산협동활동으로 동백, 잉읍, 도동분회에서는 공동작업을, 알뜰분회는 논농사 협업을 실시하였다. 나주 잉읍분회는 병막걸리를 통막걸리로 시정하는 활동을 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대부분의 여성분회에서는 풍물을 전수받아 마을잔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다. 8월 13일, 남평 드들강에서 250여명의 남·여회원이 참가하여 '여성농민단합대회'를 가졌다.(여;150명, 남;100명)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1987년 전남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는 영광, 나주, 광주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나주와 영광대회는

74) 1말, 5말짜리 통으로 유통되던 막걸리가 병막걸리로 바뀌면서 값이 뛰었고 빈 막걸리병이 마구 버려져 환경오염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지역농민대회로 치렀다. 11월 6일, 영광 '추수감사제 및 창립농민대회'를 영광 천주교회에서 4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1부 미사, 2부 창립농민대회, 3부 문화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11월 27일에는 나주·광산 '추수감사제 및 수세거부 농민대회'를 영산포천주교회에서 250여 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1부 미사, 2부 농민대회 등의 순으로 개최하였다. 비가 오는 가운데 농민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수세거부 시위투쟁을 성당 앞에서 1시간 동안 하였다. 11월 30일에는 '추수감사제 및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쟁취를 위한 전남농민대회'를 광주 호남동성당에서 700여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가농 전남연합회에서 추수감사제(1부)를 주관하였고, 농민대회(2부)는 농민위원회⁷⁵⁾ 주최로 진행하였다. 강연과 마당놀이 등 농민대동잔치를 하는 등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호남동성당에서 남동성당까지 시가행진을 하였다.

〈운동〉

농가부채투쟁

농가부채는 당시 12대국회에서 최대의 정치쟁점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 가농은 1986년의 투쟁 위에서 1987년에는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탄압 속에서 정당한 대중집회의 공간을 확보하고, 농가부채 문제를 공개적으로 여론화하며, 행정당국과의 토론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남연합회에서는 1987년 봄 활동의 주요과제로 농가부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 지역협의회별로 추진하였으나 당국의 탄압으로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였다. 함평, 강진, 무안에서는 대회가 준비되었으나 당국의 탄압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나머지 협의회에서도 부채공청회를 준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함평협의회는 4월 6일 오전 10시, 함평천주교회에서 농가부채 공청회를 개최하려하였으나 수백 명의 전경이 성당 주변을 에워싸 대회장을 봉쇄하였다. 또한 주요 간부들을 가택연금, 임의동행 하여 대회 참여를 막았다. 이때 대회에 참가하려던 회원들과 경찰 간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

강진회원들은 5월 4일 강진 군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당국의 저지로 장터에서 1시간 동안 대중집회를 가졌다. 수차례에 걸쳐 '강진 군민에게 드리는 글'과 부채문제를 중심으로 한 안내전단을 배포하여 선전활동에 주력하였다.

무안협의회에서는 5월 18일 무안군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당국의 저지로 무산되고 군청 마당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어서 무안성당에서 5.18추모제 및 마늘양파 생산비 보장 투쟁식을 갖고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옥외 확성기를 설치하고 안내전단을 배포하여 선전활동에 주력하였다.

75) 민주쟁취 전남농민위원회는 가톨릭농민회를 주축으로 기독교농민회, 자주농민회 등 전남지역 제 농민운동단체와 뜻 있는 농민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듯 그동안 농민집회를 '원천봉쇄'하던 정부당국은 4.13호헌 조치이후 공청회조차도 원천봉쇄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공청회 자체보다도 이를 전후한 농가부채실태 조사활동과 공청회를 알리는 홍보전단의 제작과 광범위한 배포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공청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역 내 농민운동 사이의 연대도 이루어졌다. 함평에서는 공청회 개최 준비를 하면서 기농, 함평농우회와 연대하였다. 무안, 강진에서는 공청회 준비에 기농과 연대하였으며, 무안지역에서는 이후에도 농가부채 및 양파·마늘 생산비보장 공청회(5.18)와 실천대회(7.4)를 기농과 연대하여 개최하였다.

민주헌법쟁취 및 장기집권 저지투쟁(6월항쟁)

전남연합회는 5월부터 추진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시·군지부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지역에 지역조직(국본)을 건설하고, 농민생존권 쟁취와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월항쟁을 주도했던 지역으로 무안, 보성, 나주,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완도 등을 들 수 있다.

1987년 상반기 정치투쟁을 살펴보면, 2월 27일 박종철 열사 추모제가 광주 등 전국대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는데 가농의 각급 조직(협의회와 분회)에서 대거 참여하여 시위투쟁을 하였다. 3월 3일 박종철 열사 49제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는데, 전남지역에서는 광주, 무안, 나주 등지에서 평화대행진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로 각계각층에서 반박 성명이 나오고 4월 21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의 단식기도가 이루어졌고 동참하는 각급 조직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나주, 무안, 별교지역에서는 옥외 확성기를 설치하여 4.13철회 농성투쟁을 하였다.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7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추모제와 시위투쟁을 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광주, 목포, 무안, 보성, 순천 등지에서 동시다발투쟁이 전개되었다. 무안, 보성에서는 농민운동단체 주최로 추모집회를 개최하였다.

6월 10일부터 6.29선언까지 전국적으로 시위투쟁이 계속되었다. 6월 투쟁에서 농번기임에도 광주, 목포, 순천, 여수, 무안, 나주, 해남, 강진, 보성, 완도, 광양, 영광 등지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투쟁이 대중투쟁으로 확산되었다.

농협민주화와 수세거부 투쟁

농협민주화와 수세거부 투쟁은 1987년 하반기에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가농에서는 농협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를 지역별 읍면 단위로 조직하였다. 전남연합회는 나주, 광산, 무안, 함평, 영광, 장흥 등지에서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무안에서는 각 면별로 열린 농민대회에 수백 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였다.

전남을 중심으로 벌어진 수세거부투쟁은 농민대중에게 절실한 과제로써 대중 스스로 투쟁에 참여하였다. 각급 조직에서 수세거부 투쟁을 위한 선전선동(교육)-마을별 조직-면별 조직-군단위 조직 등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가농을 비롯한 농민운동세력들이 '수세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선거투쟁 전 기간에 걸쳐 수세·농조문제를 반군사독재투쟁과 결합시켜 획기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보성, 무안, 장성, 영광, 진도 등을 비롯하여 해남(11.26. 3천명), 나주(12.29. 1만 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나주에서는 농조해체수세거부대회 후 1만2천여 장의 고지서를 두 가마나나 모아 반납하였다. 나주지역 투쟁은 조직원을 중심으로 차량을 동원한 선전선동-마을별 대중교육-마을별 대책위 결성-면별 대책위 결성-군단위 대책위 결성-대중집회 등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농이 전개한 농협민주화와 수세거부 투쟁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농은 11월 수세거부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인 8-9월에 '민주농협쟁취 및 수세거부대회'를 개최해 나갔다. 8월 4-5일에는 벌교에서 벌교단위농협 회의실을 점거하고 민주농협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전개한 뒤 자진해산하였다. 9월 21일에는 나주 천주교회에서 300여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광산 수세거부 및 민주농협쟁취대회'를 1부 농민대회, 2부 가두시위로 오후 5시까지 하였다(2명 연행). 9월 22일에는 장흥농민들이 민주농협쟁취 및 수세거부대회를 장흥 천주교회에서 개최하고 가두시위하며 예당리 소재지까지 진출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30여명의 회원이 연행되고 다수가 부상당하였다. 9월 30일에는 보성에서 '민주농협쟁취 및 수세거부 농민대회'를 예당 양송이공장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당국의 탄압으로 인해 농성투쟁 및 가두시위를 하였다(30여명 회원이 연행되고 다수 부상을 당하였다.)

이후 수세투쟁이 본격화 하자 11월 27일, 나주광산 수세거부 농민대회를 영산포 천주교회에서 2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고 가두시위를 하였다. 12월 5일에는 진도 수세거부 농민대회를 경운기 15대, 농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군청 앞마당에서 개최하고 경운기 가두시위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나주 수세거부 농민대회'를 나주 광산 농민 10,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나주 천주교회에서 개최하였다. 농민들은 ·대회를 마치고 농지개량조합에 가서 수세고지서 9,700여 장을 반납하고 수세를 내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쌀생산비보장투쟁

가을철 추곡수매를 앞두고 '민주농협과 쌀생산비 쟁취 전남농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농협과 추곡수매가, 농가부채, 수세 등의 과제를 결합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9월 6일, 전남농민위원회⁷⁶⁾ 결의로 쌀 1가마당 10만원 이상 전량수매를 목표로 쌀 생산비 보장투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가농은 분회마다 “쌀 1가마당 10만원 이상 전량 수매하라!” 등의 프랑카드를 내걸었고, 각급 조직에서 벽서,

76) 가농, 기농 등 전남지역 농민운동 단체연합.

유인물배포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나주, 보성, 무안, 함평 등지에서는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투쟁

7월 4일, 무안협의회에서는 마늘·양파 생산비보장투쟁으로 트랙터 2대와 경운기 9대로 광목간도로를 3시간 동안 차단하고 연좌시위를 전개하였다. 경찰의 폭력에 항의해 300여명이 밤 11시까지 군청 안에서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하였다. 7월 11일, 함평협의회 가덕분회에서는 마늘·양파 생산비보장대회를 개최하였다. 우중시위 중 백골단에 의해 다수가 부상을 당하였으며, 7월 14일까지 함평천주교회에서 농민운동 탄압 저지 농성투쟁을 전개하였고, 3차례 가두시위를 벌였다.

피해보상 투쟁

나주·광산협의회에서는 나주지역의 스톤프(농약) 피해 보상 투쟁을 지원하였다.

보성·고흥협의회에서는 고흥 해창만 지역주민의 염수침해 피해 보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7월 23일 200여 명의 농민들이 고흥 군청을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하였고, 오후 4시경 경운기 15대를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8월 29일에는 염수침해 피해보상 실천대회를 포두면사무소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당국의 저지로 대회가 무산되자, 100여 명의 주민이 포두면사무소를 점거하여 농성투쟁을 하였다. 오후 8시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박포강 외 4명이 연행되었다. 8월 30일에는 염수피해 주민 100여 명이 경찰서 앞에서 연행에 대한 항의 및 피해보상 요구 농성을 하였다. 9시 군청 점거농성에 이어 10시 자진 해산하였는데, 가농 회원들과 비회원 농민들이 결합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농민들이 끈질긴 투쟁역량을 과시하였고, 이 투쟁을 통해 10월까지 염수피해보상 전액을 받아냈다.

선거 국면 투쟁

후보 단일화 쟁취 투쟁

전라도 지역은 지역정서상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치우쳐 후보단일화가 어려웠으며, 단일화 주장을 김영삼 지지로 여길 정도였다. 특히 선거를 며칠 앞두고 김대중 비판적 지지가 우세하여 각 지역에서 김대중 선거운동에 모든 운동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선거국면에 처한 농민생존권 투쟁

나주, 진도, 무안, 영광, 구례, 보성 등지에서 선거 국면에 처한 대중집회 시 농민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농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나주지역에서는 수세거부 투쟁을

함으로써 조직화하였다. 영광지역에서는 평민당유세장을 활용하여 농민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무안에서는 평민당 청년당원과 연합하여 농민생존권문제 중심으로 반노태우투쟁을 전개하였다.

전두환 · 노태우 타도 투쟁

민정당 선거유세장 방해, 노태우의 살인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비디오 상영, 스티커, 벽보, 벽서, 전 · 노타도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무안에서는 11월 28일 민정당사가 박살나고 민정당원 집이 방화되는 등 민정당 타도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구속자 5명, 수배자 4명).

선거무효, 독재타도 투쟁

선거결과가 노태우 당선으로 발표되자 광주, 목포, 순천, 여수, 나주, 무안, 해남, 완도, 강진, 장흥, 보성, 영광 등지에서 선거무효 독재타도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운동에서 고등학생이 대거 참여하여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연대 활동

가농, 기농, 자주농 등 전남지역 농민운동 제 단체와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1987년 8월 ‘농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농민위원회 주체로 8월 17일에는 농어민문제 공청회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9월 쌀 생산비 보장 투쟁, 10월부터의 수세거부 투쟁, 농민대회 등 각 단체 간 연대활동을 군 단위, 도 단위로 하였다. 또한 연합회는 전남지역의 다양한 민주단체들과 민주헌법쟁취 전남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군 단위 조직과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각 지역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연대운동을 형성하여 지역운동의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1988년

〈조직〉

1988년에 전남연합회는 신입회원이 400명이나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빠르게 조직이 확대되면서 조직체계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마을 분회

1988년은 분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활동가 중심의 군 단위 운동이 주로 전개되었다. 의료보험개혁, 수세폐지, 수입개방저지, 농가부채해결, 농협민주화투쟁 등이 군 · 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현장의 분회에서는 대중투쟁의 와중에서도 마을별 과제를 실천하였다. 각 분회에서 월례회의(구만, 대촌, 수한, 산동, 이평, 능정, 웅치, 조성, 가덕, 마량, 동백, 옥산(남·여), 장성, 양천, 송계, 입석, 마천, 고당, 망운, 무안), 학습회(고당), 경제활동(옥산, 못자리 이양기; 입석 이양기; 주민, 탈곡 이양기: 신기, 이양기), 문화활동(장성, 가덕, 옥산, 고당, 지산, 망운, 보성협), 마을민주화(이장: 구례 5명, 보성 3명, 나주 2명, 강진 1명, 광산 1명), 분회기금조성(옥산, 입석, 가덕, 동백, 마량, 송계, 수한, 양천, 알뜰, 광주, 구만) 등을 실천하였다.

협의회와 읍·면 위원회

1988년은 조직세의 급격한 증가와 현장 투쟁의 일상화로 인해 군협의회가 부담을 안게 되어 읍면위원회를 활성화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읍·면 단위 조직을 건설하였다. 1988년 한해 동안 지역협의회 2개와 면 위원회 13개, 분회 9개가 신설되었으며, 신규회원은 400명에 달했다. 협의회로는 곡성협의회가 창립되고 고흥협의회가 보고협의회에서 독립하였다. 면 위원회는 구례(광의, 신동), 무안(청계, 망운), 영광(영광읍, 문장, 대마, 흥농, 법성, 염산), 나주(봉황, 금천, 다시, 노안), 진도(지산, 군내), 광산(삼도, 화순(북면), 곡성(입면) 등에서 결성되었다.

장흥·강진협의회와 나주·광산협의회는 2개 군에 걸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이 광범위하여 조직관리가 어려워 협의회를 분리·독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흥지역에서는 회진, 대덕, 장동에 면위원회를 만들어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광산지역 역시 협의회 발족을 위해 지도부 구축과 활동가 양성에 주력하였다.

구례협의회는 광의면과 산동면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무안지역 역시 기존의 망운과 청계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함평협의회는 조직세에 비해 활동가가 부족하여 중심인물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였다. 고흥과 보성지역은 협의회를 분리하여 조직력 강화와 활동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고, 영광협의회는 1987년에 창립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총선투쟁의 성과로 얻어진 지역 조직의 확대와 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해남지역도 많은 조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군내면을 중심으로 면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지도부구축에 힘을 쏟았다.

구례(수세, 쌀생산비대회), 장흥(경지정리, 수세), 고흥(수세, 의보, 쌀생산비투쟁), 나주(광산(수세, 고추값, 농협민주화, 농민생존권대회), 곡성(수세, 농민생존권대회), 보성(수입개방저지), 무안(의료보험, 수입개방, 고추값, 폭력경찰 처단대회), 영광(토지투쟁, 농협민주화), 진도(농협민주화, 고추값), 함평(쌀값, 의료보험) 등에서 지역협의회별 다양한 투쟁이 연중 전개되었다.

농민운동의 대중화와 읍·면위원회 건설

나주지역에서는 수세싸움을 통해서 대중조직을 건설하였고, 진도와 영광지역은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면단위 조직을 건설하였다. 나주 봉황, 진도 지산, 영광 묘량 등에서 면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동을 전개하였다. 나주는 수세거부대책위원회, 무안은 농민운동협의회, 강진은 농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진도는 해남과 지역 간 연대활동을 하였다. 나주는 수세싸움 과정에서 부락대책위-면대책위-군대책위 체계의 대중조직을 만들었다.

전국단위의 농민운동 통일논의와 가농의 대응

1988년에는 농산물(쌀)생산비 보장, 의료보험개혁, 수세폐지, 수입개방저지, 농가부채해결, 농협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지역단위, 전국단위로 농민대중투쟁이 전개되었다. 현장 단위에서는 이미 연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농민운동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1988년 11월 1일 전국수세대책위원회 모임이 끝난 후에 '전국농민운동협의체 결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려 전국농민운동단체 대표자회의 소집에 합의하고, 11월 24일에 '제1차 전국 도 군단위농민운동단체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준비소위와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이 조정되어, 이듬해인 1989년 3월 1일에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이 결성되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농민운동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에서 그동안 전남농민운동에서 주요한 직책과 역할을 담당해왔던 최성호, 정관수, 배종열, 노금노⁷⁷⁾ 네 사람이 몇 차례 만나 농민운동통일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들은 대중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남농민활동가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1988년 7월 28-29일에 전남농민활동가 86명이 목포 가톨릭센터 터에서 모여 '전남농민운동의 과제와 통일 단결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 농민운동의 통일방안 7개항을 결의하였다.

〈운동〉

1988년에 농민운동은 수세거부투쟁, 수입개방저지, 의료보험제도개혁, 농가부채탕감, 쌀수매가쟁취, 토지소유권획득투쟁 등 농민생존권 투쟁을 전국적·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작목별·과제별 지역별 대중조직이 다양하게 건설되었고, 연대투쟁과 농민운동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상반기 전남에서는 수세거부투쟁이 전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또한 4·6총선의 선거투쟁에서는 군부독재정권의 반농민정책을 폭로하면서 여촌야도의 관례를 깨고 농촌지역에서도 민정당에게

77) 1988년 7월 당시 최성호는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정관수는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 배종열은 광주·전남민중운동협의회 의장, 노금노는 전국농민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하반기에는 각 지역별로 수세싸움, 쌀수매가 107,770원 쟁취투쟁, 고추수매싸움, 땅콩수매싸움 등과 의보개선투쟁, 농협민주화투쟁, 농가부채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영암, 영광, 무안, 신안 등지에서는 토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농협민주화 운동

가농은 그동안 농협민주화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임시조치법 철폐와 조합장 직선제를 목표로 활동해왔다. 전남연합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민주농협 쟁취를 위한 유인물 가두배포, 대자보, 가두방송 등의 홍보선전 활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의 전국적인 투쟁으로 여당인 민정당은 조합장 직선제를 받아들였고, 그동안 농협민주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농민대중은 이를 일정 정도의 승리로 받아들이면서 활동의 열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면단위 지역위원회를 건설하여 면지역위원회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농협민주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선전 교육 실천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하여 농협민주화 추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합회 대의원 총회와 상임위에서는 농협민주화 가능지역을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였다.

나주 봉황지역에서는 1월 28일, 조합장 직선제 관철을 위한 봉황농민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채택하고, 민주농협쟁취를 위한 봉황농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2월 6일에 조합장 선출저지를 위해 단위농협 회의실을 점거하고 총대를 설득하여 자진 퇴장시켜 선거가 무산되었다. 이후 당선된 조합장으로부터 농협법이 개정되면 즉각 사표를 내고 선거를 실시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나주 노안에서는 조합장 부정선거로 당선무효가 되어 전국에서 최초로 직선제 실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다. 무안 청계에서도 당선된 조합장으로부터 농협법 개정 시 즉각 사표를 내고 선거를 실시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영광 염산에서는 '조합장직선제 관철을 위한 염산농민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채택(5월 10일)하고, 5월 13일 선거 시 투표장을 점거하여 투표를 저지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을 앞당겨 선거를 실시하여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에 항의시위를 하였고, 이후 조합장 직선제에 대비하여 조직력 강화와 조합장 후보지명 훈련을 계획하였다. 진도 지산에서는 민주농협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과 조합장 직선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8월 3일 단협 앞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조합장 직선제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출 회의를 무산시켰다. 장흥 관산지역은 8월 3일 조합장 출마 후보와 민주농협 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조합장직선제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가두방송을 실시하였다.

농어촌의료보험 개선 투쟁

1988년 1월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첫 단계로 농어촌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정부에 의해 강행된 농촌의료보험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의료보험조합비 납부고지서를 받아든 농민들에게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농민들은 조합방식인 농어촌 의료보험제도의 부당성과 과도한 의료보험료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아예 고지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첫 농어촌의료보험개선 투쟁은 2월 10일 무안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집회였다. 이후 농어촌의료보험개선 투쟁은 함평(3.2, 500명), 고흥(3.14, 200명)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월 16일에는 농민·의료보건의 등이 연대하는 '농어민 건강권확보 대토론회'가 종로성당에서 개최되어 반대투쟁의 이론적 근거와 전국적 민중적 연대의 틀을 잡아, 6월 28일 '전국의료보험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농축산물수입개방 저지투쟁

전남에서는 무안을 장터(4.19, 200명)와 광주 미문화원 앞(4.22, 1,500명)에서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무안의 수입개방저지투쟁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농민회 사무실 앞에서 대회를 갖고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런 각 지역의 열기는 그 이후 전국 단위에서 열린 농민대회로 이어졌다.

수세거부(폐지) 투쟁

수세거부투쟁 과정에서 나주지역은 35%, 해남지역은 40%의 수세거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당국은 농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회유, 협박, 공갈 하면서 수세납부를 강요하였다. 또한 당국은 농민들의 투쟁에 밀려 수세 1/3 감면, 농조법 개정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나주, 해남 지역의 수세거부대책위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1월 10일 함평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시위에 이어, 장흥(1.15, 200명), 강진(1.19, 500명), 진도(2월, 50명, 경운기 20대), 해남(2.6, 1,000명)을 거치면서 점차 규모가 커져갔다. 3월 14일 나주 농민들의 수세거부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와 최루탄 난사에도 불구하고 빗속에서 광목간 도로상에서 7,000여 명이 '수세폐지와 농개조해제'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4월 14일에는 전남북 농민 3,000여 명이 나주 천주교회에서 '수세폐지 전남북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남북 합동집회로 일단락된 상반기의 수세거부투쟁은 가을추수가 끝난 뒤 다시 이어졌다. 구례(10.28, 300명), 옥과(10.29, 400명), 광주지산(10.31, 700명), 장성(11.19, 600명), 곡성(11.28) 등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었다. 또한 10월 28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학계, 국회의원, 농민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세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광범위하게 전개된 수세거부투쟁은 11월 1일 '전국수세폐지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가농은 수세거부투쟁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보급시키고 조직적 연결을 도모함으로써 수세거부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고, 각 지역의 분산적 투쟁을 전국적인 농민문제로

부각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전남연합회는 수세폐지 투쟁의 현장교육을 위해 2-3명씩의 활동가들이 조를 편성하여 부락을 돌면서 좌담회 형식의 교육과 토론을 통해 수세의 부당성과 농개조의 반농민적 비민주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대책위 구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자보, 전단, 마을방송, 프랑카드, 스티커, 차량가두방송 등을 통해 수세의 부당성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책위의 구성과 조직적인 활동과 투쟁뿐임을 강조하였다. 농조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세납부를 강요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부락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공동 대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농산물 제값받기 투쟁

전남연합회에서는 쌀값(수매가) 제값받기 투쟁으로 대회와 점거를 병행하였다. 함평(9.12. 300명), 진도(9.30. 100명/10.19. 300명, 경운기70대/11.16. 80명, 농협중앙회 점거농성), 나주(10.19. 100명/10.29. 150명), 영광(10.26. 300명/11.6. 300명/11.11. 300명), 구례(10.28. 300명, 경운기 50대 트랙터 3대)에서 쌀값제값받기 투쟁이 있었고, 무안(12.12. 100명, 고추 3만근 군청 점거농성)에서는 고추제값받기 싸움이 있었다.

그 이외에도 고추와 땅콩 값 폭락으로 인해 고추 경작자, 땅콩 경작자 중심의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토지 투쟁

전남지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토지투쟁이 계속되었다. 영암 학파농장 토지반환 투쟁, 해남 본동리 토지반환 투쟁, 무안 강포 간척지와 영광 가음방조제 토지 무상양도 투쟁 등이 있었다. 특히 영광 가음간척지 투쟁에서는 7월 14일 집회도중에 경찰의 폭력으로 이재열씨가 사망하였다.

총선 투쟁

총선시기에 농민들은 정당운동에만 매몰되지 않고 농민운동을 벌여 나갔다. 나주, 해남에서는 총선시기에도 수세 거부투쟁을 계속하였고 여타 지역에서도 보수야당과 차별성을 갖고 농민운동 내부의 역량강화에 주력하였다. 함평·영광지역에서는 서경원 후보(전 가농 전국회장)가 평민당(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어 가농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측면 지원하였다. 나주·무안 지역에서는 농민후보 추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야권단일화를 위해 포기하고 민정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농민운동가들은 선거국면에서 각종 유세와 사랑방좌담회, 집회에서 농업 농민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활동공간을 넓힘으로써 조직 확대와 지역운동의 정착 및 토대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선거를 통해 전남지역에서 민정당을 확실히 패퇴시키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농민운동 진영의 활동공간은 상대적으로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조직의 규율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거나, 평민당에 소속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다.

1989

〈조직〉

1989년 들어 민족민주운동세력은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결성으로 전열을 정비하였고, 농민운동세력은 가농과 기농, 독자적 군농민회 등 전국 90여 개 군농민회가 참여한 가운데 3월 1일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을 창립하였다. 이에 가농은 농민운동의 단일조직 건설에 함께 하면서도, 이후 가농의 새로운 위상과 진로를 모색하는 내부논의를 본부와 연합회 단위에서 활발히 진행하였다. 전남지역에서도 농민운동의 통일을 위한 관심과 참여로 전남 농운연 준비위와 전농연 건설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가농 내부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농운 통일사업을 이루어 내려는 성급함 때문에 조직 내부의 진통과 타 조직 간의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건은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현장 활동을 일부분 위축 시켰으며, 가농과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

군농민회 전환과 농민운동의 단일조직 건설

가농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농민대중의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민운동의 통일과 단일조직 건설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1990년 단일조직 건설을 목표로, 1989년에는 가톨릭농민회의 지역협의회 조직을 군농민회로 전환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하였다. 협의회를 군농민회로 개편하는 사업은 전국의 65개 협의회 가운데 역량이 부족한 4개협의회를 제외하고 61개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전남연합회는 1989년 1월 12일 광주가톨릭센터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지역운동의 확대강화' 등을 중점 활동방침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자주적 농민대중 조직의 활성화와 농민운동의 통일 사업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기존의 지역협의회 조직을 군농민회로 전환, 새로운 1군1농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9년 상반기 전남지역 각 군단위 농민운동의 조직현황은 다음과 파악되었다. 군(기존 조직형태 ; 농민운동 통일 추진상황)으로 표시하였다.

구례(가농;-), 곡성(가농·곡성농; 곡성군농민운동연합), 화순(가농지역위, 화순농준위 ; 화순군농준위), 담양(담양농, 담양농), 장성(장성농·가농분회 ; -), 광산(가농지역위 ; 광산농), 나주(가농·나주농; 나주군농준위), 함평(가농·함평농·기농; 함평군농준위), 무안(가농·기농, 자생농; 무안군농), 영광(가농·자생농; 영광군농준위), 장흥(가농; 장흥군농준위), 강진(가농·

기농·전농·자생농; 강진군농준위), 해남(가농·기농·Y농;-), 진도(가농; 진도군농준위), 영암(가농분회·자생농; 영암군농), 보성(가농·기농·보성농;-), 고흥(가농;-), 완도(가농분회·어민회;-), 신안(가농분회; 신안군농), 승주(Y농; 승주군농) 등으로 파악되었다.

전남 23개 지역의 농민운동 조직화 추진현황은 당시까지 1군1농 조직을 결성한 지역으로 영암, 신안, 무안, 담양, 장성, 곡성, 승주, 광산, 지산(광주) 등 9군데와 준비위를 결성한 지역으로 화순, 영광, 장흥, 보성, 강진, 함평, 완도, 여천 등 7군데로 파악되었다. 고흥, 구례, 진도, 나주는 추진중인 지역으로 파악되었고, 해남은 미추진(분립)으로, 광양, 여천지역은 신규준비 중이었다.

영광지역은 1987년 11월에 가농 영광군협의회가 창립되어 지역농민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1989년 2월 10일에 가농을 중심으로 영광군농민회 건준위(대표 신종남:가농, 유병무:군농)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영광지역 11개면 522개 마을 중에서 10개 면 30개 마을에 농민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주요활동가는 정병은, 신필하, 임수옥, 정종관 등 가농회원들이었다.

진도지역은 가농 진도농어민협의회 주도로 진도군농어민회 준비위원회(대표 양화수)를 결성하고 전농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농민회는 6개면에 걸쳐 조직되었다. 구례지역은 가농 구례협의회 중심으로 농운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함평지역에서도 가농과 함평농우회가 함평군농민회(준) 단위에서 논의를 계속하였다. 농민운동의 조직통일 논의는 198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지만, 활발한 논의라기 보다는 당위성과 시한에 쫓기면서 전국단위에서 성급하게 진전되어 거의 현장논의를 방기한 채 3월 1일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2월 11일 전남농민운동연합 준비위가 결성되어 모든 대중사업을 전담하게 되었으나, 일부 군 농민회는 전농련에 불참하고 또는 현장단위에서 농운통일논의에 휘말리면서 지도력에 공백을 가져왔고 당면투쟁 조차도 방기하면서 기존 역량마저도 상당부분 손실되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여성농민들의 활동이 전남 단위에서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의 나주수세싸움, 무안고추투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농민들이 자주적인 여성농민 대중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그 성과물들이 현장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국 단위에서는 12월 19일에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전남지역은 1990년 2월 10일 '전남여성농민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마을단위 여성농민 교육사업과 조직사업에 주력해왔다. 가농 전남연합회 여성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체 여성농민대중들의 요구 속에서 도 여농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로 결정하고 이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협의회 별로 여성분회 조직사업에 노력하여 몇 개의 여성분회가 탄생하였다.(영광 해방분회, 진도 모사분회 등)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정부당국은 '창구단일화'의 논리를

앞세워 남북간의 자주적인 민간교류를 억압하였다. 문익환 목사가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서울로 돌아와 구속·수감되었고, 5공청산 정국 이후 정세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6공정권은 대대적인 반공선전과 함께 이른바 공안정국을 조성하였다. 이 와중에 전 가농회장 서경원 의원이 1988년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사실이 공개되었다.(6월 27일) 가농 지도부는 즉각 이 사건이 가농과는 일체 무관함을 주장하였으나, 당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가농과 민족민주운동의 탄압에 혈안이 되었다. 6월 28일에 정성현(사무국장), 6월 29일 김상덕(전국회장), 백종덕(조사부장), 임봉재(전, 여성부장), 정재돈(전, 조직부장) 등이 연행되었고, 전국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여 일체의 조직, 재정관련 서류를 빼앗겼다. 6월 30일 긴급연석회의에서는 전국의 분회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연인원 1,500명의 회원들이 전국본부에서 농성하며 조직을 지켰다.

〈운동〉

수세폐지 투쟁

수세거부운동은 마침내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 신설’ 요구로 발전하였으며 1989년 1월에 전남지역 9개 군에서 전개되었고 이 여세를 모아 2월 13일 여의도농민항쟁으로까지 나아갔다. 이후 단보당 30kg이었던 수세를 단보당 5Kg이하로 하겠다는 조치를 쟁취하였다. 또한 수세폐지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영산강농조 조합장 선거에 후보를 당선시켰으나 조직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수입개방 저지투쟁

미대사관 앞 도로점거투쟁이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었으나 일회적 제스처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5월 13일의 전남대회 역시 현장농민과의 결합력 약화로 소수 활동가만이 참석하는 투쟁에 머물고 말았다.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 쟁취운동

1989년 하반기에는 쌀값 제값받기 투쟁을 생산비보장과 수입개방저지, 농가부채 해결투쟁과 결합하여 전개하였다.

9월 8일 "추곡수매가 119,684원 보장 및 전량수매쟁취를 위한 전국 군 농민단체대표자회의"가 전남지역의 각 군을 비롯하여 전국 60개 군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후 9월 20일 전남 쌀값대책위 결성과 10월 6일 쌀값보장 전국 공청회에 이어 10월 25일 전국 쌀값대책위 결성으로 조직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10월 3일 영광대회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각 군단위 쌀값보장투쟁은 전남지역 전군을 강타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11월 2일-8일을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 투쟁주간"으로 정하고, 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가두방송, 벽서 등의 선전홍보 활동과 집회, 각 지구당사 및 농협 향의방문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11월 15일에는 '쌀값 생산비보장 및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나주 봉황과 진도, 승주를 중심으로 수매거부투쟁이 전개되었으나 연합회와 전국본부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대중투쟁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전남지역에서 쌀값 보장투쟁을 전개한 지역은 영광, 무안, 장흥, 해남, 진도, 담양, 장성, 강진, 승주, 화순, 곡성, 나주, 구례, 함평, 고흥 등이었다.

이밖에 '농수축협 민주화투쟁'은 지역적으로 조합장 선거투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선거전술의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의보투쟁, 농가부채해결 투쟁 등은 1989년에 거의 이어지지 못하였다.

1989년 추수감사제 및 쌀생산자대회

전남연합회는 11월 20일 영광성당에서 '(해방과 통일을 위한) 89년 추수감사제 및 쌀생산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쌀생산비보장! 전량수매쟁취!"를 내세우고 진행된 대회에 이어 신명난 풍물가락과 함께 펼쳐진 길놀이와 마당극 등으로 농민대동한마당이 전개되었다.

새운동 준비

가톨릭농민회는 전국농민단일조직 건설에 노력하면서도 새로운 운동내용을 준비하는 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과 각 지구연합회 단위로 '새운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농의 새로운 진로와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10월부터 11월중순까지 각 연합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전국과 지역에서 현장활동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0년 1월과 2월에 제3차 전국준비모임과 준비위원 연수회에서는 가농 '새운동'의 이념과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전남연합회에서도 '가농의 새로운 위상과 방향의 정립 계획안'을 토대로 새 가농운동의 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급의 모임과 현장방문을 통해 마을 공소와 분회를 중심으로 중심인물을 파악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합회 상임위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단위 논의구조에서 새운동 준비위원회가 중심추진체가 되도록 하였다.

② 전남기독교농민회의 조직과 활동

전국단위 기독교농민운동이 전개된 이후 1983년 3월에 충남기독교농민회가 조직되어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경북 등 5개도에 기독교농민회가 조직되어 활동해 왔다. 1986년부터 강원도 기독교농민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경남은 거창농민회가 조직되어 회원단체로

가입함으로써 7개 도에서 지역농민조직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발전하였다.

전남지역 군농민회로는 1986년에 담양농민회, 장성기독교농민회가 결성되었다. 특히 담양에서는 1986년부터 조직활동에서 농민대중조직건설 강화의 방향에 입각하여 기독교농민회가 아닌 군단위농민회로 조직하여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⁷⁸⁾

1984년 함평·무안농민투쟁, 수매량 확대요구투쟁, 수세현물납부투쟁, 농가부채탕감투쟁 등을 지역단위와 전국단위에서 수행하면서 기독교농민회는 1985년부터는 보다 가열찬 현장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전국단위에서 기독교농민회는 1985년 4월 22일 영등포산업선교회관에서 '미국농축산물 수입요구 규탄대회'를 갖고 22일 저녁과 23일 아침에 두 차례에 걸쳐 20여명의 농민회원들이 세종로 미국대사관에 진입하여 농산물수입요구 반대시위를 하였다.

이러한 외국농축산물 수입요구 규탄대회와 미대사관진입투쟁은 이후 1985년 7월, 8월, 9월에 전국 각지역(군)에서 대규모 소값피해보상투쟁으로서 대중투쟁으로 발전되었으며 전체 농민운동의 대중적 발전을 가져왔다. 전국 20여개 군단위지역에서 전개된 소값피해보상투쟁(소몰이싸움)은 일반농민대중의 자발적 투쟁진출에 기초하여 가농과 기농이 함께 참여한 대중적 연대투쟁으로서 전체농민운동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 전남에서는 무안, 강진에서 소값피해보상요구 시위를 하였다.

1985년

〈조직〉

1985년에 기독교농민회는 전남, 무안, 강진, 해남에 각각 1개씩 지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해남에서는 송지면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상반기에는 나주 동강면에 여성준지회 1곳, 지회 1곳, 무안 평산에 여성준지회 1곳을 조직했다. 여기에 전남의 6명, 무안의 3명의 회원가입이 있었다.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보면, 무안군의 경우 2개 면에 각 2개 지회를 만들어낸 상태이다.

전남(간부훈련 2회), 강진(간부훈련 2회, 지역교육 6회, 문화교육 4회, 마을교육 5회), 무안(간부훈련 2회, 지역교육 3회, 문화교육 8회, 마을교육 2회), 해남(간부훈련 3회, 지역교육 2회, 문화교육 1회, 마을교육 1회)에서 교육이 있었으나 함평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가운데는 여성농민위원회 활동이 있었다. 여성농민활동을 보면, 전국단위 교육활동도 있었지만, 지역 단위 활동을 보면, 무안의 경우 용정(3월7일), 흥릉리(8월22일), 유월리, 평산 몽탄 등에서 지역교육이 있었고, 강진 회선리, 나주 대지리 등에서도 지역교육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지역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함평농우회(6월18일), 해남 기장여신도회(9월5일)의 여성교육이 있었다. 영광군 도동과 무안군 나드리에서는 문화교육도 있었다. 무안의 경우 용정(6회),

78) 다른 지역의 사례로서는 1986년에 고창기독교농민회는 고창농민회로, 1987년에 영동기독교농민회는 지역의 자발적 농민운동세력과 연합하여 영동농민회로 조직명칭을 바꾸면서 지역단위 농민대중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유월리(3회), 평산(3회), 나드리(1회), 조암동(1회)에서 마을단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할 때에 월례회도 함께 하였다.

도단위, 군단위 농민회들은 상임위, 임원회, 간부회의, 지도위 등의 회의를 하였으며, 강진기독교 농민회와 무안기독교농민회는 총회를 개최하였다.

연대활동을 보면, 전남 단위에서는 전남사회운동협의회에 참여하였고, 5월 민중민주화운동탄압 저지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강진에서는 강진 가농, 강진 탐진농우회와 연대하여 '강진농협문제대책협의회'에 참여하였다. 함평에서는 함평농우회에 참여하였고, 무안에서는 함평무안대책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가농과 연대하여 무안소몰이 싸움에도 참여하였다. 해남에서는 지역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축산물수입반대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홍보선전활동을 보면, 전남에서 성명서 2종, 선전벽보 6종, 회지 2회, 교육자료 1회, 강진에서 성명서 3종, 선전전단 1종이 발행되었다. 1985년에는 전남기농의 회지인 「전라도농민」을 창간하였다. 여기서는 '1985년 전남농민운동과 앞으로 할 일'과 '민주제 개헌으로 농민생존권 보장받자'는 특집을 꾸렸고 '그 많은 수세 거두어 어디에다 쓰는거냐'란 농민의 주장을 싣기도 하였다.

〈운동〉

전남기농의 활동을 보면, 9월 6일 해남에서 「전남농민큰잔치」를 열고 이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전라도농민격문'을 발표하였다. 농민들은 이 격문에서 농산물수입 강요 반대, 농산물생산비 보장, 부채탕감, 소값피해보상, 재벌땅의 농민반환, 어민피해보상, 농촌중학교 의무교육화 등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전남기농은 개방농정 등 농민문제를 폭로하고 선전하는 활동(유인물 살포, 벽보 붙이기)을 하였고 농협민주화 활동도 하였다. 또한 나주·무안 영산호 간석농민 정작권수호투쟁을 지원하였고, 나주지역의 비료임의선매 시정 활동을 벌였다.

강진기농에서는 9월 9일 외국농축산물수입반대 및 소값피해보상요구 가두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강진농민만세!'라는 유인물을 통해 취로사업 노임 전액 현금지불, 부실제방공사 피해보상, 수세폐지, 소값피해보상, 농가부채 전액 탕감, 외국농축산물 수입 중지, 농산물생산비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15일까지 연행자석방 요구 기도회를 하였다. 취로사업 공동운영권 쟁취활동을 벌였고, 농활실태조사 활동도 벌였다. 또한 부당수세 거부운동을 벌였으며, 야유회를 두 번 갖고 풍물놀이를 한번 하였다.

무안기농에서는 농민문제를 폭로하는 선전활동(각종 낙서, 벽보 붙이기, 유인물 살포)을 하였고, 양파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농협과의 대화를 통해 농협민주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야유회를 두 번 가졌고 수련대회를 한번 하였고 농활잔치를 7회에 걸쳐 하였다.

해남기농에서는 수협부조리, 농협 냉장고 판매, 수매시 들머리 등에 대한 시정활동을 벌였고,

농약피해조사활동을 하고 알타리무우 피해보상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86년

〈조직〉

교육활동도 지역단위에서 1차농민교육(지역교육), 전국단위에서 2차 활동가교육, 3차 간부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홍보교육과 강사개발교육을 새로 개발하여 지역단위자체 교육실시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마을단위 여성농민기초교육과 지역활동가교육을 농한기에 집중하여 실시하였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특기할 사항은 담양의 경우 군조직 명칭을 일반농민회로 하면서 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회원조직으로 가입하였다.⁷⁹⁾ 1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8.11-13)에서 담양군농민회를 승인하였고 9월 12일 결성되었으며(총무, 양희중), 장성군 농민회 조직은 준비되고 있었다(1987년 2.28일 결성 예정)

그리고 무안 용학교회에서 두 번에 걸쳐 농민교육이 있었는데(7월 21-23일, 담양군 교육, 25명 참석; 8월 20-23일, 무안, 강진, 해남, 담양 교육, 35명 참석), 이 교육에는 여성농민회원 수명이 참석하였다.

〈운동〉

1986년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는 군부독재종식과 민주헌법쟁취, 외국농축산물수입반대운동을 중심과제로 삼고, 일상현장과제로서 농가부채탕감운동, 농협민주화운동, 부당수세철폐운동, 일상적 권익실천 등을 내세워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남기독교농민회는 1986년 3월 지역내 농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전남지역 농민생존권 확보 및 민주헌법쟁취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민주헌법쟁취 투쟁을 농민생존권 확보의 차원에서 전개하였다. 무안기독교농민회는 지역내 농민운동세력과 함께 “수입개방저지 및 미국예속정권 타도를 위한 무안농민실천대회”를 무안버스정류장 앞에서 100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고 격렬한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대회는 명칭에서 보듯이 현정권을 미국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정치투쟁을 감행한 대표적인 군단위 투쟁이었다. 이어서 망운농협민주화농성에 참여하고, 마늘생산비 쟁취 및 살인농정철폐 실천대회, 수매장(부정등급)투쟁을 벌였으며, ‘무안군 조합빛 상환거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가부채해결활동을 벌이고 ‘몽탄면수세기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세투쟁도 벌여나갔다.

또한 해남, 함평에서 기독교농민회활동가는 지역내 농민운동가들과 공동으로 수입개방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강진 기독교농민회는 1986년 1월 50여명의 회원이 강진군 농협 신축

79) 다른 지역의 경우, 거창과 상주가 있다.

개관식장에 들어가 쇠똥물을 넣은 계란을 국회농수산분과위원장 김식, 농협중앙회장 윤근환 등의 얼굴에 투척하고 소값피해보상, 농가부채탕감, 농협민주화, 외국농축산물 수입중단을 주장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함평군에서도 민주헌법쟁취서명운동과 미국예속정권타도 시위를 벌였으며, 해남군에서는 4월 6일 소몰이투쟁을 벌이고 민주농협쟁취투쟁, 도로변 토지세시정운동, 강진과 해남이 연대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1986년 하반기에는 농가부채탕감운동과 부당수세철폐운동을 전개하면서 “빛 때문에 못살겠다. 정권 갈아 빛 없애자”라는 전단을 전국적으로 살포하고 벽서, 마이크 홍보 등 일상적 경제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연말연초 부채상황기에 직면하여 11월 7일 ‘무안군조합빛 상환거부대책위’의 결성과 ‘전남농가부채조사단’의 활동을 수렴하여 11월말 기독교농민회 활동가들이 주도하여 “전국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2월 29일-30일에 신민당중앙당사에 10여명의 대책위원 농민들이 들어가서 농가부채해결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 농성 이후 배종렬 대책위원장과 최종진 사무국장이 구속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전남지역에서는 70여명의 농민들이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무안군에서는 지역부채(농협, 축협, 수협 등)의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여론화를 도모하고 이를 「부채대책」이란 선전지에 담아 폭로하면서 부채해결을 촉구하였다. 전남농가부채조사단은 호별 방문을 통한 선전선동과 장터 대중연설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갔다. 특히 유인물 배포 뿐만 아니라 벽서작업, 마이크 선전 등 새로운 선전방법을 개발하여 홍보선전활동을 강화하였다.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에서는 1985년부터 농민신문을 발간하여 현장에 제공하여 농민대중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지역단위에서도 자발적으로 지역농민신문을 제작 배포하였다. 전남기농의 「전라도농민」, 무안기농의 「무안농민신문」, 담양기농의 「대나무골의 함성」, 해남기농의 「해남농어민신문」 등이 발간되었다. 무안조합빛상환거부대책위원회에서는 「부채대책」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의 부채를 조사한 위에서 주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권익실천활동을 보면, 전남 단위에서는 ‘전남지역 농민생존권확보 및 민주헌법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4월 4일 장흥지원 재판 후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12월 29-30일에는 광주에서 부채해결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강진에서는 1월 21(22?)일 기농은 가농, 탐진농우회와 연대하여 호화관 농협 규탄 및 수세거부 똥물투척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후 벽서작업도 하고 4월4일 구형 재판후 300여명이 참여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맥주맥 권익실천, 강진군 수세시정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8월 29일에는 농지개량조합 저수지 수몰농가의 피해보상투쟁이 있었다.

무안에서는 낙서 등 광범한 선전, 「무안농민」(3.17.; 8.31.)과 「무안농민신문」(12.23.) 발행, 도지사 면담 등의 활동을 하였다. 4월 19일에는 ‘수입개방저지 및 미국예속정권타도를 위한 무안농민실천대회’(여성농민들이 시위에 참여)를 개최하였다. 1986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안을 일원과 해제면 소재지, 망운면 소재지 등에서 열린 무안농민실천대회에서 농민들은 미국예속정권타도라는 구호를 제기하면서 수입개방저지투쟁을 벌였다. 한편 26일부터 망운농협민주화실천대회가 전개되었다. 또한 무안투쟁의 후속작업으로는 선전물 ‘무안농민은 왜 싸워야 했나’ 등이 광범하게 배포되고 김석형 회장 석방운동, 법률구조비 모금운동 등을 계속하였다.

무안농민실천대회를 통해 농민회원들은 장기간의 선전활동을 해내었고 농성기간 중에는 일반농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농성, 가두진출, 옥외방송, 여성농민들의 전달조 활동 등 현장에서 농민들의 실천활동이 두드러졌고, 조직이나 기구 중심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대응해 나간 점이 눈에 띄었다.

무안에서는 7월 4일에는 ‘마늘생산비쟁취 및 살인농정철폐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무안군 조합빛 상환거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채해결활동을 벌였고, ‘몽탄면 수세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세투쟁에 나섰다. 11월에는 「부채대책」 1,2호를 발행하여 부채문제를 더욱 부각시켰고, 마늘 수매장(부당등급) 문제를 둘러싸고 무안군기독교농민회와 가톨릭농민회 무안군협의회가 통합하여 만든 ‘무안군 농민운동협의회’가 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무안에서는 기존 가농, 가농 조직이 선전활동에서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함평에서는 4월 민주헌법쟁취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5월 17일 군사독재, 미국예속정권 타도 시위를 벌였다.

해남에서는 4월 6일 장날에 소몰이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4월 15일 민주농협쟁취 투쟁을 하면서 옥천면에서 전단을 2회 살포하였다. 5월 9일에는 신민당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시위를 하여 해남시장으로부터 농지세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8월 5-6일에는 강진해남농민대회를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개최하였으며, YMCA 민주교사 규탄대회에 연대하였다. 그 외에 방위협의회 회비 반환(2천만원) 활동을 벌이고, 맥주맥 관련 공판에서 유인물을 살포하였다(신정 지회). 또한 수매장(부당등급) 문제를 제기하였고, 5월 16-18일에는 5.18 관련 시위를 벌였다.

담양에서는 「대나무골 합성」(12.22.)을 발행하였고, 농협 이용고배당금 시정 활동을 벌였다.

1987년

〈조직〉

전반적으로 1987년에 농민운동은 민주화운동 흐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투쟁을 하였다. 무안에서는 2월 7일과 3월 3일에 ‘고 박종철열사 추모대회 및 고문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6월 민주대항쟁에 전남지역의 농민운동세력의 일부(특히 무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민의 입장을 선전하였다.

6월 이후 지역단위 기독교농민회에서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군단위 지부조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농민의 생존권확보에 기초하여 전개하였고, 전국단위 기독교농민운동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농민위원회조직과 활동에, 그리고 도단위 기독교농민운동은 민주헌법쟁취 도단위 농민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체 농민운동 차원에서 공동연대하여 농민생존권 확보와 민주헌법쟁취 및 군부독재정권타도 투쟁을 전개하였다.

선거투쟁과정에서는 지역단위 공정선거 감시투쟁과 선거무효화투쟁(전남 중심)을 전개하여 농민대중의 정치역량을 고양시켰고 반독재 민주화투쟁의지를 강화시켰다.

무안가농과 무안기농이 공동신문제작, 공동투쟁 등 연대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가 ‘무안군농민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기농은 1987년 1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3월 17-18일)에서 장성군농민회를 승인하였으며, 나주와 곡성은 군단위 조직 준비위 결성 단계에 있고, 담양은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 나주군은 8월에 조직완료중이었다. 이처럼 농민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에 농민회 조직이 없던 군들에서 농민회 조직 결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화를 위해서 기농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하였다. 1-2월 겨울에는 1986년의 운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농민교육을 실시하였다. 1월 14일·17일에 무안 한산촌에서 전남1차교육이 있었고, 이 교육에 여성농민 12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2월 23일-26일에는 해남1차교육이 있었다. 그리고 무안기농에서는 「무안농민신문」(1,20.)을 발행하였다.

이어서 도농민교육이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3월 24일-27일, 8월 17-19일, 한산촌 각각 45명 참석), 군 농민교육은 나주군(4월 5일, 고막원교회, 80명; 4월 26일, 영동교회, 70명; 5월 1일, 성결교회, 45명), 장성군(4월 23일, 백운교회, 100명), 담양군(3월 1일, 신광교회, 60명; 5월 13일, 남문교회, 40명), 무안군(5월 3일, 복결교회, 70명), 곡성군(7월 22일, 옥가면, 25명), 화순군(7월 24일, 능주교회, 120명), 해남군(8월 5-7일, 민박촌, 27명) 등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해남(2박3일)을 제외하고 1일교육이었으며, 25명에서 120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군단위 교육에는 전남지역의 농민활동가들이 교육강사로 많이 나갔다.

〈운동〉

1987년에 접어들면서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는 농민운동의 활동목표를 외세의 수탈과정을 종식시키고 민족자주와 민족통일의 기초를 닦으며, 독재권력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6월항쟁 기간에는 지역의 농민들도 다양하게 시위에 참여하였다. 전남기독교농민회는 6월 10일, 6월 26일 민주화대행진 광주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7월 24일 민주헌법쟁취 전남농민위원회 결성을 주도하였다. 전남농민위원회는 ‘조합장 직선제 및 쌀 한가마 10만원 쟁취투쟁’을 벌였다. 6월 10일에는 광주에서 100여명의 전남농민들이 조직동원되어 “폭력정권 몰아내어 농민세상

이룩하자!”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 6월 19일에는 광주원각사 집회 시에 ‘전남농민들이 애국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고 시위투쟁에 참여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무안에서 100여명이 구시장터 입구에서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는 우리 손으로”라는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민주헌법쟁취하여 마늘·양파 생산비 보장받자!”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이어 터미널에서 대중집회를 갖고 목포로 재집결하였다. 그런데 이날 무안에서 특이한 일은 군경찰서 병력이 모두 도시로 동원되고 20여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읍단위 시위에 완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무안을 제외한 전남농민들은 광주에 집결하여 「전남농민격문」을 배포하여 시위에 참여하고 대중집회에서 농민연설과 금남로의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 무안과 나주에서는 별도로 농민들이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

상반기에는 이러한 민주화 열기 속에서도 무안의 생산낙농가 투쟁 지원과 해남에서의 해남수협 투쟁 등을 벌여나갔다.

하반기에는 농협민주화투쟁과 쌀생산비보장운동이 전개되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전남농민위원회’는 9월 15일 ‘조합장 직선제 및 쌀 한 가마 10만원 쟁취를 위한 1단계 투쟁기간’을 선포하고 전남농민 5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무안농민들은 몽탄면(150명), 망운면(100명), 해제면(500명) 등 각 면별로 대중집회를 통해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농협민주화와 쌀값 1가마당 10만원 쟁취를 주장하였다. 해남에서도 9월 22일 농민 100여명이 모여 ‘송지면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보성에서는 9월 30일 ‘민주농협쟁취 및 수세거부농민대회’를 개최했고, 9월 21일에는 나주·광산지역 농민들 200여명이 ‘농협민주화쟁취 및 농가부채탕감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1987년 하반기에는 전남지역에서 수세거부·농개조해체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기농은 수세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뒤의 연도별 투쟁 내용)

다시 군농민회별로 활동상황을 보면, 무안의 경우 ‘고 박종철열사 추모제 및 고문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2월), 3월 말 영세민취로사업 부정 폭로와 보상활동을 벌였다. 4월 10일에는 ‘무안군 민주화 및 농민생존권쟁취운동협의회’를 1,000여명이 참석하여 결성하고 가두시위를 하였다. 4월 15일에는 몽탄면 새마을영농개척단 발대식을 하고 영산호 간척지를 농민에게 불하할 것을 요구하며 토지없는 농민을 모아 4월 20일부터 영농에 착수하였다. 50여명의 농민이 참여하여 결성한 몽탄새마을영농개척단은 정부가 농지조성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산호 간척지를 재벌들의 공업용지로 전용하려 하자 일부 개답이 끝난 갈산지구 간척지에서 4월 21일부터 영농을 개시할 것을 결의하였고 당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 유채와 보리파종을 실시하며 싸웠다. 5월 18일에는 ‘5.18광주 추모제와 농가부채 해결 및 마늘·양파 생산자대회’를 개최하였다. 6월 20일에는 현경·망운·운남·해제면 교회 마늘양파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제 중앙교회에서 마늘양파생산비보장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6월 26일에는 무안읍에서 국민대행진을

감행하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무안군지부를 결성하였다. 7월 4일에는 300여명이 참여하여 무안 양파마늘생산비보장대회를 군청앞에서 개최하고 일반대중 500여명과 함께 읍내 가두시위를 하였다. 7월 7일에는 무안군낙우회원 80명을 결집하여 우유전량수매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버스교통비 인하투쟁도 벌였다. 그리고 무안에서는 여성농민들의 활동도 두드러져,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장성에서는 3월 적십자회비거부 투쟁, 무보수부역거부 운동을 벌였다. 4월에는 자갈대징수거부 투쟁을 벌였고 적십자회비대책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였다. 7월 9일에는 국민운동본부 장성군지부를 창립하였다. 수문설치 투쟁도 있었다. 해남에서는 4월에 송지면 곤곡지구 농지정리 투쟁이 있었다. 더불어 4.13호헌반대 투쟁을 벌였으며, 5월 1-5일에 수협민주화운동, 선전활동으로 4명이 구류처분을 받았다. 공동방제 농약쟁취투쟁도 있었다. 강진에서는 5월 4일 장터에서 부채공청회를 개최하였다. 7월 19일에는 농활해단식 때 2천여명이 참가하여 버스터미널에서 대중집회를 개최하였다. 담양에서는 8월 12일, 국민운동본부 담양군지부가 결성되었다. 함평에서는 4월에 부채해결운동이 있었고, 공청회를 시도하였다(무산?).

이처럼 무안, 함평, 강진에서 부채조사활동대회, 공청회, 시위 등을 벌이며 농가부채해결투쟁을 전개하였고 국민운동본부 군지부가 결성된 곳에서는 선거무효화투쟁도 전개하였다. 9월부터 무안, 해남에서는 농협민주화운동과 쌀생산비보장운동을 함께 혹은 각각 추진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결성, 대중집회, 시위 형태로 진행하였다. 무안과 담양에서는 마늘, 양파 생산비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11월부터 전남에 집중된 수세투쟁에 장성, 해남, 나주, 강진, 담양, 곡성 등의 기농조직이 가동되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강진, 해남에서는 대학생농촌활동에 맞추어 '농활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대회, 시위 등으로 현장문제를 고발하는 공동투쟁을 벌였다.

홍보활동과 관련해 보면, 전국단위에서 만든 「농민신문」(10회), 「세상이야기」(11회), 그리고 농민운동의 평가와 방향을 밝힌 「농민세상」을 배포하였다. (상반기) 전남 도단위에서는 「전남농민신문」을 1회 발행하였고, 전단(5회)과 성명서(6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⁸⁰⁾ 군 단위에서는 상반기에만 무안지역에서 「무안농민신문」 4호(가농 무안협의회와 함께), 「영산호의 함성」 2,3호(영농개척단 발행)를 발행하였고 담양에서 「대나무굴의 함성」 2호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해남, 강진, 장성 등에서 지역투쟁과 관련된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다.⁸¹⁾ 1년 단위로 보면 전남지역 군단위에서 신문 28회, 전단 23회, 성명서 26회, 자료집 2회 등 많은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1987년 들어 농민들의 자주의식은 날로 고양되고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조직활동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민운동을 어떻게 단일한 조직들로 통일해 갈 것인가? 이를 위한 현 단계의 조직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관해 모든 농민활동가들의 관심이

80) 상반기, 전남농민이 광주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6월19일), 전남농민이 목포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6월23일), 전남 농민격문(6월26일), 하계전남지역 농촌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농촌활동 공동성명서)(6월30일). ·

81) 해남, 수협전단 2회 발행 배포; 강진, 농가부채공청회에서 ‘10만 강진군민에게 드리는 글’ (4월) 작성 배포; 장성에서는 ‘고질적인 자갈대 징수 폐지하라!’는 전단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

집중되었다. 기독교농민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기독교농민회는 농민운동의 조직적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기독교농민회의 고유한 과제인 농촌교회와 기독교농민의 의식화 및 조직화를 위해 복무해 나갈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기독교농민회는 농민운동의 통일과 더불어 농민권익운동을 통일조직체에 맡기고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어서 그간 기독교운동 안에서 농민문제에 관여해온 각 교단 농촌목회자조직, 교육센터, 기독교농민회 등이 공동으로 기독교농민운동의 발전적 방향모색을 준비해 나가려 하였다.

1988년

〈조직〉

1988년 기독교농민회는 운동목표를 농민운동 조직통일사업과 농민투쟁 확대로 설정하여 활동하였다. 총연합회 산하의 모든 군조직이 군단위에서의 농민운동조직통일사업을 벌여서 1군 1농민회로 군단위 통일적인 농민대중조직을 준비하고 건설해 갔으며 농민운동의 전국적인 조직통일을 위한 과도적 연합체로서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을 준비해 갔다. 그러한 와중에도 전남지역에서는 연합회 산하에 곡성군농민회가 새로이 결성되었다. 연합회의 여성농민위원회는 여러 지역에서 현장 조직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육, 선전, 투쟁을 벌여나갔는데, 특히 무안에 지역여성농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는 「농민신문」과 「세상이야기」를 각각 11회, 10회씩 정기적으로 발행했으며, 성명, 전단을 27종 발행하였다. 또한 도, 군단위 농민교육, 활동가교육, 회원수련회, 일일교육 등을 광범하게 실시하였다.

〈운동〉

1988년은 농민운동에서 투쟁의 한 해였다. 모든 농민투쟁이 현장에서부터 전국 단위로까지 확산되었으며, 각 농민단체별 각개약진식이 아닌 연대투쟁의 방식으로 힘을 모아갔다. 또한 농민운동은 생산자단체들과의 연대를 다각도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기농은 농민대중의 광범한 참여 속에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수세폐지운동에 전력하면서 토지무상양도투쟁을 적극 지원 독려하고 의료보험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농축산물수입저지 및 제값받기투쟁, 농수축협법개정운동, 쌀값보장운동, 농약피해보상운동, 강제부역거부투쟁 등을 벌여갔다.

제 6공화국 정권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노골적인 농축산물수입개방 요구에 발맞추어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기독교농민회는 '민주쟁취 국민운동 농민위원회'를 통해 연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전농민적인 미국농축산물 수입개방반대투쟁을 선포하였다.

1988년의 계속되는 농민연대투쟁 과정에 기독교농민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결성을 적극 주동하였다. 또한 기독교농민회는 전 조직을 가동하여 수세폐지운동은 전남북을 중심으로 충남, 경기 등 평야지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연일 군·도 단위에서 집회, 투쟁을 하였으며, 10월 28일 ‘전국수세폐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남기독교농민회 최병상 총무가 대책위 총무를 맡아 수세투쟁의 실무를 지도해 나갔다.

또한 1988년 1월 1일부터 농어민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보험형태인 조합주의 의료보험으로 인해 농민에게 의료혜택은 커녕 부담만 가중하게 되었다. 기독교농민회는 연초부터 의료보험제도 개선운동을 벌여나갔다. 특히 여성농민위원회가 활동하던 무안에서는 여성농민들이 의료보험투쟁을 전개하였다.⁸²⁾

1988년 1월 22일 무안 유월리를 시작으로 용정, 수양촌 등 5개마을 2개 교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여성농민들은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을별로 의료보험거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마을별 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면사무소나 군의료보험조합에 고지서를 반납하였다.

이에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싸움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안군 의료보험여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는 2월 4일 4개면(몽탄, 현경, 운남, 해제) 여성농민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월 10일 ‘농어촌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여성농민대회’를 무안시장공터에서 열었다. 이어서 여성농민들은 부당한 의료보험제도를 널리 폭로하기 위해 시가행진을 하였다. 플랜카드와 피켓을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면서 전진하였다. 무안군 의료보험조합 앞에 모인 여성농민들은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농민실정에 맞게 될 때까지 우리는 납부를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각자가 가지고 온 의료보험 고지서를 직접 반납하였다.⁸³⁾

이어서 기독교농민회는 의료보험개선의 방향으로 통합의료보험 쟁취를 위해 6월 28일 각 농민단체, 빈민단체, 의료인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연대하여 의보투쟁을 벌여나갔다.

기독교농민회는 1988년 초부터 토지투쟁에도 힘을 쏟았다. 9월 14일 신안, 영암, 해남의 토지투쟁 농민들과 평택, 완주, 서산, 홍성, 아산의 토지투쟁 농민들, 그리고 기독교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협의회가 모여 ‘토지무상양도 전국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적으로 토지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양담배 수입개방으로 담배경작 농가들이 고추농사로 몰리자 과잉생산으로 고추값이 근당 4·500원까지 폭락하여 고추 주산지인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고추제값받기투쟁이 벌어졌다. 고추제값받기투쟁은 전남, 전북, 충남에까지 확대되어 가을부터 전 농민적인 투쟁으로 폭발되었다. 전남기독교농민회는 현장 농민들과 고추투쟁을 전개하였다.

82) 12월 선거기간 중에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농어촌의료보험증을 배포하였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요구한 의료보험료는 도시의 50만원 월급을 받는 회사원과 맞먹는 것이었다. 호당 평균 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너무나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연고로 농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색깔이 다른 또 하나의 세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83)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농민세상』(서울, 1988년 3월), 54-55쪽.

1988년의 전국적인 농민투쟁의 확산으로 농민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부터 농민운동 조직들 간의 연대투쟁이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농민운동 조직들 간의 연대와 신뢰의 폭이 쌓이고 농민운동 조직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면서 자주적이고 대중적인 군농민회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성과에 기반하여 1988년 말부터 농민운동 조직을 통일하기 위한 협의가 전국단위에서 더욱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

1989년 들어 기독교농민회는 총연합회와 도, 군 단위에서 ‘전국농민운동연합’에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조직통일사업을 전개하였다. 기농, 가농 등 기존 농민운동조직이 ‘전국농민운동연합’을 통해 산하 군조직을 해산하고 그간의 조직역량을 자주적인 군농민회 건설에 수렴키로 하였다. 기독교농민회는 공식적으로 조직개편을 해나가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1989년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22개 군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는 ‘모든 산하 군조직이 총연합회로부터 탈퇴를 전제로 하여 농민운동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기농의 입장을 2월 27일 임시총회에서 공식 선언하고, 2개월 안에 도농민회를 제외한 모든 군조직이 총연합회에서 탈퇴하여 농민운동의 자주적 대중조직화와 군단위 농민운동 통일사업에 기여’하며, 향후 기농은 ‘농촌내 교회와 신자의 개발, 의식화를 통해 농민운동을 확대, 강화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위한 제안을 전국 임원, 도총무, 사무국연석회의에서 검토한 후 총회에서 의결했다.

이러한 기독교농민회의 농민운동 방향 전환을 위해 군단위 조직사업은 기존의 군단위 기독교농민회가 아닌 ‘기독교 농민 위원회’로 설정하고 이 위원회가 군 단위 통일 조직의 산하에서 군 단위 통일조직의 계통하에서 신자의 개발과 조직화에 주력하도록 하며 기농 총연합회는 현장의 이와 같은 활동을 추동, 지원하도록 하였다. 단, 이와 같은 조직화도 도·군단위 농민조직과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하였다.⁸⁴⁾

임시총회에 이어 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는 한국기독교농민회로 명칭변경을 하였다. 한국기독교농민회는 1989년 5월 11일 제1차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다. 최병상(전남, 무안)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김병길(전남 함평)이 서기로 선출되었다.

한국기독교농민회는 6월 26일·27일 기농 간부와 농촌목회자,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의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평신도 농민이 개별 가입하는 선교단체로서의 기독교농민회의 이념, 위상, 역할과 조직구조를 구체화하였다. 정의, 생명, 공동체를 이념으로 내세우고 농촌교회와 신자를 주체로 농민선교활동에 임하는 임무를 설정하였다.

84) 한국기독교농민회, 『기농 10년사』(서울, 1992), 133쪽.

1989년 한국기독교농민회는 새로운 조직위상과 방향을 정립하고 조직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주로 벌였다. 전국 단위에 이어 전남 도 단위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농민선교단체로서의 기독교농민회의 공감대를 넓혀갔으며, 교회단위 조직기반 조성과 평신도 농민의 훈련을 위하여 개교회 단위교육, 도 단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직개편의 와중에서도 한국기독교농민회는 전국단위에서 9·8 힐튼호텔 앞 미국식품 반대시위, 11·28 수입개방저지 농민대회 등의 투쟁활동을 해나갔다.

③ YMCA농민회

YMCA농민회는 1985년에는 교육사업에 주력하였다. 1985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1차 장기전문과정 교육이 다락원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9명의 전남농민이 참여하였다(해남 6명, 승주 2명, 구례 1명).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이 사회과학적인 무장을 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면, 이 교육은 마을, 면, 군 단위에서 협동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교류 및 정보교환에 두어졌다.

이 기간 동안 축산협동반은 전남에서는 새로 결성되지는 않았다. 양곡조합은 순천, 별량, 덕산에서 1985년 10월 21일 27명의 구성원으로 60가마(연맹지원 40가마, 조합원출자 20가마)의 자산으로 구성되었다. 1985년말 양곡조합과 축산협동반을 제외한 신규부락개발조직(부락개발을 위한 소그룹 단위 훈련이 이루어져 옴)으로는 해남의 7개소, 순천의 2개소가 있었다.

1986년 10월 23일-23일에 해남YMCA에서 열린 농촌실무자회의에서는 Y실무자들의 지원활동과 장기교육 이수농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느슨한 형태의 농민조직을 강화해 간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어 1987년에는 호남지역지도자 교육 2차례, 나주군 농촌청년 모임과 교육, 영암지역 농민교육 등이 실시되었고 YMCA농민회원들이 참여하였다. 해남과 순천지역에서는 YMCA농민회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1987년에는 면농민회도 몇 군데 결성되었다.⁸⁵⁾ 순천에서는 순천Y농민회를 중심으로 봉리민 회의 및 마을단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례에서는 산동신흥 중심의 원예작목반 활동이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 위에서 1987년 11월 ‘한국YMCA 농민지도자협의회’라는 전국조직이 결성되었다.⁸⁶⁾

해남과 순천은 지역Y가 교육이수생들을 결집하였고 나주와 영암은 지역Y가 없어 필드워커 형식의 실무자(송기호 간사)를 두어 활동하도록 하였다.

1988년에는 군농민회가 만들어지면서 YMCA농촌사업은 군농민회의 교육을 지원하고 일부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농촌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YMCA농(어)민회는 농민운동의 통일작업에 함께 해 나가게 되었다. 대중적 실세를 지닌 군농민회가 전국농민운동을

85) 청우회, 해남 문내면, 5월 2일. 회원 22명; 농우회, 해남 마산면, 5월 3일, 17명; 농민회, 승주 별량면 11월 28일, 200명. 이 면농민회들은 자주적 농민회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86) 초대 회장을 해남Y 농어민회 회장 김옥수 씨가 맡았다.

주도해 나가도록 격려한다는 방침 아래 직접 관여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였다. 그런데 YMCA 농촌사업과 연계되었던 농민들의 조직작업이 독자적인 조직으로 독립해 나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해남YMCA 농어민회는 1989년 9월에 해남군농민회로 통합되었다. 그러면서 YMCA 농촌사업은 군농민회에 협력하여 활동가들을 결집하여 농협민주화를 겨냥한 집단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농연이 결성되면서 YMCA 농민지도자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YMCA 농민회는 전농이 결성되면서 전농의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1990년 하반기에 전농의 6회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해남YMCA 농어민회

YMCA 농촌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던 YMCA 농민회의 활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러면 전남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해남YMCA 농어민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해남YMCA 농어민회는 지역교육에 중점을 두고 부락주민들을 운동조직으로 엮어내는데 힘썼다. 총회를 개최할 때는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양곡조합임원교육, 지도자(간부)교육, 수련회, 연수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1987년 들어서는 신규회원 기초교육이 있었고, 문내면과 마산면에 지역교육이 있었다.

1987년 총회에서는 후반기 중점사업으로 수세싸움을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남Y농어민회는 수세거부운동의 주체는 몽리민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수세거부운동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부당수세거부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다. 해남Y 농어민회는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로 자기역할을 한정하고 추진위원회의 주요 임원들도 몽리민들이 말도록 하되 실무역할만 Y농어민회 회원들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Y농어민회는 9월 20일과 10월 20일에 “특집1호”(도대체 농지개량조합은 무엇하는 곳인가?, 4천 매 인쇄)와 “특집2호”(농조는 어떻게 운영되고 얼마나 많은 수세를 내나, 6천매 인쇄)를 발행하여 수세투쟁에 일조하였다. 그리고 수세거부 추진위원회 결성이나 결의대회 등을 YMCA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해남YMCA 농어민회는 수세거부운동을 통해 자주적인 농민들의 대중조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남Y 농어민회는 1989년 9월에 해남군 농민회를 결성키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해남Y 농어민회 활동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1990년 봄에는 해남군 농민회 창립준비위가 결성되었고 9월 1일에 비로소 해남군 농민회가 결성됨과 동시에 해남Y 농어민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되었다.⁸⁷⁾

순천YMCA 농민회

순천YMCA의 경우 1985년 3월 23일에 ‘순천YMCA 농민회’(초대 회장 김환봉)를 창립하였다.

87) 대한YMCA연맹, 『1976~1991 YMCA농촌사업 보고서』(), 쪽. ·

순천Y 농민회는 첫 사업으로 같은 해 10월 30일에 승주군 별량면 두고리 덕산부락에 연맹으로부터 쌀 40가마를 지원받고 조합원들이 20가마를 출자하여 덕산양곡조합을 창립하였다. 1986년 9월 1일에는 '순천 YMCA 농민회 소식' 지를 발행하고 대한Y 연맹이 실시하고 있던 지역단위, 전국단위 교육에 회원들을 계속 참가시켰다. 소식지에는 회원소식, 농민 입장, 부당한 사례 등을 홍보하였다. 양곡조합은 고흥, 보성, 승주지역 3개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보성양곡조합은 YMCA 지원자금 상환을 끝내고 공동기금으로 논을 구매하여 재산을 형성키로 하였다. 창립 전후부터 1987년까지 순천YMCA 농민회가 주체가 되어 교육사업을 꾸준히 하였고 이 기간 중 승주군(순천을 둘러싸고 있는 군)에서 YMCA 농민지도자교육을 이수한 농민들이 총 50명에 달하였다.

별량면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농민회 활동이 10여회에 이르는 교육, 홍보지발행 등을 통해 외서면, 황전면, 해룡면, 주암면까지 확산되었다. 1987년 9월 12일에는 지역농민 기초교육을 YMCA 회관에서 가졌으며 이 모임에 참석한 각 면단위 농민들은 순천Y 농민회를 보다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 아래 승주군농민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87년 11월 28일에는 조직을 면 단위까지 확장하여 처음으로 별량면 농민회(회장 김광옥)가 결성되었다. 별량면 농민회 결성식은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전투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2백여 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1987년 말 승주군 쌍암 도정리에서 수세거부운동이 전개되었고, 이후 1988년 가을에 순천지역에서 지역농민 5천여 명이 모여 부당수세거부 결의대회를 가졌다. 농민회 회원들은 수세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1988년 1월부터 3월말까지는 의료보험시정운동을 전개하였는데 Y농민회에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도 찍어내고 승주군 일대를 돌면서 홍보방송도 하고 마을마다 방문하면서 교육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였다. 그리고 1988년부터 명칭을 '승주YMCA농민회' 바꾸었다.

1988년 4월 15일에는 구례, 승주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초청하여 '농민문제 공청회'를 순천YMCA 신협 3층에서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문제, 수세문제, 농협문제, 농가부채문제, 농지문제 등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여당후보가 불참하여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소식지 「구례, 승주 농민의 소리」 7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선거 당일에는 지역 안의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4.26총선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하였다.

1988년 8월 3일에 승주YMCA 농민회는 '승주군농민회'에 합류하였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조직이 면단위로 확대해 가고 지역농민들의 권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가면서 자주적인 농민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역농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농민회는 1989년에는 회원교육, 활동가교육 등을 하였고, 1989년 2월 13일 수세폐지대회에도 참여하였다.⁸⁸⁾ 농민회가 YMCA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져 갔지만, 이후 1991년까지도 승주군농민회(전농으로의 통합 이후에는 모두 군농민회로 이름을 개칭한다.)의 사무실은 YMCA 회관 안에 있었으며 YMCA에

88) 순천YMCA 역사편찬위원회, 『순천YMCA 68년사: 순천YMCA가 걸어온 길: 1945~2013』(순천, 2013), 167~108쪽.

계속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농민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또한 승주군 농민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농민회를 대표해서 몇몇 인사들이 이사나 위원에 참여하는 것도 순천YMCA에서는 하나의 관례처럼 되었다.

기타 지역 YMCA 농민운동

나주지역의 농민운동은 1987년 11월 나주농민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당시 이미 이 지역에는 YMCA의 부락개발지도자 교육 이수생이 8-9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 교육이수생들을 중심으로 소모임들이 꾸려지고 있었다. 이 당시 YMCA 농촌사업에서 전남북을 망라하여 대표적인 지역은 해남이었는데, 해남Y에서는 당시 송기호 간사를 나주지역에 파견하여 11월에 창립준비위원회의 총무역할을 돕도록 하였다. 나주농민회는 12월 4일 창립식을 가졌으며 창립과 함께 바로 수세거부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수세거부투쟁을 주도하던 나주농민들이 1989년에 나주농민회를 창립하면서 1987년 창립된 나주농민회는 나중에 창립된 것에 흡수되었다.

영암지역은 Y 부락개발지도자 교육 이수생들이 꽤 있는 곳이었으나 뚜렷한 지도력이 없어 농민회 조직이 지체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송기호간사는 1987년에 현지를 방문하여 우선 Y 부락개발 지도자교육 이수생들을 면담하였고 과거 Y신협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축산협동반, 양곡조합 등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1987년 11월에 일차적으로 영암지역 농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1988년 2월에는 폭을 더 넓혀서 일반사회단체와 교회 등을 순방하면서 교육대상자를 발굴하여 2차례에 걸친 농민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흐름과는 별도로 영암지역 주민 중에서 현지의 한겨레신문 지국장, 평민당 청년조직, 교회 일부인사 등이 제각기 군농민회를 조직하려는 흐름이 있었는데, Y의 농민교육생들은 1988년 7월에 비공식적으로 열린 전남지역 농민운동 통합에 관한 논의를 하는 모임에서 이들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1988년 7월 31일에 '영암군 농민회 결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모임에서는 정당 쪽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의사진행조차 제대로 안될 정도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현지 농민들과 배종렬(당시 광주·전남민중운동협의회 의장), 민인기(해남Y 총무), 송기호 등은 총회 후에 별도로 모여 의논한 결과 영암군농민회 총회는 인정하되 농민회가 농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면단위 농민회 조직을 강화해 가자고 하였다.

1988년 9월에는 YMCA 전남 도단위 농민교육이 있었으며 송기호 간사는 구교육생들을 중심으로 면단위 조직을 강화해 나갔다. 9월 3일에는 미암면에서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암면 농민회를 창립했으며 9월 22일에는 3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면 농민회를 창립하였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11월 3일에 다시 창립총회를 갖고 곧이어 수세거부운동에 돌입하였다. 송기호간사는 1989년 1월에 YMCA를 그만두고 영암군농민회 수세폐지 대책위원회 기획부장을 맡게 되었으며

영암군농민회는 1989년 3월에 전농연에 가입하였다.

④ 전국농민협회의 결성

기존의 가농과 기농의 틀로는 농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자주적 농민조직을 주장하고 결성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1970년대 말 거창의 아람농민회, 의창의 신기농민회, 강진의 탐진농민회 등이 있었으며, 1981년 7월 전북 부안, 전남 함평, 경남 거창과 의창 지역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 농민조직으로서 '한국농민회'(가칭)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초반에도 자주적 농민조직들이 존재하였지만 매우 분산적이었으며, 급격한 정치적 변동 속에 대부분 해체되거나 기존조직에 흡수되었다. 그후 1985년 전남 함평지 역에서 '함평농우회'가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1986-7년 사이에 경남의 의창·함양·거창, 전남의 담양·강진, 전북의 김제·부안·순창, 충남의 예산, 충북의 청원·보은·음성, 경기의 포천·화성, 경북의 예천 등 30여 개의 자주적 농민운동조직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자주적 농민조직들의 성장흐름 속에서 활동가들은 이미 198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친 지역대표자모임에서 전국조직 창립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준비기간을 설정하고 각각 현장에서 지역조직 결성, 대농민 홍보활동 강화, 일반농민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그 폭을 확대하였다. 1986년 12월 25일 전남, 경남, 전북, 경북, 경기 지역 대표 7명이 모여 '전국농민협회 발기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노금노를 선출하였다. 1987년 1월 13일 오후 4시부터 14일 12시까지 광주에서 지역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준비를 해서 전남, 경남, 전북, 경북, 경기 지역의 군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광주 장안회관에서 1987년 2월 26일 '전국농민협회'를 결성하였다.⁸⁹⁾ 결성식(창립총회)에는 군단위 조직 대표와 각 지역에서 농민 조직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28명이 참석하였다. 창립총회는 경과보고, 회칙 심사, 임원 선거, 창립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남지역 운동가로 장영근(강진농민회 회장)이 초대 회장에 박기상(담양농민회 회장)이 세 명의 감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고, 사무국장에 노금노가 선출되었다. 사무소를 1987년 9월 광주시에 개소했다가, 1987년 12월 2일(1988년 4월?) 서울로 이전하였다. 전남지역에서 전국농민협회 소속으로 함평과 강진에 30명 이상의 회원이 있었다. 그리고 8월에 전남지역에서 교육을 하였다. 전국농민협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농민대중에 기반한 자립적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전남지역에서 전국농민협회에 가입한 곳은 강진농민회(회장 장영근), 함평농우회(회장 노금노)였고, 담양농민회(회장 박기상)도 함께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 세 곳이었는데,

89) 결성 당시 참여한 군 단위 농민회는 강진농민회, 함평농우회, 담양농민회, 김제동학농민회, 부안농민회, 경남 의창군 농민협회, 함양군농민협회, 충남 예산군농의회, 충북 청원군농민협회 등 8개도 9개군이였다. 그리고 전국농민협회는 월간신문 '농민신문'을 발간하였다.

담양농민회는 ‘담양지역’ (전국농민협회에서 발간하는 ‘농민신문’, 3호, 1987.6.1.)으로 표기되더니 1988년(농민신문, 11호, 1987.2.1.)에는 빠지고 함평농우회는 함평농민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1987년 8월 신문에서 회장 장영근, 사무국장 노금노로 표기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1988년 5월 15일에는 노동자, 학생, 회사원, 교수, 교사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농민협회 광주분회가 창립되었다. 비농민으로 구성된 광주분회는 농민운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려는 취지에서 결성되었다. ·

교육활동을 보면, 1988년 4월 30일 - 5월 1일 이틀간 강진, 함평, 화순, 담양 등지에서 온 15명의 농민이 모인 가운데 광주에서 활동가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체 민중운동 속의 농민운동의 위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각 지역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전국 단위의 교육이나 수련회에 지역 농민들이 다녀오는 일이 있었다. 1988년 3월 9-10일에 대전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연수가 있었다. 전남지역에서의 교육으로는 함평활동가 교육이 1월 12-14일 전북 이서에서 함평농민운동을 내용으로 있었고, 3월 31일- 4월 1일에도 한 차례 있었다. 1월 12일에 강진군 농협군지부에서는 강진군 내 딸기생산농가 135호를 주축으로 ‘강진군 딸기생산자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주관 아래 강진군 딸기 생산농민교육이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90여명의 생산농민들이 참여하여 활기를 띠었다. 1월 22-24일에는 한산촌에서 전남지역(보성, 강진, 화순)농민교육이 있었고, 농민문제의 본질과 부채문제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가을 이후인 11월 21-23일에는 농민단체회원들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일이 서울에서 있었다. 농업기술자협회 회관에서 열린 이 교육에는 전국적으로 116명에 달하는 농민단체 회원이 참석하였고, 전국농민협회에서는 ‘자주적 농민운동 건설에 주체적으로 나서자’는 주제 아래 농민운동의 현황과 사례, 통일방향 등에 관하여 교육하였다.

1989년의 교육활동을 보면, 8월 3-4일에 전국 각 지역의 활동가 50여명이 모여 대전 태극교육원에서 경제협동사업 교육을 받았다. ‘경제협동사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발제와 지역사례소개로 진행되었는데 강진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9월 6일에는 2박3일 동안 경남 창원 가톨릭 사회교육원에서 6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전국농민협회 활동가수련회’를 가졌다. 전국농민협회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소수활동가 중심의 조직이어서 농민과 결합하기 어려운 점들을 토의하였다.

전국농민협회 홍보지로서 농민신문을 매월 발간하기로 하였으나 1988년에는 9번 발간하였고, ‘3.4월 농민활동’, ‘농축산물수입현황’, ‘현단계 농민운동 통일방안’, ‘88 농산물체값받기투쟁 사례집’,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알기 쉬운 농업통계’, ‘농민문제와 농민운동’, ‘88년 상반기 자료집’ 등 많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투쟁활동을 보면, 1987년 9월 20일에는 함평군농민위원회가 주관하여 350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농촌실현을 위한 함평농민대회’가 함평에서 열렸다. 함평농민의 나아갈 길에 대한

강연을 듣고 함평농민 생존권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발대식을 한 후 서명을 하였다.

1987년 10월 초 담양 창평면 유월리의 농민 13명은 농가부채탕감 및 반농민적 축협·농협에 대해 규탄하는 농성을 4일간 하였다. 양축농가 지정을 받은 같은 마을 이장의 대출금의 보증을 썼다가 외국소 수입으로 이장의 소값이 폭락하면서 생긴 농가부채인데, 경감조치 대상에서마저 제외하자 농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게 되었다.

1988년에 함평에서는 부당의료보험거부, 농축산물수입저지, 농산물제값받기, 고추 생산비보장 및 전량수매요구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3월 2일에는 함평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의료보험거부대회를 개최하였다. 480여개 마을을 차량을 동원하여 다니며 의문문제를 폭로하고 대회를 안내하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항의시위 후 대회를 개최하였다. 7월 14일에는 함평에서 농민, 학생 700여명이 농축산물수입저지를 외치며 읍내 가두시위를 벌였다. 8월 10일 함평 외대화부락 24농가는 소입식자금상환거부를 결의하고 상환거부를 통고하였다. 가을 들어 10월 6일에 함평 손불면에서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제값받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개최 후 농협을 점거하여 농성하였다. 10월 29일에는 함평 나산면 농민들 100여명이 '약정고추 전량수매 및 생산비보장촉구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11월(25-26일, 29일)에도 나산에서 50-70명의 농민들이 고추전량수매요구 투쟁을 벌였다.

강진에서는 8월 1일 60여 딸기생산농민의 참여로 '강진딸기생산자협회'(회장 장영근)가 결성되었다. 작목반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기만 하는 농협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농민들은 1987년초 비닐과 비료사용에 따른 피해과정에서 보상투쟁을 하면서 생산자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만들게 되었다. 물론 지속적인 마을교육, 1987년과 1988년초의 군단위교육이 기초가 되었다. 협회는 결성식을 하고 8대의 차량에 280여명이 타고 농가부채, 수입저지, 수세, 의료보험 관련 각종 투쟁구호를 차량에 붙이고 차량시위를 하였다.

1989년 들어서는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책위준비위원회'가 9월 8일 결성된 뒤 함평에서 전국 최초로 쌀값보장대회를 개최하였다. 추석 이틀 전인 9월 12일 함평군농민회준비위원회(위원장 노금노) 주최로 우시장 입구 공터에서 5백여명의 농민들이 '추곡수매가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함평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 이어 농민들은 시가행진을 하며 함평읍내에 진입하였고 읍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농민위원회 함평활동가들이 전원 참석하였고 농민대회 경비도 농민들 스스로의 돈으로 마련하였다.

농민운동의 통일조직 결성 흐름에 맞추어 전국농민협회는 기존의 전국조직체들의 통합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전국조직을 건설할 것을 제의하면서 농민운동연합에 참가하지 않다가, 1990년 2월 12일 4차 대의원총회에서 전국통일조직에 합세하기로 하고 해산을 결의하였다.

⑤ 자주적 농민회의 등장

1986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대중노선에 입각한 농민운동 조직건설’ 움직임은 1987년 초부터 실천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다.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농민운동 조직과 활동가들은 생산현장,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는 농민운동을 추구하게 되었다.

한국가톨릭농민회는 1987년 제 18차 전국대의원 총회(2.16.-2.18.)에서 활동과제를 지역농민 대중조직의 건설과 실천조직역량의 강화, 조직활동의 민주집중제 운영, 여성조직과 청년조직 확대 등으로 결정하였으며, 조직방침으로는 전군단위의 조직적 통일성과 조직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중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군협의회를 대중조직으로 발간시키되 산하 면위원회를 강화하는 한편, 분회를 기본조직으로 군단위 작목별 생산자조직을 보조조직으로 하여 대중역량의 조직화와 대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도 1987년 ‘제1차 중앙상임위원회’ (3.17.-3.18.)에서 대중노선에 입각한 대중조직운동의 방침을 결의하였다. 1987년 활동목표를 민족자주와 농민의 민주적 제권리 쟁취, 농민운동의 대중조직 역량강화, 농민주체의 권익실천활동을 통한 농민생존권 확보와 대중노선의 실현, 민족민주운동에서의 농민운동의 위치와 역할 확보에 두고, 중점과제를 농가부채 해결, 수입개방저지, 농민의 민주적 제권리 쟁취투쟁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를 실천할 방침으로는 군단위대중조직의 건설·확산, 군단위 조직의 자립성 강화, 현장단위 대중적 실천활동과 연대활동 전개, 전국조직의 민주적 운영 등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전국적 농민운동조직은 각각의 주객관적 조건 아래에서 대중노선을 수용·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어서 종교적 형식이 갖는 비농민적 성격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농민운동을 전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7개군 농민조직과 산재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1987년 2월 26일 ‘전국농민협회’를 결성하였다.

전국농민협회는 ‘보다 분명한 농민적 입장의 철저한 지향과 주체적 의지의 결단으로써 그동안의 농민단체의 비농민적 성격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각지의 자주자립적 군단위 농민조직을 결성, 활동해 오던 차, 지역조직의 독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미조직지역 활동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담당할 전국조직으로서 전국농민협회를 창립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전국농민협회의 출범은 그간 종교적 형식 일변도로 진행되어온 농민운동의 발전적 변화이며 종교적 외피에 안주해 온 일부 활동가들에게는 경종이 되었고 농민운동의 대중적 발전을 자극하였다.⁹⁰⁾

다시 정리하자면, 대중노선에 기초한 대중조직운동을 위해 군단위를 축으로 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직활동이 전개되었다. 한국가톨릭농민회는 본부-교구(도)연합회-마을분회 식의 기존 조직 축을 개편하여 ‘군협의회체제 재편의 완료와 가동’을 결의하였고,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는

90)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농민세상』 1988년 3월, 33-43쪽.

그간의 군조직 체제를 자주·자립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으며, 전국농민협회는 창립부터 '자주자립적인 군농민조직'을 표방하였다. 뒤이어 결성된 각지의 독자적인 군단위 농민운동조직 역시 자주·자립의 기치 아래 결성, 운영되었다.⁹¹⁾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 농민운동 전국조직이 존재하는 속에서 전국조직에 속하지 않는 군단위 독자적 농민조직이 속속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 조직은 1987년에 곳곳에서 결성되었으며, 제반 전국단위조직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단위에서 자주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전국단위 조직의 분파주의를 비판하고 지역에 기초한 농민운동의 연대와 통일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자주·자립적인 군단위 대중조직을 위한 각 농민운동조직들의 방침을 모아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면단위 조직건설로서 몇몇 군농민조직은 면단위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조직관리, 운영을 면단위 중심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군단위 조직이 없는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면단위 농민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둘째, 현장단위에서부터 조직적인 연대와 통일성의 확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무안가농과 무안기농이 공동신문제작, 공동투쟁 등의 연대활동을 해 나가면서 '무안군농민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자주적 농민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나 운동협의회, 농민위원회 등의 명칭의 조직들과 면농민회들이 광범하게 결성되면서 그 위에서 군농민회가 만들어져 왔다. 이들 조직들과 면농민회들은 가농의 지역협의회나 분회, 기농의 지역조직과 독립적으로 결성되었으며 군단위 조직으로 결합되어 갔다. 이러한 자주적 농민조직들이 활발히 결성되면서 가농, 기농, Y농, 전국농민협회 등에 속한 지역협의회, 지회, 분회 조직들도 투위중심으로 결합되면서 군단위조직(군농민회)을 만들게 되었다.

〈표-2〉 1987년 전남지역 자주적 농민조직 결성상황

지역	결성시기	조직명
무안	4.10.	무안군민주화 및 농민생존권 운동협의회
함평	7.13.	함평군 농민운동탄압저지 대책위
무안	7.22.	망운면농민회
무안	7.22.	무안 낙농인권익보호대책위
전남	8.15.	민주헌법쟁취 전남농민위원회
강진	8.25.	신전면농민회
강진	8.30.	강진군농민위원회

91) 그 결과 1987년 한 해 동안 가농 8개 군협의회, 기농 6개 군농민회, 전국농민협회 13개군, 독자적 군농민조직이 15개 군에서 새로 건설되었다.

해남	8.30.	송지면 농어민형제회
강진	8.30.	민주헌법쟁취 강진농민위원회
함평	9.2.	함평군농민위원회
강진	9.10.	도암면농민회
승주	9.12.	승주군농민회 준비위원회
보성	9.14.	보성군농민회
무안	9.19.	몽탄면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
나주	9.21.	나주군농민위 원회
무안	9.21.	해제면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
강진	9.21.	칠량면농민회
담양	9.24.	담양농민회 무정협의회
해남	9.27.	송지면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
해남	9.	해남군 농약공동방제 부정사건대책위
무안	10.12.	무안 현경면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
장흥	11.17.	민주쟁취국민운동 장흥군 지부
나주	11.21.	나주군농민회
화순	11.27.	도곡면농민회
승주	11.28.	별량면농민회
나주	11.29.	세지면농민회
함평	12.7.	손불면농민위원회
나주	12.8.	금천면 · 다시면농민회
함평	12.10.	학교면농민위원회
장성	1987	남면 청량리 자갈대 대책위원회
강진	1987	강진농문회

자료: 엄영애, 2007, 286쪽.

1987년에는 7,8,9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결성되었다. 무안, 강진, 해남, 함평, 나주를 비롯하여 보성, 승주, 화순, 담양, 장성에 자주적인 농민조직들이 결성되었다.

〈표-3〉 1988년 전남지역 자주적 농민조직 결성 상황

지역	결성시기	조직명
나주	1.8.	동강면 농민회 창립
영광	1.12.	묘량면 농민회 창립대회
장성	1.20.	삼계농민회 창립
광산	1.23.	광산농민회 창립
나주	1.28.	나주 왕곡면 농민회 창립
화순	2.9.	도암면 도암농민회 창립대회
고흥	2.10.	해창만 농민회 창립대회
나주	2.29.	반남면 농민회 창립
장성	3.2.	동화농민회 창립
나주	3.7.	세자농민회 창립
나주	3.8.	나주농민회 현판식
해남	3.13.	북일면선농회 창립
나주	5.2.	가야동농민회 창립
나주	5.10.	금천농민회 창립
광주	5.15.	전국농민협회 광주분회 창립
화순	5.23.	화순군 북면농민회 창립
곡성	7.17.	곡성농민회 창립
해남	8.1.	산이면농민회 창립
화순	8.10.	화순군농민회준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영광	8.11.	군남면농민회 창립
장성	8.13.	북일면농민단체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
영광	8.13.(23?)	염산면 농어민회 창립
해남	8.25.	현산면농민회 창립총회

해남	9.1.	화산면 삼호농어민회 창립
영암	9.3.	미암면농민회 창립총회 개최
영암	9.22.	시종면농민회 창립총회 개최
영암	11.17.	학산면농민회 창립
영암	11.18.	신북면농민회 창립
신안	11.28.	신안군농민회 창립
고흥	11.31.	고흥군 어농회 결성
해남	12.7.	계곡면 농민회 창립
화순	12.7.	화순군춘양농민회 창립 및 창립선언문 발행
영암	12.13.	도포면농민회 창립 및 전단 발행

1988년 들어서는 4월과 10월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자주적 농민조직들이 속속 결성되었다. 1987년보다 더 광범위하게 자주적 농민조직들이 결성되었다. 1987년에 많이 결성되었던 함평, 무안, 강진 지역에서는 잠시 주춤하였지만 해남, 나주, 영광, 영암, 화순 등 다른 지역에서 자주적 농민조직들이 속속 결성되었다.

1988년 전남지역 자주적 농민운동 조직의 발전을 보면, 나주지역은 1월중에 동강면 농민회, 왕곡면 농민회, 2월중에 반남면 농민회, 가농 다시면지역위원회, 3월중에 세지면 농민회, 5월중에 가야동 농민회, 금천면 농민회 등이 창립되었고, 해남지역은 3월중 북일면 선농회, 기농마산면 협의회, 8월중에 산이면 농민회 등이 창립되었고, 장성지역은 1월중 삼계면 농민회, 3월중에 동화면 농민회, 7월중 진원면 농민회 준비위원회 등이 창립되었고, 신안지역은 7월중 가농압해면지역위원회, 화순지역은 2월 중 도암면 농민회, 5월 중 북면 농민회, 8월 중 나산청농회 등이 창립되었고, 곡성지역은 5월중 가농입면 지역위원회, 7월중 곡성농민회, 8월 8일에 가농 곡성협의회 등이 창립되었고, 고흥지역은 2월중에 동강면 농민회, 해창만 농민회, 3월중에 가농 고흥협의회 등이 창립되었고, 구례지역은 2월중에 용방면 청년회가 창립되었고, 광산지역은 1월중에 광산농민회, 담양지역은 3월중에 예수교 장로회 선교농민회, 강진지역은 8월 1일 딸기생산자협회 등이 창립되었다.

군 단위 자생적 농민회 3개(광산, 곡성, 영암), 가농협의회 2개(고흥, 곡성), 선교농민회(담양), 딸기생산자협회(강진) 등 7개 군조직과 면단위 자생적 농민회 19개, 가농지역위원회 3개, 기농협의회 1개 등 23개 면조직으로 총 30개 군과 면 대중조직이 건설되었으며, 준비위원회 2개(화순군과 장성

진원면)를 합치면 32개 조직이 건설되었다.

이처럼 농민대중조직의 확산은 1987년부터 면농민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고, 1988년 상반기까지 면단위 농민조직이 총 54개 정도 되는데 그 중 23개 면조직이 1988년 상반기에 조직되었다. 그리고 1988년 상반기 당시 21개 군과 1개 구(광산구) 중 16개 군과 1개 구(나주, 담양, 장성, 승주, 구례, 곡성, 고흥, 영광,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진도, 영암, 광산구)에 농민운동조직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 중 1988년 상반기에 광산, 영암, 곡성 등 3개 군에 최초로 군 단위 농민회 조직이 설립되었고 가농지역협의회가 2개(곡성, 고흥) 조직되었으며, 군 단위 기독교 농민대중 사업을 수행하는 담양선교 농민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특히 강진에서 최초로 생산자조직으로서 ‘딸기생산자협회’를 조직하여 대중운동 발전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이러한 전남지역 대중조직 결성은 면단위 농민조직의 확대와 생산자 대중조직의 결성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1988년 하반기 전남지역 농민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은 대중노선에 입각한 대중투쟁의 광범위한 전개와 이의 대중조직역량으로의 수렴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중조직의 건설과정을 지역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광산구는 11월 이후 대중노선에 의거한 수세폐지투쟁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성과로 1989년 3월경에는 5개면 수대위가 면농민회로 발전해 갔다.

무안군에서는 기존의 무안군 기농과 무안군 가농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1군 1농민회를 지향하면서 11월 9일 ‘무안농민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창립 준비위’ 구성은 각 면대표자 2인씩이 모인 것으로서 명망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주집중제에 의거하여 자주적인 군 농민조직을 건설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

승주군에서는 11월부터 수세폐지투쟁을 준비하면서 모범적으로 활동하여 110여회에 달하는 마을교육과 98개 부락대책위를 결성하였고, 투쟁의 성과를 조직역량강화로 수렴하여 기존에 있던 낙안면, 별량면농민회를 재탄생시켰으며, 새로이 주암면, 쌍암면, 해룡면, 서면 등 면농민조직이 건설되었다.

여천군의 경우 농민운동조직이 없었던 곳인데 수세폐지투쟁 과정에서 3개면 수대위가 결성되었고 곧 이것이 면농민회로 발전하였다.

영광군은 군남면, 염산면, 영광읍, 백수읍, 불갑면, 군서면, 흥농면, 대마면, 낙월면 등 9개 읍면조직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상반기에 건설된 묘량면, 법성면을 포함하면 11개 읍, 면 전체에 면(읍)농민회가 건설되었다.

영암군은 9월에 미암면, 시종면, 11월에는 군서면, 서호면, 신북면, 학산면, 영암읍, 12월에는 도포면 등 하반기에만 8개의 읍, 면 농민회가 건설되었다.

완도군은 건설준비하여 해를 넘어서 1989년 1월 농어민회가 건설되었다.

신안에서는 신안군 농민회가 11월 28일 창립되었고, 10개 면농민 운동조직이 건설되었다.

화순에서는 12월 춘양면 농민회, 1월 이양면 농민회가 결성되었고, 함평에서는 나산면의 수대위가 1989년 3월에 면농민회로 발전하였다.

해남군에서도 8월 산이면, 현산면, 12월 계곡면 농민회가 결성되었다.

이외에도 수세폐지투쟁의 성과로서 면수대위가 급속도로 면농민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상반기에 16개 군 1개 구 농민운동조직과 54개면 농민회가 결성되었던 것에서 하반기에는 군농민운동조직이 21개 군과 1개구 중 여천, 완도를 제외한 19개 군과 1개 구에 건설되었으며 총 237개 면 가운데 100여개 면농민운동조직이 건설되어 있거나 준비중이었다.

이처럼 1988년 한 해 동안 면농민조직이 급속하게 생겨났다. 더욱이 무안, 장성 등을 비롯하여 자주적인 군농민운동 조직을 지향하는 군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89년 2월 1일에는 무안 현경면에서 고추생산비보장투쟁의 성과를 수렴, 독자적인 여성농민조직인 '현경면 여성농민회'가 건설되었다. 이와 같이 1987년 하반기 이후 1988년 하반기까지 농민운동의 대중조직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

1988년 상반기 전남지역 농민운동의 대중선전은 주로 군단위, 면단위 「농민신문」을 중심으로 수세, 의보, 토지투쟁 대책위원회의 「투쟁소식지」, 「홍보유인물」, 차량방송, 그리고 6-7월의 「농활신문」 등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나주지역은 나주농민회의 「나주농민의 소리」 2회, 수세거부대책위원회의 「수세거부소식」 8회, 수세거부 행동지침과 스티카(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 제작배포가 있었다. 나주 왕곡면 농민회는 「왕곡농민신문」 2회, 「농활신문」 2회 등을 발간하였다.

해남지역은 해남 YMCA 농어민회의 「농어민의 소리」 2회, 기농의 「해남 농어민 신문」 2회, '의보대책'이란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있었다. 그리고 수세대책위원회의 「수세거부소식」 2회, 농활신문인 「농촌활동」 2회 등이 발간되었다.

함평지역은 함평농민위원회의 「함평농민신문」 3회, 의보유인물 4회, 의보스티카 제작 배포 등이 있었고, 무안지역에서는 무안농민운동협의회 「무안농민신문」 2회, 선거무효화 투쟁위원회의 「투쟁속보」, 무안총선대책위원회의 「무안농민총선대책속보」, 민중의당 무안지구당의 「민중시대」 3회 등이 발간되었다.

구례농민회 준비위원회와 가농협의회 「우리구례」 1회, 담양농민회에서는 「대나무골의 함성」 3회, 승주농민회에서는 「승주농민의 소리」 1회, 가농 진도협의회에서는 「진도농민신문」 2회, 국민운동본부 신안지부 농어민위원회에서 「신안농어민의 소리」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장흥 수세거부대책위원회에서 「부당수세거부소식」 2회, 가농장흥협의회에서 「천관산의 메아리」 1회 등이 발간되었고, 강진에서는 「농활신문」 1회, 광산농민회에서는 「광산농민의 소리」, 화순에서는 도곡농민회에서 「도곡농민신문」 1회, 보성농민회와 전청련 보성·고흥위원회 공동으로 「보성·고흥의 소리」 1회, 영광에서는 묘량면 농민회에서 「묘량농민신문」 1회, 농활공동추진

위원회에서 「영광농민의 소리」 2회, 성대농활선전국(담양, 화순, 곡성)에서 「흙바람」 등이 발간되었다. 도단위 대중선전은 전남북수세폐지 대책위원회의 「수세폐지투쟁소식」 1회, 전남가농농어촌 조사위원회에서 「어민의 소리」 1회 등이 발간되었다.

즉 군단위 농민신문은 나주, 해남, 함평, 무안, 장흥, 담양, 진도, 광산, 승주, 신안(국본지부 농어민위원회), 보성(농민회와 전청련위원회 공동) 등 11개 군지역에서 발간되었고, 면단위 농민신문은 나주왕곡, 영광묘량, 화순도곡 등 3개 면지역에서 발간되었다. 수세대책위원회에서 발간된 「수세거부소식」은 나주, 해남, 장흥 등 3개 군지역과 전남북수세폐지대책위원회에서 발간되었다. 농활관계 대중선전은 나주,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등 6개 군지역과 성대농활선전국에서 담양, 화순, 곡성 등 3개 지역에 제작배포하였다. 어민관계 선전은 전남가농의 농어촌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하였다.

1988년 상반기에 나타난 농민신문의 부정기성, 선전작업의 단절성 등은 하반기 수세투쟁을 경과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극복되었다.

광주 천주교 농어촌조사위원회, 무안, 영암, 장성, 광산, 나주, 화순, 해남, 함평 등에서는 거의 정기적으로 농민신문이 배포되었으며 거의 전 지역에서 각 군 농민신문 내지는 농민운동단체를 소개하는 소식지 등이 배포되었다.

농민신문 이외에도 과제별 투쟁속보, 즉 토지, 수세, 고추 등 농산물제값받기 투쟁의 속보가 신속하게 배포되었으며, 다양한 전단, 소자보, 대자보, 프랑카드, 만장, 노래테이프, 스티커 등 다양한 선전매체가 거의 총 망라되어 대중의 의식화와 투쟁열기를 북돋우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것 이외에도 승주 「농민의 길」, 광산 「농민의 길」, 함평 나산면 「농민의 길」 등 대중교육용자료집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중선전매체의 제작이 과거 소수 활동가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던 것을 지양하고, 농민대중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다. 특히 영광군 군남면과 염산면에서 발행한 수세거부증은 그후 수많은 대중투쟁을 전개하는데서 그 유용성을 드러냈다. 한편 대중교육은 주로 수세폐지투쟁의 준비과정으로서 농민대중의 의식화와 대중조직화에 기여하였다. 수세폐지투쟁의 성패는 대중교육의 수행여부에 달려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세폐지투쟁의 과정에서 마을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수세교육 뿐만 아니라 농업, 농민문제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농업, 농민문제 본질교육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수세교육을 통해 조직화된 마을에 재차 농민문제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조직화된 마을의 농민대중의 의식을 한 단계 높여 대중조직역량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화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학교’가 개설되었으며, 광산의 경우 지역 안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무안 현경면에서는 1월 초 ‘농민학교’를 개설하여 농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도모해냈다. 기타 여러 지역에서도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면단위 수대위, 마을단위 수대위를 대중조직화로 수렴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활동가 내부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면서 전국단위, 도단위 활동가 교육,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자주적 농민조직들은 1987-1988년 시기에 기존의 다른 조직이 있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조직이 없던 지역에서도 결성되어 왔다. 그리고 1989년 들어서는 거의 모든 군에서 군농민회 결성을 향해 나가거나 군농민회를 결성하였다. 그런데 군 단위 농민회가 결성된다는 것은 면단위 농민회들이 먼저 여러 곳에서 결성된 위에서 가능했다.

물론 이미 농민운동의 통일에 대한 요구가 농민대중투쟁 과정에서 제기되어 왔고, 전남지역에서도 1988년부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전남농민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한 실천적 활동은 1988년 7월 28일 목포 가톨릭센터 간담회에서 ‘농민운동통일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작되었고, 이의 활동으로 1989년 2월 11일 ‘전남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가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준비위원회 발족 당시, 단일한 통일조직 결성의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존 운동권을 해체하고 군 단위 활동가와 농민대중에 의한 1군 1농민회 건설에 기초한 즉각 통일론을 주장하는 전국농민협회 측의 주장과, 농민운동의 현실적 역량과 수준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농민단체들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전국농민운동 통일을 위한 한시적인 과도 조직로서 전국농민운동연합을 결성하여 전국적 통일조직에 복무시킨 뒤 보다 궁극적인 완결구조를 건설해 내자는 가농, 기농, 각 군 단위 자생적 농민단체의 주장이 맞섰다. 농민협회가 농운련 결성에 불참하게 되어 전남농운련준비위는 일부를 제외한 연합형태가 되었다.

도 단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 실무구조가 5월에야 자리잡아 나갔다. 어쨌든 이후 투쟁은 전남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 이름 아래 진행되었다. 그리고 준비위 결성 이후 연합건설을 위한 1군 1농민회 조직화사업은 꾸준히 진척되어 군농민회의 양적팽창이 이루어졌다. 1989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1군 1조직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11개 군(무안, 장성, 광산, 담양, 영암, 승주, 진도, 완도, 신안, 고흥, 곡성), 1군 1조직화를 위한 준비지역이 7개 지역(강진, 함평, 영광, 나주, 화순, 보성, 장흥), 침체 내지는 군 단위 책임구조가 없는 지역이 3개 지역(구례, 해남, 여천), 지역분회 조직만 있는 지역이 경우로 광양과 지산이 있었다. 이를 다시 전농련의 가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농련 가입 17개 지역, 독자적 군농민회 3개지역(함평, 강진, 해남), 어민조직(완도), 군 농민회가 없는 지역(여천, 광양)으로 되어 있었다.

1989년 상반기 면조직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지역 전체 237개면 중 면농민회, 준비위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120여개 면에 이르고 있었다. 1989년을 거치면서 237개면 중 150여개의 면에 면농민회 조직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진도, 강진, 완도를 비롯하여 거의 전 지역에서 마을조직화를 병행하면서 면조직을 결성해 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농민조직들의 발전 위에서 1985년-1989년 동안 농민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대중투쟁이 활발해 지면서 농민조직들 간에 연대투쟁이 생겨났고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농민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농민운동을 시기별로 지역별로 다시 재조직해 보고자 한다.

(2) 시기별 농민운동의 양상

① 1985년 농민운동의 분출 - 소값피해보상운동 및 농축산물수입반대운동, 그리고 각종 요구투쟁들

1985년 농민운동의 주요 활동은 소값폭락에 따른 소값피해보상운동(소몰이 시위)을 중심으로 전개한 농축산물수입반대운동이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가농조직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소값피해보상운동은 농축산물수입반대운동을 활성화시켰고 농민들의 대중적 진출을 촉진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가농 전남연합회가 주도하여 7월 중순부터 가농의 현장조직들(지역협의회와 분회)을 통해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4만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전국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소몰이 시위’가 시작되었다.

가농 보성·고흥 협의회에서는 전국적 소몰이 시위가 시작되기 전인 4월 13일에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천주교회에서 협의회 창립식 및 농민문제상담소 개소식을 가지면서 농민문제 근본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외국 농축산물 수입중단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별교 두평분회를 중심으로 ‘맥주맥전량 수매요구 및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가두시위를 하였다.

농협이 맥주맥을 전량수매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제한수매를 하고 남은 물량은 보리수매로 대체하겠다고 하자⁹²⁾ 농민들은 추가수매를 요구하였다. 7월 20일 단협 조합장과 협의회 측이 면담을 가졌으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민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7월 22일 관련 농민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가농회원 5명과 일반농민 5명으로 이루어진 대책위를 구성하고 시위를 계획하였다. 7월 24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보성지역 가톨릭농민회 회원들과 맥주맥 재배농민 30여명은 프랭카드를 건 경운기 12대에 맥주보리를 싣고 별교읍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막아서고 농민측과 단협조합장 사이에 면담을 통해 조합장은 농민이 원하는 맥주맥 전량을 수매해주겠다고 하여 농민들은 해산하였다. 나중에 5,000여 가마의 추가 맥주맥 수매 물량이 할당되었다.

한편 7월 17일 함평협의회 마양분회에서는 농민회원이 소시장에서 소를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⁹³⁾ 이 광경을 지켜보던 농민들은 분개하여 이 사실을 당국에서 알아야 한다면서 경운기에 죽은 소를 싣고 군청으로 향했다. 함평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농민회 회원들과

92) 농민들은 맥주맥 한가마당 5,000여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93) 7월 17일 오전 11시 함평 우시장에서 가톨릭농민회 마양분회 회원인 김영천 씨가 2년이나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망치로 때려 눕혔다. 소를 6마리 키우고 있는 김영천 씨는 이날 우시장에 소를 2마리 몰고 나와 송아지는 19만5천 원에 팔고, 105만원 주고 사서 2년 10개월 키운 어미소는 45만원에 값이 매겨지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철물점에서 망치를 구해 소를 죽여 버렸다.

농민들 40여명은 이때부터 “소값 피해 보상하라!” “외국 농축산물 수입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저지 경찰들과 충돌하였다.

전남기농과 가농 무안협의회는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장터와 무안성당에서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와 소값 피해 보상 요구 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장터에서 소값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유인물(성명서·소사육농가 피해보상운동에 관하여)을 뿌린 후 무안성당에 집결한 100여명의 농민들은 소와 경운기, 트랙터를 앞세우고 가두 진출을 시도했으나 저지당했다. 가두진출이 불가능해진 농민들은 성당 안에서 외국농축산물 반대 및 소값 피해보상 요구 대회를 가진 후 성당 마당에서 외국소 화형식을 가졌다. 화형식 후 다시 가두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폭력을 휘둘러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농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자 군수와 시장은 부상자 치료와 연행자 석방, 경찰의 철수, 농민의사 반영 등을 약속하면서 시위 중단을 제안했다.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결연히 싸울 것을 다짐하는 결단 의식을 갖고 귀가했다.

8월 14일 가농 나주 양천리 분회에서는 소용자금을 소 4마리로 군청에 반납 후 20여명이 시위하였으며, 8월 19일 승주군 외서면 이장들도 소를 농협에 반납하며 항의하였다.

9월 들어서(9월 6일) 전남 기농은 해남읍 교회에서 ‘전남농민큰잔치’를 개최하였다. 500여명의 농민이 참여하여 ‘농민생존권 확보투쟁’을 결의하고 시위하였다. 강진에서도 (9월 9일) 강진 기농 소속 농민 30여명이 강진시장에서 ‘농민생존권보장, 소값피해보상’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강진농민 만만세」라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30분간 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가농 강진협의회는 11월 ‘바나나 수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강진지역 딸기재배농가 일동의 이름으로 바나나수입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가농, 1985)

이 외에도 벌교 두평분회와 나주 옥산분회는 마을진입로에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프랭카드 설치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농민회원들은 시장, 예비군교육장, 각종 행사에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가농 구례협의회는 구례읍 구례천주교회에서 ‘1985년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11월 24일)를 개최하여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가농 나주협의회도 12월 2일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상황을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개방농정 철폐, 소값피해보상, 쌀수매가조정 및 전량수매, 농민관계 조합장 직선제 등을 주장하였다.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학생들의 화답도 있었다. 12월 2일 전남대·전북대 학생 9명이 광주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축산물수입개방압력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85년 들어 가농과 기농이 연대하여 활동하고 또한 일반농민들이 함께 함으로써 농민운동은 더욱 확산될 기미를 보였다.

② 1986년 : 대중투쟁 조직의 결성

가. 농민투쟁과 대중선전활동

1986년 전남지역의 농민투쟁은 1월 22일 강진 쇄동물 투척 시위를 시발점으로 전개되었다. 오전 9시경 기농, 가농, 탐진농우회 등 소속 50여명의 강진농민들은 600여 경찰의 삼엄한 경계하에서 강진군 농협 개관식장에서 쇄동물을 넣은 계란을 민정당의원 김식(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 농협중앙회장 윤근환 등의 얼굴에 던지며 “소값피해보상,” “농가부채탕감,” “농협 민주화,” “외국농축산물수입중단” 등을 외치며 시위하였고, 민정당사, 관공서, 농협건물 등 30여 군데에 페인트로 벽서를 쓰고 전단 「10만 강진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였다.

전단을 통해 농민들은 “농민은 선진조국의 머슴이 아니다! 빚 때문에 못 살겠다. 농가부채 탕감하라! 강진 농조는 관선보 복구하고 수당수세 철회하라! 농협임시조치법을 즉각 철폐하라! 농민조합원 머슴삼는 호화판 농협 준공식 즉각 중지하라!” 등을 주장하며, 행동지침으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진지역의 모든 농민단체 및 군민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하며, 농민권익을 침해하는 어떤 세력일지라도 배격하며, 반농민적 내용으로 일관된 22일의 농협 강진군지부 개관식을 전체 강진농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농협개관식이 난장판이 되자 경찰은 시위주동으로 3단체의 김성진, 정종범, 김규식을 연행, 구속하였다.(4월 18일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

여기에 대응하여 강진농민들은 즉각 강진읍교회에서 농성에 돌입하여 가두방송을 통해 선전하고 농성장에서 ‘강진지역 현장문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쇄동물투척시위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담은 전단을 제작, 조직적으로 배포하면서 지역에 선전, 확산시켜 나갔다.

한편 같은 날(1월 22일) 무안, 나주, 영암 등지에 걸친 영산호 주변 간척지 경작 농민 700여명이 서울역 앞 광장에서 5년 예정의 제방공사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영농을 중단시킨 반농민적 관료행정에 맞서 “농민생존권 보장,” “영산호주변 간척지 영농중단 철회” 등을 외치며 현수막을 들고 전단을 뿌리며 시위를 감행하여 6명의 농민이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전남사회운동협의회는 1월 30일 성명서 「농민살길 가로막는 군사독재 물리치자!」를 통해 강진과 영산호 농민들의 시위를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압살하는 군사독재에 대한 농민들의 조직적 항거”로 규정하고 강진 및 영산호 주변지역 구속농민 9명의 즉각 석방, 농가부채탕감과 소값피해보상, 외국농축산물 수입중단, 농민악법철폐와 농민기본권보장 및 군사독재타도와 민주헌법쟁취를 주장하였다.

연초의 시위투쟁과 함께 3월에 이르기까지 전남지역 농민들은 강진, 해남, 함평, 무안 등 각 군 단위별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중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1986년 상반기 동안에 함평농우회소식지 [배우고 생각하고 협동합시다], [민주농민], 무안기농의 [전라도농민], 가농광주교구연합회의 [전남농민의 소리], 전사협 농민위원회의 [전남농민신문] 등 각종 선전매체가

제작 발행되어 지역농민대중에게 투쟁을 선전하고 투쟁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선전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나. 전남농민투위 결성

이러한 대중선전활동과 함께 3월 10일 함평농우회, 가농, 기농연합은 ‘전남지역 농민생존권확보 및 민주헌법쟁취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남지역 농민투쟁을 담당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민투위는 선언문을 통해 “농업, 농민의 파탄과 살해의 위협은 농축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과 민정당 군사독재정권으로 인한 것이며 농민투위는 농민의 기본권쟁취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농민서명운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면서 국민감정의 악화, 내외여론의 압력, 보수연합식의 개헌협상구상 등으로 인해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강경탄압이 누그러지자 범농민서명운동은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은 채 실천활동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으며, 농민투위는 대중전단 ‘저지하자! 미국농축산물수입! 타도하자! 미국예속정권!!’을 통해 “군사독재 미국예속정권을 타도하여 농민살길 쟁취하자!”고 주장하였다.

3월 이후 전남농민운동은 농민투위를 통해 광범위한 농민대중선전활동을 전개하면서 투쟁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3월 14일 장흥지법에서 쇄동물투척시위사건 공판 이후 200여명의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또한 농민투위는 4월 4일 제1차 실천대회를 쇄동물투척시위재판을 진행하는 장흥에서 열어 500여명의 농민들이 ‘군사독재 타도하고 농민생존권쟁취하자’는 현수막을 들고 장흥경찰서 앞까지 가두시위를 감행하였다.

다. 무안농민투쟁

본격적인 투쟁의 깃발은 무안에서 먼저 타올랐다.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전단, 성명서, 소식지 배포, 벽서 등의 다양한 선전활동을 계속해온 ‘무안농민투위’는 4월 19일 ‘수입개방저지 및 미국예속정권 타도를 위한 무안농민 실천대회’를 열었다. 100여명의 무안농민들은 오후 1시 30분 무안 버스정류장 앞에서 500여명의 정사복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저지하자! 미국농축산물수입, 타도하자! 미국예속정권!!”이란 구호제창과 함께 장시간 3회에 걸쳐 가두시위에 돌입하였다.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온 광주지역학생들이 버스의 검문검색을 통해 무차별 연행되는 와중에도 농민들은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시위투쟁을 하였으며, 당일 오후3시부터 무안읍제일교회, 제이교회, 무안읍성당에서 가두시내방송을 하며 4월 25일까지 7일간 농성에 돌입하였다.

무안농민투위는 투쟁선언문과 전단을 통해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권장수입마늘 생산비 쟁취, 농협부채 상환거부를 아울러 주장했다. 4월 29일 ‘우리 무안농민은 왜 싸웠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무안투쟁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지역농민대중에게 선전하였으며 전사협 농민위원회의 ‘전남농민신문’은 이를 도차원으로 농민대중에게 확산 선전하였다.

한편 무안군의 가농 망운분회는 끈질기게 민주농협 쟁취투쟁을 벌여왔다. 망운단위농협은 1985년 생산농민으로부터 마늘을 kg당 1,350원과 1,800원에 수매하여 상인에게 팔아 이익금 4,500만원을 조합장이 착복하고, 수입종자개량마늘을 농민들에게 현물로 교환해준다고 하고 상당량을 빼돌려 kg당 2,700원에 팔아먹었으며 비료출고료까지 떼어먹고 1억원 상당의 초호화판 농협을 지으려하는 등 반농민적 작태를 계속하였다. 이에 가농 망운분회는 4월 21일 ‘민주농협쟁취의 불길은 타오른다’는 제목의 전단을 통해 조합장퇴진, 임시조치법 철폐 및 조합장직선제 실시, 모든 농협업무의 공개, 착복해간 농민의 재산을 반환할 것 등을 주장하며 이를 부락 및 면단위에 널리 전전하였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100여명의 농민이 망운천주교회에서 망운농협부정의 폭로와 조합장 파면을 요구하는 방송을 계속하면서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가두시위를 시도하였다. 5월 1일에는 가농 망운분회가 주최한 ‘민주농협쟁취 및 마늘생산비보장, 농가부채탕감,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에 2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가두시위를 하였다.

7월 4일에는 무안 가농, 기농 회원 100여명이 무안천주교회에서 ‘마늘생산비 쟁취 및 살인농정철폐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경제기획원 장관 화형식을 하고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가두시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폭력으로 농민 다수가 부상하였다.

9월 1일에는 가농이 주도한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⁹⁴⁾에서, 무안농민 100여명이 무안성당 마당에서 마당굿, 미국기와 일본기 화형식을 하는 농민대회 후 네 차례의 가두시위를 하여 반 시간 가량 중앙로를 차단하였고 농성투쟁도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무안 가농 망운분회는 9월 12일에 농민방송국을 설치하여 정권시녀로 전락한 언론을 거부하고, 매주 1회 정규적인 농민방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11월 25일에는 무안군내 25개 지역에 ‘빛 때문에 못 살겠다. 정권 바뀌 탕감반자’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중선전(홍보)과 관련하여 무안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선전방법으로 페인트로 주장을 주요 건물의 벽이나 길가 농가의 담벼락에 쓰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라. 해남농민투쟁

현장단위 민주농협쟁취투쟁은 해남군 옥천면에서도 벌어졌다. 옥천농협이 건물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나락 1가마씩을 건어들이자, 해남기농 옥천협의회는 농협신축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5일 “농협신축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강제출자금 나락 1가마씩을 전액 반환하고 조합장은 농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물러날 것”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제작하여 각 농가에 배포하였다. 4월 23일 농민대표와 조합대표 간의 1차 협상에서 조합측은 강제출자 전액반환과 신축철회를 약속하였으며 4월 26일 2차 협상에서 신축철회를 재확인하고 강제출자금을 5월 10일까지 전액 반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회는 싸움의 경과와 주장을 담은 전단을 계속

94) 전국동시다발투쟁, 30여개 지역에서 연인원 총 3천여명 참가.(가농, 30년사, 415)

제작하여 선전하였다.

5월 9일 해남 YMCA에서 열린 제 10 지구당 개헌대회에서는 해남기농, YMCA 농어민회, 해남기독청년회 등 3단체가 “신민당은 정권야욕 버리고 농민문제 해결하라”, “미국농축산물수입 저지하고 미국예속정권 타도하자”는 현수막을 들고 전단을 뿌리며 군사독재와 타협을 꾀하려는 신민당(야당)에게 민중의 편에 서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9월 12일에는 황산면 인근 4개 부락이 간척사업으로 인한 김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다.

마. 함평농민투쟁

함평지역에서는 4월 함평농우회와 함평 기농이 ‘민주헌법쟁취하여 농민살길 농민이 찾자’는 성명을 발표하여 실천행동으로 개헌서명운동을 주장하였다.

한편 함평 가농은 5월 9일 ‘민주농정쟁취대회’를 열었으며 함평농우회, 함평 기농을 포함한 15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대회가 끝난 후 면사무소까지 현수막을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결의문을 통해 “소값피해보상 및 농가부채 탕감실현, 수입개방압력저지, 민주헌법쟁취, 민주농정쟁취, 모든 민중민주운동단체와 연대투쟁”을 다짐했다.

함평농우회와 함평 기농은 투쟁방향을 개헌서명에서 예속정권타도투쟁으로 선회하여 5월 17일 함평장날 가두시위를 벌였다. 오후 1시를 기해 전단 2,000장을 뿌리면서 60여명의 농민들은 ‘5.18 학살정권을 처단하자!’는 현수막을 들고 장터에서 함평사거리까지 가두시위를 하였다. 농민들은 전단을 통해 “군사독재 미국예속정권타도”, “농협부채상환거부, 마늘생산비 보장”, “영농자금신용대출을 천만원 이상으로 올릴 것”, “5.18 학살 원흉 처단” 등을 주장했다.

함평 가농은 9월 1일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전국동시다발투쟁)에 40여명이 참여하였다. 12월 5일 가농 전남연합회는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함평천주교회에서 열었으며, 300만 전남농민에게 드리는 글, 현 시국에 대한 전남농민의 주장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가농 함평협의회는 영산강농지개량조합 함평지소의 대동제 여수로 승상공사 비리 규탄 성명서를 냈다.

이처럼 1986년 전남농민운동은 연초부터 현장단위 투쟁과 다양한 대중선전물 제작 및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배포선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투쟁을 전담할 수 있는 책임적 투위 구조를 결성하여 미국예속정권 타도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농민투위는 각 군단위의 투쟁을 「전남농민신문」 등의 선전물을 통해 선전, 확산시켰으며, 망운, 옥천 등 현장단위 경제투쟁 또한 촉진하였다.

그리고 전국동시다발투쟁이란 형식이 새로이 나타났다. 9월 1일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가농 주도)와 12월 29일의 ‘농가부채상환 거부투쟁’이 그것이다. 9월 1일의 ‘미국농축

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에는 전남지역(가농 전남연합회)에서 700여명이 참가하였다.⁹⁵⁾ 무안, 함평, 나주, 모성, 강진, 구례, 그리고 광주 등 각 지역에서 40-200명이 동시에 실천대회를 하고 경찰과 대치하거나 가두행진을 벌이고 농성을 하였다.

‘농가부채상환 거부투쟁’은 전국적으로도 일찍이 전남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무안에서 11월 7일 ‘무안군 조합빛상환거부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전남농가부채조사단’의 활동이 있었다. 부채조사단은 지역 부채(농협, 축협, 수협 등)의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여론화를 도모하고 이를 ‘부채대책’ 선전지에 담아 폭로하였다. 또한 부채조사를 하면서 호별방문을 통해 선전선동과 장터 대중연설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수렴하여 11월 말 ‘농가부채해결 전국농민대책위원회’라는 투쟁전담조직을 결성하였다. 부채대책위는 “빛 때문에 못 살겠다! 정권 같아 빛 없애자! 농가부채 정부잘못 갚지 말자 조합빛”이라는 구호를 내건 부채투쟁활동 선동전단을 전국에 살포하면서 현장 단위의 투쟁도 독려하였다.

드디어 12월 29일 부대위 소속 농민 7명이 신민당(당시 야당) 중앙당사에 들어가 농림수산장관과 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가부채에 대한 긴급대책 실시를 목표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각 지역별로(충남, 충북, 경북, 전북) 대책위 결성과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전남에서도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70여명의 농민(주로 전남기농회원)들이 광주 YMCA 6층 소강당에서 농성투쟁을 하였다. “빛 때문에 못 살겠다! 정권 같아 빛 없애자! 농가부채 정부잘못 갚지 말자 조합빛”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옥외방송으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군사독재 타도와 관세연론을 비판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농가부채는 정부가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토론회 등을 하고 30일 오후 4시에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역별 주요 투쟁 외에도 1986년 하반기에 전남지역 농민운동의 상황을 보면, 7월 14일 가농 구례협의회에서는 회원 등 200여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 겸 농민생존권과 민주헌법쟁취 대회’를 산동면 소재지에서 개최하였다.

8월 29일에는 강진 농지개량조합 저수지 수몰농가의 피해보상투쟁이 있었다. 농지개량조합 앞에서 400여 마지기의 땅을 잃은 수몰농가 43농가가 “강진농조 물러나라. 집단이주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9월 1일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를 전국동시다발투쟁으로 전개하였을 때, 앞서 언급한 함평, 무안, 해남 이외에도 나주, 광산, 보성, 고흥, 강진, 구례, 광주에서 농민투쟁이 있었다.

보성지역에서는 별교성당에서 보성, 고흥 농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대회를 개최한 후 가두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 끝에 백종덕 연합회총무가 코뼈를 다지는 등 다수가

95) 무안 100명, 함평 50 · 경찰과 대치, 나주 200 · 경찰과 대치, 연행자석방 요구, 보성 60 · 별교성당에서 실천대회, 경찰과 싸움, 강진 100 · 강진읍 교회에서 난투극 전개, 일부 연행, 석방, 구례 150 · 구만리, 대산리, 산동 각 마을에서 실천대회 후, 읍으로 가두행진, 광주 40 · 시내 분회 중심으로 사무실에서 대회, 전단 5천매 살포.

부상을 입고 20여명이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강진지역에서는 군내 1백여 명의 농민들이 강진성당과 읍교회에서 대형 확성기를 설치하고 실천대회를 갖고 경찰과 난투극을 벌려 강영조, 위익환 회원 등 3명이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구례지역에서는 구만리, 대산리, 산동 등 군내 회원 3개 마을에서 실천대회를 가진 뒤 광의면 소재지로 집결한 150여명의 농민회원들이 경운기 10대와 오토바이를 앞세우고 가두 이동방송을 하며 읍으로 진출하여 기동대 3개 중대와 대치하였다. 이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최성호 연합회회장 등 5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밤 11시경 석방되었다. 각 마을에서부터 실시한 경운기 가두방송은 지역주민 선전효과를 높여주었고 지나가는 마을마다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광주지역에서는 시내 광주 분회를 중심으로 40여명의 회원들이 광주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단한 실천대회를 마친 뒤 어깨띠를 두르고 광주 시내 전역에서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전단 5천매를 뿌려 열렬한 시민호응을 얻었다.

조직활동을 보면, 자주적 농민대중조직으로서 전남 담양농민회가 9월 12일 결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해남 황산면 인근 4개 부락 어민들은 간척사업으로 인한 김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12월 28일에는 전남기농 농민활동가 대중집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약 6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대중토론을 통해 수렴시키면서 활동가의 정치의식과 운동감각을 높였다.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 다양한 홍보물들이 계속 이어졌다. 무안가농의 ‘무안농민의 소리’, 무안 기농의 ‘무안농민’, 담양농민회의 ‘대나무굴 함성’, 무안군 조합빛상환거부대책위원회의 ‘부채대책’ 등의 기관지가 발간 배포되었다. ‘부채대책’은 이 지역의 부채조사활동에 기초한 주체적인 문제제기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해남 YMCA 농어민회는 9월 5일 ‘농어민의 소리’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무안 가농 망운분회의 ‘농민방송국’ 설치(매주 1회)는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있어온 마을방송을 이용한 선전활동을 합법화시켰다. 또한 무안에서는 기존의 기농, 가농 조직이 선전활동에서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

③ 1987년 : 대중투쟁의 고양

1986년 하반기 ‘농가부채해결전국농민위원회’가 결성되어 전국단위 선전활동을 하고 신민당 중앙당사와 각 도단위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 이후, 1987년에 들어서는 선전과 활동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었다. 전남에서는 강진, 무안에서 농가부채공청회가 개최되었다.

4월 7일 강진에서 개최 예정이던 강진군농가부채공청회는 군수의 거부로 연기되었다. 이에 강진군농가부채문제공청회 추진위원회는 ‘전화로 군수의 공청회 참석을 촉구한다.’ ‘10만 강진군민이 공청회 추진위원이 되자’는 행동방안을 제시하였다. 5월 18일에는 ‘무안 민주화 및

농민생존권운동협의회’와 ‘가능 무안협의회’, 무안 기농이 ‘농가부채해결 및 마늘·양파 생산비 보장 무안군민 공청회’를 무안군청 새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5.18 광주추모제와 겹쳐서 연 공청회에는 150여명 참가하였다. 농민들은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농가부채 해결하는 민주정부 수립하자.” “정부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마늘, 양파를 수매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농가부채투쟁 이외에도 무안에서는 2월 3일 ‘고 박종철 열사 무안군 추모위원회’를 결성하여 2월 7일 무안 천주교회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 박종철 열사 추모제 및 고문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나주군 문평면 안곡리의 농민 20여 명은 3월 17일에 경기화확 비료에 의한 딸기피해⁹⁶⁾ 보상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농민들을 연행, 감금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장흥 회진면에서는 유령세금거부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10일 가능 장흥지역협의회는 ‘천관산의 메아리’ 2호를 발행하여 유령세금거부운동을 제기하였다. 3월 30일 회진면 주민들은 화진지서 신축부지대 호당 7천원을 납부거부하였다. ‘천관산의 메아리’ 호외를 발행하여 “회진지서 신축부지대의 강제징수를 철회하라,” “농협출자 이익배당금에서 강제징수해간 지서부지대를 즉각 반환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4월 10일에는 무안지역 운동체로서 ‘무안 민주화 및 농민생존권운동협의회’를 창립하였다. 해남에서는 4월 30일·5월 1일 사이에 해남군 기독교농민회가 ‘강제출자를 조건으로 한 상환’이란 유인물 2,200매를 배포하였다. 또한 해남군기독교농민회 어민분과는 북평면 이진 등 7개 마을, 북일면 7개 마을, 송지면 10개 마을에서 어민문제 홍보활동을 하였고 활동 중에 4명이 구류 처분을 당했다. 해남군기독교농민회 어민분과는 5-10만원에 이르는 강제출자금 강제반환, 편중대출 수협자금 회수하여 영세어민에게, 수협운영 민주화 및 수협임시법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구류농민 4명은 구류 중에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여 단식농성(5.1.-5.5. 5일간)을 하였다. 광주민중항쟁 추모운동도 이어져, 5월 18일 무안에서 ‘5.18 광주추모제와 농가부채 해결 및 마늘, 양파 생산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어서 6월항쟁이 터지면서 농민들도 시위에 참여하였다. 6월 10일에는 광주에서 100여명의 전남농민들이 조직동원되어 “폭력정권 몰아내어 농민세상 이룩하자!”는 프랑카드를 들고 가두시위에 참여했다. 6월 19일에는 광주 원각사 집회시 ‘전남농민들이 광주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고 시위투쟁에 참여했으며, 6월 26일에는 무안에서 100여명이 구시장터 입구에서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는 우리 손으로”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민주헌법 쟁취하여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받자!”는 구호를 외치며 대행진을 시작했다. 이어 터미널에서 대중집회를 갖고 목포로 재집결했다. 이날 무안에서 군경찰서 병력이 모두 도시로 동원되고 20여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96) 경기화확의 비료사용 후 1만8천여평에 1억 9천여만원의 딸기농사 피해 주장.

읍단위 시위에 완전 숙수무책이었다.

무안을 제외한 전남 농민들은 광주에 집결하여 '전남농민격문'을 배포하며 시위에 참가하고 대중집회에서 농민연설과 금남로의 가두시위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보성, 나주에서도 많은 농민들이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

6월 항쟁 이후 7월 8일에 '민주쟁취국민운동 전국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8월 19일 10개 농민단체 주체로 '헌법개정공청회'를 열었다. 11월 이후에는 각 도단위 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상반기의 동향에 이어 하반기에 농민투쟁이 격화되었다. 이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자.

가. 농민대중조직의 확대·강화

1987년 들어 진도, 영광 가톨릭농민회 군협의회와 나주 기독교농민회, 군농민회 등 기존 조직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순창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나주농민회 등 군단위 대중조직이 건설되었고, 무안군 망운면농민회, 강진군 신전면농민회, 해남군 송지면 농어민형제회, 화순군 도곡면농민회, 승주군 별양면농민회 등 면단위농민회가 활발히 건설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단일조직과 더불어 계층별, 요구별, 작목별 농민조직의 결성도 활발하였다. 무안군 몽탄면·해제면·현경면, 해남군 송지면 등지에서 결성된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가 수백 명의 지역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수세납부거부 및 농지개량조합 해체투쟁을 수행한 '수세거부대책위원회'는 각 마을단위, 면단위 조직이 결성되어 수세거부농민대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농민운동의 통일을 위한 노력도 단편적으로나마 여러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군단위에서는 무안에서 가농과 기농이 연대하여 '무안군농민운동협의회'를 조직운영하였고, 함평에서는 함평농우회와 함평기농의 통일조직으로 '함평군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농민운동의 조직을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교육이 필요하였다. 해남과 나주 등지의 수세거부 및 농지개량조합 해체투쟁에서 대중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활동가들이 각 지역을 분담하여 마을로 들어가 이장에게 수세문제로 마을사람들과 의논할 것이 있으니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방송을 하고, 마을주민들이 모이면 활동가가 수세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이 토의해서 마을단위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마을단위 대책위원장들이 모여 면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군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나갔다. 그리고 수세투쟁이 군단위 차원에서 대규모화된 이후에는 각 면단위로 3-4일간씩 수세싸움에 참여했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면농민회를 건설해 나갔다.

수세거부투쟁위원회,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 등 투위구조가 면, 군, 도단위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이고 다발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 부당수세거부투쟁은 면소재지나 군소재지 등 일반농민들의 참여가 쉬운 지역에서 끈질기게 전개되면서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였다. 농협민주화투쟁에서도

면단위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단위농협회의실, 농협앞마당 등 생활현장에서 투쟁이 전개되었다. 수세납부거부투쟁에서는 수세고지서를 모아 반납함으로써 실력행사를 통해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였다. 해남에서 시작된 수세납부거부 및 농지개량조합 해체투쟁이 성과를 거두자 곧 강진, 장성, 나주, 화순, 담양, 구례, 진도, 장흥, 영광, 보성, 순창 등지로 확산되었다.

농민들은 또한 민주헌법쟁취투쟁과 선거투쟁에도 참여하였다. 광주에서는 6월 10일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였고 6월 19일 원각사집회에서 ‘전남농민이 광주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6월 26일에는 장성, 담양, 강진, 해남 등지의 농민들이 광주로 집결, 시위를 벌였고, “동토의 남도에 휘몰아 쳐라, 민주의 황토바람이여”라는 ‘전남농민격문’을 뿌리면서 시위를 하고 광주공원 광장에서 대중연설과 토론을 시도하였다. 7월 8일 전국단위에서 가농, 기농, 가여농이 참여하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전국농민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장성, 완도에서 군지부가 결성되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12월 18-20일에 걸쳐 무안, 해남 등 전남 각지역에서 부정선거무효화 투쟁이 전개되었다.

나. 토지 투쟁

전남지역에는 간척지가 많이 건설되어 왔다. 간척사업자들의 토지착복이 발단이 되어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무안 창포간척지 무상양도 투쟁은 남화토건(사장, 최상옥) 측이 창포만 일대를 매립하면서 발생하였다. 원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 서호, 사마, 청천, 무안을 평옹리, 현경면 양학, 동산리, 망운면 목동, 피서리 등 해안지선 농민들은 1963년에 농지를 분배해 주겠다고 사업자(김안중)의 약속을 믿고 창포만을 매립했다. 매립허가가 김안중에게서 남화토건 사장으로 넘어가 1983년 3월 9일 그의 소유로 되었다. 매립당시 피해주민들에게 전액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매립에 들어가 남화토건에서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완공된 이후 남화토건은 모든 땅을 독식하여 대규모 목장을 경영하였으며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인근 주민들에게 50%의 소작료로 농사짓게 하였다.

이에 10월 10일 무안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대 주민들이 ‘창포간척지 양도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창포간척지 양도추진을 위해 적극 투쟁에 돌입하였으며, 11월 19일 ‘창포간척지 양도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재벌지주(남화토건)와 이를 비호하는 민정당 정권과의 투쟁을 적극 전개하면서 창포간척지 양도투쟁과 군부독재퇴진투쟁을 병행하였다.

또 다른 토지투쟁으로 무안 영산호 영농개척단의 토지획득투쟁은 반농민적 간척사업에 대한 투쟁이었다. 영산강 간척사업소측은 세계은행차관을 빌려다가 영산강을 막아 간척지를 개답하여 간척지 240만평의 전천후농지를 농민에게 분양하겠다고 한 뒤 5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쳐 놓았으나 분양을 미루면서 공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나왔다. 이에 몽탄면 농민 50여명은 4월 15일

‘뫼탄새마을영농개척단’을 결성하여⁹⁷⁾ 수차례의 협상과 군수실 농성 등 지속적인 투쟁과 협상을 시도하고, 이와 병행하여 경작 가능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놓고 있는 갈산지구 간척지 등에서 경작을 시도하면서 경작투쟁을 벌였다. 특히 ‘영산호의 합성’이라는 자체 신문을 발간하여(4월 30일) 싸움의 정당성을 선전, 홍보하면서 영암, 나주 등 인근 관련지역 주민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투쟁을 계속하였다. 농민들은 ‘토지는 농민에게’, ‘간척지 개답하여 재벌에게 주지 말고 농민에게 불하하라’, ‘갈산지구간척지에서 농사짓게 하라’, ‘면사무소, 농촌지도소, 농협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지원하라’, ‘영산강 사업소는 농민 편에서 일하라’ 라고 주장하였다. 농민들은 10월 중순에는 당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유채와 보리 파종을 실시하는 등 경작투쟁을 벌였다.

다. 수입개방저지투쟁

1987년에는 수입에 반대하는 낙농·육우농가들의 투쟁이 있었다. 7월 22일 무안군 낙우회 회원들이 ‘낙농인 권익보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무안군 낙농인 권익보호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소값 피해보상 받고 생산우유 전량 판매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원유수입 및 원유생산 조절안’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7월 25일에는 무안군 낙농인 권익보호 대책 위원회 이름으로 ‘무안군 낙농인 권익실천투쟁 경과보고’를 발행하였다. 8월 6일에는 영광 영광읍에서 영광 낙농가 및 농민 100여명이 우유유통제 철폐시위를 벌였으며, 나주시·군 우유 생산조절안 저지 대책위원회는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아십니까?’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식료품재벌의 횡포와 수입을 막으려는 운동(수입저지투쟁)도 있었다. 대표적인 식료품재벌인 해태는 전남 나주지역에 육가공 공장을 세우고 자체 양돈장을 마련하여 부족한 물량은 인근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매입, 가공하여 전량 수출기로 하였다. 그러나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육가공공장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체 양돈장에서 생산한 돼지를 출하하여 영세 양돈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더욱이 덴마크산 수입 돼지고기 통조림의 본격 시판에 나섰다. 이에 나주지역 양돈농민들은 해태가 돼지사육을 중단하거나 약속한대로 육가공공장을 설립, 농가생산돼지를 수매토록 요구하고, 해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과 기타 실력행사도 가리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전국양돈협회에서도 해태에 ‘대농민약속이행 청구서’를 전달하면서 약속 이행과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철폐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민을 기만한 해태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현수막과 포스터 50만부 이상을 제작하고 농민들의 집단시위에 대한 책임은 해태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97) 영농개척단은 놓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에 땅이 적은 농민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형성된 협동생산을 위한 농민조직으로 4월 20일부터 영농착수를 결의하였다.

10월 15일 해태는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전국양돈협회에 공식 통보했으나 나주지역의 대규모 양돈장의 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 10월 19일부터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터미널, 역, 식육점, 단체 등 각 지역에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농산물 생산비 보장투쟁

－ 쌀 생산비 보장투쟁

민주헌법쟁취운동본부 전남농민위원회(가농, 기농, 가여농, 전농 참여)는, 그간의 민주헌법쟁취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개정 헌법에는 농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임시조치법에 묶여 25년 이상 독재 권력과 재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관제농협을 농민이 되찾고 농민의 생명줄인 쌀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 1단계 ‘조합장직선제 및 쌀 한가마니 십만원 쟁취 투쟁기간’을 선포하고, 전라남도 각 지역에서 실천투쟁과 50만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전남농민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전남 각 지역에서 쌀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벽서활동과 함께 9월 21일 나주·광산 농민대회, 9월 22일 장흥 농민대회, 9월 말 부안 각 면단위 농민대회, 해남 면단위 농민대회 등 농민대회가 지역별로 개최되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 마늘·양파 생산비 쟁취투쟁

생산비 보장 투쟁은 다양한 작물들로 확산되어 왔다. 특히 상품작물들에 대한 유통농지세 부과로 농지세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5월 9일 ‘농가부채해결 및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 무안군민 공청회’ 안내전단이 「무안농민신문 회호」로 5,000여부 배포되었다. 5월 17일 밤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하라”고 각 마을마다 골목마다 대대적인 벽서작업이 실시된 후, 5월 18일 ‘5.18추모제 및 농가부채해결 및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 무안군민 공청회’가 무안가농, 무안기농 공동주최로 무안군청 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5.18 광주추모제와 함께 치러진 공청회에는 150여명이 참가하여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농가부채 해결하는 민주정부 수립하자,” “정부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마늘·양파를 수매하라.”고 요구하였다.

6월 8일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김운오(28)씨가 마늘, 양파 값 폭락에 비판하여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이를 기화로 무안농민들은 6월 20일 ‘무안농민신문’ 제3호, 마늘·양파 특집호를 통하여 마늘·양파의 생산비 내력을 정확히 산출하여 일정액 이상으로 정부의 전량 수매를 촉구하였다. 동시에 무안군 현경, 망운, 운남, 해제면 마늘·양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명작업도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6월 22일 해제면 단협에서 농민들이 마늘에 불을 지르고 마늘·양파값

폭락에 항의하는 등의 경과를 걸치면서 6월 31일 ‘7월 4일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대회’ 안내전단을 ‘무안농민신문 호외’로 5,000여부 발행 배포하였다.

7월 4일, 현경면 농민들이 마늘과 양파를 가득 실은 경운기 9대와 트랙터 2대를 끌고 무안-현경간 도로를 돌파하고 최루탄 세례 속에서도 4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정문 앞 광주-목포간 도로 위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다시 가두행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열은 1,000여명으로 늘어났고 민정당연락소 사무실 등에 양파와 마늘을 던져 유리창을 박살낸 후 광주-목포간 도로 위에 경운기에 싣고 온 마늘과 양파를 쏟아붓고 불질러 버렸다.

다시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최루탄에 농민다수가 부상을 당하고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서장을 응징하고 최루탄박스를 탈취하면서 경찰들을 물리치고 군청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후 7월 18일 현경면, 7월 20일 해제면, 7월 21일 일로면, 7월 26일 망운면 등 각 면단위에서 ‘7.4 무안투쟁 보고대회 및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면단위 투쟁과정에서는 농성과 조합사무실점거 및 전두환 사진을 불태우며 전두환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생산비 보장투쟁과 이한열 추모대회를 병행하였다.

7월 11일 함평에서도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대회’가 개최되었다. 함평-영광간 국도변에서 6대의 경운기를 앞세우고 출발한 농민시위는 3km 이상을 행진하다 덤프트럭을 동원해 길을 막고 있던 500여 경찰과 함평읍 입구에서 대치하였는데, 경찰이 최루탄을 퍼붓고 군화발로 짓이겨대 7명의 농민에게 중상을 입혔다. 농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읍내로 몰려와 ‘마늘·양파 생산비 보장하라,’ ‘폭력경찰 응징,’ ‘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며 3일간 농성시위를 계속하다 7월 14일 정오경 요구사항을 모두 달성하고 농성을 해산하였다.

마. 농협민주화투쟁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전남농민위원회’는 9월 15일 ‘조합장 직선제 및 쌀 한 가마 10만원 쟁취를 위한 1단계 투쟁기간’을 선포하고 전남농민 5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무안농민들은 몽탄면(9월 19일, 150명), 망운면(9월 21일, 100명), 해제면(9월 21일, 500명) 등 각 면별로 대중집회를 통해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농협민주화와 쌀값 1가마당 10만원 쟁취를 주장하였다.

9월 21일 나주·광산지역 농민들 200여명이 ‘농협민주화쟁취 및 농가부채탕감 농민대회’를 개최했으며, 해남에서도 9월 22일 100여명이 모여 송지면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농협개혁에 나섰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담양군 창평면 농민 12명이 창평면 축협을 점거하고 부채탕감 및 반농민적 축협 및 농협에 대한 규탄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보성에서는 9월 30일 ‘민주농협쟁취 및 수세거부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농민들은 농협민주화를 부채문제나 수세문제와 함께 제기해 나갔다.

바. 수세거부 및 농지개량조합해체투쟁

수세거부투쟁은 몇 년 전 구례에서 현물납부 투쟁이 있었고 산발적으로 있어왔으나, 1987년 하반기에는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수세거부투쟁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위원회의 하반기 투쟁과제로 설정되었고,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수세활동가 모임에서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0월 26일 ‘전남수세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군단위 수세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수세거부, 고지서반납 등 효과적인 투쟁방법을 통하여 투쟁하였다. 이어서 11월 26일 해남 수세거부결의대회(3,000여명), 12월 26일 나주수세거부실천대회(1만여 명)에 이르는 농민대중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표-4〉 1987년 전남지역 수세거부투쟁 일지

강진	6월	군동면,도암면,칠량면,강진읍에서 ‘수세대책위원회’ 결성
	9.24	‘군동면 삼신지구 수세문제 농민대회’ 개최
	11.29	‘화산지구 수세거부대책 준비위’ 결성
	11.29	‘옥천지구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4	‘군동면 삼신지구 수세대회’ 를 개최, 삼신 사거리에서 모리민 200여명 참가
	12.9	‘강진군 수세거부 1차대회’ 개최, 강진읍 버스정류장 앞 시장통 입구에서 여성농민들이 경찰 저지선 통과
	12.24	‘강진군 수세거부 2차대회’ 개최, 모리민 1200~1500여 명 참가, 농개조 앞에서 시위
고흥	9.30	‘고흥민주농협쟁취 및 수세거부 농민대회’ 개최
곡성	12.29	‘수세거부 및 농조해체 결의대회’ 개최, 옥과면 우시장 앞에서 모리민 300~400명 참가
나주	11.11	‘금천, 봉황지역 수세거부모임’
	11.17	‘봉황면,금천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1.21	‘부당수세거부 및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나주농민결의대회’
	12.11	‘다시면, 왕곡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12	‘금천면 수세거부 대책위’ 결성
	12.12	나주군, ‘반남면, 공산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26	‘금천면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26	‘노안면, 세지면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29	‘수세거부 나주농민 실천대회’ 개최, 천주교성당에서 1만여 명 참가
담양	11.18	‘용면 수세 교육’ , 남문교회에서 60여명 참석
	11.25	‘담양읍 수세교육’ , 남문교회에서 60여 명 참석 마을별 ‘수세거부 대책위’ 구성

보성	9.30	‘민주농협쟁취 및 수세거부 농민대회’ 개최, 예당면 양송이공장 앞에서 농성 및 가두시위, 경찰 폭력으로 30명 부상
장성군	8.30	장성 기능 ‘수세공청회’ 남면 백운교회에서 150여명 참석
	9.6	‘장성 ‘부당수세거부 1차 농민대회’ 개최
	9.12 ~ 12.12	장성 기능, 공정선거감시운동과 농조해체 활동 각 면별로 전개. 남면(9.12), 삼서면(11.16), 장성읍(11.17), 북하면(12.5),삼계면(12.6), 황룡면(12.4), 북이면(12.5), 장성읍 2차(12.10), 동화면(12.11), 진원면(12.12), 지역마다 100~200명의 농민이 참여하는 교육 실시
	11.12	‘남면수세거부대책위’ 결성, 농민 200여 명 참가
	11.15	‘농민추수감사제 및 농조해체결의대회’ 남면 백운교회에서 농민 700여명 참가
	11.16	‘삼서면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4	‘황룡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12	‘동화면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18	‘부정선거조작 폭로 및 장성군민 농조해체결의대회’ 장성 공용터미널 앞에서 2500여명 참가
	12.20 (24?)	제 2차 ‘부정선거조작 폭로 및 장성군민 농조해체결의대회’ 황룡장터에서 1000여명 참가, 8월 이후 남면, 삼서면, 동화면에서 수거한 수세고지서 1700여매 소각
해남	11.11	‘해남군 부당수세거부대책위’ 구성
	11.20	‘옥천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1.21	‘화원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1.22	‘송지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수세거부 결의대회’ 개최
	11.23	‘북일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1.24	‘마산면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1.26	‘해남군 수세거부대책위원회’ 주최 ‘농개조 해체 및 수세거부 몽리민 대회’ 해남 YMCA 앞에서 농민 3000여명 참가
	11.28	‘문내면 상덕포지구 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4	‘삼산면수세거부대책위’ 결성
	12.7	‘문내면 수세거부 결의대회’
	12.8	‘현산면수세거부 결의대회’
	12.26	‘해남군수세거부대책위원회’ 주최 ‘해남군 수세거부대회’ 해남 YMCA 앞에서 1500여 명 참가
화순	12.30	‘도곡면 부당수세거부 결의대회’ 도곡교회에서 몽리민 300여명 참가

－ 해남수세투쟁

해남의 수세투쟁은 9월 20일 「해남 농어민의 소리」 특집호에서 ‘도대체 농지개량조합은 무엇하는 곳인가’, 10월 20일 「농어민의 소리」 특집 2호에서 ‘농조는 어떻게 운영되고 얼마나 많은 수세를 내는가’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1월 7일 송지면 수세거부대책위원회가 각 부락대표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되어 마을별로 수세전단을 배포하고, 벽보, 스티커를 붙이며,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마을단위에서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여기에 모인 농민들과 수세와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토의를 하면서 마을단위 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각 면단위 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11월 11일 해남군내 각 부락 모리민 대표 150여명이 모여 ‘해남부당수세거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그리고 각 면단위에서의 추진위원회 1명씩으로 구성되었다. 11월 19일 「수세거부소식」 제1호를 발간하면서 ‘해남부당수세거부추진회’에서 집중적인 선전 작업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부당수세를 낼 수 없다’는 스티커를 작성, 배포하고 11월 26일 부당수세거부 결의대회 전단과 가두방송을 실시하였다.

이어 11월 20일 옥천면, 21일 화원면, 23일 북일면, 24일 마산면, 28일 문내 상덕지구, 12월 4일 삼산면에서 각각 수세거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1월 22일에는 송지면 수세거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전활동을 통해 11월 26일 해남읍에서 3,000여명의 모리민이 모인 가운데 부당수세거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수세거부 타령을 개사하여 함께 부르면서 경과보고, 사례발표, 결의문 채택 순으로 대회를 진행한 뒤 풍물패를 앞세우고 해남농조까지 항의행진을 하였다. 이어 12월 2일부터 고지서수거운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월 6일부터 해남군내 전모리민을 대상으로 ‘부당수세거부 및 농지개량조합 해체를 주장하는 해남 모리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동시에 수세납부고지서 반납운동을 전개하였다.

12월 7일 문내면, 8일 현산면에서 수세거부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12월 26일 해남군 수세거부대책위원회는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당수세거부 실천대회’를 개최하면서 1987년 조합비 고지서 4,272매를 모리민에게서 수집하여 농지개량조합에 반납하였다. 그러나 이후 인수증까지 쓰면서 접수했던 수세고지서를 농조에서 다시 모리민에게 배포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반납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수세고지서를 다시 수집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 나주수세투쟁

나주에서는 11월 11일 금천, 봉황지역에서 수세거부모임을 실시하고 11월 17일 100여명의 농민이 모여 봉황면 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11월 18일에는 나주수세거부대책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11월 21일 약 100여명의 농민들이 부당수세거부 및 부정선거감시를 위한 나주농민결의대회를 갖고 수세거부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부당수세에 대한 대중선전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고, 농민회조직도 결성되어 갔다. 11월 20일 나주농민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11월 29일 세지면농민회, 12월 4일 나주농민회, 12월 10일 다시면농민회가 결성되었다.

농민회결성과 아울러 수세거부대책위는 더욱 확산되었다. 12월 10일에는 80명의 농민이 금천면 수세거부대책위를 결성했으며, 11일에는 다시면, 왕곡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2월 12일에 반남면, 공산면에 ‘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드디어 12월 12일 금천, 봉황, 왕곡, 다시, 반남, 공산, 동강, 세지, 남평, 나주시 등 수세거부대책위원회들이 참가한 가운데 ‘나주수세거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만 2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반수에 가까운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2월 29일 ‘나주 부당수세거부 및 농조해체 결의대회’에서 12개 지역 면대책위와 각 마을대책위를 통해서 수거된 수세납부고지서 12,073매를 농지개량조합에 반납하고, 10,026명이 서명한 수세폐지, 농조해체를 내용으로 한 서명용지를 수세대책위에 전달하였다. ‘부당수세 폐지, 농조해체,’ ‘수리청 신설, 적립금 농민 반환’을 주장하며 시위에 들어간 농민들의 엄청난 열기에 농조는 수세독촉을 하지 못하였다. 대회 후 농민들을 농조까지 행진하여 고지서를 반납하고 조합장으로부터 이후부터는 절대 강제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군청으로 행진하여 해산했다.

－ 장성수세투쟁

장성에서는 8월부터 면단위 수세교육을 통해 부당수세거부운동을 확산하여 8월 30일에 장성기독교농민회 주체로 남면 백운교회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세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농개조 장성지소 재무·총무계장을 참석하도록 하고 농민들은 공청회 석상에서 ‘수세거부 및 농지개량조합해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몽리민의 서명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여 장성군 각 마을마다 서명운동과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 위에서 9월 6일 ‘부당수세거부 1차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장성 기농은 공정선거감시운동과 농조해체활동을 각 면별로 전개하였다. 9월 12일에서 12월 12일까지 세 달 동안 남면(9.12), 삼서면(11.16), 장성읍(11.17), 북하면(12.5), 삼계면(12.6), 황룡면(12.4), 북이면(12.5), 장성읍 2차(12.10) 동화면(12.11), 진원면(12.12) 등 지역마다 100~200명의 농민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지역에 대책위가 결성되어 갔다.

11월 12일에는 농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면수세거부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11월 16일에는 ‘삼서면수세거부대책위,’ 12월 4일에는 ‘황룡면 수세거부대책위,’ 12월 12일에는 ‘동화면수세거부대책위’가 연이어 결성되었다.

또한 농조해체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1월 15일에는 남면 백운교회에서 농민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민추수감사제 및 농조해체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선거이후 12월

18일에는 장성 공용터미널 앞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정선거조작 폭로 및 장성군민 농조해체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24일에는 황룡장터에서 1000여명 참가한 가운데 제2차 ‘부정선거조작 폭로 및 장성군민 농조해체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8월 이후 계속된 수세투쟁 결과 장성에서는 1,700매의 수세고지서를 불사르고 전체 농민민의 40%가 완전거부를 결의했다.

－ 강진수세투쟁

강진에서는 6월에 일찍 군동면, 도암면, 칠량면, 강진읍에서 ‘수세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9월 24일 약 200여명의 농민이 모여 ‘군동면 삼신지구 수세문제 농민대회’를 치르고, 강남·삼신지구 수세대책위를 결성하고 마을별로 남녀 1명씩 대책위원을 뽑고 고지서를 일괄 거두고 조직적으로 수세를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후 선전활동을 계속하면서 11월 29일 화산지구와 옥천지구 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12월 들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12월 4일 삼신사거리에서 군동면, 삼신면 부당수세거부 대책위원회 주최로 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하여 ‘강남·삼신 지구 농민 부당수세거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조까지 플래카드와 풍물을 앞세우고 시위행진을 하였다. 농민들은 조합장에게 조합탈퇴를 선언하고 수세고지서를 집단반납한 후 수세수납활동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후 각 면단위 대책위원회를 확대 조직한 후, 12월 9일에는 약 1,000여명의 농민이 모여 ‘강진군수세거부 1차대회’ (‘강진부당수세거부 및 농조해체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이후 강진읍 버스정류장 앞 시장통 입구에서는 여성농민들이 경찰저지선을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어 12월 24일에는 1,200~1,500여명의 농민들이 ‘강진군 수세거부 제2차 대회’를 개최하고 농지개량조합 앞에서 시위투쟁을 벌였다. 투쟁은 해를 넘겨 1987년 1월 19일 ‘농조해체강진군민대회’로 발전하였다.

－ 기타지역 수세거부투쟁

그 외에도 수세납부거부 및 농지개량조합 해체를 위한 투쟁이 전남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화순에서는 12월 30일 도곡면농민회 주최로 ‘부당수세거부결의대회’가 3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농민들은 수세고지서 230매를 화순농개조에 반납했다.

장흥에서는 1988년 1월 2일 뒤늦게 수세거부활동을 시작하였고, 1월 15일 ‘수세거부농민대회’가 열렸다.

곡성에서도 12월 29일 옥과면 우시장에서 300~400여명의 농민들이 수세에 대한 강연을 듣고 수세거부 및 농조해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담양에서는 11월 18일 남문교회에서 용면 농민을 대상으로 수세교육을 실시했으며 60여명이

참석하였다. 11월 25일에는 담양읍 수세교육 및 간담회를 남문교회에서 가졌고 60여명의 농민이 참여하였다. 여기서 마을별로 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계속 수세거부를 선전하고 12월 27일 각 면단위 수세거부대책위원 모임을 열고 활동의 어려움을 토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보성도 9월 30일 민주농협쟁취 및 수세거부농민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고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예당면 양송이공장 앞에서 농성 및 가두시위를 하였고 경찰의 폭력으로 3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수세 거부투쟁 및 농지개량조합 해체투쟁은 농민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우선 투쟁 준비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농민들의 구체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일반농민들과 과감히 접촉함으로써 일반농민들을 광범위하게 투쟁에 끌어 들였다는 점과 투쟁의 중심을 일반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단위 수세대책위원회에 두고, 이 마을단위 수세대책위를 중심으로 면단위, 군단위 대책위원회를 상향식으로 결성하면서 일반대중주체의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중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투쟁방법에서도 요구 청원 차원이 아니라 '수세거부'라는 농민요구를 관철하는 실행행사로 나갔던 점, 그리고 차량을 동원한 가두방송, 마을방송 등 대중의 정서에 맞는 매체를 사용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투쟁, 선전, 교육의 과정이 사후교육을 통하여 농민주체조직의 건설과 확대로 나갔던 점은 대중투쟁과 대중조직 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⁹⁸⁾

사. 기타 투쟁

3월의 장흥지역 유령세금거부운동, 나주 문평면 안곡리의 화학비료 사용 피해 보상요구 등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피해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7월 3일 나주에서는 스톱프(농약) 피해농가 대책위원회가 '대한 농약사의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월 14일에는 가음방조제 무상등기를 주장해 왔던 영광군 염산면 농민 500여 명이 염산장에서 농민 한풀이 한마당을 가졌다.

고흥에서는 염수피해보상운동이 있었다. 7월 20일 고흥 두포면 해창만 간척지 염수 피해농민 40여 명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군청에서 농성을 하였다. 이어 7월 23일에도 해창만 간척지 경작농민 50여 명이 고흥군청에 찾아가 바닷물에 침수된 논 90ha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7월 30일에는 피해농민 100여명이 고흥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가톨릭 농민회 나주·광산협의회는 7월 23일 '나주·광산 농민 여러분 병막걸리를 통막걸리로 시정하고 피해 보상을 받으시다'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며 병막걸리 시정운동을 하였다.

98) 농어촌사회연구소, 『87 하반기 농촌동향분석』(서울, 1988), 41-67쪽.

8월 4일에는 보성군 수경재배 농민들이 보성 단협에서 수경재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화순에서는 동복수원지 확장공사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가 8월 28일에 '호소문'을 발행하였고, 9월 4일에 제2차 '호소문'을 발행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9월 13일에는 해남군 농약 공동방제 부정사건 대책위원회가 '전시행정의 꼭두각시 무능한 해남군수 유민봉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부정사건을 폭로하였다. 9월 26일에는 담양·창평면 농민들이 축협을 점거농성 하기도 하였다(29일까지). 이처럼 각종 피해보상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7월 들어 대학생들의 농촌활동 지원투쟁도 진행되었다. 해남에서는 7월 11일 해남읍에서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 및 해남지역농촌활동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해남군 농촌활동 공동위원회에서 「해남 농촌활동」 제1호를 발행하였다. 강진에서도 강진군 농촌활동 공동위원회에서 「농촌활동」 제1호(7.14.)와 제2호(7.19.)를 발행하였다. 7월 20일 구례에서는 가톨릭농민회 구례군협의회 주최로 '경희대 농활대 해산식 및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농민들은 1987년 들어 대학생농촌활동을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다.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함평(12.9.), 장흥(12.10.), 화순(12.12.)에서 군단위 공정선거감시단 발대식을 하였고, 12월 12일 함평군 농민위원회는 '전두환 노태우 퇴진 및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4일 해남에서는 해남·해남군 '부정선거 봉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공정선거에 대한 감시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선거에서 여당후보의 승리 이후 부정선거 규탄과 선거무효화 투쟁으로 넘어갔다. 17일부터 20일까지 강진, 무안, 보성, 장흥, 해남, 장성, 함평(학교) 등에서 '부정선거규탄 및 선거무효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규탄대회나 결의대회, 투위구성 등을 하고 시위를 하는 방식이었다.

④ 1988년: 농민운동이 꽃피다.

1988년 상반기 전남 지역의 농민투쟁은 나주·해남을 중심으로 한 “부당수세거부 및 농조해체투쟁”과 함평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료거부 및 의료보험조합 개혁투쟁”, 그리고 영암, 무안, 신안, 영광 등지에서 소작농민 중심의 소작지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토지투쟁”, 각 지역의 일상적인 “피해보상요구 투쟁” 등으로 전개되었다.

하반기 투쟁은 주로 “수세폐지투쟁”에 집중되었고, 무안, 해남, 진도 등의 “농산물제값받기투쟁”, 그리고 영암, 영광, 무안, 신안 등지의 토지투쟁 및 각 지역의 일상적인 “피해보상요구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전국이 고추값과 수세문제로 들쭉날쭉하였고 11월 17일 여의도에 2만 5천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하여 농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가. 부당수세거부(폐지) 및 농조해체 투쟁

1987년 11월과 12월의 해남 수세투쟁과 나주 수세투쟁, 그리고 강진과 장성의 수세투쟁에서

보여준 광범위한 농민대중들의 진출은 대중투쟁의 전형을 창출하였다는 의미에서 농민운동의 대중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1988년에 들어와서도 수세거부(폐지)투쟁은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88년 1월 10일 함평수세거부대회(100여명 참가), 1월 18일 부당수세거부 장흥농민실천대회(300여명 참가), 1월 19일 농조해체 강진군민대회(100여명 참가), 2월 6일 부당수세거부 해남몽리민 단합대회(2,000여명 참가), 4월 14일 수세폐지를 위한 전남북농민대회(5,000여명 참가) 등 경찰의 원천봉쇄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의 농민이 수세싸움에 참여하였다.

수세거부투쟁에서 특히 나주, 해남, 강진, 장성의 수세투쟁, 그리고 전남북농민대회는 투쟁 내용이나 규모에서 대중투쟁의 지속적 진전을 보여주었다.

나주수세거부대책위원회는 1987년 11월 17일에서 12월 26일까지 나주시와 11개면단위 대책위원회를 각 마을대표로 구성하여 12월 29일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세거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이후에도 부당수세거부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대중선전, 교육, 서명운동, 고지서 반납, 징수거부 등을 전개하였다. 대중선전으로는 「수세거부소식」 지를 발행하여 각 마을에 배포하고 나주농민행동지침(소자보)과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라는 스티커를 마을마다 부착하며, 플래카드 걸기 등을 광범위하게 하였고, 대중교육으로서 수세교육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9개면에서 시행하였다(1,500여명 참가). 그리고 수세고지서를 마을별로 모아서 수대위로 반납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1월 18일에는 수세거부에 대한 나주농민의 결의를 농수산부장관에 발송하였고, 1월 27일에는 1만 농민의 서명명부와 「수세거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국회와 평민당(야당)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대중선전과 대중교육, 서명운동을 통한 농민대중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1988년 3월 14일 ‘부당수세 폐지를 위한 나주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비가 오는 가운데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5,0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하여 광주-목포간 도로에서 최고장을 불사르며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 “농조직원 날뛰어도 부당수세 절대 못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에서 농조로 가자는 결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농조로 가는 과정에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발포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1명의 농민들이 연행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나주시외버스 정류장 사거리 앞에서 다시모여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남부당수세거부 대책위원회는 1987년 11월 26일과 12월 26일 수세거부투쟁의 대중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1988년 2월 6일 ‘부당수세거부 해남몽리민 단합대회’와 4월 6일 ‘부당수세 철폐를 위한 해남몽리민 대회’를 개최하여 부당수세거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월 6일 부당수세 거부 해남몽리민 단합대회에서는 경찰의 사전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농조 해체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광주은행 해남지점앞 사거리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고, 경찰의 저지선을 몸싸움으로 뚫고 대회장에 들어가 수세고지서 3,000여

매를 불태우면서 대회를 가졌다.

이후 수대위 윤치영 위원회장 등 농민 5명은 2월 10일 수세폐지를 주장하는 4,000여명의 서명 명부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각 정당과 농수산부장관을 면담하고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남농리민들의 수세 폐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3월 19일 수대위 최고결의기관인 ‘최고정책 결정회’가 마을 책임자(180여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 YMCA 강당에서 개최되어 농지개량조합 해체와 수세폐지를 위해 끝까지 부당수세를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4월 6일 ‘부당수세 철폐를 위한 해남농리민 대회’가 2,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해남 YMCA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를 마치고 수세 독촉장을 농조에 반납하고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농조까지 경운기 3대를 앞세우고 가두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최루탄 발사와 폭력적 저지에 4명의 농민이 부상당하고 4명이 연행되었다. 이에 700여명의 농민들은 농조에 모여 조합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나주와 해남지역 수세거부투쟁은 이후 지역간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수세거부 투쟁을 전개해온 순창수세거부운동과 결합하여 전남농민들은 4월 14일 ‘수세폐지를 위한 전남북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나주, 해남, 순창 등지에서 수세거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던 전남북 농민 5,000여명이 나주천주교회에 모여 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세폐지,” “농민생존권 보장,”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수세거부 투쟁의 결의를 한층 높였다. 대회에 이어 농민들은 프랑카드와 피켓을 앞세우고 농조를 향하여 가두행진을 하던 중 경찰의 무자비한 저지로 다수의 부상과 27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농민들은 굴하지 않고 광주-목포간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면서 “폭력 경찰 타도,” “연행농민 석방,” “농조해체” 등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의 최루탄 폭력에 성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 대회과정에서 박상진 나주 수대위원장, 전남기농 최병상 총무, 보성농민 진병기 등 3명이 구속되었고 최병상 총무와 진병기씨는 7월 26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한 순창농민 서정일씨는 폭력경찰에 의해 뇌출혈을 당하고 뇌수술을 받고 피해보상을 받아 내기에 이르렀다.

대회에 이어 4월 16일에는 ‘전남북수세폐지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수세거부투쟁을 지역간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는 「수세폐지투쟁소식」지를 발행하였다(1회).

〈표-5〉 1988년 전남지역 수세거부 및 폐지 투쟁

월 일	주최	장소	참가자 수	내용
1.10	함평농민위원회	학다리성당	200	‘함평수세거부대회’ 후 가두행진 학교면 학다리 성당에서.

1.15	장흥수세거부대책위원회	장흥관산 읍교회	300	‘부당수세거부 장흥농민실천대회’ 후 농성, 경찰폭력, 집행부 전원 연행 무차별 구타
1.19	강진부당수세 거부대책위원회	광명교회 옆 시장통	100	‘농조해체강진군민대회’
2.6	해남부당수세 거부추진위원회	해남 YMCA앞	2,000	‘부당수세거부 해남군 모리민 단합대회’ 후 가두행진, 수세고지서 3,000매 소각, 13명 연행
3.14	나주부당수세거부 대책위원회	나주 천주교회	6,000	‘제 2차 부당수세거부대회’
4.6	해남부당수세 거부 대책위원회	해남 YMCA	2,000	‘부당수세철폐 해남모리민 대회’ 후 농조를 향해 행진, 최루탄, 폭력진압, 해남기농 총무 윤영전 외 여성농민 2명 연행
4.14	호남지역 수세거부 대책위원회	나주 천주교회	5,000	‘수세폐지 전남북 농민대회’ 후 광주~목포도로에서 평화시위, 백골단의 폭력진압, 다수의 농민 부상, 27명 강제 연행, 순창의 서정길(48세) 각목에 머리 맞고 조선대병원에서 뇌수술
4.28	전북 순창군농민회	순창농개조	700	‘수세폐지 전남북대회 순창농민 피해보상 쟁취대회’ 후 경찰서로 가서 피해보상 확답 받고 해산
6.22	영산강농지개량 조합평직원협의회		150	‘수리시설의 전면 국가관리’ 등 주장
8.3	담양농민회, 담양예수교농민회		100	‘수세거부대회’ 개최
8.4	해남YMCA 농어민회, 해남기농, 해남부당수세거부 추진위원회	해남 송지면 송호리 해수욕장	100	‘수세거부대회’ 개최
9.16	해남수세거부 추진위원회	해남YMCA	100	‘수세대책회의’ 개최, ‘부당수세거부추진위’ 를 ‘부당수세폐지추진위’ 로 개칭 결정
9.20	해남수세거부 추진위원회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 결의대회”
10.28	구례가농협의회	구례군 전역	300	50여 대의 경운기, 트랙터로 · 구례군 전역을 돌며 ‘수세폐지! 쌀 수매가 107,778원 쟁취’ 주장
	전국 수세폐지 대책위	전주 가톨릭센터	300	‘전국수세폐지공청회’ 개최
10.29	‘옥과면수세대책위’	우시장터	400	‘수세폐지를 위한 곡성농민결의대회’ 후 품물놀이
10.31	광주 ‘지산수세거부대책위’	지산단협 옆	700	‘수세폐지 및 농조해체 농민대회’ 후 4km가두시위

11.16	전남 '가농곡성삼기협의회'	삼기면 농협 앞	150	'수세폐지 및 농민생존권쟁취대회' 개최
11.19	11.19. 해남			'수세폐지와 생존권쟁취를 위한 해남농어민 큰잔치'
11.19	11.19. 장성		600	'수세폐지결의대회' 개최
11.19	11.19. 담양	담양읍	100	'수세폐지결의대회' 개최
11.22	11.22. '영암군 농민회'	영암읍 군민회관	500	'수세폐지 결의대회' 후 군청까지 가두시위
11.28	11.28. 수세폐지곡성농민 공동대책위원회			'수세폐지 및 곡성농민 생존권 쟁취대회' 개최와 성명서 발행
11.30	11.30 화순지역 농민운동단체 (능주농민회, 능주수세폐지대책위, 화순군 농민회준비위, 화순군수세폐지대책준비위) '수세폐지대책위'	능주면 석물공장 앞	150	'수세폐지화순군민결의대회' 후 시가행진
12.6	12.6. 고흥 '동강 민주청년회'	동강면 사무소 앞		'수세거부 및 농민생존권쟁취대회' 개최
12.14	12.14. 함평 '나산면 수세폐지대책위'	나산면 복지회관		'수세폐지 나산면민 결의대회' 후 시위
12.19 (20)	12.19(20)? '영암농민회'	영암읍 역리 공설운동장		'수세폐지 및 농민생존권 쟁취대회' 개최
12.20	12.20. '나주수세폐지대책위'	영산포 우시장		'농민생존권쟁취 및 수세폐지대회' 개최
12.22.	12.22.			수세폐지 승주,여천 대책위 결성대회
12.23.	12.23.			수세폐지,농조해체,수리청신설 광산농민 1차결의대회 및 결의문 발행
12.28.	12.28.			광산수세폐지대책위원회 결성 및 결의대회 개최
12.28.	12.28.			영광·염산면수세폐지대책위원회 결성 및 결의대회 개최

1987년 11월 이후 전남지역의 나주, 해남을 비롯하여 전북 순창에서 전개된 수세폐지투쟁의 성과를 딛고 198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수세거부에서 더욱 발전하여 “수세폐지”투쟁으로 나아갔다. 수세폐지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9월 13-14일 “전남북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로 전국 40여개군의 군단위 대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세폐지를 위한 활동가 교육이 개최되었다. 교육에서는 수세폐지투쟁 사례발표와 투쟁방향 등이 논의되고 토론을 통해 수세투쟁의 방향으로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이 결정되었다. 수세폐지투쟁의 방향이 확정되자 수세폐지투쟁의 전국적 확산과 조직화를 위해 각도 준비대표 1인, 각 농민단체대표 1인씩으로 “전국수세폐지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전국수세폐지대책위원회”는 대중선전과 지역조직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10월 28일 전주에서 “수세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5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공청회의 공술인은 농민대표 2인, 학계대표 2인, 4개 정당, 농림수산부, 농조연합회, 영산강농조노동조합 각각 1명 등으로 하였으나 평민당을 제외한 3개정당과 농림수산부, 농조연합회 대표는 불참하였다. 공청회에서 평민당을 제외하고 농민과 학계, 영산강농조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청회를 통해 수세폐지투쟁방향에 대한 최종 점검을 끝낸 준비위원회는 11월 1일 전국의 각 지역대표를 소집하여 정식으로 “전국수세폐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전국수세폐지대책위원회”의 결성과 함께 11월 초부터 서서히 지역단위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군단위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1988년 하반기에 수세폐지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62개 군에 달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20여개 군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수세투쟁을 계기로 하여 대중조직역량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해남수세거부(폐지)투쟁

해남지역 농민들은 1987년에 이어 1988년에도 수세거부(폐지)투쟁에 나섰다. 2월 6일 해남 YMCA(해남부당수세거부추진위원회)의 주최로 2,000여명이 해남YMCA 앞에 모여서 ‘부당수세거부 해남군몽리민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단합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에 들어갔다. 2월 10일에는 수세거부서명자 4천여 명의 명단과 입장을 각 적당에 제출하였다. 추진위 이름으로 ‘수세거부소식’ 4,5호를 발행하여 수세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어서 4월 6일 해남부당수세거부대책위원회 주최로 ‘부당수세 철폐를 위한 해남몽리민대회’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그 사이에 ‘수세거부소식’ 6,7호를 발행하였다. 8월 4일에는 해남YMCA농어민회, 기독교농민회, 수세거부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해남농어민 하계단합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9월 20일에는 해남군부당수세거부추진위원회 주최로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드디어 수세거부에서 수세폐지로 요구를 강화해 갔다. 11월 19일에는 ‘수세폐지와 생존권쟁취를 위한 해남 농어민 큰잔치’를 개최하며 수세거부(폐지)운동을 마무리하며 다음해로 넘어갔다.

나주수세거부(폐지)투쟁

나주지역은 1987년의 활발한 수세거부투쟁을 1988년에도 계속 이어갔다. 본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나주시·군 부당수세거부대책위원회 명의로 「수세거부소식」 호위를 발행(1.1.)하고 이어서 「부당수세거부 나주농민행동지침」이란 소자보도 발행하였다(1.3.) 본격적으로 수세투쟁을 알리는 「수세거부소식」 제1호 발행(1.6.)하고 『수세거부자료집』 1,000부도 발행(1.9.)하였다. 이러한 선전홍보활동에서 더 나아가 1월 18일에는 ‘수세거부에 대한 나주농민의 결의’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전달하였으며, 1월 27일에는 1만 나주농민의 서명과 수세거부에 대한 입장’을 국회 농수산분과와 평민당에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홍보활동에 들어가 「수세거부소식」 제2호를 발행(2.21.)하고 「특보」 제1호도 발행(3.10.)하면서 수세거부투쟁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3월 14일에는 나주부당수세거부대책위 주최로 ‘부당수세 폐지를 위한 나주농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6,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부당수세거부대회에 참가한 나주농민들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수세거부의 의지를 밝혔다. 나주농민들의 이러한 수세거부투쟁에 호응하여, 3월 14일에 광주전남사회운동협의회에서는 ‘나주농민의 부당수세거부를 적극 지지하며’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같은 날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도 ‘부당수세 폐지를 위한 나주농민 투쟁을 지지하며’란 성명서를 발표하여 수세거부(폐지)투쟁을 측면 지원하였다. 대회를 하면서 연행 구속된 농민들의 석방을 위한 움직임이 그 다음날 있었다. 3월 15일 나주구속농민형제석방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구속농민형제 석방을 위한 농성에 들어가면서’란 유인물을 발행, 배포하고 ‘구속농민 석방 요구’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어 수세거부운동을 해온 전북 농민운동집단들과 연대하여 4월 14일 전남북수세대책위 주최로 ‘수세 폐지를 위한 전남·북 농민대회’를 나주에서 개최하였으며 5,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대회를 하고 나서 전남·북 수세폐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4.16.), 이 대책위 이름으로 성명서와 「수세폐지투쟁소식」을 발행하였다(4.21.).

9월 10일 나주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나주수세폐지대책위원회로 개칭하면서 수세폐지라는 운동방향을 확정해 나갔다. 가을 들어서 전남지역의 수세거부운동을 결집하는 수세폐지전남대책위원회가 결성(10.10.)되었고, 이어 이 전남대책위는 10월 17일에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행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나주수세투쟁은 전남지역은 물론 전북지역과 연대하면서 조직의 폭을 넓혔으며 결국 11월 1일 전국수세폐지대책위원회의 구성으로 나아갔다. 12월 20일에는 나주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로 ‘농민생존권쟁취 및 수세폐지대회’를 개최하였다.

광산수세폐지투쟁

광산지역은 11월 들어 수세폐지운동을 위한 자료준비와 교육, 모임 등을 착착 진행해 나갔다. 11월

9일 부당수세폐지를 위한 자료준비와 자체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세폐지운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11월 20일 부당수세폐지를 위한 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12월 초부터 예비모임, 소위원회모임, 준비위원회모임, 출장소별모임 등을 하고 광산수세폐지대책준비위원회 이름으로 「광산수세폐지운동」 1호를 발간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다. 드디어 23일에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 광산농민 1차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행하였다.

이어서 수세 후속작업을 위한 차량홍보 및 마을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위에서 28일 광산수세폐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광산수세폐지대책위원회에서는 「수세폐지소식」 2호를 발행하였다(12.29.). 이처럼 광산지역은 두 달 만에 집중적인 마을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수세투쟁을 활성화하고 두 번의 결의대회를 치루었다.

함평수세폐지투쟁

함평에서는 1987년 투쟁의 결산으로 1월 10일 학교면 학다리 성당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세거부대회’를 개최하였다. 12월 들어 나산면수세대책위원회가 건설되었고(12.4.) ‘수세폐지를 위한 나산농민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12.14.) 이처럼 함평에서도 면단위 활동이 확산되었다. 엄다면에서도 면단위 수대위 활동을 준비하였으며 엄다면수세폐지대책준비위원회에서는 ‘수세폐지운동」 1호를 발행하였다(12.12.) 그리고 함평농민운동의 군단위 조직인 함평농민위원회 산하에 “수세폐지 및 농가부채 정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하기에 이르렀다(12.17.). ·

기타지역 수세투쟁

장흥지역에서는 1987년의 투쟁에 이어 1월에 장흥부당수세거부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부당수세거부소식」 1호(1.2.)와 2호(1.13.)를 발행하였고, 1월 18일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당수세거부 장흥농민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곡성에서는 가을 들어 수세폐지운동이 확산되었다. 10월 29일에는 곡성에서 옥과면수세대책위원회 주최로 400여명의 농민이 모여 ‘수세폐지를 위한 곡성농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11월 16일에는 가농 삼기협의회 주최로 ‘수세폐지 및 농민생존권 쟁취대회’를 개최하였다. 11월 28일에는 수세폐지곡성농민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수세폐지 및 곡성농민생존권 쟁취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영암지역도 가을 들어 수세투쟁을 시작하였다. 9월 15일 영암군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영암수세폐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1월 30일 ‘수세폐지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9(20?)일에는 ‘수세폐지 및 농민생존권 쟁취대회’를 개최하였다.

화순지역에서도 수세투쟁이 벌어졌다. 이미 4월 5일에 도곡농민회 도곡면부당수세거부추진위원회에서 “도곡민주화의 선봉장 수세거부 몽리민 만세!!”라는 유인물을 발행하여

수세투쟁을 홍보하였다. 가을 들어 10월 27일 화순군수세폐지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능주농민회, 능주수세폐지대책위, 화순군농민회준비위, 화순군수세폐지대책준비위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수세폐지화순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8일에는 구례에서 가농구례협의회 주최로 ‘수세폐지, 쌀값보장’ 시위를 하였다. 농민들은 경운기 50대와 대형트랙터를 앞세우고 수세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으며, 시위 중 무장경찰과 가두투쟁을 벌였는데 결국 경찰이 굴복하여 시위대열을 경찰 백차가 에스코트 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수세폐지투쟁이 전개되었다. 9월 14일 장성 북일면 덕성리에서 ‘수세거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0월 31일에는 광주 지산지역 농민들 700여명이 참여하여 ‘수세폐지 및 농조해체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11월 22일에는 담양읍 농민들이 ‘수세폐지 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6일에는 고흥에서 고흥군동강민주청년회 주관으로 ‘수세거부 및 농민생존권쟁취대회’를 개최하였다. 진도와 영광까지 수세투쟁이 확산되어, 12월 28일 진도수세폐지대책위원회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가졌으며, 같은 날 영광에서는 염산면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11월말에 수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하면서 마을단위에서부터 수세고지서를 집단수거하는 등의 수세거부행동이 본격화하였다. 또한 전남지역은 미작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추수가 지난 11월초부터 수세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1,2월에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1989년 1월 25일 정부는 장기채와 몽리민 부담 수세의 2/3를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월 6일 야당인 평민당은 수세폐지와 농조해체의 정책대안을 발표하였다. ·

나. 의료보험료 거부 및 의료보험조합 개혁투쟁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 134개 군에 일제히 실시된 농어촌의료보험은 농어민 실정을 무시한 비싼 보험료와 조합주의가 갖는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농어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및 의료보험조합 개혁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전남지역의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및 의료보험조합 개혁운동은 수세거부투쟁과 함께 농어민 다수대중에 의해 보험료 납부고지서 반납과 보험카드 반납운동 형태로 시작되었다.

1988년 1월 중 완도에서 1천여 명 주민들의 보험카드 반납, 1월 15일 담양읍 양각리 30여명 주민들의 보험료 납부고지서 반납이 있었다. 1월 20일 가농 진도협의회는 [진도농민신문]에 “농어민 수탈하는 의료보험 조합비 전면 거부하자”를 게재하였고, 1월 24일 함평군농민위원회는 ‘의료보험문제 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월 26일 승주 YMCA 농민회는 [승주농민의 소리]에 “농어촌 의료보험제도의 실태”를 게재하고 배포하였다. 1월 27일 담양농민회는 [대나무골합성]에서 “의료보험은 농촌현실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를 게재하고 배포하였으며,

1월 29일 영광 묘량농민회는 [영광 묘량농민신문]에 “농어촌의료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게재하고 배포하였으며, 1월 30일 해남기농은 [의료보험대책]이란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였고, 2월 2일 함평지역 56개 마을대표로 ‘함평의료보험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월 9일 보성군농민회, 전청런 보성·고흥지역위원회는 “이래도 되는가? 의료보험!!!”이란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2월 10일 ‘무안군의료보험 여성 대책위원회’ 주최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2월 13일에는 ‘해남 산이면 의료보험조합 부당의료보험료 거부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담양농민회는 [대나무골 함성]에 “빛좋은 개살구 농어촌 의료보험을 거부하자!”를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2월 25일 화순도곡농민회는 [도곡농민신문]에 “현행농어촌의료보험 농민들 거센 반발 보험료 납부거부, 보험카드 반납소동 일어”를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2월 26일 나주 왕곡농민회에서는 면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료보험문제 강연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3월 2일 함평에서는 ‘함평의료보험대책 위원회’ 주최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당의료보험료거부 군민대회’를 개최하였고, 3월 25일 가농장흥협의회는 [천관산의 메아리]에 “농어촌 의료보험제도는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는 글을 게재 발표하였다. 6월 29일 ‘함평농민위원회’는 [함평농민신문]에 “농민건강전 쟁취하자”를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7월 9일 ‘강진군 농민·학생 농활공동추진위원회’는 “농민은 현 정부에게 왜 찬밥 신세인가?”라는 홍보전단에서 의료보험료 거부와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주의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및 의료보험조합개혁 투쟁은 대중선전과 함께 함평, 무안, 담양, 진도, 승주, 영광, 해남, 보성, 화순, 나주, 장흥, 강진에서 진행되었다.

함평지역의 의보투쟁은 1월 24일에 ‘함평농민위원회’에서 ‘의료보험 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성명서를 통하여 “반농민적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부과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한다.”고 발표하고, “① 의료보험료의 국가부담을 대폭 늘려 농민실정에 맞게 책정하라. ② 진료기관과 진료지역을 농민생활에 맞춰 설정하자. ③ 조합을 해체하고 통합방식으로 실시하라. ④ 현행의료보험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므로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2월 2일에는 56개 마을 대표로 ‘함평군 의료보험조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대중의 요구별 조직을 결성하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선전을 계속하면서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50여개 마을을 순회하며 의료보험의 부당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중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에 대자보를 붙였다. 그리고 면단위별로 보험료납부고지서 수거(2,000여 매) 및 서명운동(1,000여명 서명)을 전개하고, 면단위별로 차량방송을 실시하고, 9개읍면 300여개 마을에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스티커 부착, 유인물배포(4회) 등의 대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중선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의료보험료 거부운동을 전개하면서 3월 2일에는 ‘함평군 의료보험조합 대책위원회’ 주최로 동아예식장에서 2,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하여 ‘부당의료보험료 거부 군민대회’를 가졌다. 대회장소로 정한 함평공원에서 대회를 갖기 전에 장터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방송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장 등 다수가 강제연행되었고 경찰과 대치하여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저지선을 뚫고 동아예식장으로 대회장소를 바꿔 대회를 가졌으며 연행된 농민들은 집회 전에 전원 석방되었다. 이후 7월 6일에는 엄다면 엄다리 불암 보리공판장에 수매대금 지불장소에서 의료보험료를 징수하려하자 농민들이 강렬히 항의하여 이를 물리치는 등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무안지역 의보투쟁은 여성농민들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다. 2월 초 무안여성농민들은 ‘무안군 의료보험 여성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을마다 여성농민들이 스스로 작성한 대자보를 붙이면서 “진정한 의료보험제도를 우리 손으로”라는 홍보전단을 통하여 2월 10일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 여성농민 대회’를 알리고, “현행의료보험 무엇이 문제인가?”를 선전하였다. 그 내용은 “농민실정 무시한 과다 보험료,” “불공평한 보험혜택,” “전국을 일원화하는 통합주의를 실시하라,” “현 무안군 의료보험조합은 민정당의 직업 알선소다,” “농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등을 담고 있었다. 2월 10일 ‘무안군 의료보험 여성 대책위원회’ 주최로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여성 농민대회”를 200여 여성농민들이 주로 참여한 가운데 무안을 장터에서 개최하였다. 대회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성명서를 채택한 뒤 시가행진을 하여 무안읍사거리까지 와서 부당의료보험조합을 규탄하는 대회를 계속하였다. 대회 이후 여성농민들은 의료보험조합을 찾아가 의료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반납하였다.

다. 토지양도투쟁

영암, 영광, 무안, 신안, 해남 등지에서 소작농민들의 토지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무안 태원간척지 주민 100여명은 1988년 3월 20일 해제버스정류장 앞에서 “농지임대료 인하”를 주장하면서 시위 농성을 하였다.

신안에서는 3월 중에 ‘승의 간척지 양도추진위원회’에서 4천만 국민께 드리는 신안농민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승의학원은 간척지를 즉각 양도하라! 김신근은 모든 공직을 즉각 사퇴하고 전 기독교인에게 즉각 사죄하라! 신안군청은 소유권 이전 사유를 밝혀라! 신안군청은 농지분배 증서의 사유와 내력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라! 가진 놈을 옹호하는 현 정권은 물러가라! 평화적 양도운동을 탄압하는 목포경찰서는 사죄하라!”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신안 지도읍 태원농장 소작농민 50여명은 7월 21일 농장소유회사인 목포 태원여객에 물려가 “농지무상임대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소작농민들은 앞으로 7년 동안 농지를 무상임대하고 연고권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지주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지주측은 1년 동안만 무료경작을 제시하여 협상은 결렬되고 농성을 계속하였다.

10월 20일 안좌면 주민 70여명은 다시 “간척지 경작권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였고, 산두지구 미완용 간척사업장의 일시 경작에서 당초 매립자의 일시 경작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신안군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한편 신안 ‘송의 간척지 양도추진위원회’는 “송의학원은 간척지를 즉각 양도하라!” “가진 농을 옹호하는 현 정권은 물러나라!” 등을 외치며 투쟁하였으며, 신안 지도읍 태원농장 소작농민들도 “향후 7년간 농지를 무상임대해주고 연고권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영암 학파농장 소작농민들은 1988년 7월 1일 서호면 “소작료거부 결의대회”를 갖고 학파농장 소작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토지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서 대회 이후 “소작제 철폐하라,” “소작쟁의 쟁취하자”는 등의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서호면과 군서면 학파농장 소작농민 700여명이 경운기 100여대를 앞세우고 영암읍 시외버스 정류소 앞에 모여서 “학파농장 소작료 거부 결의대회”를 갖고 “불건적인 대지주 소작제 철폐하고 무상으로 소작인에게 양도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군청 앞까지 가두시위를 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 난사 등 폭력적 진압으로 인하여 다수 농민이 부상당하고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소작농민들은 국도인 영암로타리에 경운기 100여대로 도로를 막고 광주-완도간 도로를 차단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후 8월 7일 소작농민들은 “제2차 소작철폐 농민대회”를 영암군청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10월 17일 「영암농민회보」 준비 1호를 발행하여 “학파농장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학파농장소유주는 학파농장을 어떤 방법으로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를 소작인들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암 농민들은 학파농장소작인들과 단결하여 승리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1월에는 학파농장 소작철폐 대책위원회에서 “토지무상분배요구” 전단을 발행하였다. 여기에서 “농민에게 토지를”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토지 무상양도, 그 동안 납부한 소작료 일부 반환, 농민탄압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학파농장에서는 전남·광주지역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지원으로 마을마다 농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전열정비에 주력하면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영광 ‘염산면 가음방조제 무상등기 추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입동, 야월, 합산 지역 주민 60여명이 가음방조제 안의 경작지 무상등기를 요구하는 토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1대의 경운기에 분승하여 영광군청으로 향하던 중 염산면 우체국 앞과 농협 앞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으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타고 있던 경운기에 경찰이 올라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아당겨 타고 있던 농민 이재열씨(45세, 야월리 2구)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 실신하여 영광종합병원에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영광군청 내무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100여명이 농성을 하면서 무상등기를 요구하고 고 이재열씨를 사망케 한 경찰을 규탄하였다.

7월 15일 ‘무상등기 추진위원회’, ‘가농 영광협의회’, ‘염산면 농어민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투입을 요청한 사람과 폭력진압을 지휘한 자가 누구인가 밝혀내라. 과잉폭력을 사용할 때 이재열씨를 직접 다치게 한 경찰은 누구인가를 밝혀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7월 17일 영광성당에서 “이재열씨 사인규명 및 폭력경찰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우체국 앞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42명의 농민들이 연행되었고 그 중 3명은 구속되었다. 그리고 영광군청 내무과 사무실에서 농성하던 농민들도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7월 21일 영광읍 우시장에서 500여명의 농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며 “고 이재열씨 사인규명 및 폭력경찰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이재열씨의 사인규명, 농지무상분배, 구속된 농민 석방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7월 26일 영광 공용버스정류소 앞에서 “고 이재열 열사 사인규명 및 살인경찰처단을 위한 범도민 규탄대회”를 갖고, 영광성당에서는 17일부터 계속 농성을 하였다. 한편 경찰은 고 이재열씨의 시신을 23일 영광종합병원에서 탈취하며 염산면 신성리 뒷산에 암매장하였다.

7월 26일 ‘이재열 열사 사인 진상규명 및 폭력경찰 응징대회’를 가졌으나, 경찰에 의해 무사비하게 탄압을 받은 이후, 투쟁이 소강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 농민운동조직에서는 8월 4일 집행부 모임을 갖고 “토지 무상등기 이전”과 이재열 열사 사인규명, 구속자석방 등을 위해 투쟁을 추동시키기로 결의를 하고 아울러 투쟁의 주체는 마을주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을주민 좌담회를 열기로 하였다. 8월 8일 송암리 주민들과 좌담회를 열었다. “염산면 가음방조제 내 간척지쟁의의 진상(민민연 제작)”이란 영상을 보고 마을주민들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투쟁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토론의 결과 마을청년들 15명을 중심으로 “마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대책위에서는 이후 투쟁을 보다 계획성을 갖고 추진하며 아울러 군 농민운동조직과 연계를 튼튼히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마을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농민운동회원들에게 두들겨 맞는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이후 토지투쟁은 또 다시 앞에서 결의한 내용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침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름의 시위투쟁으로 구속되었던 활동가들이 석방됨에 따라 다시 투쟁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 1월 중순 여타의 농민들의 적극적 투쟁소식이 알려지고, 다른 지역의 토지투쟁소식을 접한 마을주민들은 염산토지투쟁을 다시 준비하였다.

해남군의 경우 ‘현산면 봉동리 화전답 무상양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8월 29일 “축협은 우리 땅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오전 10시에 봉동리 70여명의 농민들이 해남군 축협 앞에 몰려가 일제의 귀속재산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협명의로 등기된 3만5천여 평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8월 30일 “현산면 봉동리 화전답 무상양도추진위원회”에서는 「투쟁속보」 제 1호를 발행하였다. 투쟁속보를 통해 농민들은 무상양도의 근거를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기 때문에, 또 축협은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등으로 제시하면서, 9월 1일에서 6일까지 고도리 터미널에서 대농민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축협 측에 “축협은 봉동땅을 등기 이전한 경위를 밝혀라”는 등 4가지 질의를 담은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9월 6일에는 「투쟁속보」 4호를 발행하면서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전남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토지투쟁이 전개되었는데, “전국 토지무상양도 대책위”가

1988년 9월 14일 결성되어 정보, 소식, 사례 등을 교환하였지만 지역간 연대투쟁으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라.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투쟁

1985년 소값 파동의 후유증이 아직도 농민들의 생활에 미치고 있는데도 다시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양담배, 포도주까지 수입하게 됨에 따라 축산농민, 잎담배 경작농민, 포도생산농민들의 수입개방 저지투쟁은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며 개방저지투쟁대오에 나섰다.

광주·전남지역에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입개방저지투쟁이 전개되었다. 2월 1일 광주·전남지역 22개 축협 조합원 1,500여명은 광주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쇠고기수입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당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합원들은 “소값파동 이후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 낙농업자들은 또 다시 쇠고기 수입이 계속될 경우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쇠고기, 유제품 등의 수입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관광호텔 한국쇠고기 사용하라”, “미국농민 살려주는 축산정책 웬말이냐”, “양축농가 살길은 쇠고기수입 반대뿐이다” 등의 1백여 개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였다. 대회 후 중앙로를 거쳐 충장로와 금남로 제일은행 광주지점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고, 경찰의 저지에 맞서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였다.

농민들만 농축산물 수입저지에 나선 것이 아니다. 6월 들어서는 19일에 농협 전남도지회 직원 부인 250여명이 농협연수원에 모여 수입농축산물 불매 및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쇠고기, 양담배, 냉동감자, 포도, 오렌지 등 수입 농축산물을 사먹지 말자”고 결의하였다. 6월 20일 광주 YMCA(목포, 순천 YMCA에서도 전개함)에서 시민 100여명이 모여 “양담배 불매운동 대회”를 가진 후 충장로, 금남로 등에서 “양담배 연기 속에 흐려지는 민족정기”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7월 4일 함평에서는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농민 결의대회 및 농촌활동대학생 환송식’이 있었는데, 농민·학생 700여명이 경운기 15대와 트랙터 3대를 동원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7월 9일 전매노조원과 시민 1,500여명은 광주공원에서 ‘양담배추방을 위한 불매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역보복조치라는 위협을 앞세우고 강압적이고 무차별한 수입개방 압력과 양담배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미국의 제국주의 작태를 규탄했다. 대회 후 양담배 화형식을 갖고 양담배 불매 가두시위를 하였다. 7월중에 새마을 청소년회 전남연합회에서는 ‘양담배 불매운동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성명서에서 “미국의 개방 압력 막아내어 민족자존심 되살리자. 미국은 농산물 개방을 즉각 철회하라. 수입권금 수출하여 개방농정 철폐하자. 국민경제 위협하는 양담배를 추방하자. 양담배는 사지도 팔지도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 주장하였다.

어민들의 새우젓수입반대운동도 있었다. 신안 임자면 전장포 어민 2,000여명은 수입새우젓이 국내시장에 출하되면서 판매가격이 대폭 인하되고 판매량이 감소하며 위판장 중개인들이 매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새우젓수입 중단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신안 임자면 등 3개 지역 새우잡이어민 20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새우젓 수입개방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들 어민들은 “롯데, 쌍용 등 재벌들의 새우젓수입 철폐”, “수입으로 가구당 연 5백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수입 감소”등을 주장하였다.

마. 농산물 제값받기 투쟁

전남지역은 경북이나 충북과는 달리 미작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제값받기 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농산물제값받기투쟁에 영향을 받아 전남지역의 여러 곳에서 투쟁이 전개되었다. 전남지역의 농산물제값받기투쟁은 크게 고추생산비보장투쟁, 쌀값보장투쟁, 여타작목의 생산비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다.

해남에서는 9월 8일 ‘고추제값받기대회’를 개최하고 농협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9월 14일 산이면농민회에서 ‘산이면 고추생산비쟁취대회’전단을 발행하고 고추제값받기투쟁을 촉구하였다. 9월 17일에는 ‘농축산물생산비쟁취 해남·진도 공동투쟁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고추생산비 보장하고 전량수매하라”와 “쌀값 107,778원 쟁취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9월 19일 산이면 고추재배농민들과 농민회원 100여명이 경운기 8대를 몰고 해남읍 시가지에서 시위를 하면서 고추생산비보장과 전량수매를 요구하였다. 추수로 인하여 고추투쟁이 주춤하다가 10월 26일 해남군 화원·문래·황산·산이면 등 4개면 고추계약재배농민 100여명은 경운기 13대와 트랙터를 나누어 타고 해남군청 앞에 집결, 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농민들은 농협 해남군지부 2층 회의실을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29일 오전에 농성을 풀었다. 마침내 11월 17일 해남, 진도 농민 150여명은 서울에 올라가 농협중앙회를 점거하고 “고추생산비보장 및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하여 100톤 추가수매를 쟁취하였다.

진도에서는 9월 30일 지산면 고추생산농민과 농민회원 50여명이 경운기 14대를 타고 “고추생산비보장,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7시간 동안이나 시위를 벌였다. 10월 19일에는 지산면, 군내면 고추생산농민과 농민회원 등 250여 명의 농민들이 경운기 60여대와 트랙터 1대에 분승하여 군청으로 몰려가 고추전량수매를 요구하며 경운기 60대에 싣고 온 고추 7톤을 군청 사무실에 쌓아두고 나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쟁을 바탕으로 11월 17일 해남농민과 함께 농협중앙회를 점거, 농성을 전개하였으며, 고추 1백톤 수매를 약속받고 농성을 풀었다.

나주에서는 10월 19일 고추재배농민들 100여명이 봉황농협에서 ‘제1차 고추생산비 보장 및 전량수매쟁취를 위한 봉황면농민대회’를 개최하고, 10월 29일에는 봉황농협 앞에서 2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제2차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봉황면 단위농협과 군청을 점거하고 고추수매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후 나주지역은 수세투쟁으로 분주하다가 1989년에 들어서면서 고추투쟁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월 19일 세지면, 1월 31일 다도면 농민들이 고추생산비보장,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군청으로 쳐들어가 추가수매를 쟁취하였다.

함평에서는 10월 6일 손불면에서 300여명의 농민들이 고추생산비보장,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대회를 갖고 밤 10시까지 단위농협을 점거하여 투쟁에 참가한 농민들의 고추전량수매를 약속받았다. 나산면에서는 10월 25일과 29일, 각각 100여명, 3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 함평을 가동, 옥산 농민들이 고추생산비보장투쟁을 전개하여 전량수매를 쟁취하였다.

영광에서도 10월 26일 200여명의 농민들이 “고추, 땅콩수매”를 요구하는 대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11월 6일에는 담배생산농민들 300여명이 ‘잎담배수매거부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1일 2차대회를 열었다.

무안에서는 10월 15일 해제면 농민 500여명이 경운기에 고추를 싣고나와 “농협은 약정재배한 고추를 전량수매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고, 10월 28일에는 현경면 단위농협 앞에서 고추생산농민 200여명이 “고추 근당 2,500원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11월 21일에는 ‘현경고추제값받기 및 전량수매대책위’ 주관 하에 “농산물제값받기 및 전량수매”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고추생산비 근거와 생산비보장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공청회를 마쳤다.

이후 12월 14일부터 27일까지 “무안 고추생산비보장 및 전량수매대책위”주최로 대회를 열고 무안군청을 점거, 농성하였으며, 농성 이틀째 50톤 물량의 수매를 받아냈다. 그러자 미조직 지역의 농민들도 고추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 현경면, 해제면 등 6개 읍면 500여명의 농민들은 120톤의 고추를 싣고와 군청 복도, 계단 등에 쌓아놓고 전량수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군수 이하 군청직원들은 각 단위농협으로 고추를 가져가서 수매하라고 요구하고, 농민들은 군청에서 수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입된 경찰병력을 물리치고 면단위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차 수매 후 더 많은 물량의 고추가 몰려들게 되자 곧바로 2차 투쟁을 결의하였다. 장장 15일간 계속된 농성으로 군청을 접수하고 매일 350여명이 농성을 하였다. 투쟁과정에서 사고(실족과 교통사고)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였고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해산되어 2명의 농민이 구속되었으나, 투쟁의 결과 450톤의 추가 전량수매를 쟁취하였다. 이러한 투쟁으로 해제면농민회, 현경면농민회, 여성농민회, 운남면농민회가 결성되었고 여러 면에서 면농민회 조직을 준비하게 되었다.

화순군에서는 해를 넘겨 1989년 1월에 들어서 고추투쟁이 전개되었다. 1월 초순 “수세폐지 및 고추생산비 보장 농민대회”를 선전하면서 투쟁을 준비하였다. 당국은 1월 19일 저녁 이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매량을 배정하여 통보하였다.(수매량 12,000근, 춘양면의 경우 5,000근). 이에 농민들은 수매에 응하지 전량을 수매장으로 가지고 가서 수매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월 20일 수매와 더불어 추가량을 면사무소에 쌓아두고 도암면, 춘양면 농민들 150여명이

농성에 돌입하였다. 저녁에 군농산과장이 전량수매를 약속하여, 이에 군수의 각서를 요구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21일 군수, 농협지부장과 면담을 통해 도암면 21,000근 추가분을 수매합의 후 대책위에서는 추가분 수매에 있어 농성참여자와 신품 나온 물량을 최우선으로 수매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해산하였다. 이후 춘양면 추가분 7,000근 수매합의, 25일 도곡면 4,000근 수매합의, 26일 능주면 3,000근 합의를 쟁취해냈다.

9월 12일 함평에서 가농 주최로 '88년 쌀생산비보장을 위한 농민대회'가 300여 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0월 28일에는 구례에서 300여명의 농민들이 “수세폐지 및 쌀값 등 농축산물가격보장”을 요구하며 트랙터 5대와 경운기 50를 몰고 구례군 전역을 돌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영광에서는 11월 6일 ‘농산물제값받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1월 7일에는 앞담배 농가들이 농성에 돌입하였다.

고추투쟁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농산물제값받기투쟁, 특히 쌀값쟁취투쟁은 주로 유인물, 농민신문 등 선전전에 주력하였다.

전남지역의 고추투쟁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제값받기 투쟁은 경북지역이나 충북지역과 같이 광범위하고 연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미작 중심지역으로서 고추재배농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중투쟁으로서 수세투쟁이 20여개 군에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농산물제값받기투쟁은 전남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 먼저 전개되었고 그 열기는 11월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농축산물수입개방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로 수렴되었다.

바. 피해보상투쟁

농어민들의 일상적인 피해보상 투쟁이 각 지역에서 피해 농어민들의 자발적 요구투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광양만 인근 어민들의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한 어업권피해보상투쟁은 지속적이고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광양제철소 건립으로 어장을 잃어버린 광양만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요구는 1988년 당시 5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4월 중에 태금면 대인도어민들은 “자연산패류어업권 보상”을 받기 위해 계속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6월 23일에서 25일까지 곽약면 광영리 어민 500여명과 태금면 태금리 어민 500여명은 광양제철소 진입로인 금호대교와 태인교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면서 어업권 보상조기 타결을 촉구하라고 출근길을 막고 제철소 직원들과 경찰의 저지에 맞섰다. 피해어민들은 “일인 일가구 취업보장, 공업학교 설립, 어업권 보상, 148만평의 산업기지가발구역 해제, 배알도 유원지 개발”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광산구 극락강 하천부지 11만 6천평에는 270세대 3,000여명이 살고 있었는데, 광주시가 이곳을 수상스키장, 테니스장, 조깅코스 등을 갖춘 수상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하천부지 경작농민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5월 15일에 시행업체인 한국중공업이 중장비로 투입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극락강 수상 공원화 사업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생계대책을 위한 보상과 작업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회 총무인 김병환씨가 구속되었다.

승주 별량면과 해룡면 일대 850여 세대 4,900여 양식어민들은 보해산업의 주정폐수에 의해 고막과 새고막 양식장 1,786ha에 70억 원 가량의 양식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전액 보상과 보해 주정공장의 이전, 11억9천여만 원의 잉여자금 이자감면과 원금상환 연기를 4월 2일에 요구하였다.

신안 압해면 대천리와 감읍리, 그리고 목포지역 김양식어민 554명은 1월 26일 영산호에서 흘러보낸 담수로 김양식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농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해남 화원면 내주마을 300여 농민은 구사체취로 인한 어장피해와 농경지·선착장 피해 등에 대해 3월 8일 전남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3월 18일에는 도청에 직접 찾아가 농성을 하였다. 보성 문덕면, 복내면 농민들은 주암댐 건설에 따른 수물민보상금을 직접보상금과 간접보상금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주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일시지급을 1월 22일에 관계 당국에 건의하였다. 담양 대전면 ‘양영제지 공해추방 대책위원회’는 6월 26일 ‘공해보고대회’를 갖고 폐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6월 15일 무안 운남면 농민들은 양파종자가 꽃대가 나와서 망쳤다고 양파종자 판매상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장성군의 경우 8월 13일 북일면에서 현 병막걸리가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기에 통막걸리로 환원하자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00여명의 적극적 호응을 받아 투쟁에 승리하였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공해추방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고려시멘트 공장의 공해피해에 대한 피해보상투쟁을 전개하였다. 8월 27일 고려시멘트 공장의 장성을 인근주민 300여명은 “공장가동중단,” “고려시멘트 철거 이전” 등을 요구하며 공장 안 운동장으로 들어가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후 9월 19일, 주민측이 고려시멘트 공장이 설립된 1971년 이후부터 17년간의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한데 반해 공장 측은 1984년 이후 5년간의 보상 이외에는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집단투석전이 전개되었고, 이 싸움에서 15명이 부상당했다. 다음날인 9월 20일, 장성 ‘공해추방위원회’와 고려시멘트는 군당국의 중재로 협상을 열어 “피해보상을 현금으로 한다”는 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나 구체적인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고려시멘트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였다. 12월 20일에는 장성을 삼가2동, 삼월동, 탄광2구 주민 170여명이 광주 충장로 1가 고려시멘트 본사사무실을 점거하여 “공해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나주군에서는 10월 11일, 개답지를 경장하는 나주군내 13개 마을 농민들이 나주농조가 벼의 등숙기에 농업용수를 제때에 공급하지를 않아 1백여 헥타의 벼가 결실이 안 돼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농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10월 17일에는 「나주농민의 소리」 특보 6호를 통해 “정부는

소유행성열병 피해를 전액보상하라!”고 촉구하였다. 그 후 11월 19일, 약 200여명의 소사육농가들이 모여 “소 유행성 열병 피해보상요구” 시위를 나주 축협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11월 25일, 「나주농민의 소리」를 통해 재차 “소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광산 주민 300여명은 12월 20일 하남 3차공단 주민 토지피해보상투쟁을 도청앞에서 전개하였다.

농어민들의 피해보상 투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양식피해보상투쟁이었다.

9월 12일, 강진군 도암면 송학리 50가구 300여명은, 당국이 20여년 간 외지인에 어업권을 쥐서 생활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개인 어업권을 어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10월 18일, 목포에서 어민 300여명이 “해태양식장에 몰려든 담수로 인해” 총 1백5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을 촉구하였다.

10월 20일, 장흥에서는 거주지 제한 없는 수산업법으로 현지어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지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역 외에도 해변을 끼고 있는 많은 농어민들이 양식피해보상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10월 6일, 함평 학교면에서 “상습침수지 독 썰아달라!”며 고막리 140가구 600여명이 전라남도과 함평군에 건의하였고, 10월 20일에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의 200여명의 농어민들이 “중단 방파제 공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또 영광에서는 10월 18일, “원자력 발전소 피해 보상하라!”며 농성시위를 전개하였고, 12월 5일과 12일 “주민생존 위협하는 핵 발전소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벌였다.

이러한 농어민들의 피해보상투쟁은 구체적인 생활상의 요구로서 생존권투쟁으로 전개되었다.

⑤ 1989년 : 농민운동의 조직화

1987년 하반기 이후 전국 62개 군에서 150여회의 수세투쟁과 1988년 8월부터 전국 40여개 군에서 100여회의 고추투쟁의 역량을 결집하여 1989년 2월 13일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90여개 군 2만여명의 농민이 모여 ‘수세폐지 및 고추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여의도 농민항쟁’은 농민대중의 자주적 투쟁의지가 한껏 드러난 것이었고 농민운동의 통일을 촉진하였다.

1989년은 전농련의 기치 아래 수세폐지운동, 어민회의 조직과 활동, 전남여성농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 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농민운동 형식이 나타났는데 바로 영농발대식이었다. 농민대중의 조직과 투쟁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중적인 봄싸움과 가을싸움을 정리화하여 종합적인 투쟁의 축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봄싸움으로서 영농발대식을 전국적으로 198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3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40여개 군에서 전국적으로 영농발대식이 거행되었다. 전남지역에서는 3월 24일 나주(3천여명 참석)와 함평 나산(300여명 참석)에서 거행되었다. 3월 25일에는 무안에서 3월 31일까지 김길호 열사 추모기간을

정하고 추모하다가 4월1일 영농발대식(600여명 참석)을 거행하였다. 3월27일에는 장성(200여명 참석)에서 그리고 4월 3일에는 광산에서 영농발대식이 거행되었다.

나주에서는 중앙로에 3천여명의 농민이 모여 ‘나주농민 수세폐지 및 영농발대식’이란 이름으로 영농발대식을 거행하였다. 1부에서는 “우리는 결코 부당수세를 한푼도 낼 수 없다”는 기치를 높이 들고 수세 경과보고, 차압저지 사례, 결사대 조직보고 및 결사대장 인사와 나주농민 행동지침에 대해 낭독하고 농민가를 제창하며 끝을 맺었다. 2부에서는 농민세상과 풍년을 기원하는 축문을 낭독하고 온갖 잡귀를 몰아내는 무당춤을 추며 소원을 빌었다. 3부에서는 중앙로를 시작으로 농조 앞까지 평화대행진을 벌였다. 이러한 영농발대식 모형은 여러 지역에서 따라 하게 되었다.

가. 수세폐지투쟁과 농조 선거투쟁

1987년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의 함성이 나주들판을 뒤흔든 이후 1988년 전국 70여개 군의 농민들은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총 200여회 이상의 항의시위를 하였다. 마침내 1989년 2월 13일, 여의도에서 전국 90여개 군에서 2만5천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부당수세”를 끝장내기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남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는 2월 25일 광주공원 광장에서 수세폐지전남농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삼중차단으로 열 수 없게 되자, 나주, 광산, 함평, 무안, 승주 등에서 올라온 농민들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소를 호남동천주교회로 옮겨 대회를 치렀다. 5월 16일에는 광주전남 농운련 사무실에서 영산강농조구역 8개군(나주, 함평, 영암, 광산, 장성, 지산, 담양, 광주) 수세폐지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모여 공동수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영산강농조지역 수세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대책위는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수세징수를 저지하고 농조대의원선거에도 공동대처하고 대의원회라는 합법적 기구를 통한 수세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현장에서는 1988년의 투쟁을 이어 연초(사실 농민운동은 3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2월에 마무리하는 1년 주기를 갖고 있다)에도 수세투쟁이 계속되었다. 1월부터 면단위 조직에 들어가 면단위수세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군단위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존에 군단위 대책위원회가 있는 곳에서는 면단위 대책위원회들이 결성되었고 면단위대책위원회들의 결성 위에서 새로이 군단위 수세대책위원회도 결성되었다. 그동안 수세투쟁이 약했던 함평, 영암, 영광, 보성 등지에서 수세폐지대책위원회들이 결성되고 수세폐지대회를 개최하였다. 물론 해남, 장성, 나주 등 수세투쟁을 활발히 해 온 지역들에서도 수세투쟁을 계속하였다.

대책위들이 이미 결성되어 있던 해남에서는 1월 16일 해남군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로 ‘수세폐지 및 강제차압저지 해남농민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월 25일과 3월 1일에는 ‘수세폐지 및 관권개입저지 해남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해남수세대책위원장 윤치영이 구속되었고 6월 18일에는 ‘윤치영위원장 석방 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7월 8일에는 ‘해남 농조대의원 선거대책본부

결성 및 농조대의원 장악 결의대회'를 열고 농조대의원선거전에 뛰어들게 되었다.

해남과 함께 수세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나주에서는 3월 15일 나주농민회,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로 농조의 강제차압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수세폐지투쟁선언문을 발행하였다.

함평에서는 1월 초에 엄다면, 해보면, 손불면에서 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3일에는 해보, 월야, 나산면 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부당수세폐지를 위한 농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대책위는 1월 17일 속보,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세 개의 면대책위가 궐기대회를 한 데 이어, 1월 17일에는 함평군농민위원회 주최로 '수세폐지 및 부채정리를 위한 함평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3월 6일에는 손불면 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손불면 수세폐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광산에서는 1988년에 이어 1월 5일 광산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마을교육을 실시하였고, 1월 13일에는 '수세고지서 반납 및 독촉장 발부저지 광산농민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4월들어 3일에는 광산농민회, 광산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주최하여 '영농발대식 및 수세독촉장 반납 3차 광산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영광에서는 1월 중순에 백수읍(1.10.), 군남면 수세대책위원회와 영광수세폐지대책위원회(1.11.)이 결성되었고, 1월 16일에는 영광군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로 '수세폐지, 농조해체 영광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장흥에서는 1월 12일 장흥군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로 '장흥군 수세폐지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3월 6일에는 장흥군 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군청을 방문하여 관권개입에 항의하고 수세폐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영암에서는 1월 20일 시종면수세대책위원회 주최로 '시종면수세폐지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2월 4일에는 4개 면 수세대책위가 연대하여 '영암 서부지역(미암, 학산, 시호, 삼호) 수세폐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진도에서도 1월 11일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 진도농민 실천대회'를 개최하였고, 3월 2일에는 가톨릭농민회 진도농어민협의회 주최로 '수세폐지 및 농어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진도농어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승주(1.12.), 장흥(1.12.), 장성(1.19.) 보성(1.25.), 담양(2.2.), 화순(2.3.)에서 군단위 수세폐지 농민대회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전남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와 전남수세폐지대책위원회는 2월 17일 수세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행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전남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 주최로 광주에서 '수세폐지 전남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1월에는 미조직된 지역에서 면단위 대책위원회들이 결성되었다. 2,3월 들어서는 이렇게 새로 조직들이 결성된 지역들과 이미 면단위, 군단위 대책위들이 구성된 지역들에서 군면단위

결의대회나 농민대회를 하면서 수세폐지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점차 강제차압이나 압류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수세투쟁은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이라는 수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려주었다. 이러한 대회 이외에도 군면단위 수세대책위원회들은 다양한 수세관련 신문과 성명서들을 발표하고 배포하였다.

그리고 수세투쟁이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농지개량조합 대의원 후보를 내게 되었다. 여름 들어서면서 농지개량조합 선거에 대의원으로 출마한 농민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에 농민운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987년 말부터 확산된 수세투쟁에 놀란 정권은 “수세 5kg으로 인하, 농지개량조합장 직선”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 안을 놓고 농민운동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이 팽팽하게 맞섰다. 두 가지의 입장을 둘러싸고 수많은 격론을 거치면서 영산강농조지역의 7개 군 활동가들은 수세폐지투쟁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농조조합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조 직선”에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가 또한 논란이 되었고, 만약에 농조조합장에 농민운동측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의 후속 대안이 있는가가 문제도 떠올랐다.

드디어 6월 7일 150여명의 농조 대의원 선거에서 농민후보 92명 당선, 6월 28일 박금서 농민후보의 농조조합장 당선, 그리고 이사 5명, 감사 1명을 당선시키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영산강 농조를 농민의 힘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측 대의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농민운동 안에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결국 12월 5일 ‘수세차압 강행결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영산강농조선거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농조선거에서 이사, 감사까지만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전술을 구사하여 농민운동역량을 보존하면서 농조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표-6〉 1989년 전남지역 수세폐지투쟁

일시	장소	투쟁내용
1.5.	광산	광산수세폐지대책위원회, 마을교육 실시
1.7.	함평	엄다면 수세폐지대책위원회준비위원회 결성
1.7.	영암	군서면 수세폐지 결의대회 개최
1.8.	함평	해보면 수세폐지대책위 결성
1.9.	함평	손불면 수세폐지대책위원회 결성
1.10.	영광	백수읍 수세폐지대책위원회 결성

1.11.	영광	영광수세폐지대책위원회 결성
1.11.	진도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 진도농민 실천대회
1.12.	승주	수세폐지 승주,여천,순천결의대회
1.12.	장흥	장흥군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장흥군 수세폐지농민대회
1.13.	광산	수세고지서 반납 및 독촉장 발부저지 광산농민 2차 결의대회
1.13.	함평	해보,월야,나산면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 부당수세폐지를 위한 농민결기대회
1.14.	영광	군남면 수세폐지대책위원회 결성
1.16.	영광	영광군수세폐지대책위원회, 수세폐지, 농조해체 영광농민결의대회 개최
1.16.	해남	해남군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수세폐지 및 강제차압저지 해남농민대회
1.17.	함평	함평군농민위원회 주최 수세폐지 및 부채정리를 위한 함평 농민대회
1.19.	장성	수세폐지와 농조해체를 위한 제2차 장성농민결의대회
1.20.	영암	시종면 수세폐지대회 개최
1.25.	보성	보성군농민회, 수세폐지 보성군 농민대회
1.31.	장성	수세폐지, 농조해체 삼계, 삼서농민 결의대회
2.2.	담양	담양군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수세폐지, 농조해체 담양농민결의대회
2.3.	화순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을 위한 화순농민결기대회
2.4.	영암	영암 서부지역 (미암, 학산, 시호, 삼호) 수세폐지결의대회
2.17.	전남	전남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 전남수세폐지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행
2.25.	광주	전남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 주최 “수세폐지 전남농민대회”
2.25.	해남	해남수세폐지대책위원회, 수세폐지 및 관권개입저지 해남농민대회
3.1.	해남	해남수세폐지대책위원회, 수세폐지 및 관권개입 저지해남농민대회
3.2.	진도	가톨릭농민회 진도농어민협의회 수세폐지 및 농어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진도농어민 결의대회
3.6.	함평	손불면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 손불면 수세폐지 결의대회
3.6.	장흥	장흥군 수세폐지대책위원회 군청방문
3.15.	나주	나주농민회, 수세폐지대책위원회 주최 농조의 강제차압계획에 대한 기자회견 및 수세폐지투쟁선언문 발행
3.23.	영암	신북면농민회 주최 차압저지 농민대회
4.3.	광산	광산농민회, 광산수세폐지대책위원회, 영농발대식 및 수세독촉장 반납 3차 광산농민 결의대회
6.18.	해남	해남수세폐지대책위원회, 윤치영위원장 석방 환영대회
7.8.	해남	농조대의원 선거대책본부 결성 및 농조대의원 장악 결의대회
9.4.	강진	강진군농민회, 수세강제압류 항의 농성

〈표-7〉 1989년 전남농민들의 추곡수매투쟁

		지역	투쟁내용
9월	12일	함평 영암 미암면	300여 농민 쌀값결의대회 개최 뒤 행진 100여 농민 쌀값쟁취, 전량수매쟁취 결의대회
	19일	강진	300여 농민 쌀값결의대회 개최
	20일	전남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 쟁취 전남대책 준비위원회 결성
	25일	장흥 대덕면	농민회 결성 및 쌀값쟁취 결의
10월	3일	영광	농민 500여명이 모여 “쌀값쟁취 및 전량수매쟁취 결의대회” 개최한 뒤 시가행진
	14일	무안 몽탄면	농민 200여명이 모여 “쌀 대책위” 결성하고 대회
	25일	전국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전국대책위원회” 결성
	28일	해남	150여 농민들 “해남군 쌀 대책위” 결성
11월	2일	무안	300여 농민 모여 “쌀값쟁취 및 전량수매쟁취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시가행진
	4일	전남	“전남 쌀 대책위” 기자회견, 11월 15일까지 한시적 수매거부와 전량수매 요구, 11월 15일 전국농민대회에 적극 참여 결의
	6일	해남	1,000여명의 농민들이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시가행진
	7일	승주	300여 농민 “쌀 결의대회” 이후 시가행진
		진도	300여 농민 “쌀 농민대회” 이후 시가행진
		담양	700여 농민 “쌀값 농민대회” 이후 시가행진
		강진	800여 농민 “쌀값 농민대회” 이후 시가행진
		화순 춘양면	200여 농민 “쌀값 농민결의대회” 개최
		함평	다수의 농민회원들 쌀값전단 뿌리고 농협항의 방문
	8일	곡성	200여 농민 “쌀값 결의대회” 이후 군청까지 시가행진
		화순	200여 농민 “쌀값 결의대회” 이후 농협방문
	9일	장성	300여 농민 “쌀값 결의대회” 이후 군청까지 시가행진
	10일	나주	1,000여 농민 “쌀값 결의대회”
		영암	100여 농민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 쟁취” 선전전
	11일	고흥 동강면	200여 농민 “쌀값 대회” 개최
		광산 동곡면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회가 무산됨
	13일	구례	300여 농민 “쌀값 결의대회” 개최
		광주	전남 기독교 목회자들 “쌀값 쟁취결의대회” 개최
	14일	신안	50여 농민 신안군청에서 “쌀값 결의대회” 개최
		고흥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회 무산
	15일	전국	전국농민대회에 전남지역 16개 군에서 1,000여명 상경
		각 지역	전남의 각 군에서 경찰의 불법적 탄압에 항의 농성
	20일	영광	가톨릭농민회 “89 추수감사제 및 쌀값결의대회”, 300여 농민집회 뒤 시위

9월 중순 들어 추곡수매투쟁은 ‘쌀값결의대회’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하는 식이었다. 함평과 강진에서 그리고 영암과 장흥에서는 면단위 쌀값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 쟁취 전남대책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 대책위는 11월 4일 기자회견을 하여 쌀투쟁을 복돋우었다. 10월 들어 영광과 해남에서 그리고 무안의 몽탄면에서 대책위를 결성하거나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지역활동에 힘 입어 10월 25일에는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전국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쌀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11월 들어 전남 각 지역의 군단위 또는 면단위에서조차 200여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의 농민들이 집결하여 대회를 열고 군청 등으로 향의 시가행진을 하였다. 6일 해남농민들의 결의대회 개최와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7일에는 6개 군에서 그리고 이어서 14일까지 각 지역별로 쌀값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가행진을 하거나 선전전을 하였다.

이러한 열기를 모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는 전남지역 15개 군에서 1,000여명이 상경하여 쌀값 보장을 요구하고 그 방법으로 전량수매를 요구하였다. 한편 같은 날 전남의 각 군에서는 경찰의 탄압에 항의농성을 하였다. 함평, 승주, 곡성, 담양에서는 군청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하였고, 나주와 진도에서는 평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해남에서는 도로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톨게이트와 터미널에서 항의시위를 하였다.

이렇게 각 면이나 군에서 대회 형식을 통해 힘을 모아 전국농민대회에 결합하는 상경투쟁을 하거나 동시에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투쟁을 하는 방식은 농민운동이 통일된 1990년대 투쟁의 형식을 미리 보여주었다.

다. 어민투쟁과 전남어민회의 결성

1970-80년대 어민들은 지리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권으로부터 외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비해 정보교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어민들은 경제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소외당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낙후되는 심한 불평등을 겪어야 했다.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국공유 수면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업권의 면허허가 등을 얻어야만 생산 활동이 가능한데, 이러한 인허가 사항에 국가권력의 통제와 지방유지 등의 이권개입 등으로 생산현장의 배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행정력의 간섭과 횡포가 심하였다. 수협은 본래의 목적인 어민들의 공동이익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생산력의 증강도모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전혀 못하면서 오히려 관료 집단이 되어 어민을 지배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여천공단, 광양제철소, 영광원자력발전소 등 공해산업이 대거 임해지역에 건설됨에 따라 연근해 어장의 오염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어민들의

삶터이자 젓줄인 바다와 갯벌은 황폐화되고 노후하여 생산력이 격감되었으며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황금어장을 잃은 어촌의 생활상은 피폐일로에 있었다.

전남지역 어민들은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수협이 횡포에 대해 항의하곤 하였다. 1986년 9월 12일에는 해남 어민들이 황산면 인근 4개 부락 간척사업으로 인한 김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987년 11월 2일에는 완도 어민 300여명이 수협공판장에 모여 ‘면세 유류의 정량공급, 고급어종의 가격조작 금지’ 등 11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하였다.

1988년 들어 어민들은 다양한 어업관련 문제들을 제기하고 건의하고 항의하고 시위하기 시작하였다. 완도에서는 1월 27일 군내 32개 어촌계가 염장미역 수출배정량을 늘려줄 것을 수협도지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다. 4월 21일에는 완도지역 양식어민들이 읍·면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9월 6일에는 무허가 해태양식장 어민들이 해태어장을 양성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건의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10월 20일에는 미역가공업자가 수출부진을 핑계로 어민들에게 미역대금을 체불하자 700여명의 어민들이 이에 항의하여 시위하기에 이르렀다. 진도에서도 6월 28일 미역가공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생산어민들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어업권과 관련한 건의, 소송제기, 투쟁 등이 이어졌다. 2월 4일에 여천에서는 중흥, 신평, 화사, 두암 어민 200여명이 자연산 새조개 채취권을 달라고 건의하였다. 4월 22일 광양에서는 광양제철을 상대로 태금면 대인도 어민들이 어업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어 6월 23일에는 골약면 광영리 주민 500여명이, 6월 24일에는 태금면 태금리 주민 500여명이 광양제철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해남에서는 7월 6일 송지면 동현리에서 ‘염수피해보상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7월 19일에는 북평면 김양식피해농어민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17만 해남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해남군청공무원 등의 폭력행위를 규탄하였다. 8월 4일과 24일에는 송지면 719가구가 우근방파제로 인해 조류소통이 안 돼 피해를 입었다며 어업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나 피해원인 제거 및 중단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9월 12일 강진도암면 송학리 50가구 3백여명의 어민들은 어업권환수투쟁을 벌였으며, 9월 26일 광양군 진상면 수어천 주민들은 어패류 패사원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다. 10월 18일 목포어민 3백여명은 해태양식장에 흘러든 담수로 15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성하였다. 10월 20일에는 신안 흑산면 가거도 어민 2백여명이 방파제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다. 장흥에서는 10월 20일 지선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양식면허규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보상이나 피해원인 제거 요구에서 더 나아가 생산비보장의 요구도 제기하였다. 12월 14일 고흥군 단장리 김양식어민 20여명은 김생산비보장과 자유판매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다. 진도에서는 가농 진도군협의회 어민분과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 농어촌조사위원회 명의로

“김값 폭락으로 영세어민 다 죽는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정부수매 쟁취하자!”란 성명서를 내며 항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촉발하는 어민교육이 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의 활동가와 현장 활동가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 활동가들은 어촌지역실태조사⁹⁹⁾를 기반으로 하여 육지보다도 더 경직된 마을구조 속에 사는 어민들을 마을 밖으로 불러내 교육시키면서 조직화하도록 촉진해 나갔다. 빼앗긴 마을공동어장이나 꼬막밭을 찾는 일에서부터 마을의 권위적 지배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일을 어민들 스스로 하도록 촉진하였다.¹⁰⁰⁾

1988년에 이러한 다양한 어민투쟁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어민회 조직의 움직임이 진행되었고, 1989년에는 4월 이후 진도와 해남, 그리고 고흥, 보성, 완도, 장흥에서 읍면·마을 어민회가 결성되었다. 그 와중에 어민관련 각종 소식지들이 발행, 배포되었다. 해남YMCA농어민회의 ‘농어민의 소리’가 1986년 9월에 창간된 이후 계속 발행되었고, 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에서 나오는 본격적인 어민 회보 ‘어민의 소리’가 발행되었다. 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농어민’ 신문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해남군 기독교농민회도 ‘해남농어민신문’이란 제목의 신문을 냈다. 그리고 신안사회운동협의회에서 발간한 ‘신안농어민신문’, 그리고 해남의 면단위 송지농어민회에서 낸 ‘송지농어민소식’ 등이 있었다.

이러한 투쟁과 교육 그리고 선전활동 속에서 드디어 1989년 12월 20일 전남 9개 군, 21개 마을분회, 321명의 회원으로 전남어민회가 결성되었다. 전남어민회의 조직화에는 1987년부터 전남지역 어촌실태 조사연구를 해온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에서 어민조직화를 담당했던 최성호¹⁰¹⁾의 활동이 있었다. 서로 섬이나 해안에 떨어져 살고 있는 어민들이 모여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전남어민회는 1990년부터 어민생존권과 관련된 권익실천활동을 펼쳤으며, 1991년에는 해상시위까지 하였다.

3. 여성농민들의 투쟁과 조직화

여성농민들의 활동은 남성들과 함께 하기도 했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해 나가기도 했다.

1) 여성농민투쟁

1970년대말 부터 시작된 전남 여성농민운동은 가톨릭농민회 여성부, 기독교농민회 여성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청로거부운동, 농지세 시정운동 등 농민권익을 찾기 위해 앞장서 왔다. 1980년대 들어서 전남지역에 가농 여성분회가 조직되어 활동해 왔다. 1984년 함평의 동백, 장미 분회, 무안의

99)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 『어촌실태조사연구보고서』 (광주, 1988).

100) 『가농 광주연합회 40년사 1』 (광주, 가농), 664-679쪽.

101) ‘어촌을 돌며 어민회를 조직하다.’ (최성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3』, 농민운동가편, 5.18기념재단, (광주, 2009), 397-401쪽.

무궁화분회, 1985년 함평의 입석, 도동, 옥산 분회 등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1984년 4월 10일 가농 함평연합회에서는 고태도에서 ‘함평지역 부녀야유회’를 개최하였다. 가농 여성분회들은 생필품공동구입,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모내기, 공동벼베기 등의 협동활동을 하고, 공동 장보기, 화학조미료 안쓰기 그리고 시청료거부투쟁과 풍물익히기 등 활동을 벌여왔다.

그리고 전남지역에서는 이미 1984년에 여성농민들이 중심이 된 투쟁이 있었다. 1984년 현경면 용정리 기독교농민회 여성회원들의 을류농지세 시정 활동이 그것이다. 이를 계기로 군 단위 여성농민활동가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현경면 신촌마을에서는 월례 모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1985년 소몰이투쟁, 1987년 수세투쟁, 1988년 의료보험개선투쟁, 고추투쟁에 수많은 여성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해 왔다. 연도별로 살펴보자.

1985년 가농에 속한 여성 농민들은 하반기에 있었던 함평, 무안 소싸움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싸움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분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함평 동백분회는 협동 구매 구판사업, 공동작업, 공동기금 조성 등을 꾸준히 실천하였고, 월례회, 분회교육, 야유회, 대보름놀이 등을 통하여 분회의 결속도를 높였다. 새로 구성된 나주의 옥산분회와 입석 도동분회는 공동작업이나 공동기금 조성 등을 해 나갔으며, 월례회와 학습회도 해 나갔다. 가농 연합회에서는 나주, 무안, 함평 동부, 구례에서 6회에 걸쳐 여성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나주지역에서 분회가 구성되었다. 1985년에 가농 전남연합회는 도 단위 여성교육을 남성회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여성회원 스스로 여성들만의 모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기농도 1985년에 무안군에 4개의 여성분회를 조직하였다. 기농의 여러 교육에 여성농민위원회 활동이 있었다. 여성농민들은 전국단위 교육활동에도 참여하였지만, 지역 단위 활동으로 무안의 경우 용정(3월7일), 흥릉리(8월22일), 유월리, 평산 몽탄 등에서 지역교육이 있었고, 강진 회선리, 나주 대지리 등에서도 지역교육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지역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함평농우회(6월18일), 해남 기장여성신도회(9월5일)의 여성교육에도 참여하였다.

가농 전남연합회에서는 여성들의 조직화를 도모해 왔다. 1986년에 잉읍(나주 봉황), 알뜰(나주 다시), 수한(구례 광의), 도동(영광읍)분회 등에 20여 명의 회원들이 4개 분회를 조직하였다.¹⁰²⁾ 여성분회에서는 마을 기초교육(4회), 입회자 교육(1회), 중심인물 육성을 위한 파견 교육(3명)을 실시하고, 각종 학습자료를 배포하고 학습일지를 기록하였다. 잉읍, 동백, 도동분회(학습회 포함)에서는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동백, 잉읍, 도동분회의 공동작업과 알뜰분회의 논농사 협업화 등 생산활동과 도동, 동백분회에서 야유회 겸 단합대회가 있었다. 동백분회는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과 일상실천활동을 하면서 여성농민들은 농민운동에도 참여해 왔다. ·

102) 전남연합회에 소속된 여성분회는 1983(4?)년에 조직된 동백분회(함평), 장미분회(함평), 무궁화분회(무안)와 1988년에 만들어진 나리분회(진도)를 포함하여 총 8개 분회가 활동하였다.

1986년에 기농도 마을단위 여성농민기초교육을 농한기에 집중하여 실시하였다. 무안 용화교회에서 두 번에 걸쳐 농민교육이 있었는데(7월 21-23일, 담양군 교육, 25명 참석; 8월 20-23일, 무안, 강진, 해남, 담양 교육, 35명 참석), 이 교육에는 여성농민회원 수명이 참석하였다.

기농은 4월 19일에 '수입개방저지 및 미국예속정권타도를 위한 무안농민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안읍 일원과 해제면 소재지, 망운면 소재지 등에서 열린 무안농민실천대회에서 농민들은 미국예속정권타도라는 구호를 제기하면서 수입개방저지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이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전달조 활동을 하였다.

1987년에 가능 소속 여성농민들의 활동을 보면, 교육사업으로는 마을교육 6회, 입회자 교육 28명, 여성연수 120명, 중심인물 육성을 위한 여성 장기교육(1차 3명, 2차 5명), 파견교육과 각종 학습자료 배부 등을 실시하였다. 잉읍과 도동분회는 자체적으로 학습모임을 가졌다. 연합회 단위의 여성분과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잉읍, 동백, 도동, 장미, 알뜰 등 여성분회에서는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가졌다. 생산협동활동으로 동백, 잉읍, 도동분회에서는 공동작업을, 알뜰분회는 논농사 협업을 실시하였다. 나주 잉읍분회는 병막걸리를 통막걸리로 시정하는 활동을 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대부분의 여성분회에서는 풍물을 전수받아 마을잔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다. 8월 13일에는 남평 드들강에서 250여명의 남·여회원이 참가하여 '여성농민단합대회'를 가졌다.(여:150명, 남:100명)

1988년에는 기농 소속 여성농민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농민에게 의료혜택은 커녕 부담만 주게 된 농어촌의료보험에 대해서 기독교농민회는 연초부터 개선운동을 벌여나갔다. 특히 여성농민위원회가 활동하던 무안에서는 여성농민들이 의료보험투쟁을 전개하였다.¹⁰³⁾

1988년 1월 22일 무안 유월리를 시작으로 용정, 수양촌 등 5개마을 2개 교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여성농민들은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을별로 의료보험거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마을별 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면사무소나 군의료보험조합에 고지서를 반납하였다. 이에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싸움을 전개하기 위해서 2월 초 무안여성농민들은 '무안군 의료보험 여성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을마다 스스로 작성한 대자보를 붙이면서 "진정한 의료보험제도를 우리 손으로"라는 홍보전단을 통하여 2월 10일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 여성농민대회'를 알리고, "현행의료보험 무엇이 문제인가?"를 선전하였다. 그 내용은 "농민실정 무시한 과다 보험료," "불공평한 보험혜택," "전국을 일원화하는 통합주의를 실시하라," "현 무안군 의료보험조합은 민정당의 직업 알선소다," "농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등을 담고

103) 12월 선거기간 중에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농어촌의료보험증을 배포하였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요구한 의료 보험료는 도시의 50만원 월급을 받는 회사원과 맞먹는 것이었다. 호당 평균 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너무나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연고로 농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색깔이 다른 또 하나의 세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있었다. 2월 10일 ‘무안군의료보험 여성대책위원회’ 주최로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여성 농민대회”를 200여 여성농민들이 주로 참여한 가운데 무안을 장터에서 개최하였다. 대회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성명서를 채택하고 난 후 시가행진을 하여 무안읍사거리까지 와서 부당의료보험제도를 규탄하는 대회를 계속하였다. 대회 이후 여성농민들은 의료보험조합을 찾아가 의료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반납하였다. 이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농어촌의료보험)을 하나의 전국적 보험 단위로 통합하는 '통합의료보험법안'이 1989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입법되었다.¹⁰⁴⁾

무안여성농민들은 의보개혁투쟁에 이어 고추투쟁을 주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1988년 10월 26일부터 무안군 현경면 수양촌 여성농민들은 고추투쟁을 통하여 그들이 요구한 가격으로 추가 수매를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1989년 1월 24일에 '무안군여성 농민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2월 1일에 무안 ‘현경면여성농민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여타 여러 지역에서도 농산물제값받기 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진출이 일어났다.

이처럼 전남지역에서 여성농민들의 대중투쟁 참여는 1987~1988년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1987년 나주 수세투쟁에 여성농민 대중(전체 참가자의 30%정도가 여성)이 참가한 것을 비롯해 1988년 상반기에 나주·해남을 중심으로 벌어진 수세투쟁, 함평·무안의 의료보험조합개혁투쟁, 영암·무안·신안·영광 등지에서 소작농을 중심으로 전개된 토지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이 전체 참가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증가했다. 질적으로도 투쟁 대오에 자리잡거나 앞장서서 몸싸움을 하는 식으로 발전했다.

1987년 말부터 전개된 수세폐지투쟁을 통해서 급격하게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농민들의 투쟁력은 이어 의보개혁투쟁, 고추투쟁, 토지무상양도투쟁에서 상당히 고양되었다.

무안여성농민들은 1988년 ‘무안의료보험여성대책위원회’라는 여성농민이 주체가 된 전국최초의 과제별 조직을 결성하여 여성농민투쟁조직의 새로운 전형을 낳았다. 무안여성농민들은 의보개혁투쟁에 이어 고추투쟁을 주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농산물제값받기 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세폐지투쟁에서 보면 여성농민들이 투쟁현장에서의 단순참여를 극복해 나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양태로는 투쟁지도부에 여성농민이 참여하여 투쟁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거나 혹은 즉석 선동가로 나서기도 하고, 마을별로 조직동원하여 투쟁에 참여하는 등 점점 더 조직적 투쟁양상으로 발전해 갔다. 특히 함평 나산의 경우 처럼 부녀총회를 통해 투쟁의 필요성, 참가방법, 재정충원 등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마을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토지투쟁이 전개된 영암의 경우 투쟁 자체가 장기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여성농민들의 참여가 지속적 결집력을 갖고 끈질긴 투쟁참여와 가두진출을 이뤄냈다. 해남과 신안의 경우 여성농민이

104)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농민세상』 (서울, 1988년 3월), 54-55쪽.

투쟁집행부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해냈다.

그러나 투쟁의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현상은 아직 개별적인 투쟁진출 위주로 되었으며, 설사 투쟁지도부에 여성농민이 참여했다 할지라도 여성농민의 대중조직을 갖고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고 했다고보다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 기능적 측면에서 했다. 이것을 극복하면서 새롭게 진출한 곳이 고추제값받기 싸움을 벌인 무안여성농민운동이었다.

이러한 1988년의 투쟁 위에서 1989년 2월 13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전남지역에서 500여명의 여성농민들이 참여하여 상경투쟁을 하였고, 이후 왜곡보도를 일삼는 KBS를 규탄하는 속보를 발행하였다. 또한 여성농민들은 5월에는 전남농활공동추진위원회에 결합하여 대학생들의 여름농활을 함께 수행하였다. 또한 나주, 장성, 광산이 극심한 수해피해를 당하였는데 나주, 장성은 읍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여론화가 크게 되었으나 농민들의 피해가 큰 광산은 고립되어 있으므로 광주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수해대책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도시지역 여성들은 의류와 모금을, 여성농민들은 쌀과 양념류(세 트럭분)를 지원하였다. ·

특히 1989년 쌀 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은 보다 주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쟁에 참여하였다. 쌀값과 전량수매라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스스로 마을교육을 준비하고 실천했고, 11월 대회 역시 계획,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히 주체로서 참여했다. 9월-10월에는 화순군 춘양면, 진도, 강진을 중심으로 추곡수매투쟁준비에 들어가 60여 곳에서 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전량수매투쟁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12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여성농민위원회 결성대회에 전남여성농민 60여명이 참여하였고, 지역에서는 "여성농민 뚝뚝뚝 전량수매 쟁취하세"라는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전단을 3,000부 만들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일터에서, 마을회의에서 배포하였다. 전남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는 1990년에도 꾸준히 활동하여 마침내 1991년 3월 9일 '전남여성농민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면 전남지역에서 1989년 쌀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의 투쟁과정을 각군별로 살펴보자.

무안에서는 1월 24일에 무안군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무안군 안에 있는 면단위에서 여성농민회가 결성되었다. 즉 2월 1일 무안군·현경면여성농민회가 오전 10시 30분 현경면 단위조합 2층 회의실에서 여성농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 면단위 여성농민회로 결성되었다. 1988년 의보투쟁, 군청 고추싸움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여성농민들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소외된 여성농민의 권익을 실천하고 입장을 대변하며 조직, 교육사업을 통해 농민문제의 해결에 노력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무안군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여성농민 회보 '강강수월래' (창간호, 4.28. ; 2호, 10.10.)를 발행 배포하였다. 창간호에서는 정치정세, 여성농민의 나아갈 길, 무안군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여성농민들의 삶, 어머니가 딸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완이 아빠를 보내고(김길호 열사 부인의 수기), 수세투쟁의 방향 및 앞으로의 전망, 의료보험 농어촌에서의

문제점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2호에서는 정세보고(공안정국과 민중운동의 진로), 특집으로 여성농민회와 교직원노조의 좌담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학부모님에게, 학부모가 교사에게, 미국은 진정 우리의 우방인가?(핵), 쌀값과 전량수매, 농촌탁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탁아입법을 앞두고), 수해농민, 마을 소식(수양촌 사람들), 동화, 용정·수양리 양파·마늘 생산자협회 준비위 발족 등을 담아냈다. 기존의 회보들과는 달리 삶의 문제에 천착해 나갔다.

무안군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는 12월 14일에는 ‘고추싸움 승리 1주년기념대회’를 무안군청 군민회관에서 2백여 명의 여성농민들과 1백여 명의 남성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고추싸움 경과보고 및 농업농민문제의 본질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부락별로 민중가요 경연대회를 가졌다. 1988년 12월14일부터 열흘 넘게 했던 무안여성농민들의 고추싸움의 승리를 기리는 자리였다.

나주에서는 2월 9일 나주여성농민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도, 봉황, 다시, 동강, 금천, 세지 등 6개면에서 45명의 여성농민이 나주에서 모여 ‘현정세와 여성농민운동 현황’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주지역에서 여성농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그 결과 여성농민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마을, 면, 군조직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주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를 만들고 11개 마을 책임자를 선정했다. 또한 준비위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토론을 벌여 조직활동, 교육활동, 홍보활동, 재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하였다.

이처럼 교육을 하면서 조직을 해 나가게 되었다. 2월 17일 곡성 고달면에서 여성농민 마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70여명의 여성농민들이 모여 노래도 배우고 수세투쟁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농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러한 교육은 장성과 화순에서도 진행되었다. 장성에서는 7월 20일 남면에서 여성농민 교육이 있었다. 여성농민 50여명이 참석하여 수입개방과 여성농민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함께하는 놀이시간을 가졌다. 21일에는 남면 선창,선풍에서 20여명의 여성농민이 참석하여 수입개방과 쌀값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12월 15일 삼계면 삼도리에서도 여성농민 마을교육이 있었다. 여성농민 20여명과 아저씨 5명이 참석하여 일반벼 수매문제에 관한 교육을 받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화순에서는 7월 6일 춘양면 여성농민 교육이 있었고, 4개 마을 11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춘양면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임원선출을 하고 다음 모임날짜를 잡았다. 이어서 춘양면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가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를 위한 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10월 30일에는 여성농민 21명이 참석하여 쌀값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는 11개 부락 170여명의 여성농민이 교육을 받았고,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를 위한 서명운동도 벌였다. 이러한 교육에 이어서 11월 7일 춘양면 여성농민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대책위원회 주최로 오전 10시 춘양면 지서 앞에서 200여명의 농민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강진에서는 7월 농촌활동 기간에 여성농민들이 적극 결합하였다. 그리고 9월 24일 강진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가 제1차 여성농민 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동안에 걸쳐 작천면 토마리를 시작으로 5개면 40개 부락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쌀값 119,684원 보장, 전량수매 실시의 당연함과 농산물가격정책은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미국 농축산물수입은 적극 저지해야 하며 추곡수매가 결정은 농민의 주체적 참여 속에서 쟁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7월 농촌활동 기간 동안 행해진 마을 강연회에서 관계를 맺은 작천, 군동, 칠량, 도암지역 여성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농민회 창립을 준비해 갔다. 특히 9월 하순과 10월 초에 추곡수매 문제를 갖고 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결합된 40여개 마을부녀회가 참여하면서 11월 20일 강진군여성농민회가 창립되었다. 오전 10시 다산 연구원에서 4개면 각 부락대표 35명이 참석하여 창립대회를 가졌다.

그 외에도 영암에서는 면단위 발대식이 있었다. 2월 20일 영암 시종면농민회 여성회원 발대식 및 농어촌의료보험통합일원화 결의식이 여성회원 70여명과 농민회원 60명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여성농민운동 전남 대표자 인사소개와 농어촌의료보험 통합일원화에 대한 결의문 낭독, 전남 여성농민회준비위 경과보고 등을 갖고 부회장, 운영위원, 간사 등 임원선출을 하였다. 함평에서는 3월 6일 함평농민위원회 여성위원회 결성식이 있었다. 임원선출을 한 뒤 사업계획으로 부채상환거부운동, 중학교의 의무교육 쟁취, 농촌 환경오염실태조사, 경제사업 등을 내세웠으며, 회비는 경제사업분과를 활성화해서 충당하고 자율적인 회부납부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2) 조직

여성농민들을 조직하려는 활동이 이미 있어 왔다. 가톨릭농촌여성회가 1979년 2월 무안군 일로면 임성과 몽탄에서 여성농민 마을교육을 실시했지만 조직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4년 농민 생존권 위기를 거리투쟁으로 극복하려는 함평·무안 농민들의 농민대회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에는 농민투쟁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어 갔다. 여성농민의 독자적 조직화 움직임에 대해 분파주의라는 반대 논리는 1985년 소몰이시위를 통해 거의 극복되었다.

1986년 말에 이미 도단위 여성농민운동을 조직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86년 12월 말 사회선교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여성농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석했던 여성농민운동 활동가들¹⁰⁵⁾이 도 여성농민모임을 논의하면서 1987년 4월, 6월, 7월, 8월에 모임을 갖고 도 여성농민 조직화를 추진했으나 1987년 9월 회의가 무산됨으로써 중단되었다.

1987년에는 여성농민의 독자적 조직화를 위한 활동이 많은 군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 전남지역의 여성농민 조직화 현황을 보면, 가농 여성분회는 구례, 나주(알뜰, 잉읍), 영광, 진도 등지에 있었고, 가농 여성위원회는 무안에 2개 지회(용정, 해제)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상당한

105) 강경애(강진), 김종분(해남), 오미란(일명 오소현), 이종옥(평주), 조용희(담양) 등.

여성농민운동 활동가들이 마을에서 여성농민 모임들을 만들었거나 준비했다.

다른 한편으로 농민문제연구소¹⁰⁶⁾ 출신의 이종옥(교회여성연합회), 오미란 간사 등 몇몇 활동가들은 수시로 모여 여성농민조직의 방법론을 강구하였다. 가톨릭농민회여성부, 기독교농민회여성위원회의 소그룹적 범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며 기존의 자모회와 계, 부녀회 등을 여성농민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를 토대로 1987년 여름농활과 결합하여 부녀회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8년과 1990년 부녀회활동조사를 통하여 소그룹적 분회조직을 건설하기보다는 부녀회를 여성농민운동조직으로 전환시켜내는 것이 여성농민대중조직 건설의 핵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여성농민운동이 농민회에 종속되어 여성농민의 고유한 입장에 기반한 창조적인 활동이 부재했다는 반성에 따라 여성농민들의 힘을 주체적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활동가들은 여성농민조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강진군과 해남군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였다. 1988년을 전후하여 전남도내 곳곳에서 여성농민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분출된 여성농민들의 힘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전남지역에서 1988년 들어 여성농민조직이 여러 곳에서 준비되었다. 가농의 여성분과 소속의 7개 분회와 무안, 해남, 진도, 강진, 나주 등지에서 면단위, 군단위 여성농민조직이 건설되고 있었는데, 조직화의 방식은 거의 대부분 교육과 투쟁을 결합시키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조직위상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분회, 지회, 분과위원회식의 기구적 조직이 아니라 여성농민회라는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진전시키는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무안의 경우 군단위로 '무안군 여성농민회 준비위원회', 면단위로 '현경면여성농민회'가 창립되었고(89.2.1), 강진군의 경우 '군동면여성농민친목회'가 창립되었다.(88.8)

전국 여성농민운동조직의 결성은 1989년 1월 20일 '활동가간담회 준비소위'가 꾸러지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1989년 3월 1일 전국여성농민활동가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 여성농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농민의 자주적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여성농민 조직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989년 6월 24일까지 5차례의 회의와 실무회의, 분과회의 등을 거듭하였으며, 1989년 8월 7일 2차 여성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차모임에는 기독교농민회여성농민위원회와 여성농민모금위원회, 그리고 7개군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직체계와 명칭을 결정하고 1989년 12월 18일 '전국여성농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표-8〉 1989년 전남지역 군여농(준비위)창립 현황

106) 기독교학생운동권출신으로 전남기독교농민회 총무와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나상기가 1987년 광주에 개설한 연구소로, 지역에 있는 농업관련 학자와 함께 정책대안수립, 현장조사연구, 세미나개최, 해외농민 운동자료소개 등의 일을 하였다.

일시	조직명칭	참가자
1989.1.24.	무안군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70여명(11개 마을)
1989.2.1.	무안군현경면여성농민회	
1989.2.9.	나주군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1989.2.	영광군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1989.2.20.	영암군시종면농민회 여성회원 발대식	여성회원 70명(남성회원 60명)
1989.3.6.	함평농민위원회 여성위원회	12명(4개 마을 대표)
1989.7.6.	화순군춘양면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1989.11.20.	강진군여성농민회	
1990.7.30.	해남군여성농민준비위원회	280여명
1990.11.6.	진도군신의면여성농민회	70여명
1990.11.19.	해남여농준비위 송지면지회	18개 부락에서 참여
1990.12.11.	해남군여성농민회	300여명
1991.3.9.	전남여성농민회	전남대 대강당

『전남지역 농민운동주요활동』(농민문제연구소, 1990.3)

『전남여성농민회 결성대회』 자료(전남여농, 1991.3.9.)

이러한 전국여성농민의 조직화와 발맞추어 전남지역의 여성농민운동조직화도 진행되었다.

농민운동의 통일에 발맞추어 여성농민운동도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뜻이 모아지면서 그간의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가농, 기농 및 그밖의 여성농민들이 모임 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1989년 1월 18일-19일 이틀 동안 전남지역 여성농민활동가 간담회를 목포 한산촌에서 개최하였다. 여성농민 통일을 위한 간담회였으며 여기서 전남여성농민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결성식은 '전남 제1차 여성농민활동가 간담회'로 소집되었으며, 28명(강진 2명, 광산 2명, 광주 4명, 나주 5명, 무안 8명, 진도 1명, 함평 4명, 해남 2명)이 참석하여 전남지역의 여성농민조직에 대해 점검하고 임원¹⁰⁷⁾을 선출하고 전남여농준비위 활동을 확정하였다.

2월 10일 전남여성농민회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각 지역별 여성 농민대중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들이 토론되었고, 2.13여의도 농민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107) 위원장 이정옥, 사무국장 이종옥, 조직부장 주향득, 교육부장 유정자, 선전부장 오미란, 재정부장 김종분.

결의하였다. 2월 13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500여명의 여성농민들이 참여하여 상경투쟁을 하였고, 이후 왜곡보도를 일삼는 KBS를 규탄하는 속보를 발행하였다.

1989년 4월 17일 영광군 가농협의회 사무실에서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여성준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보강하고 각부서별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후 여농준비위는 여성농민 조직화를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조직 확산에 주력했으며,

5월 9일 회의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중조직확대에 목표를 두면서 여름농활에 조직적으로 준비,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강사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7월 31일 회의에서는 수해피해농민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나주, 장성, 광산이 극심한 수해피해를 당하였는데 나주, 장성은 읍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여론화가 크게 되었으나 농민들의 피해가 큰 광산은 고립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을 적극 지원할 것과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원활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광주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수해대책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도시지역 여성들은 의류와 모금을, 여성농민들은 쌀과 양념류(세 트럭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전남농활공동추진위원회에 결합하여 농활을 수행하였다. ·

준비위는 8월 30일 여성농민회지 ‘밭두렁’ 창간호를 발행, 배포하였다. ‘밭두렁’에는 여성농민 위원회 교육소식(나도 강사가 될 수 있다), 함께 알아봅시다(수입개방과 농민), 여성농민은 이렇게 합니다(여성농민 행동지침), 탁아소 문제, 전남여성농민 소식 등을 담아냈다.

9월-10월에는 화순군 춘양면, 진도, 강진을 중심으로 추곡수매투쟁준비에 들어가 60여 곳에서 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전량수매투쟁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12월 5일 회의에서는 전남여성농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겨울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세워 나가기로 하였고, 이정옥 준비위원장을 전국 여성농민위원회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12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여성농민위원회 결성대회에 전남여성농민 60여명이 참여하였고, 지역에서는 "여성농민 뽕뽕뽕쳐 전량수매 쟁취하세"라는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전단을 3,000부 만들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일터에서, 마을회의에서 배포하였다.

이처럼 각지역에서 여성농민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면단위 군단위 여성농민회가 준비되고 일부 결성되고 있었다. 전남단위에서의 여성농민대중조직은 그 출발이 1년여 정도 밖에 되지 못하지만 ‘무안군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결성을 출발로 하여 영광, 나주에서의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고 ‘강진군여성농민회’가 건설되었다. 또한 면단위 조직으로는 무안 ‘현경면 여성농민회,’ 화순 ‘춘양면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강진군여성농민회 산하에 4개 면지회가 결성되었다. 특히 1989년 활동으로 두드러진 점은 강진, 화순 춘양에서의 마을부녀회를 여성농민조직으로 전환시켜낸 것이었다.

이렇게 각 지역단위의 여성농민조직이 건설되면서 농협조합장 선거에 여성농민조직이 대응해 나가게 되었다. 농민후보 유무에 상관없이 민정당(집권여당)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여성농민들의

요구가 조직적으로 수렴되어 3개 면에서 집단적으로 선거투쟁을 벌였다.

이전의 마을교육은 외부의 활동가가 지역에 들어가서 추동해 내고 지역 여성농민은 구경꾼이 되었던 감이 없지 않으나, 1989년 쌀 투쟁을 수행한 지역의 경우, 여성농민들이 주인이 되어 수행하였다. 특히 마을부녀회장을 설득해 마을방송을 하고 부녀회의 공식교육으로 쌀교육이 자리매김 함으로 대중성을 획득해 냈다. 이 성과로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군, 면 농민대회를 성과적으로 이루어 내고 부녀회를 여성농민조직으로 전환시켜냈다.

전남에서는 1989년 1월 무안군여성농민준비위 결성을 시작으로 일선 시군조직 결성이 잇따랐다. 1989년 7월 4일 화순군 춘양면여성농민회준비위가 결성되었으며 1989년 11월 21일에는 40여개 마을부녀회가 참가한 가운데 전남지역 최초로 강진군여성농민회가 정식 출범하였다.¹⁰⁸⁾

이어 전남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해남여성농민회가 결성되었다.¹⁰⁹⁾ 해남지역에서는 1987년 공정선거감시운동, 수세거부투쟁을 통하여 몇몇 활동가 사이에서 여성농민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활동가 가운데 2명은 기독교청년회출신, 2명은 현장출신이었으며 1명은 학생운동권출신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투쟁현장에 여성농민을 동원하는 정도였을 뿐 조직을 꾸리는 데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이들은 우선 여성농민정서에 맞는 교육을 하면서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기로 하고 1988년 7월 ‘해남여성농민교육준비위원회’ (이하 교육준비위)를 구성하였다.

교육준비위는 이름그대로 여성농민교육에 주력하였다. 마을의 공식적인 여성농민조직인 부녀회를 여성농민조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마을교육에 임하였으며 각종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여농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해남군 7개마을을 중심으로 결성된 해남여성농민모임은 교육, 투쟁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여성농민활동가를 찾아내고 유자차·무농약고추판매를 통하여 재정자립을 시도하였다. 여성농민모임은 1990년 1월 4개 마을농민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여성농민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대학생하계농촌봉사활동을 기점으로 여성농민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1989년 강진여성농민회 건설의 촉매역할을 해낸 성신여대농활팀을 해남지역에 파견해 달라고 요구하여 9개팀이 추가 배치되었다. 농활팀은 여농활동가가 있는 3개면 9개 마을에 배치되었다. 여성농민모임회원 11명이 조를 짜서 14개 마을을 순회하며 분반모임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단 군농민회사무실에 오후 5시30분까지 모여 자료를 챙기고 오후 6시·7시 사이에 교육할 마을로 들어갔다. 농활숙소나 여농활동가집에서 저녁을 먹고 밤 9시30분이 넘어 분반모임이 시작되었다. 밤11시쯤 교육이 끝나면 농민회에서 지원해준 오토바이나 트럭을 타고 농민회사무실에 모였다가

108) 이어 1990년 들어 진도군 의신면여성농민회(11월 6일), 승주군 주암면여성농민회(11월 19일), 해남군여성농민회(12월 11일)가 속속 결성되었다. 준비위는 1991년 1월 제8차 회의를 갖고 ‘전남여성농민회’ 결성대회를 위한 실무소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1년 3월 9일 ‘전남여성농민회’ 결성대회가 열렸다. 전남도내 3개 군조직, 7개 면지회, 3개 면여성농민회, 110여개의 마을조직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전남여성농민조직을 선포한 3·9창립대회는 7개군 500여명의 여성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남여농은 초대회장장에 한한순, 부회장에 오본임, 총무에 이종옥을 선출하였다. 『전남여성 100년』, 제7장 위대한 어머니(1980년대), 315-329쪽

109) 『전남여성 100년』, 제7장 위대한 어머니(1980년대), 315-329쪽.

각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오후5시에 집에서 나오면 새벽1시에 들어갔으니 단단히 결심하지 않고서는 해낼 수가 없었다.

농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마을별로 분회조직에 들어가 3개면 10개 마을에 분회가 조직되었다. 그해 7월 6개 면 25개 마을 28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구미해수욕장에서 해남군여성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결성의 열기를 몰아 그해 12월 해남군민회관 강당에서 여성농민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남군여성농민회’ 창립총회가 열렸다.¹¹⁰⁾

여성농민운동이 활발했던 무안지역도 여성농민회 결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무안지역의 여성농민의 활동은 1980년 1월 여성농민교육에 현경면과 해제면 여성농민들이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그후 1984년 무안 기동에 여성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여성농민들도 시청로거부운동, 부당을류농지세 싸움, 추곡수매현장싸움 등에 참여하였다. 그후 1987년 7월4일 마을 양파싸움에 적극 참여하여 유인물배포, 생활부담당, 방송 등을 담당하였다. 1988년 2월 10일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여성 농민대회’가 여성농민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대회는 시가행진 후 의료보험조합에 고지서를 반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함께 선거공간과 교육을 거치면서 여성농민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이는 이후 고추생산비보장투쟁(이하 고추싸움)의 원동력이 되었다.

고추싸움은 무안지역의 여성농민들을 조직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8년 10월 무안군 현경면 수양촌의 여성농민들이 모여 고추값 폭락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된 고추싸움은 전량을 수매하는 성과를 올리고, 당시 주축이 되었던 현경여성농민들은 1989년 2월 1일 ‘현경면여성농민회’를 결성하고 해제와 운남면도 조직결성을 준비하게 되었다. 1989년 3월에는 무안군 여성농민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무안지역여성농민조직의 결성은 1988년 의료보험제도개선투쟁과 고추싸움을 기반으로 결성되었다.¹¹¹⁾ 의료보험·고추싸움을 통하여 여성농민들도 뭉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무안여성농민들은 고추 1근당 100원씩을 떼어 수천만 원의 기금을 만들었다. 1989년 2월 전국면단위로는 최초로 ‘무안군현경면여성농민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준비가 길어져 1992년 3월 ‘무안여성농민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무안군 5개면 100여명의 여성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는 3년간의 준비위를 마감하고 무안여성농민회 출범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여성농민조직의 결성과정에서 전국적으로는 ‘전남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외에도 ‘전북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경기여성농민위원회,’ ‘강원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의 결성을 바탕으로 1989년 12월 18일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 1990년에는 ‘UR협상 거부, 농발대 분쇄 및 제값받기 제1차 전국농민대회’(약칭 9.7

110) 이날 회장에 수세투쟁 때부터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오분임(현산면 신방리분회), 총무에 김종분이 선출되었다.

111) 김준, 1980년대 무안지역 농민운동 연구, 191쪽.

대회)를 앞두고 전남여농준비위는 8월 13일 나주 감나무집에서 제6차 전남여농준비위원회의 및 활동가 연석회의를 가졌다. 24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1990년 하반기 투쟁활동의 중심을 9.7대회에 모으기로 하고, 조직적 참여와 전남농민회도연맹과 투쟁 지침을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8월 29일에는 '9.7대회에 관한 동원 지침서'를 각 군 및 여성농민조직으로 발송했으며,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홍보 마을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을 강진·해남·광산·진도·승주군 등 128개 마을에서 여성농민 1,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밖에도 6월28일-7월14일에는 부녀회 활동 조사를 3-4 차례 실시하고¹¹²⁾ 부녀회를 여성농민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확인하고 실천해 나갔다.

전남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의 이러한 준비로 1991년 3월 9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여성농민회'를 결성대회를 치루게 되었다.

4. 전남농민운동조직의 통일

전체 농민운동의 조직 노선은 1986년에 크게 흔들렸다. 자체 조직만으로 미국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을 전개한 가농의 자기 조직 관리와 종교운동적 경향과 농민운동의 통일적 기반을 조성하려고는 하지만 자체 역량이 부족한 기능 등 기존 농민운동조직은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중조직에 근거한 자주적 농민조직화를 주장하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

물론 자주적 대중조직의 건설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농민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회적 배경과 지원에 의존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민운동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과, 기존의 의존적 자세는 오히려 농민대중의 자주적 의지를 떨어뜨리고 운동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농민의 자주적인 운동체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¹¹³⁾ 기존의 가농과 기능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1986년부터 자주적인 농민조직들이 등장하면서 후자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1970년대 말, 거창의 아람농민회, 의창의 신기농민회, 강진의 탐진농우회 등에서 부분적인 논의가 있어왔으며, 1981년 충북 음성에서 '을류농지세거부운동', 1983년 '농협조합장직설제실시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1984년 '함평무안 농민대회' 등이 전개되면서, 1985년 '함평농우회'를 시작으로 군단위 대중조직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86년과 1987년 사이에 경남 의창, 함양, 거창, 전남 담양, 전북 김제, 부안, 순창, 충남 예산, 충북 청원, 보은, 음성, 경기 포천, 화성, 경북 예천 등 각지에서 '자주적 농민운동조직'이 건설되어 전국적으로 30여개에 이르렀다.¹¹⁴⁾ 더욱이 1987년에는 자립적·자주적 군단위 농민조직과 계층별(소작농민조직), 요구별(수세대책위·부채대책위 등), 작목별(낙우회·원예협동반 등) 생산자조직 등 농민의

112) 『여성농민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113) 자주적 대중조직 건설에 대한 논의는 이정찬(1990, 183-221)과 나상기(1990, 155-171)를 참조.

114) 김태일, 79쪽.

구체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투쟁조직들이 급부상했다. 그러면서 1987년부터 대중노선에 입각한 대중조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가농은 1987년 제 18차 전국대의원총회(2.16.-2.18., 전주가톨릭센터)에서 그리고 기농도 같은 해 제1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대중노선에 입각한 대중조직의 건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가농과 기농은 단일조직의 건설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존의 조직과 단일조직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두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물론 현장 운동에서는 운동조직의 통일을 향한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단일조직에 대한 논의는 1987년 전국농민협회가 가농과 기농의 조직을 지양하고 자주적인 전국농민조직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후 1988년의 고추생산비 보장투쟁과 부당수세거부투쟁,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138개군 중 80여개 지역에 군농민회가 결성된다. 1989년 2월 13일 여의도농민대회가 '전국수세대책위원회'와 '전국농산물 제값받기 대책위원회' 주최로 2만여 명이 참여하여 치뤄지면서 단일조직에 대한 논의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89년 3월 1일 가농과 기농, 그리고 일부 독자적 군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련)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협의회→연합회→단일조직의 조직수순을 주장하였고, 반면에 전국농민협회는 곧바로 통일조직을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만일 연합체수준이 지속된다면 각 주체들이 과도적 수준에서 자기조직의 유지 경향을 낳게 되어 단일조직 건설이 어렵게 되며, 당시 농민운동의 수준은 충분히 성숙되어 곧바로 통일조직을 결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1989년 9월 8일 전농련과 전국농민협회가 공동으로 소집한 대책회의에 61개군 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쌀값보장과 전량수매 대책위원회 준비위를 결성한 뒤 10월 25일 100여 군조직이 참여하여 '쌀값보장과 전량수매 대책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단일조직 결성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었다. 결국 11월 15일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4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이 창립되었다.

농민운동 조직의 통일 논의는 전남지역에서 먼저 활발하게 전개되어 1987년 8월 8일 함평군에서 '함평군농우회'와 '함평군기독교농민회'가 함평군농민회로 통합되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무안에서 군 농민회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어 전남지역의 농민단체(가농·기농·협회·농민문제연구소)들은, 1988년 7월 28-29일에 목포 가톨릭센터에서 각 군의 농민활동가 7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전남 농민운동의 통일단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정관수(가농), 배종렬(기농), 노금노(협회), 농업문제연구소 1인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1988년 12월 22-23일에 전남농민운동단체 대표자회의가 열려 전남지역의 단일조직결성을 제기하였다. 모임에는 12개 지역 14개 농민운동단체가 참석하였으며 전남농민운동연합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1989년 2월 11일 전남농민운동연합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원회 발족 당시 단일한 통일조직 결성의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존 운동권을 해체하고 군 단위 활동가와 농민대중에 의한 1군 1농민회 건설에 기초한 즉각 통일론을 주장하는 전국농민협회 측의 주장과, 농민운동의 현실적 역량과 수준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농민단체들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전국농민운동통일을 위한 한시적인 과도기로서 전국농민운동연합을 결성하여 전국적 통일조직에 복무시킨 뒤 보다 궁극적인 완결구조를 책임성 있게 건설해 내야 한다는 가능, 기능, 각 군 단위 자생적 농민단체의 주장이 맞섰다. 전국농민협회가 농운련 결성에 불참하게 되어 전남농운련준비위는 일부를 제외한 연합형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연합결성의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검토하지 않고 연합결성을 조급하게 하고 말았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준비위 결성 이후 곧바로 도 농운통일사업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5월이 되어서야 사무국 실무구조가 정착되면서 자리잡아 갔다.

이와는 달리 준비위 결성 이후 농민운동연합 건설을 위한 1군 1농민회 조직화사업은 꾸준히 진척되었다. 1989년 말의 상황을 보면, 1군 1조직화 지역 11개 군¹¹⁵⁾, 1군 1조직화를 위한 준비지역 7개 군¹¹⁶⁾, 침체 내지는 군 단위 책임구조가 없는 지역 3개 군¹¹⁷⁾, 지역분회 조직만 있는 지역 2곳¹¹⁸⁾ 등이었다. 이를 다시 전농련의 가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농련 가입 17개 지역, 독자적 군농민회 3곳(함평, 강진, 해남), 어민조직(완도), 군 농민회가 없는 곳(여천, 광양) 등이었다.

면조직의 현황까지 살펴보자면 전남지역 전체 237개면 중 면농민회 및 면농민회준비위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120여개 면에 이르고 있었다. 1989년을 지나서 237개면 중 150여개의 면에 면농민회 조직을 건설하기에 이르렀고, 진도, 강진, 완도를 비롯하여 거의 전 지역에서 마을조직화를 동시에 병행하였다.

단일조직 건설을 위한 78개군 전국 군대표자회의(1990년 2월 13일) 이후 전남농민운동연합 준비위에서 실무적 역할을 하여, 3월 16일 오후 2시 YMCA 6층 소강당에서 20개 군 지역에서 군대표자들이 참가하여 전남 군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¹¹⁹⁾ 여기서 도연맹 결성을 결의하고 준비위를 구성하였다.¹²⁰⁾ 이후 2,3차에 걸쳐 군대표자회의(4월 9일과 5월 11일)를 개최하고 지구별모임(5월 4일)¹²¹⁾을 하면서 준비하여, 5월 11일 11시 광주 가톨릭센터 7층 대강당에서 드디어

115) 무안, 장성, 광산, 담양, 영암, 승주, 진도, 완도, 신안, 고흥, 곡성.

116) 강진, 함평, 영광, 나주, 화순, 보성, 장흥.

117) 구례, 해남, 여천.

118) 광양, 지산.

119) 참석군 : 진도, 해남, 강진, 무안, 함평, 영광, 광산(광주), 장성, 담양, 나주, 화순, 곡성, 구례, 승주, 보성, 고흥, 영암, 여천, 장흥, 북구(광주) 등 20개 지역.

120) 3월 16일 도연맹준비위 결성(20개 군 참가) : 위원장 정광훈(해남), 부위원장 최승휴(나주), 양화수(진도), 사무국장 김규식(강진).

121) 남부지구(해남농민회 사무실 : 진도, 해남, 강진, 영암, 장흥, 완도), 동부지구(승주농민회 사무실 : 승주, 고흥, 보성, 구례, 광양 (여천 불참)), 서부지구(무안농민회 사무실 : 신안, 무안 (함평, 영광 불참)), 중부지구 (도연맹 사무실 : 담양, 광산, 북구, 장성, 화순, 나주, 곡성) 등 지구별로 모임을 갖고 도연맹결성을 위한 쟁점들을 점검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림2〉 전남도연맹의 통일과정



대부분의 군단위 농민조직들은 1989-90년 사이에 단일조직으로 통합·결성되었다. 한 종류의 농민조직이 있었던 군이 있고 여러 농민조직이 있던 군도 있었다. 군마다 조금씩 다르게 통합과정을 거쳐 단일조직을 이루어나갔다.¹²²⁾ 한 개 군에 하나의 조직이 존재했던 군(영광, 구례, 신안, 장흥, 진도), '가농'과 '기농'이 공존했던 군(무안, 장성), 독자농과 '가농'(혹은 '기농')이 공존하던 군(고흥, 광산, 보성, 담양), '가농'과 '기농', 'Y농', 그리고 독자농(혹은 '전농협')이 공존하던 군 등 그 유형이 다양하였다.

〈표-8〉 전남지역 농민조직별 지역분포

구분	결성 연도	강 진	고 흥	곡 성	광 산	광 양	구 례	나 주	담 양	무 안	보 성	승 주	신 안	여 천	영 광	영 암	완 도	장 성	장 흥	진 도	함 평	해 남	화 순	합 계
가농	197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기농	1978	0						0	0	0								0			0	0		7
Y농	1979											0										0		2
전농협	1988	0							0												0			3
독자농			0		0			0	0		0	0										0		7
전농연	198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전농	19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가농: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기농: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전남기독교농민회), Y농:YMCA농(어)민회, 전농협:전국농민협회, 전농연:전국농민운동연합 전남준비위, 독자농:독자적 농민회,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몇몇 군의 조직통일 과정을 살펴보자.

122) 김준, 농민운동 조직화의 양상과 운동의 지속성, 『현대사회과학연구』 0, 229.

영광

가능만 있었던 영광의 사례를 살펴보자. 영광지역의 농민운동조직화는 1987년 가능 영광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영광국민운동본부, 평민당, 연청, 공정선거감시단, 대학생, 기독교공정선거감시단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무효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 조직은 1988년 8월 영광지역 민중민주운동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쟁점 외에 “수입개방거부”, “민주농협”, “통합의보”, “수세거부” 등 농민적 요구사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1989년 영광군 핵발전소 추방운동연합이 흥농읍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면단위의 농민회조직은 1988-90년 사이에 묘량·군남·염산(이상 1988년), 군서(1989년), 흥농·영광읍(이상 1990년) 지역에 조직되었다. 또한 영광군 수세폐지대책위원회가 백수·염산·군서·군남·묘량·대마·영광·흥농 지역을 중심으로 1989년 1월에 결성되었다. 단일조직 결성을 위한 노력은 영광수세폐지대책위와 영광핵발전소 추방연합이 결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수세와 핵문제가 제기되었던 읍면지역들은 나중에 영광지역 농민운동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였으며, 1990년 8월 영광군농민회가 결성되었다.

영광지역의 농민운동조직의 결성과정을 보면 조직결성을 매개한 핵심적인 쟁점으로 핵문제와 수세문제가 있었으며, 다양한 사회운동조직들이 존재하였고 학생운동출신의 젊은 활동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의 조직분화가 없었기 때문에 단일조직 결성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었으며 기존의 운동자원들이 새로운 조직으로 결합되었다.¹²³⁾

무안

가능과 기농이 있었던 지역으로 무안을 살펴보자.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농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무안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은 가능과 기농의 특출한 지도자가 있는 곳이며, 최초로 여성농민운동조직이 결성된 지역이다. 또한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곳으로, 일부의 농민회원을 중심으로 민중당이 결성되었던 지역이다. 무안지역의 농민운동조직화는 다른 지역 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가능은 1976년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기농은 1978년에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들 조직들은 1986년부터 공동으로 '무안농민신문'을 발행하였으며, 1987년에는 가능과 기농을 포함한 지역연합조직인 '민주화 및 농민생존권운동협의회'(농민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당시 고문살해된 박종철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추모위원회를' 해소하고 결성한 조직으로 2개읍 8개면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운동을 주도하였다.

무안지역은 면단위 농민운동조직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조직되었다. 1987년에 기농 환경면협의회, 망운농민회, 몽탄·해제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와, 환경(기농 통합)·해제·

123) 김준, 9-11쪽.

운남지역에 농민회(1989년)가 결성되었다. 이외에도 무안·청계·현경·망운 지역을 중심으로 '창포간척지 양도추진위원회'(1987년)가 결성되었고, '고추가격 보장 및 전량수매대책위'를 '농산물가격보장대책위'(1988년)로 상설화시켰으며, 전국최초로 '현경면 여성농민회'(1990년)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1989년 4월 '무안군농민회'가 결성되었다.¹²⁴⁾

무안지역의 단일조직 건설을 위한 발판은 1984년 '함평무안농민대회'와 1986년 '수입정권타도 농민대회', 그리고 1986년 '무안군농민협의회'가 결성되면서 마련된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가농과 기농이 일찍 결성된 무안지역은 조직적인 결합체는 아니지만 무안군농민협의회가 결성되어 가농과 기농이 공동보조를 취하였으며, 농가부채문제와 마늘·양파생산비보장 등 농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수렴하였다. 또한 선거공간을 이용하여 공정선거감시단이나 부정선거규탄대회 등 직접 정치집회에 참여하면서 단일조직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후 1988년 7월 27-28일에 걸쳐 무안군농민협의회 주최로 무안군농민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 농민운동의 활동평가와 무안농민운동연합 건설을 논의하였다.

한편 전남지역의 단일조직결성 움직임은 1988년 12월 22-23일 전남농민운동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모임에는 12개 지역 14개 농민운동단체가 참석하였으며 전남농민운동연합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1989년 2월 11일 전남농민운동연합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전농련 참가문제는 각 군단위에 위임하였다. 무안지역은 이미 가농과 기농, 그리고 면단위 자주농이 조직통합을 위해 8월 '무안농민회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전국 전농련에 가입하였다. 그후 1989년 4월 "10만 무안농민의 권익실현과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이루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하며 '무안군농민회'를 결성하였다.¹²⁵⁾

해남

해남지역은 해남YMCA의 농촌사업이 일찍부터 전개된 곳이며 농민교육이 진행되었고 신탁조직결성이 있었다. 해남Y에서 농촌교육을 받은 농민들이 '농촌문제연구회'를 만들어 모여서 신탁, 양곡조합, 축산반 등의 사업을 주도하였다. 이 농민들 사이에서 좀더 적극적인 농민들이 해남기독교농민회(1979년)를 구성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해남YMCA농민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 지역의 농민운동조직화가 대중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은 1980년대 후반 수세문제와 농협민주화가 쟁점화되어 대책위가 조직되면서다. 수세폐지대책위가 송지·화원·북일·마산·문내·삼산지역(1987년)에서 조직되고, 송지에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북일면(선농회), 송지면(농어민형제회) 등지에서 독자적 농민회(YMCA농민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하여 조직)가 조직되었다.¹²⁶⁾ 이렇게 기독교농민회, YMCA농어민회, 자주적 농민회

124) 김준, 1980년대 무안지역 농민운동 연구, 「여성연구」0 11-12쪽.

125) 김준, 1980년대 무안지역 농민운동 연구, 「여성연구」0 188쪽.

126) YMCA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연계되거나 활동하였다.

등이 공존하였지만, 수세투쟁에서 함께 하면서 면단위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단일조직화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물론 해남지역의 경우 농민운동조직화의 헤게모니는 역시 기독교농민회에 있었다. 이러한 조직적 기반을 중심으로 1990년 해남군농민회가 결성되었다.

나주

나주지역의 농민운동조직화는 1987년 나주광산 '가농'협의회 창립을 시작으로, 같은 해 기독교농민회, 나주농민회가 동시에 결성되었다.

나주지역은 수세투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농민회 결성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었다. 농과대학 출신이 주축이 된 YMCA농업교육생 회원들이 1987년 12월 4일 '나주농민회'를 결성한 적이 있었다.¹²⁷⁾ 이때 농민회 건설을 주도했던 이들은 주로 농과대학 4H출신들로 변혁운동으로서의 농민운동이 아닌 좀 더 순수한 농민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이미 이전에 나주에서 협업농장을 시도했던 이들이기도 했다.¹²⁸⁾ 이 협업농장 성원들은 광주 YMCA에서 진보적인 농업교육을 받았고 종교에 기반한 농민회를 탈피해 농민대중에 기반한 자주적 농민회를 결성하려고 1년 넘게 준비하여 창립했지만,¹²⁹⁾ 농민대중에 기반한 농민회가 아니었고 이후 수세거부대책위원회와 합류하면서 해체하였다.

1987년 11월 이후부터 1989년 상반기까지 전개된 수세투쟁과정에서 1988년 3월 8일 나주농민회가 창립된다. 1987년 말에 수세문제에 대한 대중선전을 한 뒤 12월 12일 나주수세거부대책위원회가 결성된다. 29일에는 나주천주교회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세거부나주농민실천대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988년 1-2월에 면단위 교육을 각지에서 실시하면서 면단위수세대책위원회들이 결성되었고 면단위 수세대책위원회를 면농민회로 전환하면서 드디어 1988년 3월 8일 기존의 나농과 수대위가 결합된 나주농민회가 창립되었다.¹³⁰⁾ 이후 나주농민회는 수세투쟁을 주도하고 영산강농조 선거에 개입하게 되었다.

127) 박철환, 『못내못내! 절대못내! 부당수세 절대못내!』 (내일미디어, 2007), 41-44쪽.

128) 함박농장이라고 불렸던 나주지역 최초의 협업농장은 1984년경에 추진됐었다. 농과대학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시도된 협업농장은 동신대 인근에 함박농장을 만들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시도하였다.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영기(대호동), 허연(동강면), 이철호(영산포), 전준화(왕곡면), 김순갑(세지면) 등.

129) 최승휴(동강면 장동리), 전준화, 나종필, 김학순, 이재덕 등이었다. 여기에 백종필(장곡면 신가리), 정철문(왕곡면 신포리), 신권수(영산포 오량동) 등이 합류했고, 초대 회장에 허연(동강면) 총무에 나종필을 선임했었다.

130) 초대회장 임경순, 사무국장 신권수.

참고문헌

- 농민문제연구소, 「87상반기 전남지역농민운동 주요활동」
농민문제연구소, 「87하반기 전남지역농민운동 주요활동」
농민문제연구소, 「88상반기 전남지역농민운동 주요활동」
농민문제연구소, 「88하반기 전남지역농민운동 주요활동」
농민문제연구소, 「89 전남지역농민운동 주요활동」
농민문제연구소, 「90농민운동평가와 91전망」
농민문제연구소, 「면(읍) 농민회 조직실태 및 활동내용 조사연구 보고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광주, 1990).
전국농민운동연합, 「우리농민」, 창간호(1989.5.), 2호(1989.12.).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정기(임시)총회 자료집」, 「활동보고」, 1982-1990.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세상이야기」, 1987-1988, 각월호.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84농촌사회사정」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85농촌사회 사정」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86농촌사회사정」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87농촌사회 사정」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86 상반기 농촌동향분석」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86 하반기 농촌동향분석」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87 상반기 농촌동향분석」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87 하반기 농촌동향분석」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88 상반기 농촌동향분석」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88 하반기 농촌동향분석」

가톨릭농민회 광주연합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광주본부 · 천주교광주교구 농민사목, 「한국가톨릭 농민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40년사, 1-2」 (광주, 2013).

-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 30년사」 (마산, 2009).
-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안동가농 30년」 (안동, 2011).
-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30년사」 (원주, 2009).
- 관방원예작목회, 「농민운동의 새로운 기수가 되어」, 장상환 외, 「농촌현실과 농민운동, 현장4」 (돌베개, 1984), 165-202쪽.
- 광주YMCA 역사편찬위원회 편, 「광주 YMCA 90년사: 1920~2010」 (광주, 2010)
- 김서정, 「소파동백서」 (동광출판사, 1987).
- 김준, 「수세폐지 운동의 조직론적 연구 -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91).
- 김준, 「1980년대 무안지역 농민운동 연구」, 「여성연구」 (목포대학교 여성연구소, 1993) 1: 175-202.
- 김준, 「농민운동 조직화의 양상과 운동의 지속성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6: 221-252쪽.
- 김태일, 「한국의 농민과 국가, 1964-1990」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1991).
- 김현숙, 「영산강농지개발조항 선거투쟁」, 「89 농어촌사회동향」 (농어촌사회연구소), 101-107쪽.
- 나상기, 「전국단일조직 결성과 80년대 농민운동의 평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민중사, 1990), 155-171쪽.
- 노금노, 「땅의 아들 1,2」 (돌베개, 1986).
- 노금노, 「땅의 아들 3」 (돌베개, 2014).
- 대한YMCA연맹, 「1976-1991 YMCA농촌사업 보고서」 (대한YMCA연맹, 1991).
- 명동천주교회, 「한국가톨릭인권운동사」 (서울, 1984).
- 무안군농민운동협의회, 「무안군농민운동일지」 (무안, 1987)
- 박연섭, 「80년대 농민운동의 비판적 고찰」, 「해방 40년의 재인식 2」 (돌베개, 1986), 283-338쪽.
- 박철환, 「못내못내! 절대못내! 부당수세 절대못내!」 (내일미디어, 2007).
- 서경원, 「잃어버린 진실, 함평고구마사건」, 「기억과 전망」 (서울, 2003년 여름), 215-229쪽.
- 순천YMCA 역사편찬위원회, 「순천YMCA 68년사: 순천YMCA가 걸어온 길: 1945~2013」 (순천, 2013).
- 신언관, 「「전농」 결성의 의의와 과제」, 「농어촌사회」 (농어촌사회연구소, 1990년 여름), 19-37쪽.
- 엄영애,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나무와 숲, 2007).
- 윤수중, 「농민운동의 전개와 새로운 과제」, 「농민과 사회」 (농어촌사회연구소, 1997) 15, 34-46쪽.
- 윤수중,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형성과 도전」,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 2010) 20-1, 47-87쪽.
- 이승훈, 「한국농촌사회에서 농민운동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 해남군의 한 농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1991).

- 이우재, 「한국농민운동사」 (한울, 1986).
- 이우재,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아카데미 농민교육」, 「한국농민운동사연구」 (한울, 1991), 186-225쪽.
- 이정찬, 「자주·대중노선의 정착과 농민운동의 전국단일조직 건설」,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183-221쪽.
- 이호철, 「1980년대 농민운동의 전개와 그 과제」, 「경상논집」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3) 21-1, 69-89쪽.
- 장상환, 「현단계 농민운동의 과제」, 「사회경제평론」 (서울, 1988) 1, 207-230쪽.
- 장상환, 「농민운동의 현단계와 과제」, 「현 정세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두리, 1989), 107-157쪽.
- 장상환, 「1970년대 사회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 「이론과 실천」 (서울, 2001년 11월), 1-9쪽.
- 장영근, 「농민의 마음, 하늘의 마음」 (창작과비평사, 1995).
- 정명채·민상기·최경환, 「주요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 정호경, 「현대 한국 천주교회와 농민운동—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박현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 2」 (돌베개, 1986), 257-282쪽.
- 조영욱, 「1970년대 함평 농민운동의 연결망과 의미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 1998).
- 조영호, 「함평군 고구마사건」, 한승헌 외,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춘추사, 1984), 171-185쪽.
- 최재영, 「82년도 음성 부당농지세 시정운동」, 장상환 외, 「농촌현실과 농민운동, 현장4」 (돌베개, 1984), 202-232쪽.
- 한국가톨릭농민회, 「'85 소값피해보상 및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 자료집」 (한국가톨릭농민회, 1987).
-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 1966-1996」 (한국가톨릭농민회, 1999).
- 한만수, 「한국농민의 정치갈등과 농민운동」 (비봉출판사, 1997).
- 허헌중, 「농민운동: 대중노선에 입각한 대중조직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전환」 (사계절, 1987), 209-260쪽.
- 한국기독교농민회, 「기농10년사」 (서울, 1992).
- 5.18기념재단, 「5.18의 기억과 역사3」 (농민운동가편)(심미안, 2009).

1990년대 전남지역 농민운동

1. 머리말

가농과 기농이 운동을 주도하던 가운데 1985년 함평군농우회의 창립 이후 다양한 독자적인 농민회들이 창립되었다. 특히 1986년 각종 투쟁위원회 형식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교조직의 틀을 벗어나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7년 초 ‘전국농민협회’가 출현하면서 농민운동의 단일조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국적인 통일조직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것은 1988년 11월의 ‘농축산물수입개방저지’ 농민대회였다. 이 대회는 전국의 14개 농업농민 단체들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이 대회가 계기가 되어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어서 1989년 말부터 가농, 기농, 전농협 등이 전국적 단일조직 설립을 논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989년 3월 가농과 기농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군농민회가 참여하는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10월 들어 ‘전농연’과 ‘전농협’이 공동으로 ‘쌀값보장과 전량수매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단일조직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구체적인 조직통일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1989년말 양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자농(자주농)’들이 단일조직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자 통일작업은 속도를 내게 되었다.¹⁾ 준비작업을 거쳐 1990년 4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결성되었다.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라는 종교적 농민운동의 흐름에 자주적 농민들의 조직화가 진전하면서 1990년에는 드디어 전국적인 단일 조직화가 이루어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탄생하였다. 농민운동의 대중적 폭발 위에서 농민운동의 조직화가 진전되었던 것이다. 전농으로 통일된 조직화 과정은 상향식 조직화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민의 열기를 상당히 담보해 나간 것이었다. 1980년대 농민운동을 결산하는 의미를 지닌 전농의 결성은 기존의 운동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조직적 결론이었다. 대중들의 활발한 투쟁을 상향식으로 조직화하여 각종 분열된

1) 정명채 · 민상기 · 최경환, 『주요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89쪽.

농민운동조직을 통일한다는 것은 분열지배를 획책하는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농민적 대항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더욱이 전체변혁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기존 권력장치(국가)에 대체세력으로서 변혁운동의 통일된 조직화를 가져오는 방향에 서 있었던 것이다.

전농 스스로 자신을 1980년대 자주적 농민운동의 결실이라고 보며, 기존의 분립된 전국조직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군 단위 대중조직에 기초를 둔 전국농민조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전체 농민의 근본적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하였다.²⁾

이제 농민운동이 전농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전농조직이 투쟁단위가 되어 갔다. 전에는 각종 투쟁위원회 등의 활동이 활발했던데 반해 농민운동의 각종 활동들이 점차 전농의 계통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배권력도 전농과의 협상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제 전농은 농민의 ‘대표기구’가 된 것이다.

전농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민운동조직으로서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세력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체로서 활동하였다.

공식적 수준에서 전농은 ‘농민의 협력과 단결을 통하여 농민의 제권리를 실현하고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및 조국통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자신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전농은 농민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와 민주자주통일 등의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슬로건을 함께 표방하였다.

전농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1990년대 이후 농민운동은 도연맹 단위에서 그것도 도연맹 안에서 활동적인 몇 개 군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되면서 외국의 농축산물수입압력이 거의 모든 농축산물로 확산되었고, 전농의 투쟁은 주로 협상거부 및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반농민적 자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갔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장쟁취운동, 농어촌발전대책본세,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제 농민운동은 전농을 축으로 하여 도, 군 단위 산하조직들이 움직이는 형국으로 변해갔다. 특히 1980년대의 운동이 정부에 대한 거부투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전농이 주축이 되어 정부와 벌이는 협상전술이 주요하게 되었고, 농민들은 새로운 농업방식이나 관계들을 모색해 나가게 되었다.³⁾

전농은 74개의 군단위 농민회 조직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⁴⁾ 지역적으로는 전남이 18개, 경북이 14개, 전북이 11개 순이었다. 강원과 경기 지역이 3개로 가장 적었다(김태일, 1991: 94). 군 조직들 사이에서도 회원이 분포되어 있는 마을이 5개에서 800여개까지 편차가 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전농은 창립 초기 기존 조직의 정비와 미가입지역에서의 조직구성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정명채 외, 1995: 94-95). 2008년 전농에 가입한 시군농민회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00개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전농은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군, 면)에서

2) 전농 정책실, 『‘전농’ 결성과 농민운동의 방향』 (전농, 1990), 1-4쪽.

3) 윤수중, 「농민운동의 전개와 새로운 과제」, 『농민과 사회』 15 (농어촌사회연구소, 1997), 34-46쪽.

4) 창립 당일까지 자격(회원 50명 이상, 회비납부 완료)을 갖추어 가입한 군농민회는 74개 군이었다. ·

구성되고 도연맹을 통해서 연계된다.

〈표-1〉 전농의 시군농민회 현황

구분	시군농민회	
	1990년	2008년
경기	평택, 포천, 화성 (3)	평택, 포천, 여주, 안성, 김포, 연천, 이천, 화성(참관), (8)
강원	정선, 홍천, 횡성 (3)	정선, 홍천, 횡성, 철원, 춘천, 화천, 평창(참관), 영월(사고) (8)
충남	공주,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아산온양, 예산 청양, 홍성 (9)	공주,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아산, 예산 청양, 홍성, 천안, 보령, 연기, 서산(참관), 공주(사고) (13)
충북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제원제천, 증원충주, 청원 (7)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충주, 청원, 진천 (7)
경남	거창, 고성, 김해, 사천, 의창, 진양, 창녕, 하동, 함안 (9)	거창, 고성, 김해, 사천, 의창, 진양, 창녕, 하동, 함안, 진주, 부산, 산청, 의령, 합천, 창원, 남해, 밀양, 거제, 양산, (19)
경북	경산, 고령, 금릉, 봉화, 선산, 성주, 안동, 영덕, 영야, 영일, 영주영품, 예천, 의성, 청송 (19)	경산, 고령, 금릉, 봉화, 선산,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의성, 청송, 상주, 영천, 구미, 포항, 예천·김천·영덕(참관), 울진(사고), (18)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산,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승주, 신안, 영광, 영암, 장성, 진도, 함평, 해남, 화순 (18)	강진, 고흥, 곡성, 광주,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승주, 신안, 영광, 영암, 진도, 함평, 해남, 화순, 순천, 장흥, 장성(참관), (20)
전북	고창, 군산옥구,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11)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장수, 전주, (13)
제주		남제주
합계	79개 군 농민회	100(?)개 군 농민회

2. 1990년대 전농의 농민운동⁵⁾

1990년대 전반기에는 농축산물수입자유화 정책의 확대실시로 농민운동은 UR협상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95년부터는 농업을 전면화하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민운동은

5) 윤수중,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형성과 도전」, 『농촌사회』 20-1 (농촌사회학회, 2010), 47-87쪽.

반대투쟁의 파고에서 지역화, 대중화에 힘쓰며 대중들과 결합하려고 하였다.

1) UR협상 저지투쟁

1989년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농업은 세계화의 격랑 속에 내던져지게 된다. 이 시기의 농민운동은 전농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여 1986년부터 밀실에서 진행된 UR협상(농산물의 전면개방과 저관세화 내용으로 타결됨) 저지, ‘농어촌종합발전대책’ (1990년)이라는 명목 아래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을 포기하려는 농업축소정책 분쇄투쟁이었다. 이는 농민들의 UR협상반대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대응으로 표출되었다. 농민들은 UR협상의 내용에 대한 공개와 정부의 강력한 반대표명을 요구하는 투쟁과 ‘농발대’ 분쇄투쟁을 중심으로 시위를 전개해 나갔다.

우선 전국 단위의 전농의 운동으로서, 1990년 9월7일 ‘농산물수입저지, 농발대분쇄, 제값받기 1차 전국농민대회’가 제주도를 포함해 9개 도에서 3만 5천명이 참여하여 열렸다. 경찰과의 충돌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였다. 나아가 전농은 농업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1991년 6전(전노협, 전농, 전대협, 전빈연, 전교조, 전민련)을 중심으로 한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투쟁에 연대하면서 연대연합조직의 단초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전국연합)의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개방정책을 저지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4년 들어 UR저지 투쟁은 국회비준저지투쟁으로 집중되었다. UR협상의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농민들은 국회의원사무실 농성, 야3당 장기점거농성, 민정당 당사 타격투쟁, 천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투쟁방법을 동원했다.

1994년 ‘2.1전국농민대회’는 9개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대회를 준비하여 치러졌는데, 4만여 농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본대회를 치루었다. 농민들은 본대회 직후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2.1농민대회는 건국 이래 가장 큰 전국대회였으며, 농민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UR반대투쟁은 비록 WTO국회비준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WTO이행특별법 제정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민·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형성하게 했고, 농민대중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농민운동이 더욱 더 전지구적인 상황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

물론 이러한 반대투쟁을 하면서도 농활의 대중화를 통한 농학연대를 강화해 나갔다. 대학생들의 농활은 19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좀더 적극적인 농활로 변모하게 되었고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농활은 1990년대 초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전농의 지역 단위들은 농활대의 활동과 결합하였고 농활대의 활동으로 농민회의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전농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1990년대 이후 농민운동은 도연맹 단위에서 그것도 도연맹 안에서 활동적인 몇 개 군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되면서 외국의 농축산물수입압력이 거의 모든 농축산물로 확산되었고, 전농의 투쟁은 주로 협상거부 및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반농민적 자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갔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장쟁취운동, 농어촌발전대책분쇄,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전농은 현장 농민들과 결합된 투쟁(나라락적재투쟁, 골프장반대투쟁, 앞담배전량수매투쟁, 의료보험개혁투쟁, 농협개혁투쟁)과 민주주의 쟁취투쟁(민자당 일당 독재투쟁, 전국연합 결성참여, 범민족통일행사 참여, 대선투쟁)을 함께 조직, 전개하면서 농민운동을 대중화시키려고 하였다.

2) 농정개혁투쟁

4년에 걸친 농민들의 강경한 투쟁에도 농업개방을 전면화 하는 비준안이 1994년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농민운동진영은 한동안 침체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오히려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서게 되었다.

농민운동진영은 1995년에 변화된 상황에 조용하는 활동과 투쟁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면서 전국집중투쟁보다는 군, 도 단위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실천활동을 해나갔다. 만양고추, 청운무종자 피해보상투쟁, 사과과값받기 투쟁, 골프장반대, 쓰레기장 반대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투쟁을 활발히 전개해갔다. 한편 지자체 선거대응, 농사청년조직건설, 민원상담소 개설, 농업신기술 연구 등 생활운동영역의 확대를 통해 농민조직을 지역대중 중심의 일상활동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전농의 사업도 경제사업 활성화, 제도정치권 진출, 협동조합 참여, 지역운동영역 개척 등으로 다원화, 다양화 되었다.

농민투쟁은 농민들의 요구와 제도개선이 중심이 되면서 지역에서부터 ‘불량종자 피해보상을 위한 생산농민 흉농종묘본사 상경투쟁’, ‘골프장건설반대투쟁’, ‘사과값 폭락 보상투쟁’ 등 다양한 농민들의 요구가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농민들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지역투쟁은 지자체 실시를 앞두고 지역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모으고 농민들이 지자체 선거 및 지역농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며, 지자체 선거의 참여를 통한 농업문제 해결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화, 대중화를 중심에 두고 UR투쟁의 후유증을 극복해 이후 농민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 농민운동은 1996년에 들어서면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요구, 신농정 폐기, 농업희생대책 요구를 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1997년에는 소값 파동으로 9월 들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대선후보들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11월 18일 2만 5천여명의 농민들이 여의도 고수부지에 모여 대선후보들을 초청하여 농업발전공약을 제시할 것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농민운동 진영은 신정부가 농업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국민의 정부)은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실사를 하는 등 개혁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정책 개혁(부채문제, 농업회사의 개설 문제, 협동조합개혁 등)에 대해서 비판해 내기 보다는 타협해 나가는 전농지도부의 운동경향에 대해서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1999년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교체해

나갔다. 이러한 문제는 전농지도부의 관료화와 개량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농 자체가 대표기구가 된 이상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현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새롭게 구성된 전농 지도부는 국민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를 정리하고 정부의 기만적인 농업정책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3월 들어 협동조합개혁을 가로막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개혁투쟁을 전개하였다. 3천여명의 농민들이 폭우 속에서 농협중앙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출입봉쇄와 외국농산물 보유에 분노한 농민들이 건물을 점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정부의 탄압이 있었고, 지도부의 공백을 비상대책위를 꾸려 대처해 나간 전농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농업구조개편 전략을 폭로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를 결성하여 정부의 농협개혁의 허구성을 공격하였다. 이즈음에 정부의 농협개혁에 찬성하는 농민단체들은 '협동조합 추진 범농업인연대'를 구성하여 농림부의 정책에 동조하였다.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통합법안'을 만들어 7월에는 1,500여명의 농민이 전국농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역시 많은 농민이 연행되었다. 농림부의 안이 입법통과되면서 입법투쟁은 종료되었지만, 농협개혁의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다.

1999년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전농은 농민대회를 노동자대회와 결합하여 개최해 나갔다. 한번은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한번은 농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 건설의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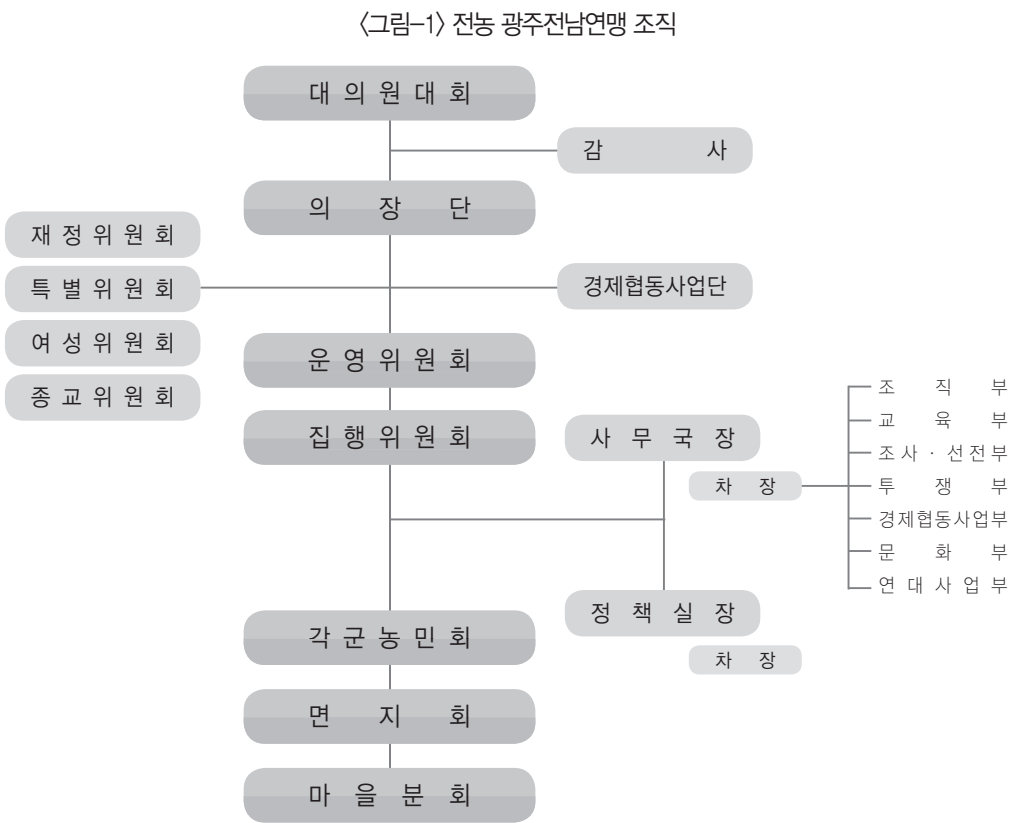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전농결성 이후 1990년대의 농민운동에서는 반독점 및 반독재라는 거대담론은 약화된 반면, 농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욕구들을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왔다.⁶⁾ 또한 국내농업문제가 국제적인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국내농업을 방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농민보호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전과는 달리 단순한 거부 및 반대 라기 보다는 지배권력의 방향설정과 정책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이와 관련하여 권력비판을 수행해 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점차 의료보험통합, 유통, 그리고 지자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농민회원들 가운데 일부가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일도 일어났다. 어쨌든 농민운동이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겠다.

3. 전농(광주전남도연맹과 각군농민회) 활동

전농 광주전남도연맹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두었으며 하위 단위로 각군농민회-면지회-마을분회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재정위원회,

6) 김철규, 「한국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운동담론의 변화」, 『경제와 사회』 34 (한울, 1997), 78쪽.

특별위원회, 여성위원회, 종교위원회 등을 옆으로 두고 경제협동사업단을 꾸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투쟁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의장단과 사무국장, 정책실장 등이었다.



〈표-2〉 1990년대 광주전남도연맹 의장단 및 실무진

연도	직위	의장	부의장	부의장	부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1990	정광훈	이득선	양화수	김한신			김규식	박범준
1991							윤기현	김정순
1992	홍번	이형일	정원실				유상욱	김정순
1993							유상욱	이하영
1994	이형일	정원실	이병일	윤기현			문행주	지용진
1995							문행주	지용진

1996	정원실	김영채	문경식	정찬석		유상욱	이종화
1997		김영채	문경식	정찬석		유상욱	이종화
1998	정광훈	신현호	최병상	최영추	박원기	김영동	이종화
1999	박원기	신현호	최병상	최영추	조권준	김영동	이종화

의장단과 실무진은 2년씩 하였으나 구속되는 등 비상사태로 2년을 못 채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은 한번 더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연도별로 전남 광주전남연맹과 각 시군농민회의 활동을 살펴보자.

1) 1990년

1990년 5월 11일 전남도연맹이 결성된 이후 6월에 들어서면서 ‘하계 농촌활동’을 필두로 하여 ‘9.7 전남 농민대회’를 치렀다. ‘영광·함평 보궐선거’를 경과한 이후 쌀값보장 전량수매쟁취 투쟁을 11월 이후 1991년 1월까지 전개하였다.

(1) 조직현황

1990년 2월 13일 단일조직 건설을 위한 78개군 전국 군대표자회의 이후 전남농민운동 연합준비위에서 실무적 역할을 하여, 3월 16일 오후 2시 YWCA 6층 소강당에서 20개 군 지역에서 참가하여 전남 군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⁷⁾ 여기서 도연맹 결성을 결의하고 준비위를 구성하였다.⁸⁾ 이후 2,3차에 걸쳐 군대표자회의(4월9일과 5월11일)를 개최하고 지구별모임(5월4일)⁹⁾을 하면서 준비하여, 5월 11일 11시 광주 가톨릭센터 7층 대강당에서 ‘전남 전남도연맹’을 결성하였다.

결성 직후 조직현황을 보면 22개 군농민회가 도연맹에 결합하였고¹⁰⁾ 미가입군이 3개였다.¹¹⁾ 전남지역 전체 군에 농민회 또는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전남도연맹군농민회면지회-마을분회라는 선이 정립되었으며, 운동의 중심축은 군농민회에 두었다. 8월 들어서 분회 및 지회(면농민회)의 결성, 군 단위 수련회 및 단합대회, 군농민회 창립대회 등을 통해 전남도연맹의 지역적 토대가 마련되어 갔다. ·

7) 참석군 : 진도, 해남, 강진, 무안, 함평, 영광, 광산(광주), 장성, 담양, 나주, 화순, 곡성, 구례, 승주, 보성, 고흥, 영암, 여천, 장흥, 북구(광주) 등 20개 지역.

8) 3월 16일 도연맹준비위 결성(20개 군 참가) : 위원장 정광훈(해남), 부위원장 최승휴(나주), 양화수(진도), 사무국장 김규식(강진).

9) 남부지구(해남농민회 사무실 : 진도, 해남, 강진, 영암, 장흥, 완도), 동부지구(승주농민회 사무실 : 승주, 고흥, 보성, 구례, 광양 (여천 불참)), 서부지구(무안농민회 사무실 : 신안, 무안 (함평, 영광 불참)), 중부지구 (도연맹 사무실 : 담양, 광산, 북구, 장성, 화순, 나주, 곡성) 등 지구별로 모임을 갖고 도연맹결성을 위한 쟁점들을 점검하였다.

10) 가입군 · 강진, 고흥, 구례(준), 곡성(준), 광산, 나주, 담양, 무안, 보성(준), 신안(준), 승주, 영광, 영암,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광주, 북구(총 18개군(광주 2개군 포함), 준비중인 농민회 4개군).

11) 미가입군 · 여천군농민회건설준비위원회, 광양군농민회준비위, 완도어민회준비위(총 3개군).

(2) 투쟁내용

3월 중순 이후 영암(3.15. 150여 명), 무안(3.24. 100여 명), 고흥(3.28. 200여 명), 진도(3.28. 400여 명), 함평(4.3. 600여 명)에서 농민회원들 중심으로 농민들이 영농발대식을 하면서 한 해 농사와 농민투쟁을 힘차게 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창립총회를 겸하기도 하였고,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저지, 토지개혁 실현, 수입저지 등을 결의하였다.

6월 들어 곡성군 옥과면에서 부당경지정리 시정 요구 투쟁(6.20.)을 전개하였으며, 6월말에서 7월초까지 여름농활이 전개되었고, 농활을 끝내면서 7월 초(7.4.-7.6.)에 농민-학생 집회를 가졌다.¹²⁾ 7월 21일 광양군농민회가 “이돈만 의원 국정보고 및 민자당 규탄대회”를 개최한 이후, 8월 들어 해남군농민회(8.3.)와 나주군농민회(8.5.)는 의료보험료 인상 및 차압에 항의하였다. 해남에서는 5천2백 농가가 의료보험료를 거부하도록 조직하여 의료보험료 인상 및 차압에 항의하였고, 나주군 농민회원 30여명은 의료보험조합을 방문하여 의료보험료 차압에 항의하였다.

8월 27일에는 전남도연맹 대의원 3백여 명이 참석하여 “9.7대회 사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높였다. 9.7전남농민대회는 전국 9개도에서 농민 3만5천여 명이 참석하여 치른 “유알협상거부·농발대 분쇄 및 제값받기 제1차 전국농민대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어서 9월 22일에는 전국 45개 군농민회 주최로 농민 7천여 명이 참여하여 “유알협상거부·농발대 분쇄 및 제값받기 제2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9월 10월 바쁜 농사철을 지나면서 수확기에 접어든 11월 들어(11.11.-20.) 전국 52개 군농민회 주최로 농민 1만2천여 명이 참여하여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대회”를 각 군별로 개최하였다. 전남지역에서도 11일 광양군농민회가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벼가마를 불태웠다. 이후 벼가마 불태우기, 이장단의 수매거부 및 사표제출 등의 투쟁이 확산되었다. 11월 동안에는 농민추수대동제의 원천봉쇄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였다.¹³⁾ 이러한 투쟁 위에서 11월 24일 ‘전남 UR공대위’를 결성하고 여러 사회세력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길을 마련하였다. 11월 25일에는 국민연합이 주최하는 “90민중대회”에도 적극 결합하였다. 이 와중에 해남군농민회는 추수대동제 물품피해보상과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11.16.-30.).

12월 4일 전국의 각 군농민회에서 선발된 농민선봉대 50여명은 쌀값보장과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국회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를 기화로 12월 17일 장흥, 해남, 장성, 승주, 고흥, 진도 등 6개군 농민회는 “쌀값보장·전량수매쟁취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12월 하순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전남 각 지역 면단위에서 전량수매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화순, 보성, 강진, 함평 등에서는 여러 면이 동시에 전량수매 투쟁을 벌였으며, 나주는 여러 면이 연속해서 전량수매요구투쟁을 벌였고, 무안에서는 전량수매를 요구하면서 벼가마를 불태웠고 장흥에서는 이장단 300명이 전원 사표를

12) 전국 50여개 군에서 6만여 명이 일제히 전국 각군별로 동시집회를 가졌다.

13) 전국농민추수대동제를 사수하기 위해 전국의 각 군농민회 회원 5백여 명이 상경하여 추수대동제 사수투쟁을 벌임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사수투쟁을 벌였다.

제출하였다. 1월 29일 보성에서 농민 30여명이 도청에 나락 야적시위를 전개하였고, 2월 4일 강진과 광산에서 본격적으로 야적투쟁이 전개되었다.

(3) 9.7 쌀값쟁취 및 반농민정책 철폐 전남농민대회

8월 초부터 ‘운영위원-집행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대회 명칭과 시기, 장소(전남대)를 정하고, 농민대회 추진계획서를 마련하여 지역을 순방하기로 하였다. ‘전농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9.7전남농민대회를 전국동시다발 1차 전국농민대회로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8월 중순(13-16일)에 도내 각 지역을 방문하여 대회준비를 점검하였다. 각 지역 군농민회는 수련회, 단합대회, 대의원총회, 창립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도연맹에서는 농민대회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조직동원과 농민대회의 필요성을 적극 교육하였다. 이후 9.7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지역 상황을 점검하며 8월 27일 ‘비상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남농민대회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농선봉대까지 조직하고 교육한 뒤, 대회가 가까워지자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3만장 배포하였다.

9월 5일 부터 전남지역 전체에서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원천봉쇄가 자행되고 급기야 9월 6일에는 도지사, 광주시장, 도경국장, 검찰지검장이 대회불허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농 전남도연맹은 대회의 강행과 사수를 결의하고 9월 6일 700여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야제를 개최하였다.

9월 7일 3만여 명의 농민이 대회에 참가하고자 각 지역에서 출발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에 막혀 총 23개 군에서 7천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민대회를 열었다. 대회 도중 경찰은 페퍼포그차 5대를 투입하여 대회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전농 선봉대와 농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곧바로 퇴각하여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농민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공용터미널까지 평화행진을 하면서 ‘UR협상의 반농민성과 반민족성’을 널리 선전·폭로하였다. 투쟁과정에서 농민선봉대의 역할이 컸으며 특히 농민대회에 문화행사를 입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대회를 활기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전국대회는 물론 전남지역 안에서의 농민대회나 시위에도 각군농민회 단위로 집결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4) 도연맹의 활동

교육활동은 도연맹에서 군농민회의 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고 전농 단위의 교육(장기교육)이나 연수(전농간부연수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전국단위 교육에 교육생을 참가하도록 독려하거나 현장단위에서 일정을 잡아 교육내용 및 강사를 의뢰하면 함께 풀어나가는 정도에서 활동하였다. 각군 교육부장의 모임을 통해서 각종 교육을 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천하지 못하였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도연맹 단위에서 연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광주·전남 민주연합’에

도연맹준비위부터 조직적으로(의장, 부의장, 연대사업부장, 정책국장) 참여하였다. 민주연합의 대동한마당에 참가하고 민주연합의 사무처장에 농민운동 경력 인사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민중연대회의'에 정책실장이 참여하였고, 민중대회에 농민들이 결합하였다. 'UR공대위'에는 도연맹 사무국장이 공대위 사무국장에, 부의장이 UR공대위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UR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투쟁이나 사업, 농활, 축제, 대회 등에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집단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러나 군단위 연대사업은 극히 취약한 상태였다. 사안에 따라 교회 그리고 전교조 등과 연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전망을 가진 연대운동이 부족한 상태였고, 농민쪽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였다.

농학연대사업으로서는 농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18개군 250개 마을에서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농활에 참여하였다. 농민운동 쪽에서도 각 지역에서 농활주체 담당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농활을 준비하거나¹⁴⁾ 학생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여 가능하면 현장조건에 맞는 농활지침서를 만들어 사용하여 도움이 되었다(함평의 경우). 도단위에서 도농공추위를 상시적으로 가동, 운영하지는 평가가 나왔고 이후 농활 책임부서를 꾸려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농활을 주도했던 남대협이 농활수행자세에 대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다.¹⁵⁾ 학생들에 대한 많은 사전교육과 교양을 실시하여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자성이 일기도 하였다. 농활기간 중 근로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 투쟁(7월 4일 동시다발 투쟁)을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뿐 아니라 호응도도 낮아 참가율이 저조하여 학생들의 집회가 되었다.

그리고 매시기 사업별로 선전물을 발행하였다. 하계농촌활동에 즈음해서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비판하고 농활일정을 알리는 포스터와 전단을 제작 배포하였고, 전남농민대회에서는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미국농축산물 수입개방반대 우루과이협상 거부 등을 주장하는 포스터와 전단들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어진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투쟁에서는 '수입개방 강요하는 우루과이협상 결과 거부하자!,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하자!'란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고, '쌀투쟁 승리 눈앞에 왔다!, 농사꾼은 이렇게 합시다!'란 투쟁속보를 내기도 하였다. 우루과이협상 거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과연 농민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합시다!'란 전단발행배포와 함께 거부 서명을 받았다.

그 외에 피피마대 공동구판매사업을 시도했으나 성과가 미미하였고, 추수대동제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루지 못하였다.

14) 장흥의 경우 농활담당자가 책임적으로 학생들과의 항상적인 교류(학교방문 등)를 하고 있어 3월부터 농활준비에 들어간다.

15) 광주인근지역의 경우 출퇴근, 외출의 무절제, 원래의 팀보다 많은 수의 감소, 준비 미비 등으로 농활사업에 차질을 빚은 데서 온 것이다.

2) 1991년

(1) 투쟁활동

1991년 농민투쟁활동을 보면, 2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회를 제안하는 형식으로 하여 3월초부터 준비하여 농민대회를 치렀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농민대회라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 조기선거 실시에 따른 동원의 어려움 등을 제기했으나 전남지역에서 강행하자고 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3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YMCA 소강당, 110명 참가)를 개최하여 3.23대회를 강행할 결의를 하고 준비하여, 3월 23일에 전남대 5.18광장에서 "국민의료보험법 및 90, 91년 쌀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로 포문을 열었다. 애초에 조선대에서 치를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전남대로 장소를 옮겨 치르게 되었다. 이 때 농민 1천여 명을 포함 총 2천5백여 명이 참여하였다.

4월 들어서는 전국 동시다발 의보조합 항의방문(4월 11일, 38개 군에서 실시), 전국 동시다발 민자당사 항의방문(4월12일, 21개 군에서 실시) 등을 하면서 의료보험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압정권에 공격을 가하였다. 5월 5일에 광주에서는 백골단 해체 집회를 하였고 무안군민대회(7백여 명 참석)를 개최하여 정권퇴진운동을 벌였다. 5월 8일에는 화순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움직임 위에서 5월 9일에는 중앙에서 "민자당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¹⁶⁾ 전남지역에서는 "민자당해체 군동시다발 대회"로 담양, 장흥, 영암, 강진, 승주, 광산, 해남에서 대회를 치렀고, 오후에는 농민 300여명이 광주로 집결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정권퇴진 움직임은 5월 17일에 전남대 병원 앞에서 농민 7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수입 음모 분쇄 및 폭력학살 노태우정권 퇴진 전남농민대회"로 이어졌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회장이 5-6차례 침탈당하고 극렬한 몸싸움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하였다. 1시간 정도 대치 중 대학생들의 지원으로 집회장을 확보하고 전대병원 영안실 앞에서 시민, 학생까지 합세하여 2천여 명이 집회를 했다. 5월 27일 보성군에서는 "김철수, 정상순 열사 정신 계승 보성군민대회"를 개최하여 이 분위기를 이어갔다.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하던 농민들은 10월 들어 '쌀값보장 전량수매와 미국쌀 수입저지'를 내걸고 각지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10월 14일 운영위, 집행위에서 제안된 대회를 위해 준비위를 구성하고 지역순방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힘을 모아갔다. 상황실까지 설치하여 준비해 나갔고, 나주, 장성, 담양, 곡성, 광산, 화순, 광주북구, 영암 등 각지에서 3천여 명 참가하여 나주 영산포 우시장에서 10월 25일 "쌀값보장 전량수매와 미국쌀 수입저지를 위한 나주평야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를 마치고 대열을 지어 나주시까지 행진하였고 정리집회를 마치고 해산하였다.

11월 중순부터는 각군단위 농민회에서 '쌀값보장 전량수매와 미국쌀 수입저지'를 내걸고

16) 전국 87개 군 30여만 명 참가, 전농 68개 군 3천여 명 참가.

군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장흥(11월 12일, 500명 참가), 화순(11월 15일, 5백명 참가), 해남(11월 16일, 2천명 참가), 강진과 장성(11월 19일, 각각 5백명 참가), 영광(11월 21일, 5백명), 진도와 함평(11월22일, 진도 6백명 그리고 함평 4백명 참가)으로 이어진 각군별 농민대회에는 보통 5백여 명이 참여하였고 해남에서는 2천여 명의 농민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흐름을 모아 11월 26일에는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미국쌀 수입저지 및 쌀값보장 전량수매 전국농민대회"가 치러졌다.¹⁷⁾

12월 중순 이후에는 '미국쌀 수입저지와 쌀값보장 전량수매를 위한' 면단위 농민대회 및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농민들이 경운기에 쌀을 싣고 가 면·읍사무소 앞에 적재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12월 16일 고흥군 동강면(농민대회, 200가마 적재)을 시작으로 무안군 해제면(12.18, 2,000가마 적재)에서, 그리고 12월 20일에는 해남 면단위(마산면 경운기 56대, 산이면 경운기 55대, 송지면 경운기 40대, 옥천면 경운기 24대분 적재)에서, 12월 21일에는 보성군 겸백, 미력, 조성, 노동, 벌교, 득량 등 6개면(총 경운기 35대 1,500가마 적재)과 해남군 현산면(경운기 26대, 800가마 면사무소 적재, 해남 총 경운기 200대 5,000가마 적재), 12월 31일에는 장흥군 관산읍(읍사무소, 200가마 적재)에서 적재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야적투쟁은 1992년 1월 들어서도 계속되었고, 야적한 쌀을 입고하는 것으로 투쟁이 정리되었다.

이처럼 1991년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상반기의 3.23 '국회법 재의결 및 90·91 추곡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 4월의 군농민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 민주세력과 연대해 벌인 국회법 쟁취투쟁, 5-6월의 공안 통치 분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범국민 투쟁에의 적극 참여, 하반기에 70여개 군에서 벌인 쌀수입 저지와 쌀값보장, 전량수매 쟁취 투쟁과 11.26 전국농민대회 그리고 24개 군의 벼 적재투쟁과 연이은 서울 상경투쟁 등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2) 전남도연맹 활동

광주전남도연맹이 자리를 잡아가자 여러 가지 연대사업을 해 나갔다. 전농 광주전남도연맹은 전국적인 민주단체의 연합체인 '민주연합'에 각 부문별로 참여해왔다.¹⁸⁾ 농활추진과 관련해서는 '농민학생연대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전에 비해 상설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봄농활(7개 대학 2,000여명, 14개 군 지역에서 수행)과 여름농활(15개 대학 3,751명, 15개 군에서 농활수행)에 결합하였다. 그리고 5월투쟁(5.9, 5.18 대회) 때 농민 100여명이 광주집회에 참석하였고, 대책위원회 상황실에 도연맹 간사 1인이 결합하여 활동하였다. 민주연합을 이어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전남연합)'의 대의원대회에 농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연대를 과시하였다. 그 외에 '전남지역 핵발전소 30기 건설반대 국민대회'에 핵발전소 건설지역 농민과

17) 농민 1만 5천여 명 등 2만 5천여 명 참가.

18) 중앙위원(정광훈 의장), 집행위원회(윤기현 사무국장), 정책위원회(김정순 정책실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박석면 연사부장).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안으로는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중부지구 5개 군에 1990년 교육사업 평가와 1991년 교육사업 계획, 도나 전국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부의 교육사업수행에 지침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7차례에 걸쳐 ‘농민학교’를 개설하였으며, 12월 10일-11일(해남 대흥사)에는 ‘전남지역 활동가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약 70여명의 전남지역 활동가들이 모여서 쌀투쟁 등을 중심으로 열린 토론을 전개하였다.

3) 1992년

1992년 1-2월은 1991년의 적재투쟁을 정리하면서 입고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3월 총선에 즈음하여 고흥, 영광, 강진, 보성의 경우 민주당(야당)과의 연대, 독자적인 당선투쟁을 전개하면서 마을교육과 민주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지역 내 농민회의 정치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4월 23-24일 목포 한산촌에서 열린 활동가대토론회에는 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농민운동과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농민회의 골간조직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협동사업을 모색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

5월 들어 농번기임에도 6일 무안군 망운면에서는 ‘마늘·양파 가격보장 요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선후보 확정을 위한 민자당 전당대회에 즈음하여 전민중적 투쟁과 결합하고 농민투쟁력을 고양하기 위한 농민대회(‘농업사수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전남농민대회’)를 조선대학교 공대 앞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안 양파문제와 결합하여 시내에서 양파투척투쟁과 농업문제를 반민자당선전사업과 결합해 나가기도 하였다.

대선을 앞두고 5월말에서 6월말(5월26일-6월29일)까지 대선방침 설명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5명의 설명회 요원이 12개 군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범민주단일후보 방침 확정’을 끌어냈다.

이어 하반기 대대적인 농민투쟁과 권력교체를 앞두고 전남 농민활동가들의 단결과 결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7월 31일 조선대에서 ‘전남농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2천여 명의 농민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약간 과열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이어서 가을걷이 전에 본격적으로 하반기 대선투쟁과 쌀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를 다지는 농민대회를 준비하였다. 9월 1일, 전남대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쌀값보장·전량수매·농업대개혁 쟁취를 위한 전남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의 사전 원천봉쇄방침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모여 쌀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투쟁일변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쌀정책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연대의 기운을 만들기 위하여 광주전남도연맹 주도로 10월 27일 ‘쌀수매정책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농협, 도의회, 민주당, 학계, 소비자 대표, 후계자 등이 모여 쌀수매 정책의 개혁과 쌀값 15%인상, 1,100만섬 이상 수매를

요구하는 정책적 내용을 서로 교환하고 향후 연대의 기운을 만들고자 하였다. 공청회와 같은 것을 전국차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적 차원으로까지 그 기운을 확산시켜 나갔다. 농민들이 움직일 수 없는 농번기에 도연맹이 계속적으로 쟁문제를 쟁점화시켜 나간 것이다.

11월 들어 국회폐회가 임박함에도 민자당과 정부당국은 쟁문제를 1393년 차기 정권으로 계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각 군에서 모인 전남농민 140여명은 11월 9일 ‘과천 청사 상경투쟁’에 참여하였다. ‘과천정부종합2청사 진입투쟁’으로 농민 200여명이 국회와 경제기획원에 청원하기로 결정하고 상경하였다. 과천정부종합청사 근처 백화점 앞에 집결한 농민들 전원이 과천정부종합청사로 진입하여 1층 로비점거, 7층 경제기획원실을 방문하여 장관과의 면담요청을 하였다. 7층에 집결한 농민들이 전경에게 포위되고(심한 몸싸움 끝에 46명 전원 연행), 나머지 전남 농민들은 민주당사로 집결하여 80여명이 철야농성을 진행하였다. 11월 10일에는 민주당사에 농성중인 전남농민들이 시내에서 선전전을 수행하였다.¹⁹⁾

본격적인 농민투쟁의 계절인 11월에 들어 각군농민회별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11월 17일 함평군(200명)을 시작으로 23일 화순군(우시장, 100명), 곡성군(읍시장터, 농민·학생 200명), 26일 해남군(해남읍 터미널앞 10시, 200명, 73가마 적재), 27일 보성군(400명)과 진도군(200명), 30일 나주군까지 농민대회를 통해 쟁투쟁을 전개하고 보성군의 경우는 면별로 야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12월 5일까지 13개 군이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12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야적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11월 28일 고흥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12월 들어 본격화되어 12월 3일 장흥(군민회관 앞 적재물량 200가마, 군청에서 탈취해감. 손해배상 준비. 장흥읍 298가마, 회진면 276가마 적재, 총 782가마 적재), 12월 4일 나주(7개면 영산포 공판장에 700여 가마 적재)와 곡성(오전 7시 300가마 적재 시작)과 영광(군남면 350가마 적재, 24개 마을 중 20개 마을 참가)에서 다발적으로 전개하였고, 2월 9일에는 고흥의 4개 면(포두면 289, 동강면 271, 정안면 70, 영남면 20가마, 총 650가마 적재), 곡성의 상기, 옥과, 오곡면(270가마, 관에서 탈취해감)에서, 영암의 군서면(120가마 적재)에서 적재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어서 12월 13일 구례에서도 4개면(삼동, 용광, 광위, 간전면)에서 읍, 시장에 167가마를 적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야적투쟁은 8개 군 여러 면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도연맹에서는 12월 9-11일에 걸쳐 있던 ‘쌀수입 저지 단식투쟁’²⁰⁾을 계기로 쌀 문제를 쟁점화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12월 21일에는 YMCA에서 ‘전남농민 간부대회’를 개최하였다. 80명이 참석하였고, 대선이후

19) 이 시기는 합법적으로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시기이자 민자당의 음모를 저지시킬 수 있는 시기였다. 과감한 투쟁으로 청사를 점검하게 되었고 이 투쟁으로 인해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추곡수매관철을 위하여 이틀간 철야 농성을 하였고, 민자당은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통해 1%인상과 110만섬 추가수매를 결정지었다. 이 투쟁은 전남의 애초 목표인 정부당국의 추곡수매시책의 변화를 일차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사무국장과 해남 사무국장이 구속되어 도연맹의 실무력의 공백을 가져왔다.

20) 참가자는 의장단-2, 나주-3, 진도-1, 보성-2, 장흥-6, 구례-3, 영광-3, 화순-1, 도심무자-2, 여농 지원-5명.

대선투쟁을 약평하고 농민운동의 방향과 쌀투쟁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간부가 참가하여 조직적으로 대선패배의 분위기를 일정하게 정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1월에 들어서는 담양군 창평면 농민 300명이 군청앞 마당에서 군당국이 허가한 골프장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철회 등을 요구하며 군수면담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1월 7일). 6명이 강제 연행되고 1명이 감금되는 사태에 직면하여 농민들 400여명이 군의회회관에서 농성을 하고 그 다음날 농성자가 500여명으로 늘어났고 연행자 4명이 석방되었으며, 군의회 만장일치로 골프장 건설반대를 결의하게 되었다.

1992년의 연대사업은 주로 농활에 집중되었다. 군 연사부장 연석회의(3월 27일)를 통해 연대사업 목표와 방향 및 봄농활 일정과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봄과 가을 농활 실시 전(5월 1일, 9월 2일)에 도농학연추회의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만났다. 6월 4-7일에 16개 군에 12개 대학 206마을 206팀, 약 4,500명이 봄농활에 참여하였다. 6월 29일-7월 8일에는 영호남 교류농활을 실시하였는데, 각 5개팀을 상호 교류하기로 하고 영광(1), 보성(2), 진도(2)에서 농활을 하였다. 특히 1992년부터는 ‘국민농활’을 실시하게 되었다. 7월 6-7일에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 연합이 주최하고 농민회가 결합하는 국민농활이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에서 개최되었다. 10월 1-4일에 실시된 가을농활에는 18개군에 대학생 3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1993년 1월 14-19일에는 ‘겨울농활’까지 실시하였으며 전대, 조대생 약 2,000명이 참석하였다.

4) 1993년

(1) 투쟁활동

1993년 들어 2월 12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마치고, 2-3월에는 수입개방저지 투쟁에 돌입하였다. 2월 15일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는 전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농민이 참가하였는데, 전남지역에서는 3천여 명의 농민이 참가하였다. 이 투쟁은 쌀수입 개방을 농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대통령선거 이후 침체되어 있는 사회운동에 활력을 주려는 투쟁이었다. 또한 1993년 투쟁의 포문을 여는 것이었으며 처음으로 농민후계자와 공동투쟁을 하게 되어 이후 농업농민문제에 대응하는데서 농업관련단체와의 연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① 신농정 분쇄투쟁

농민들은 ‘5.18 민주항쟁 13주기 기념식 및 정신계승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이후, 6,7월 들어서 신농정 분쇄투쟁에 돌입하였다. 5월 20일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신농정의 허구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6월 3-6일, 봄농활 ; 6월30일-7월8일 여름농활)이 있는 후, 7월 들어 전농 임원단의 단식농성(7월 3-10일)이 시행되고 이에 발맞춰

전남 도연맹과 여농은 “신농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7월1-10일). 도연맹 의장단 및 사무국의 지역순회 활동이 있었고, 7월 5일에는 ‘우리쌀 지키기 광주·전남 대책회의’ 결성식이 있었다. 3월 초부터 광주전남연합에서 제안하여 쌀대책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6월 들어 간담회, 연석회의, 각 단체 대표자 회의 등을 거쳐 7월 5일 3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결성되었고 결성식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책위는 그 후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과 활동 위에서 7월 1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신농정 저지 및 쌀수입 강요하는 클린턴 방한 반대 농민대회’ (전국 1천2백 명 참가)에 전남지역에서 8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클린턴의 방한에 맞춰 쌀수입 음모를 폭로해 냄으로써 신농정의 허구성을 드러내는데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김영삼 정권의 농업정책이 집약된 신농정은 5.6공 군사정권의 농업구조조정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농축산물의 전면적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전농은 보았으며, 신농정의 반농민적 허구성을 폭로하고 농민적 농업정책(농업대개혁)을 쟁취하는 것이 600만 농민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고 보았다. 이에 연초 농기계 반값 공급의 실패를 밝혀내고 신농정의 양곡정책, 농지정책의 반농민성을 폭로하는 투쟁 및 전농 중집위원회의 단식농성, 도연맹의 10여 일간 비상체제 돌입에 연이은 7.10대회를 통해 신농정 분쇄투쟁의 실천적 토대를 열었다.

여름 들어서는 도연맹 활동가 토론회와 전농 활동가 토론회가 있었다. 8월 11·12일 화순 적십자수련원에서 열린 ‘1차 도연맹활동가 토론회’에는 60명이 참가하였고 ‘2차 수입개방저지와 힘찬 전진을 위한 전남활동가 토론회’에는 80명이 참가하였다. 여기서는 전농과 군단위 농민회의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열린 범민족대회에 80명의 지역농민이 참여하였다. 전농 활동가 토론회로는 8월 17-18일에 전북 이서개발원에서 농민운동을 점검하는 1차토론회가 있었고, 9월 21일에는 청주대학교에서 전농 하반기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27명 참가). 그리고 그 중간인 8월 27일에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농업기술자협회회관)에도 이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였다.

② 수매가, 수매량 쟁취 및 냉해보상 투쟁

가을 들어서는 1993년 추곡 수매가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신농정 하의) 양정제도의 허점과 전면 수정요구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냉해피해 조사 및 보상투쟁’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장흥군에서 의도한 바를 실천한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11월 들어서는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투쟁이 시작되어 12월말까지 지속되었다. ‘추곡수매, 냉해보상, 수입저지 11월 12일 전국농민비상대표자대회’ (탐골공원,

전국 2천명 참가, 전남 8백 명 참가)를 시작으로 13일 ‘수입개방 반대 청와대 항의방문 투쟁’ 이어졌다(쇠사슬 투쟁, 30명 가운데 전남 8명 참가). 11월의 투쟁은 전국단위 집회, 전국단위 농성투쟁, 거리선전전 등 중앙집중 투쟁이었다.

11월17일 대통령(김영삼)이 APEC회의에 참가한 뒤로 농민운동은 쌀문제를 범국민적인 문제로 만들어갔으며 전국민적인 투쟁과 도,군단위별 독자적인 투쟁을 결합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은 11월 하순부터 시작된 쌀투쟁을 특히 12월 들어서는 연대조직을 결성하면서 농성, 삭발, 단식, 나락적재, 나락불태우기, 농기계반납시위 등으로 전개하였다. 각군, 면단위에서 1-2회 집회를 갖고 시,군단위 비상대책위 지역위원회를 결성해 나갔다. 12월 7일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대회’ 이후 전남에서도 연대활동으로서 12월 10일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광주·전남 시도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5천여 명 참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농민이 1천 5백여 명이였다.

11월 23일 나주농민 50여명이 군청앞에 나락적재를 시도하려다가 전경 200여명에게 원천봉쇄된 일이 있었다. 11월 24일에는 “추곡수매 쟁취 및 양파, 마늘 수입저지를 위한 무안·함평 농민대회”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위에서 전농은 11월 29일 “한국농업 사수를 위한 전농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11월 29일부터 한국농업사수와 민족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농 산하 모든 조직이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12월 4일까지 1단계로 ‘1인1가마 적재, 농기계반납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남지역의 민중운동 진영은 연석회의를 갖고 비상시국회의 소집을 우리쌀지키기 대책위에 요구하였고, 12월 3일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전남 본부’가 결성되어 12월의 쌀투쟁을 주도해 나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각군단위에서는 농민대회, 군민대회, 나락적재, 나락불태우기, 가두행진, 군청진격, 농성, 농기계반납, 수매거부, 신농정 장례식, 성조기화형식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트랙터가 등장하고 해남농민들은 광주진격투쟁을 전개하다가 경찰에 막히자 도로를 점거하기까지 하였다.

11월 30일에서 12월 30일까지 전남 각 지역에서 벌어진 쌀투쟁을 정리해 보자. 시기별로는 11월 30일에 시작되어 12월 30일까지 이틀에 한번 꼴로 쌀투쟁이 여러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벌어졌으며 중하순에 집중되었다.

〈표-3〉 1993년 전남지역 쌀투쟁

일시	지역	투쟁내용
11월 30일	나주	벼 30가마 도로변에 적재, 70가마 추가적재, 나락 15가마 불태움, 농민 80명 검찰 2개 중대와 대치, 4명의 농민 부상(갈비뼈, 팔 부러짐)
12월 1일	고흥	11:00 대회시작, 100 여명 가두행진
12월 2일	장흥	냉해피해보상, 추곡수매, NTC품목 개방반대를 위한 군민대회 (400명), 군민회관에서 대표자 농성
12월 7일	진도	오전 8시 군내면 3개마을 수매거부 돌입(덕병리, 연산리, 용신)
	승주	오전 10시 집회 농민 1500명, 학생 1500명 - 순천대 학생과 농민 민자당사 돌격(똥물시위)
	나주	오전 기자회견, 농기계반납투쟁 돌입, 왕곡, 동강, 공산에서 80여대 차 동원하여 나주군 총진격
12월 8일	나주	3개면지회(왕곡, 동강, 공산) 농기계 반납투쟁
	화순	오전 10시 우시장 군민대회, 1,000 여명 참가
	구례	오전 10시 30분 구례지리관, 700명
	곡성	오전 11시 장터, 500여명, 가두행진
	장흥	관산면 오전 10시 집회, 500여명
	해남	오후 3시 30분 농기계 4대 반납투쟁 * 지역별 군청진격 투쟁
12월 10일	나주	나주 우시장 7,000여명, 트랙터 20대(3인 연행, 항의시위, 나눔) 시청으로 시가행진, 군청에서 노제, 중앙로에서 상여, 나락, 미국기, 김영삼 영정 화형식, 해산 * 트랙터로 광주로 행진
	영암	오전 10시 500여명, 상여 군청 앞까지 시가행진
	광주	비대위 집회 10,000여명, 의장, 정원실 부의장 석발, 정책실장 등 혈서투쟁, 도청앞까지 시가행진 일부 해산, 일부 미문화원 진격중.
12월 11일	영광	오전 10시 우시장 1000명
	함평	
	해남	농민 1인이 구청에 반납한 농기계를 찾으려갔다가 구청직원에게 맞음.
12월 12일	진도	1시, 절마광장, 비대위추최, 1,500-2,000참가, 신농정 장례식, 트랙터 5대와 경운기에 돼지를 싣고 군청으로 몰려감, 군청에 적재한 나락 10가마, 벼단, 상여 불태움

12월 13일	광산	오전 11시 송정리역 500여명참가. 김영삼,미국,신농정 화형식. 구청장이 대통령 앞으로 전달(대통령 쌀개방반대 서신)하겠다고 약속함.
	여수	여수,여천, 2시, 시민회관, 비대위 여수·여천본부주최, 300여명 참여
	신안	안파면 300여명 참여
	해남	이양기 1대 불태우고, 이미 반납했던 12대에 이어 60대 트랙터를 군청에 반납함 (농기계 반납증 요구 - 군수 거절, 11일 폭행 상황에 대하여 사과)
12월 14일	강진	2시 읍조합앞, 2,000여 명. 대회 후 트랙터 30대 군청으로 이동중, 최루탄을 쏘며 저지했지만 3개조로 나눠서 차단선을 뚫음. 군청앞 트랙터 30대 농기계 반납 상태임.
	장성	오전 10시 우시장, 1,000 여명(후계자 주최, 민주당 - 농민회 후원)
	화순	식발후 농성돌입. 3시 30분경 화순군 군농협 사거리 앞에서 6명 식발. 이후 16일까지 농성 결의. 저녁 8시 현재 15명 농성중.
12월 16일	진도	군내면 20:30 트랙터 20대, 경운기 3대 대치중.지산면 트랙터 3대, 경운기 1대 면사무소에 반납
	화순	3일째 농성. 춘양면 트랙터 4대,경운기 2대 면사무소에 반납
12월 17일	장흥	트랙터 8대 경운기 1대 군청에 반납, 나락 한가마 불지르고 군청앞 시위
	영암	11시 시종면에서 1,000명 농민대회(농민회,후계자 주최), 상여 행진
	진도	농기계 계속 진출 (30대) * 범대위 광주전남본부 서명작업
12월 20일	보성	득량면 농민대회 (200명 참가)
	고흥	11시 트랙터 등 농기계 반납시위와 나락 적재. 오후 군청앞에 농기계 30대와 나락 11가마 야적함(약 100여명 참가). 2시 비대위 고흥 본부 결성
	진도	20-21일 현재 계속 트랙터 시위 (계속증가)
12월 21일	진도	트랙터 40대 군청진격(계속 증가)
12월 22일	함평	오전 10시 광주은행 뒤 공터 100여명. 성조기 화형식 및 시가행진

12월 24일	영광	군남,군서,영산,영광읍 4개 지역 총 80여대 군청 진격
	진도	군내,의신,지산,진도읍 4개 지역 총 30여대 군청집결, 전경 1개 중대와 대치
	장흥	현재 군청 안 12대(트랙터 11대, 경운기 1대), 오전 11시 5대 반납, 집회와 농성
	화순	북면 5대(트랙터 4대 경운기 1대) 면사무소 앞
	고흥	농기계 15대 군청앞.
	담양	버11가마 아직(12월 8일 이후)
	해남	현재 군청앞에 17 대(12월 6일 이후)
12월 30일	해남	해남농민 60여명이 오전 10시 차량 15대에 동승하여 해남에서 광주로 차량선전 및 시위를 하며 올라오고 있음. 13시 30분 현재 목포와 무안 경계선에 있는 검문소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함. 15시 30분 현재 도로점거 시위.

1993년은 유래 없는 냉해피해와 지배권력의 쌀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수매가 동결, 수매량 축소정책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던 한해였다. 이에 전농을 필두로 모든 농민단체와 야당까지 결합한 공동연대전선을 형성하고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양곡정책 분쇄와 냉해피해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 재해대책법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급박한 진전은 이런 투쟁에 대한 대중적 결집을 이루어 내야 하는 상황에 또 다른 투쟁의 과제를 긴박하게 제기함으로써 투쟁의 집중과 대중적 결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③ UR 협상 반대투쟁과 UR 재협상, 국회비준 거부투쟁

이러한 쌀투쟁은 UR반대 투쟁과 같은 맥락에 있었다. 그러나 전농은 UR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UR에 의한 농업피해보다 가트의 BOP줄임에 의한 수입개방의 피해가 보다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여 투쟁의 정치적 집중점을 가트에 최종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1994년 2,3월로 설정하였다. 1993년 하반기 쌀투쟁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목표이기는 하나, 1994년 2,3월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저지투쟁에 집중, 총화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운동은 연초 쌀대책회의를 주도하였고 하반기에 쌀대책회의를 모태로 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도-전국 투쟁을 조직하여, UR에 대한 범국민적 투쟁전선을 마련, 투쟁의 집중과 대중화를 이루어냈고 투쟁의 수위와 방향을 반김영삼-반미투쟁으로 발전시켰다.

전농민적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 김영삼 정권의 UR협상은 일단락되었다. 이에

투쟁의 중심은 2월 15일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저지와 국회비준 거부를 통한 UR재협상으로 모아졌다.

특히 11월 13일 목에 쇠사슬을 건 청와대 향의방문 투쟁을 기폭제로 하여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였고, 이는 11월 22월에 걸쳐 광범위하고 폭발적인 투쟁으로 나타났다.

12월에 벌어진 각 군, 면별로 엄청난 진격투쟁의 열기를 이어받아 1994년 2월 1일 대학로에서 ‘UR 재협상, 국회비준거부투쟁’의 일환으로 “UR재협상 쟁취, 국회비준거부와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4만 명이 참가하였는데, 전남에서는 4천 5백 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연대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대학생들의 농활(봄농활 6/3-6, 여름농활 6/30·7/8, 17개군)을 좀더 확대하였다. 곡성의 금속노조, 담양의 노동운동협의회, 장성의 평화실현연합 등과의 국민농활은 농업농민문제의 대중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겨울농활도 준비하여 1월말경 10개 군에서 1-2일 정도 선전전 형태로 수행하였다.

5) 1994년

(1) 투쟁내용

1994년은 UR국회비준을 앞두고 조직의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 이를 저지하여야 하는 비상한 시기였다. 김영삼정권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UR국회비준을 몇 차례에 걸쳐 강행처리하려고 하였고 이에 전남도연맹은 김영삼정권의 UR국회비준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2월 1일부터 시작된 UR국회비준 저지대회는 중앙에서 세 번에 걸친 농민대회, 광주에서 열린 5번의 대회, 그리고 각군에서 벌인 2번의 동시다발 대회 및 차량과 농기계 시위를 거쳐 연말에 보고대회 및 송년회로 마무리 되었다. 서울이나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각군에서 차량이나 농기계를 동원하여 집결하였고, 각군동시다발투쟁에서는 각군별로 며칠 간 농기계와 차량을 동원하여 군청으로 집결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초순부터 1개월여에 걸쳐 벌어진 추곡야적투쟁은 총 9개 군 4000여가마의 물량을 확보하고 추곡수매요구와 UR국회비준저지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 와중에 청와대 진격투쟁은 물론 구속되거나 연행된 농민들을 구출하는 투쟁도 불사하였다.

〈표-4〉 1994년 UR국회비준저지 전남농민 투쟁활동

일시	대회명/장소	내용
2월 1일	UR재협상 쟁취, 국회비준거부와 농정개혁을 바라는 전국농민대회/서울 대학로	전국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전남지역에서는 4천 5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3월31일	UR국회비준저지,재협상 촉구를 위한 광주 유권자 결의대회/ 광주	

4월 9일	망국적 UR협상 규탄과 국회비준 결사저지 시도민 총결기대회/조선대 노천극장	
6월 15-16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전남농민활동가 전진대회/광주	농민활동가 150여명이 참가
6월20일	UR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서울	전남 농민 700여명 참가. 민자당 단독 날치기 통과음모저지 위해서
6월25일	UR국회비준저지와 신공안 탄압 분쇄를 위한 시·도민대회/광주	농민차량 100대 이상 참가
10월25일	UR국회비준저지 및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전국군 동시다발 농민대회	전남 각 군에서 개최
11월16일	UR국회비준저지와 추곡수매 쟁취를 위한 전남농민대표자 결의대회/광주	차량 140여대, 농민 400여명, 학생 200여명이 참가
11월29일	쌀 생산비 보장과 WTO비준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보라매공원-여의도	전남 차량 55대 2,500여명 참가
12월 8일	'추곡수매 날치기 통과 규탄 및 UR이행 특별법제정 위한 전국동시다발 군 집회 및 차량 농기계시위	전남 12월중 10개 군에서 동원된 농기계는 총 400대, 벃가마 4천 가마 군청 앞 야적
12월28일	UR보고대회 및 송년회	장흥, 화순, 영광, 보성, 나주, 담양, 진도, 고흥, 강진, 승주...

1994년에 조직, 교육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의 조직화와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한 '농사 청년 조직화사업'이었다. '전남청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5개 군에 걸쳐 광범위한 논의확산과 청년운동의 주체건설, 청년학교의 개최를 통해 청년조직화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연대사업으로 봄, 여름의 농활을 연대하였고, 광주공원에서 열린 5.18 계승대회에는 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지역현안투쟁으로 보성지역의 쪽파투쟁, 무안·해남의 마늘종자피해보상투쟁, 목포·무안통합반대투쟁, 별교의 산업쓰레기장설치반대투쟁, 영광의 지속적인 반핵투쟁 등이 있었고, 농민회원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군단위 투쟁과제의 추진은 농민회의 역량을 강화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세력 및 주민역량과 투쟁 속에서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6) 1995년

1995년을 맞이하면서 전남지역은 UR협상과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최대의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다. 농민회원들 또한 그동안 투쟁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 토대구축에 대한 고민과 농민운동의 활로개척이라는 중차대한 진로모색에 고민이 중첩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영농발대식

UR협상저지투쟁 이후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김영삼정권의 UR협상 실패로 인한 농수산물의 전면적 개방에 맞서 농업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WTO이행특별법의 조기실시 및 농정개혁 7대과제를 쟁취하겠다는 결의의 장으로서 영농발대식을 추진하였다. 영농발대식은 의료보험통합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후 투쟁을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나주, 해남, 영광군농민회에서 실시되었다. 영농발대식은 한해의 첫 대중사업으로 UR투쟁 이후 조직정비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나주농민회의 경우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이후 의료보험투쟁을 조직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조직과 교육사업

1995년 전남도연맹은 17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으며 참관 2개군(신안, 함평)으로 구성되었다.

1994년에 이어 추진한 농사청년위원회 구성작업은, 나주, 해남, 구례 등을 중심으로 17개 시군에 농사청년의 주체가 건설되었다. 농사청년회 운동은 30대 전후 농사청년을 조직대상, 운동주체로 설정하였다. 전남농사청년위원회 준비위를 구성하고, 군단위 책임자까지 선정하여 통일투쟁, 수련회, 5.18행사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하는 청년'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교육사업에서는 전남도연맹은 중앙의 교육사업에 교육생을 파견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도연맹차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독자적인 교육사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군농민회에서도 마을교육을 꾸려내지 못하였다.

(3) 농정투쟁

김영삼정부는 UR협정을 근거로 추곡수매 축소만을 강제하였다. 이에 전농은 김영삼정부의 반농업정책에 맞서 WTO체제하에서 WTO이행특별법시행령 제정을 목표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계속적으로 WTO이행특별법시행령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여 왔으며 또한 농정개혁7대과제(농지제도 개선, 양정제도 개혁, 협동조합개혁, 통합의료보험 실현, 영세농지원대책, 농자재, 사료의 부과세 영세화, 농어촌투자 42조원 법제화) 쟁취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추곡수매 13.8%인상, 1,100만섬 이상 수매할 것과 UR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4) 지역현안투쟁

1995년은 UR투쟁 이후 새롭게 조성된 정세와 조건 속에서 농업대개혁투쟁으로서 의료보험

통합쟁취투쟁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현안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문제, 농민권의 실천문제가 폭넓게 제기되면서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상반기에 주로 전개된 지역현안투쟁으로는 농협 보답대회²¹⁾ 관련 비웃 사건(나주시농민회 금천지회), 난시청지역 TV수신료 납부거부투쟁(강진, 구례, 장흥, 해남),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투쟁(보성), 마늘·양파불량종자 피해보상투쟁(무안), 만났고추 불량종자 피해보상투쟁(영광) 등이 있었다.

이러한 현안투쟁 과정에서 농민회가 지역사회에서 농민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내 비민주적 요소의 척결을 통한 사회개혁의 대표체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조직으로의 조직적 강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었다.

(5) 통합의료보험 실현과 추곡투쟁 및 11월 25일 전남농민대회

7월 19일 전농 중앙위원회에서는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일원화를 하반기 주요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추곡수매투쟁을 결합하기로 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상반기에 나주농민회를 필두로 담양, 장흥, 보성 등지에서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투쟁은 '의료보험통합 촉구 서명운동' 과 의보조합에 대한 항의방문, 그리고 조합측과 의료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통합의료보험실현을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것을 합의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남도연맹 차원에서는 민선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전농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군농민회에서는 통합의료보험쟁취투쟁과 함께 대중집회와 차량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7-8월 군단위에서 서명운동과 프랑걸기 등 선전전을 전개하여 농민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수 이후 각 군단위 농민대회와 차량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곡수매와 의료보험통합실현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어 전남도연맹에서는 9월 서명용지 3,300부를 제작하여 각 군농민회에 배포하였으며, 9월 30일 농민단체, 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14개 단체가 결합하여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광주·전남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료보험통합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서명운동과 11월, 12월 두 달 동안 보험료납부거부투쟁을 결의하였다.

또한 추수기에 접어들면서 김영삼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 960만섬 수매방침에 반대하고 추곡수매에 대한 전농의 요구를 언론을 통한 홍보작업과 농민회출신 도의원을 통하여 의회회가 농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우리의 안을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 면담을 통하여 전농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의회,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추곡수매안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도지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전남도연맹에서는 추수기가 접어들기 전에 현장의 의보통합분위기를 상승키고 언론을 통한 전농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10월 4일

21) 일년 동안 농협을 이용하고 협조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고자 농협에서 개최하는 대회.

군동시다발 차량시위를 3개군(화순, 장흥, 보성) 농민회가 참여한 가운데 하였다.

군농민회들은 9월 의보통합에 대한 각 면지회별 현수막 걸기와 장날을 이용한 서명받기,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장과 공동으로 합의를 받아내거나 의료보험통합 서명에 돌입하여 7,000여 농민이 참여하였다.

또한 구례군 토지면의 경우 각 이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보통합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발대식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담양군농민회는 각 마을 교육과 선전을 통하여 9월 22일 농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담양군농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1월 4일 도연맹 비상운영집행위를 통하여 투쟁의 본격화를 결의하고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각 군농민회에서는 추곡수매와 의보통합을 위한 대중집회(4개 군)와 차량시위(8개 군)가 이어졌다.

이러한 투쟁 위에서 11월 25일 도청 앞에서 ‘쌀과 농축산물 제값받기 및 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 위한 전남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민선시대에 즈음하여 전남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2,500여명이 참석한 대회에서 농민들은 쌀과 의료보험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 대회는 지역차원에서 농민회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여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는 대회 참석자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농협 등 다양한 단체가 동시에 참석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이어지는 등 전 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나주, 화순, 장흥 지역의 농민운동은 의료보험조합 항의방문,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투쟁,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민회적 활용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의료보험문제 등 중앙정부투쟁과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풀어나갔다. 이러한 운동과정에서 몇 개 군에서 한국통신노조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한국통신노조의 민족통신사수투쟁에 격려방문 등 새로운 연대를 확인해 나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주농민회는 통합의료보험쟁취투쟁을 선거공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선전과 교육을 해 나갔다.

(6) 연대사업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관이 지역현안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곡수매결정과정에서 전남도, 도의회, 도연맹 3자의 추곡수매공동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남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의료보험통합쟁취투쟁을 준비하면서는 보건의료단체,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등 14개단체로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광주·전남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공동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농학연대사업으로 봄, 여름농활이 12개군 각각 3천명,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개되었으며, 특히 지자체 선거시 농민회후보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봄농활-주말농활

(지자체선거 시)-여름농활로 진행된 농활에 연인원 5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지자체선거 공간에서 각 후보에 대하여 특정수의 지원이 있었고 주말농활을 제기하여 주말에는 후보자선전에서부터 농사일돕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광주지역 노동운동단체연합회원과 금속노조원 100여명이 나주 신정훈후보 지원차원에서 동강면에서 1박2일 동안 연대활동을 하였다. 그 외에도 전농 광주전남연맹에서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 조직발전 및 전선재편 등의 사안활동에 적극 결합하였다.

(7) 지자체 선거참여

지자체선거공간을 통하여 농민운동의 정치적 지위확보와 정치적 대표세력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고 세계무역기구(WTO) 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정개혁 7대과제 쟁취,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실현의 과제를 선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민회의 집행력강화, 활동가들의 안정화 및 조직역량 강화를 꾀하고자 하였다.(회의체계 정상가동, 군농민회, 면지회 등 기간조직 정비).

전남도연맹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농방침에 근거한 전남도연맹의 선거대응방침을 결정하고 각 군단위에서는 최종 의결기구에서 조직적으로 결정된 후보에 대한 당선투쟁을 전개하였다. 후보전술에 있어서 경직된 후보전술을 접고, 보다 개방적인 후보전술을 택하여 출마보다는 당선가능성과 의회진출에 목표를 두었다. 필요에 따라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통한 민주당후보공천을 시도하였다.

그러면서도 전남도연맹은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연맹 공식 조직후보로 도의원 4명, 기초의원 13명 등 17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조직후보로 결정한 과정은 주로 군단위 결정과 추천에 의해 올라온 후보에 대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남도연맹은 그간 후보들의 민주당 공천획득에 대한 지지, 지원과 언론작업 등을 전개하였으나 선거법에 묶여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애초에 계획했던 지역공청회 또한 몇몇 군농민회에서 시도하였으나 준비부족 또는 민주당후보자의 공청회 기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선거결과 조직후보로 도의원 3명과 기초의원 4명이 당선되었다. 후보를 출마시킨 지역의 경우 후보당선운동을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반면 후보가 없는 지역의 경우 농민회의 조직적 가동이 전무하였다. 민주당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이거나 상관없이 농민회 조직의 뒷받침이 없다면 선거운동 뿐 아니라 당선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²⁾

22) 무소속으로 나선 나주의 신정훈 후보의 경우 막강한 조직력과 철저한 대중투쟁중심의 선거운동으로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 뜨리고 농민운동의 위력을 발휘한 반면, 민주당 내천을 받은 상당수 기초후보의 경우 민주당 기존조직의 이탈과 농민조직의 소극적인 뒷받침으로 선거운동전략의 혼선마저 초래하여 실패하였다.

7) 1996년

(1) 투쟁활동

① 식용쌀수입저지 투쟁

전농 전남도연맹은 김영삼 정부의 식용쌀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쌀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가공용 쌀만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중국산 식용쌀을 수입해 들여왔다. 이에 대하여 식용쌀 수입입찰저지, 입항저지, 입고저지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진행된 도보행진에는 연인원 7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여론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열린 9.10농민대회(‘통합의료보험·쌀증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에는 농번기임에도 전남지역에서 3,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 이어진 150여명의 청와대 항의투쟁은 40여명이 연행되는 사태를 가져왔고 이 투쟁에도 전남지역 농민들이 주로 참가하였다.

식용쌀수입반대투쟁은 2월 10일 목포항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입쌀 1만 5천 톤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한 것을 필두로 정부의 식용쌀수입 강행에 맞서, 6월 2일 전남도연맹이 주최하여 도청앞에서 2,3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소값폭락과 식용쌀 수입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7월 10일에는 남원농민회가 ‘의보통합, 쌀수입반대’ 집회를 농민, 학생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어서 여천항에서 8월 20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농민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용쌀 수입반대와 식량자급 기반마련을 위한 전남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보트를 이용한 해상시위, 바다에 투신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어서 8월 29일부터 화순, 장흥, 보성, 나주, 강진, 고흥, 진도, 담양 등 각 지역에서 식용쌀 입고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입고저지 집회를 개최하고 창고나 정미소 등에 찾아가 항의하고 입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남도연맹은 9월 17일과 20일 각각 ‘식용쌀 수입저지 각군 동시다발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차 투쟁은 담양, 진도에서 대회를 가졌으며, 2차 투쟁은 고흥, 구례, 나주, 순천, 장흥에서 농민대회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식용쌀 저장창고를 항의방문하고 군수를 면담하거나 창고업자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논을 갈아엎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농기계나 차량을 동원하여 시위하기도 하였다.

② 쌀 수매가 인상 투쟁

3년 연속 수매가 동결 기도에 맞서 나주, 화순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들은 수매거부투쟁을 조직하고 전농 중앙의장단은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11월 4일 장성군 삼서면, 장흥군 안산면 농민회원 50여명이 “수매가 인상,” “1천5백만섬 수매”라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한 수매장 선전을

시작으로 나주 노안면, 동강면, 화순 춘양면, 능주면에서 수매거부가 전개되었고, 구례군 이장단이 수매거부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였다.

〈표-5〉 1996년 전남지역 수매가인상 투쟁 현황

일시	시군면	투쟁내용
11월 4일	장성 삼서면	농민회원 50여명이 “수매가 인상” “1천5백만석 수매” 피켓시위
	장흥 안산면	
11월 6일	해남,영암	금호 방조제 준공식 현장에서 해남군농민회 15명이 “수매가 인상” 선전전
11월 7일	나주 노안면	이장단 추곡 수매거부 결의
	구례 문척면	수매장 선전전
11월 11일	나주 동강면	이장단, 농민회 수매거부
	구례	수매장에서 농민회원 20여명 “수매가인상” 피켓 선전전
11월 13일	화순 춘양면	수매 거부, 50여명 수매가 인상 선전전
11월 14일	화순 능주면	수매 거부
11월 14일	나주	나주농민회 추수대동제 (0시, 영산강 고수부지, 300여명)
	함평	월야면 이장단 수매거부
11월 16일	구례	8개 읍면 이장단 수매거부를 위한 기자회견 (11시, 광의면 복지회관)
11월 20일	전남도의회	전남 도의회 성명서 채택 “추곡수매가 12.3% 인상하고 1,150만석을 수매하라”
11월 27일	담양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와 추곡수매가 인상을 위한 담양 농민대회 (10시, 천변주차장, 100여명)
11월 28일	곡성	곡성군 농민회 수매가 인상, 통합의보 차량 선전전
	전남쌀 전업농	전남 쌀전업농 기자회견 “수매가 인상 촉구 기자회견” (4시, 도청앞) - 전남 전업농 1,789명 중 116명 서명, 농민회원 30여명 참석
11월 29일	고흥	고흥군 농민회 수매가 인상, 통합의보 차량 선전전
12월 3일	광주	광주시농민회 ‘추곡수매가 인상, 수매량축소배정반대 광주시 농민대회’ (10시, 시청앞, 180여명)
12월 4일	보성	보성군농민회 수매가 인상, 통합의보 차량시위
12월 13일	서울	쌀수매가 인상과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96 제2차 전국농민대회

수매가인상과 통합의료보험을 묶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차량선전전, 피켓시위, 기자회견, 농민대회, 거부결의 등 11월 내내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해나갔으며, 12월 13일에는 8,0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전국농민대회('쌀수매가인상과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제2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애초의 요구인 12.3% 인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치권을 압박하여 정부의 동결의도를 분쇄하였다.

③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투쟁

2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의료보험통합 투쟁을 중심투쟁으로 결의한 이래, 각 도, 군의 영농발대식과 정부종합청사 앞 천막농성투쟁, 총선투쟁, 한겨레신문 광고투쟁, 차량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현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전남도연맹은 3월 20일 각군 동시다발 의료보험조합 항의방문(전남·전북도연맹 시 군농민회 동시다발 의료보험조합 항의방문, 24개 시군농민회, 4,000여 명)을 조직하였으며, 모든 군농민회가 참여하여 의료보험료인하, 통합의료보험에 대한 입장요구 등을 내걸고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영농발대식도 의보쟁취와 쌀증산을 내걸고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6일 조선대에서 개최하였다(의료보험통합 쟁취 및 쌀증산을 위한 '96 전남농민영농발대식).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6개 시군농민회가 참여하는 신문광고투쟁을 전개하였으며, 5월 18일 도청 앞에서 '학살자 전원처벌, 미국사과와 의료보험통합촉구 전국농민대회' 를 개최하였고, 농활시기에는 스티커 10만장 붙이기, 선전물을 배포하고, 7월 8일 각군 동시다발 의료보험조합 항의방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농활이 끝나는 7월 9일에는 학생들과 농민들이 '각 지역 의보통합 선전·의보조합방문·의보통합 결의대회' 를 개최하였다.

9월 1일부터는 '통합의보·쌀자금을 위한 전국도보홍보단' 을 꾸려 제주에서 서울까지 동서군으로 나누어 행진을 하고 주요 도시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 10일 전국농민대회에 결합하였다.

이처럼 상반기부터 전 군농민회의 가동력을 높여내면서 의료보험조합 항의방문, 과천종합청사앞 농성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도시민들까지 투쟁에 동참하고 야당의 단일안으로 의보통합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

④ 흉농종묘 불량종자 보상투쟁

흉농종묘 측과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투쟁이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영광 백수지역 농민들의 민사소송을 구실로 흉농 측에서 합의를 파기하여 투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영광군농민회와 대책위를 중심으로 피해보상투쟁을 전개하였고 도연맹과 각군농민회가 함께 '2.1 전국농민대회' 를 통하여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쌀자급과 의료보험통합투쟁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진 1996년의 투쟁은 식용쌀 사용을 저지했으며,

추곡수매가 4%인상, 통합의료보험에 대한 검토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2) 조직과 교육사업

전남도연맹은 1996년 각 군농민회의 회의체계 정상화를 통한 조직복원과 함께 읍면 지회건설, 강화, 그리고 농사청년위 건설과 대중화, 활동가 1천명 조직화사업과 이를 위한 ‘농민희망학교’ 운영을 추진하였다.

회의체계는 도, 군이 월 1회 개최되는 등 농번기를 제외하고 정례화되었지만 도의 운영위, 집행위의 참석자가 50-60%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1996년 8월 11일 보성군 읍어면지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면지회가 대부분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투쟁을 위한 대중동원 때만 움직이는 상태에 있었다.

농사청년위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1997년 정식발족을 피하면서 6월 25일 순천대운동장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몇 군을 제외하고 군주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농 광주전남도연맹은 간부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1천명 활동가조직사업과 ‘농민희망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운영팀을 구성하고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참여부족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부딪혀 한 차례도 운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군농민회에서조차 투쟁사안에 밀려 교육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연대사업

연대사업으로는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광주전남연대회의’가 2주 1회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는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노총이 꾸준히 참여하였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선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고, 8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 강진군 성전면 6개 마을에서 150여명이 농촌활동에 참여하였는데, 보건의료단체는 진료활동을, 민주노총은 농기계수리 등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1996년 농촌활동은 봄농활 3,200 여명, 여름농활 2,000여명이 참여하여 14개 시군에서 실시되었다. 농촌활동과 결합하여 의료보험통합쟁취를 위한 10만장 스티커 붙이기, 1인 1부모 사귀기, 의료보험조합 항의방문 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김영삼정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개악에 반대하여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총파업투쟁과 각 단체의 시국선언에 맞춰 전남도연맹은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개악철폐를 요구하는 전남농민 800인 선언’을 조직하였으며, 1997년 1월 11일 광주역광장에서 농민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철폐와 노동자투쟁 지지·지원을 전남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각 군농민회는 성금과 쌀, 떡, 막걸리를 준비하여 민주노총에 전달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지원하였다.

기타 지역현안투쟁으로 장흥 탐진댐 건설 반대대회(7.9.), 영광핵발전소 저지운동²³⁾ 등이 있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전남 광주전남연맹과 농민회원들은 통일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최하기도 하였다.

8) 1997년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이후 김대중정부에 대해 견인과 비판을 통해 농업정책공약의 성실한 조기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전남지역에서는 3월 25일 나주농민회(1,500여명, 풍년기원제, 문화행사, 대정부건의문 채택), 4월 1일 해남군농민회(30여명, 녹두장군 전적지순례, 강연)와 보성군농민회(300여명, 발대식)에서 영농발대식을 하면서 일년 농사를 힘차게 준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1) 투쟁활동

① 의료보험투쟁

지난 10여년동안 끊임없이 투쟁해 왔던 의료보험통합이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동안 사회보장제도로써 기능을 상실한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가 농민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의 끈질긴 투쟁으로 단계적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1996년 국회에서 상정, 입법화됨으로써 완전통합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완전통합의 길을 열어놓았다.

② 농협개혁

금융시장 개방화를 이유로 조합원의 자율적 의사보다는 ‘농협합병촉진법’에 의한 강제적 조합합병에 맞서 농민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월 29일 아트홀 신명에서 열린 ‘농협합병에 관한 공청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하여 농협합병에 대한 전농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농협의 합병이 협동조합으로서 원칙과 기능에 충실한 합병보다는 금융개방화를 앞두고 신용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청회를 통하여 농협의 강제적 합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청회 이후 농협합병의 무원칙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농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었고, 나주의 경우 8개 농협의 합병추진에서 조직 내 토론과 공청회, 조합원에 대한 선전을 통해 합병을 무산시켰다. 그러나 각 회원농협이 처해 있는 한계 속에서 각 지역에 따라

23) 5.6호기 착공저지 농민대회(8.21), 영광핵발전소 비상대책위 청와대, 정부부처, 한전본사 항의방문(9.9).

농협합병에 대한 조직 내 찬반이 엇갈렸고, 대부분 권역별 합병에는 동의하는 실정이었다. 농민들은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협동조합으로서 본래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개입력 확대를 통한 농협개혁에 뜻을 두고 있었다.

③ 농축산물가격보장과 부채 투쟁

1997년은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를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계속된 소값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요구와 UR협상 이후 증가한 농가부채에 대한 경감 및 상환유예를 요구하였다.

8월 4일 해남에서 열린 ‘전남농업발전과 농축산물 제값받기 97전남농민 수련대회’에는 2,3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지방의원들은 9월 5일 전남도연맹과 농촌을 지키는 지방의원모임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소값폭락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농민회 출신 지방의원들은 새벽에 우시장을 방문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9월 8일 광주역에서 열린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남농민대회’에는 1,50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를 동원하여 소값폭락에 항의하였고 농가부채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경제파탄의 주범 경제부총리에 대한 화형식을 가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11월 18일 여의도 고수부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97 전국농민대회’까지 가져갔으며, 이 대회에 전남지역에서는 3,543명(차량 92대)이 참여하였다.

(2) 연대활동

농민과 학생의 연대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온 농촌활동은 정권의 남충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국면 속에서도 연인원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식량자급과 농축산물 제값받기를 중심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도농민학생연대사업추진위원회가 꾸려져 회의를 하고 만나면서 농활을 준비해 나갔다. 5월 2~5일에 진행된 봄농활에는 14개 시·군농민회에 193개팀 4,122명이 참가하였다. 농활신문 1만장과 선전포스터 5천장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해단식은 조선대학교 노천극장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농업 사수를 내걸고 진행하였다. 여름농활(7.2~8)은 ‘식량자급 실현과 농수축산물제값받기’를 내걸고 진행하였으며, 10개군농민회 75개팀 1,100명이 참가하였다. 시·군별 해단식 및 농민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쳤다.²⁴⁾

그리고 농촌활동과정에서 농약빈병모으기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적인 모습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대 수의대의 경우 방역활동과 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농민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24) 고흥, 구례, 담양, 보성, 영광, 진도.

그 외 연대사업으로는 5월 17일 ‘오월문제 완전해결과 무능부패정권규탄국민대회’에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였고, 518인 선언운동에 40명이 참여하였다. 안기부법,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인선언운동에는 400명이 참여하였고 ‘농업파탄, 부정부패정권 대선자금공개하라’는 프랑 걸기에 10개군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수해피해를 입은 복역동포를 위한 모금운동과 비료보내기 사업에 각 시군농민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900여 만원을 모금하였다.

(3) 교육활동

전남지역에서는 전농 중앙의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간부교육, 의장·회장단 연수, 사무국장단 연수 등에 몇 명씩 참여하였다. 시군농민회 교육도 이루어졌는데, 나주농민회의 경우 청년학교(97. 1. 14-3. 1 : 주2회, 평균 30명 참가)를 열고 간부교육(97. 2. 23 ; 80여명 참가)을 하였으며, 해남농민회는 활동가 교육을 하고 농협합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담양군농민회의 회원교육, 영광군농민회의 간부교육 등이 있었다. 도연맹이 주관하여 각 시군농민회에서 1-2명씩 참여하는 활동가 소토론회도 두 번 개최하였다.

9)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전남지역 농민운동은 더욱 활성화된다. 그리고 2월 26일 제7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명칭을 ‘한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에서 ‘한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으로 바꾸었다. 물론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1) 투쟁활동

① 농협개혁 투쟁 및 상호금융 금리 인하 투쟁

2월 들어 농협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군농민회는 농협개혁 투쟁에 나섰다.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나주농민회를 시작으로 해남, 순천, 화순, 영광, 구례에서 농민회원들이 농협 시군지부에 항의 방문하여 ‘농수축협은 상호금융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예대금리차를 축소 조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월 9일 광주전남연맹이 농협중앙회 광주전남지부 앞에서 항의농성 및 기자회견을 한 이후, 각 시군농민회에서는 2월 10일에서 2월 말까지 항의방문과 면담요구는 물론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특히 나주농민회의 경우 면단위에서 또는 몇 개의 면이 결합하여 점거농성에 돌입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리인하 약속을 받아냈다. 3월 초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금리인하를 약속받게 되었다(장흥,

진도). 이어서 4월 23일 광주공원에 572명의 농민이 참석하여 ‘정책금리 인상규탄과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광주전남농민 투쟁선포식’을 치렀다.

② 영농발대식

2월 26일 도연맹 대의원대회 이후 3월 중순 들어 각 군농민회의 영농발대식이 진행되었다. 3월 15일 고흥군농민회를 시작으로 4월 18일 강진군농민회까지 12개 시군농민회에서 영농발대식을 하였다. 체육대회, 활동가토론회, 선포식, 축제, 등을 겸하면서 일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적게는 30여명에서 나주농민회의 경우 1,500여명이 참석하였고, 영암의 경우 축제형식으로 치러져 관광객까지 합세하여 7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영농발대식에서 농민들은 농가부채해결, 농산물가격보장, 농정개혁 등을 제기하였다.

③ 시군농민회 농가부채투쟁

9월 15일에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는 ‘식량자급 ·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98 전국농민대회’란 이름으로 치러졌고, 전남지역에서는 120대의 버스에 4,716명이 참석하였다.

계속 제기되어 온 농가부채문제가 11월말 들어 농민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11월 30일 ‘농가부채 해결, 수매가 인상, 농정개혁 촉구’를 위한 나주농민대회’(영산포 구우시장, 700명) 이후, 함평, 장흥, 화순, 구례, 영광, 진도, 광주, 곡성, 고흥에서 농가부채해결을 축으로 가격보장, 수매가인상, 농정개혁, 수해피해보상 등의 요구를 함께 제기하면서 농민대회, 항의방문, 차량시위 등을 전개해 나갔고, 12월 10일에는 6개 시군농민회에서 농가부채 현물납부의 방법으로 농기계반납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에도 농기계반납투쟁이 있었고, 12월 28일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300명이 참석하여 ‘농가부채 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광주전남 농민대회’를 개최하기까지 이르렀다.

④ 지역현안투쟁

농진공 · 농조연 · 농조 통폐합과 관련하여 농지개량조합원들의 통합반대에 대해서 시군 농민회가 농조를 항의방문하는 활동이 있었다(장흥농조). 그리고 보리피해보상 요구활동이 있었다(장흥군농민회, 영광군농민회).

(2) 연대활동

대학생들의 농촌활동으로 봄농활(5월 1일-4일)은 14개 시군농민회 168팀, 3,658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7월 4-5일에는 광주전남연합,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가 참여하는 국민농활이 나주 노안면과

세지면에서 전개되었고, 7개팀(마을농활 3팀, 기능농활팀 4팀) 100명이 참여하였다. 가을농활(10월 9일-11일, 2박 3일)에는 5개 시군농민회 9팀, 94명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농활을 대학생에서 다른 연대세력에게로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농민들은 민중대회에도 참여하였다. 11월 8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재벌해체! IMF반대! 98 민중대회’에는 전남지역에서 80명의 농민이 참여하였고, 12월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재벌 해체 IMF 반대! 광주전남민중대회’에는 전남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168명이 참석하였다(전체 1천여 명).

(3) 교육활동

교육은 도연맹 단위에서 남부지역교육(4.9. 해남, 46명)과 지자체교육(4.10. 나주, 20명)이 있었다. 시군농민회 교육으로는 고흥군농민회의 입회자 교육(3.5-3.6)과 정치강좌(4.14.), 나주농민회의 간부교육(3.18.)과 간부수련회(7.20.-21.)가 있었다. 해남군농민회에서는 활동가교육(8.26.)이 있었고 특히 산이면지회의 회원교육(3.30.)이 있었다. 그 외에 광주시농민회의 간부교육(7.10.)과 순천시 농민회의 농축산물 제값보장과 농가부채해결에 대한 교육(8.27.)이 있었다. 이처럼 각시군농민회별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10) 1999년

1999년 들어 농민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영농발대식을 하였다. 3월 31일 ‘농협대개혁 농가부채 완전해결을 위한 나주농민 영농발대식’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는 1,5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4월 10일에는 구례군농민회 가 영농발대식(12시, 구례북중학교)을 하였다.

(1) 투쟁사업

1999년은 협동조합개혁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3월 3일 서울 농협중앙회 앞 비상농민대표자대회를 시작으로 각 시군농민회의 농협시군지부 항의방문, 항의농성, 점거농성 등이 3월 초중순(보성, 해남, 구례)과 7월 초순(진도, 화순, 보성)에 있었다. 7월 3일에는 광주역 광장에서 ‘농가부채해결, 협동조합개혁과 미국IMF반대 노동자, 농민, 학생 결의대회’ (오후 2시)를 개최하였고, 농민회원 771명이 참석하였으며 32명이 삭발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7월 중순에는 지역별로 나누어 국회앞 농성에 참여하였다. 전남의 농성투쟁 참여 일환으로, 지역별로 4-5개 군의 농민들이 1박2일로 국회 안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²⁵⁾

25) 남부지역 국회앞 농성(진도, 해남, 장흥, 강진/7.8-7.9), 동부지역 국회앞 농성(구례, 순천, 보성, 고흥/7.9-7.10), 북부지역 국회앞 농성(화순, 광주, 장성, 담양/7.10-7.11), 서부지역 국회앞 농성(나주, 영광, 함평, 무안, 곡성/7.16).

이 투쟁은 상호금융 금리의 인하와 연체 이자의 인하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각급단위 교육을 하였고, 특히 광주전남연맹 협동조합위원회에서 정리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전농의 협동조합 개혁안을 정리하는데 모태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하반기에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었다. 11월 22일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도청 앞에서 한 뒤, 11월 25일 시군농민회 동시다발 농민대회 및 차량선전전을 전개하였다. 8개지역(진도, 해남, 화순, 함평, 나주, 광주, 담양, 보성)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4개 지역(곡성, 구례, 장흥, 고흥)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차량선전전을 하였다. 군단위에서 개최한 농민대회에 수백명의 농민이 참여하여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해결, 수입개방반대 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철폐, 농업재해보상법제정 등까지 제기하였다.²⁶⁾ 12월 14일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사를 각 지역별로 방문하여 항의농성을 하였다.²⁷⁾ 이러한 부채해결투쟁은 정부의 상호금융자금의 농가부채인정, 그리고 3차례에 걸친 농가부채정감대책의 수립, 상호금융저리자금으로의 대치 등의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에서 이러한 투쟁을 벌이면서 또한 중앙에서 열리는 농민대회에 가는 상경투쟁 또한 여러 번 하였다. 각군단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의 대회장소에 집결하여 대개 오후1,2시부터 대회를 치루고 내려왔다. 7월의 결의대회 때는 며칠 전부터 국회앞 농성에 지역별로 참여하다가 결합하였다. 12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는 3천여 명의 전남지역 농민들이 참여하였다.

〈표-7〉 1999년 전남농민의 상경투쟁

일시	장소	대회명	참가자수
3월 3일	농협중앙회본부	농협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진정 개혁을 위한 비상농민대표자 대회	31명
3월18일	농협중앙회본부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조합원대회	236
4월24일	대학로	전농 창립 9주년 기념 및 협동조합개혁, 농정공약 이행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173
7월16일	국민회의당사 앞	농가부채해결 협동조합개혁과 의료보험 완전통한 농정공약 이행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210
12월10일	서울역 광장	농가부채 완전해결, WTO수입개방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99 전국농민대회	3,000
12월17일	정부종합청사	농가부채완전해결 농민탄압규탄 4대 농민개혁입법안 쟁취 2차 전국농민대표자대회	250

26) 농가부채 완전해결 수입개방 결사반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광주시농민대회(700명 참석),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해결 WTO수입개방 반대 담양군농민대회(50명 참석), 농가부채 완전해결 WTO수입개방 결사저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나주농민대회(400명 참석), 99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진도군농민대회(진도읍 천마광장, 700여명 참석).

27) 고흥, 곡성, 광주,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순천, 장흥, 진도, 해남, 화순, 함평.

농업재해보상투쟁의 경우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진한 대책에 항의하였다. 또한 출수기의 계속된 비로 인해 목도열병 피해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고흥, 해남, 진도, 장흥, 나주, 보성군농민회를 중심으로 도단위의 '목도열병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준비하였으며, 특히 해남군농민회가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남군농민회에서 군청을 방문하여 피해조사를 건의하고 군, 농업기술센터, 농민회가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전남도에서 피해지역 조사에 나섰다. 농민회는 군청항의방문, 군청앞 벚짚쌓기 시위 등을 벌였고, 장흥과 해남에서도 보상요구 집회와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결국은 군단위를 넘어 농림부와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질의서를 보내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해를 넘겨 2000년 1월 19일에는 상경투쟁까지 벌였다. 이러한 투쟁은 김대중정권의 대선공약이행 촉구투쟁, 이후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표-8〉 1999년 해남농민들의 목도열병피해보상투쟁

일시	투쟁내용	비고
9월22일	해남군농민회 군청 방문 (피해조사 건의/ 표본조사 합의)	
9월27일	해남군농민회 목도열병 피해지역 표본조사 (군, 농업기술센터, 농민회 합동)	
10월 4일	전남도에서 목도열병 피해지역 조사 실시	
10월 6일	해남군농민회 목도열병 피해 보상요구 해남군청 항의 방문 (11시, 해남군청앞) 군청앞 벚짚 쌓기 시위 (14개 읍면 대자보, 프랑카드 부착)	
10월 7일	목도열병 피해 보상과 농업재해보상법제정을 위한 나주농민대회 (11시, 나주시청 앞)	나주
10월29일	해남군농민회 군청 항의방문, 피해보상 촉구	
11월11일	장흥군농민회 목도열병 피해보상요구 집회 및 농성 (식발)	장흥
11월17일	농림부, 김봉호 의원, 해남군, 해남군의회에 공개 질의서 제출	
11월23일	해남군농민회의 질의서에 대해 농림부로부터 회신이 올	
11월25일	도열병 피해보상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해남군농민대회 (해남군청 앞, 700여명 참석)	
11월26일	해남군농민회 목도열병 피해보상 요구 해남군청 앞 천막농성 시작	
11월27일	해남군농민회 농림부장관, 김봉호 의원에게 2차 질의서 발송	
12월 3일	목도열병 피해보상대책위 회의 (2시, 해남군농민회 농성장)	
1월19일	해남군농민회 목도열병 피해보상투쟁 상경투쟁 진행	2000년

그 외에도 3월에 광주시농민회 대촌지회에서 봄배추가격폭락 보상투쟁을 벌였다. 총1만평을 트랙터 로타리로 갈아엎어 가며 보상을 요구하여 보상을 받아냈다.

(2) 조직활동

나주 봉황면지회의 재건, 곡성 검면지회, 해남 화산면지회, 황산면지회, 보성의 문덕면지회, 문내면지회, 광주시농민회의 임곡지회 등이 재건 또는 창립되었다. 그리고 구례의 구례군민연합과 순천 민단협, 그리고 나주농민회의 지역 사업에 대한 고민 등이 있었다. 즉 투쟁의 과정 속에서 각급단위 농민회가 지역전선운동을 고민해 나갔다. 그러나 운동조직을 유지하는데서 재정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이것은 단순히 재정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 조직의 생존, 존폐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났다.

(3) 교육활동

전남지역 농민들은 전농 중앙의 여러 교육, 토론회, 수련회 등에 참가하였다. 토론회나 교육은 협동조합개혁 관련된 토론회, 공청회, 교육이었고, 4번의 수련회가 있었다. ·

전농 광주전남연맹의 교육으로는 4월 19일 나주축협에서 열린 협동조합 교육이 있었다. 86명이 참석하여 ‘한국협동조합의 현황과 개혁방안’, ‘회원조합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하였다. 그리고 고문단 · 운영위원 단합대회, 가족전진대회, 대토론회 등을 조직하였고 4일간에 걸친 ‘농민희망학교’를 운영하였다. 또한 광주전남연합 주최의 민족간부학교(광주, 나주, 곡성, 순천, 화순 등 5개 지역에서 15명의 회원 참가) 등에 농민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시군농민회의 교육활동으로는, 협동조합 교육(해남, 담양, 광주)이 있었고 여러 시군농민회나 지회에서 협동조합개혁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7-8월에는 수련회를 통하여 단합을 다지기도 하였다(나주농민회, 나주농사청년회, 해남군농민회, 고흥군농민회). 또한 운동의 대중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 노력으로 8월 20일 광주전남연합 가족전진대회(구례 섬진강 솔밭)를 열어 1천여 명의 활동가, 회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었다. 또한 광주전남연합 회장단, 고문단 연수를 통해 운동의 지평을 넓혀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순천군농민회의 민족간부학교(순천회원 20명 참석), 화순군 농민회의 희망학교 등이 진행되었다. 화순군농민회의 컴퓨터교육과 광주시농민회와 화순군농민회의 풍물교육 등 현장 농민들의 정서와 요구를 반영한 대중교육사업이 개발되었다.

(4) 연대활동

봄농활(4월 28일-5월 9일)은 12개 시군농민회, 101개 마을에서 1,9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여름농활(6월 26일-7월 3일)은 12개 시군농민회, 82개 마을에서 8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각 농활에서 농활신문 10,000장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10월에는 주말농활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여름농활을 끝내면서 농민, 학생, 노동자가 7월 3일 광주역광장에서 공동투쟁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구례에서 농촌활동을 실행한 학생들의 경우 교육농활, 일일대학 체험 등의 다양한 형식들을 모색하였다. 또한 국민농활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²⁸⁾

기타 각종 결의대회나 기자회견, 민중대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통일한마당 행사(순천, 나주, 광주)를 하거나 초청강연회를 개최(해남)하였으며 범민족대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4.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 연합회)의 활동

가농은 전농의 창립(1990.4.24.)과 더불어 그간 25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그간의 정치투쟁노선을 변경하여 대안운동으로서 농업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공동체 운동과 도농연대 교류를 개척한 '한살림운동', UR돌풍 속에서 농업 농촌을 살기위한 실천대안운동으로서 '우리밀살리기운동', 나아가 범교회적 참여를 이끌어낸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등을 펼쳐나갔다.

연도별로 구체적인 운동 내용을 살펴보자.

1) 1990년

가농은 전국 단위에서 새로운 운동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 준비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가농활동을 전농체제로 바꾸는데 대해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당시 가농 지도부는 현장의 이견을 듣고 농민운동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²⁹⁾ 가농 전남연합회는 3월 9-10일에 대의원총회를 열어 1990년의 활동목표를 '생명운동과 공동체적 삶의 실천, 생명, 공동체운동의 조직적 실천토대 구축, 전체 농민운동과 올바른 관계정립'으로 정하였다.

가농은 조직체계를 '전국본부-도연합회-군협의회-마을(공소)분회'에서 '전국본부-교구연합회-본당-마을생활공동체'로 바꾸었다. 전남은 '가농 전남연합회'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³⁰⁾ 가농은 새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위원회(생활공동체, 유기농업, 유통사업, 농민사목, 생활건강, 여성활동위원회 등 6개) 체제를 가동하였는데 전남의 경우 생활건강위원회와 유기농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장 조직의 구성원 대다수가 전농조직에 흡수되어 위원회

28) 5월 29-30일, 광주시 동곡, 삼도, 임곡지역 : 참석단체-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연합, 6월 19-20일, 순천시 월등면 당산마을(20명 참가) : 참여단체-한고을노동자회, 순천청년회, 두엄자리.

29)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1966-1996』(서울, 1999), 165쪽.

30) 1994년 정기총회에서 '가농 광주대교구연합회'로 바꾸었다.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³¹⁾ 지도신부와 지도수녀가 있었고 여성간사를 두기도 하였다. 1990년대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 연합회 회장단과 지도신부, 지도수녀 상황은 <표-9>와 같다.

<표-9> 1990년대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의장단 및 지도신부·수녀

연도 직위	회장	부회장	총무	여성간사	지도신부	지도수녀
1990	백남기	위익환 이현철	최강은	채행자	김승휘	노혜레나
1991				김향	이재휘	
1992	이은열	김상욱				
1993						
1994	이상효	백종덕				
1995		박길옥				
1996	박길옥	김영채				
1997						
1998	배삼태	김부일		최민석	이진영	
1999						

1990년 이전에 가농은 광주·전남의 23개 시·군 지역에서 19개 지역에 회원이 산재하여 활동하였고, 11개 군에 걸쳐 군 조직(협의회)이 활동해 왔다. 1990년 전농 결성 이후 가농군협의회가 군농민회로 통합 개편된 이후 영광 등 4개 지역에서 가농조직이 개편되었다. 연합회 단위의 회의는 이루어졌으나 군단위 조직의 회의는 영광에서만 이루어졌다. 회원연수와 임원연수가 이루어졌고 전농과 분리하여 운동을 전개하는데서 어려움이 논의되었고,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에 대한 강조와 학습이 이루어졌다. 일부 선배활동가들이 전농의 군농민회는 물론 가농에서조차 운동 일선에서 물러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활동은 생명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토론을 했고, 활동가들이 한살림연수회에 참가하였다. 12월 1-2일에는 북동성당에서 도시-농촌 직거래장터를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12월 5일 화순천주교회에서 열린 추수감사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을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 건설을 향해 총매진하자!' 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1) 회장단은 1989년에 선출된 임원들이 1991년까지 계속하였다. 1990년 들어 총무만 바뀌었다.

2) 1991년

UR농산물협상은 쌀개방을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쌀수매가 보장과 미국쌀 수입저지 등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전남에서는 핵발전소건설예정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고조되었다. 또한 각종 먹거리 및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골프장건설 등 반생명적 요소들이 부각되었다. 전남연합회에서는 전년도 활동목표에 '도시소비자 공동체의 지속적 조직화' 항목을 추가하였다.

전남지역의 가농활동을 보면, 영광지역에서 가장 먼저 새 운동으로 전환하여 기존 입석분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력을 보였으며 미맥가공공장을 운영하였다. 나주와 진도는 실행위원들을 선출하는 등 활동을 해 나갈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활동이 미미하였다. 각 지역별로 1개 이상의 생활협동반(생산자공동체)을 만들어 마을조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였으나, 보성 웅치와 해남 황산 등에서 활동이 시작되는데 불과하였다. 1990년에 이어 생명과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살림꾼 배움교실'을 열어 이를 계기로 소모임 '되살이' 공동체가 조직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당별로 소모임이 결성되어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바자회, 시민장터, 선물상품 판매 등을 계기로 유통사업의 경험을 쌓아 갔다.

가농은 1990년부터 시작된 우리밀살리기운동을 전국 차원의 국민생활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전남연합회도 사라져 가는 밀밭을 되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자는 측면에서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벌이는 우리밀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특히 모금운동을 전개하면서 가농회원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교회지도자, 교사, 주부, 의료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많은 수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1991년에 파종량은 3,750kg였으며, 구례, 보성, 진도 등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이밖에 영광, 함평, 무안, 곡성, 장흥, 해남, 나주, 장성지역 등에서도 우리밀을 재배하였다.

3) 1992년

가농은 3년간 생명공동체운동을 해 오면서 반성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하였다. 전남연합회는 2월의 대의원총회에서 1992년 중점목표를 '책임 있는 생산자 육성관리, 생명공동체운동의 조직적 실천토대 구축, 튼튼한 유통체계 기초 확립, 우리밀 생산 책임 등으로 정하였다. 좀더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조직형태는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적 행동의 돌출로 조직원들 간에 충돌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새로운 운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무진이 유통사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생명공동체운동에서 유기농업이 중요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통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고리를 도농직거래에서 찾고자 하였다. 광주, 목포, 순천 지역의 도시 본당에 생명공동체운동과 우리밀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나갔다. 구체적으로는 직매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 되살이'를 개설하고, 이어서 되살이 소비자모임을 구성하고 소비자공동체에 주문공급을 시작하였다. 광주(임동성당 안)에 이어 목포, 순천 되살이가 차례로 문을 열면서 소비자조직과 함께 직거래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가농운동의 실천적 대안운동으로 전개된 우리밀살리기운동은 1992년에 7,000가마(1가마당 40Kg)를 수확하여 1차년도 생산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수확과 수매, 가공사업 등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회원가입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점차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밀 제1공장(구례)이 10월에 완공되었다. 1992년에 생산된 밀은 전량 수매되어 구례공장에서 제분되어 우리밀살리기 회원과 소비자에게 공급되었다. 또한 우리밀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생산자들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전국 우리밀생산자위원회'가 12월에 결성되었다. 전국적으로 20만평의 경지에 밀을 재배했으며 전남지방에서는 구례 6만평³²⁾을 비롯하여 보성, 진도, 영광, 곡성, 함평, 무안, 나주, 해남 등지에서 모두 7만평의 밀을 재배, 1,000가마를 수확하였다. 한편 농촌생산자와 도시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밀밭 밭기행사가 구례(2월 19일)와 보성(2월 24일)에서 펼쳐졌다. 그리고 목포에 '우리밀지부'가 건설되었다.

4) 1993년

문민(김영삼)정부의 농업안인 '신농정'은 국제경쟁력만을 목표로 삼아 농업농촌의 현실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였고, 장마와 냉해에다 UR타결(쌀과 기초농산물 개방)로 농민대중은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생명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각지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진도의 야채, 영광의 우리밀주조공장, 무안·구례의 우리밀 가공, 곡성의 두부, 함평의 공동퇴비장 등)이 일정정도 성과를 가져왔다. 그와 더불어 생명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현장교육이 요청되었으며, 연합회 단위의 마을교육(5회)이 함평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유기농교육과 군단위 우리밀생산자교육이 있었고 되살이 회원들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생명공동체운동 연수회 등이 있었다.

우리밀살리기운동은 가농운동의 활로를 개척하는 중심사업으로서 역할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 전국적으로 3만4천가마를 수매하였으며 전국 88곳에 직매장이 설치되었다. 전남지역은 이상기온에 의한 가을 날씨 탓에 계획한 파종면적(200만평)에 약간 못 미치는 160만평에 파종하였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1993년에 전남 5개군에 생산자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활동은 미비하였다. 1992년에 준공된

32) 대표적인 집단재배지역으로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지역은 13농가에서 6만평의 밀을 파종하였다.

구례공장에 이어 무안에 제2가공공장이 준공되었다(1996년까지 가동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 목포, 순천 등 3개 권역과 매장으로 나뉘어진 유통사업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각 권역별 대표로 되살이생산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회원들의 조직적인 유기농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유기농업 교육을 통해 함평 학다리의 월호리에 새로운 생활협동반이 만들어 졌다. 5월 3일에는 되살이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신선한 물품공급을 위해 냉장차량을 구입하였다. 이어서 광주, 순천, 목포 3권역 되살이 모임을 갖는 등 월1회 공동체 조장모임과 동(구역) 대표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무공해 비누공장 견학과 소비자 회원 교육 및 되살이 소개 교육을 30여회 실시하였다. 되살이 공동체의 자체 소식지를 발행하였고, 지역신문 등 언론의 협조로 20여 차례에 걸쳐 되살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조직한 결과, 1993년 8월말에는 소비자공동체 35개, 회원 500여 세대, 출자금 1천여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국면을 맞아 가농은 천주교 안에 농업회생 의지를 촉발시키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광주대교구도 쌀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기도회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가농의 대응활동은 특히 천주교를 중심으로 농업보호와 회생에 대한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켜, 이후 '우리농촌살리기운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5) 1994년

1994년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93년 말 타결)에 따른 쌀의 일부 수입과 WTO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1995년을 한 해 앞두고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 시기였다. 이에 가농은 생명공동체운동을 여전히 추진하면서도 농업의 존속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전남연합회는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가농 전남연합회'에서 '가농 광주대교구연합회'로 변경하였다. 다른 지역의 가농 조직은 이미 1990년부터 각 교구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었었는데 전남지역만 바꾸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1990년 전농 결성 이전까지 가농이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던 것을 천주교회 중심으로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교회중심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해부터 대사회적인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물론 농민운동의 지역적 기반은 전농에 있었지만 전농이 포괄하지 않는 천주교회를 기반으로 대사회적인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가 6월 29일에 결성되고 서울, 부산 등 4대 교구에서 교구본부가 창립되어 교육훈련, 물류센터 개설, 직매장 운영 등의 구체적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주교구연합회에서는 더디게 진척되어, 1995년 창립을 목표로 광주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광주교구에서는 되살이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체계를 함평-광주, 진도-목포, 보성·고흥-순천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연합회 산하에 유통사업단 구성을 추진하였다. 2년간 무상임대료 사용해오던 임동성당 안에 있던 되살이 매장을 4월 학운동성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9월에 살레시오수도원으로 이전하였다.

우리밀살리기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1994년 5월 전국적으로 회원수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출자금은 25억원을 넘어섰고 재배면적도 800만평으로 늘어났다. 구례와 무안에 이어 아산에 제3 제분공장이 추진되었고, 제품도 더욱 다양화되어 우리밀 라면과 2분도 통밀빵 등 가공제품이 새로이 생산 공급되었다. 또한 현장의 농민회원들도 기존의 제분공장에 이어 과자 등 다양한 현장 가공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주대교구연합회에서는 생산자 조직을 몇 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구성하였다. 생산자조직은 주로 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협동체의 형태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영광에 2개(우리밀 영농조합법인, 우리밀생산자 작목반), 함평에 3개(한우, 야채, 잡곡), 무안 1개(우리밀), 장흥(위탁영농회사), 보성·고흥(보고영농조합법인), 곡성(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조직하여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장흥 관산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작목반과 시범단지를 운영하였고, 함평의 잡곡영농조합은 두부를 공동생산 판매하였고, 영광의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우리밀 증류수 공장을 만들어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6) 1995년

1995년은 WTO체제가 본격 가동된 해로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시기이다. 또한 이 해는 4대 지방선거가 있어, 가농회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참여에 적극적인 모색과 진출이 있기도 하였다.

1994년에 이어 교회의 홍보매체(평화신문)와 주교회의 등을 통해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대중의 인식제고에 힘썼으며 ‘농민주일’을 제정하였다. 광주·전남에서는 4월 1일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광주대교구 본부를 결성하고 소비자교육과 조직, 도농직거래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리농학교를 성당에서 열어 도시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영농조합,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등 많은 생산자협동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협동체들을 기반으로 유기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되살이’ 운동은 계속되었다. 1995년 당시 광주, 목포, 순천으로 나뉘어 이루어지던³³⁾ 되살이를 물류업무의

33) 통합 직전 실태를 보면, 광주되살이(출자 소비자회원 320명, 공동체 13개, 매출액 1,300만원), 목포되살이(출자 소비자회

단일화 등 몇 가지 이유로 5월 4일 통합되었다. 사무국을 두어 실무자가 상근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우리밀살리기운동은 수입개방과 가농 조직의 침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다. 5월에 이미 회원 15만 2천명에 달했으며, 가공유통부문에서도 우리밀 고추장 등 우리밀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 시판되었다. 한편 1995년 수매량³⁴⁾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수매량의 적정소비를 위해 식당 택배 및 칼국수 대리점 모집 등 다양한 소비처 확보에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밀살리기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우리밀 잔치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7) 1996년

1996년은 WTO체제 출범 이후 OECD 가입 등을 통한 세계화 개방화 정책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있어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온 해였다. 이에 따라 농업과 농촌마저도 완전 국제경쟁체제에 편입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재해가 심각하였다.

가농의 활동영역은 가농과 우리농, 되살이, 우리밀 등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 실무인력의 업무과다로 현장 조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대교구연합회는 3월 20일 광주가톨릭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가지고 임원들을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 3년차를 맞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7월 셋째주일을 '농민주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구에 우리농본부가 창립되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주관으로 제2기 우리농학교가 4월 30일~5월 2일(3일간) 광주가톨릭센터 703호에서 열렸다. 교육은 생명운동과 생활공동체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96년 가농운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귀농운동본부의 출범과 귀농학교 운영이다. 우리농에서는 26개 단체와 귀농희망자들을 포함하는 '귀농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귀농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998년이 되어서야 제1기 귀농학교가 개설되었으며, 우리농 광주대교구본부 주관으로 매년 한차례 '귀농학교'를 운영하였다.

회원들의 마을과 지역단위에 생산자 협동체,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한 활동계획은 몇몇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생산자 단체 구성으로 나타났을 뿐이었다.

그동안 확장되어 온 우리밀살리기운동은 1996년에 들어 전면적인 조정기를 맞이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제5차 대의원총회에서는 향후 1-2년 동안 재배면적 동결과 함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면적 조정기'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밀운동은 1991년 운동본부 출범 이후 4년 9개월 동안 회원 15만7천명, 재배면적 1천1백만 평이 될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원 229명, 공동체 5개, 매출액 700만원), 순천되살이(출자 소비자회원 80명, 공동체 5개, 매출액 700만원)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4) 재배면적 350만평에 10만 가마의 밀을 수매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1-2년 동안의 조정기에는 재배면적의 확대보다는 우리밀 품질과 가격경쟁력향상에 중점을 두어, 우리밀 가격을 수입밀 가격대비 2배 수준까지 낮추어 우리밀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를 증가시키고 재배면적 확대로까지 연계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되살이 운동은 직매장을 운영하며 상근하는 살림지기들이 있고 농촌에는 농사를 짓는 여름지기들이 있다. 1996년에는 고흥되살이 여름지기들의 보고영농조합에서는 5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단지'를 착공(총공사비 약 2억8천만 원)하였다. 되살이교육(동부)과 본당교육(여수 문수동, 여천 선원동) 등을 하고 본당교육에서는 공동체를 만들거나 본당단위 되살이회의를 구성하였다. 여름에는 광주교구 여름지기들의 하계연수회를 갖고 12월에는 여름지기와 살림지기들이 추수감사제에 참여하였다.

8) 1997년

우리농촌살리기(우리농)운동에서 1997년은 생협을 만들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광주교구연합회에서는 본당(5개) 단위로 생협을 만들기로 하고 준비하였는데, 우산동 살림지기 생협과 임동 숲고을 생협 2개가 만들어졌다. 생협의 창립과정을 보면, 전 신자를 대상으로 미사강론을 통해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도·농공동체 운동'을 설명하고, 이후 레지오³⁵⁾ 전 단원을 대상으로 VTR(수입농산물)상영과 우리농운동에 대한 강의를 하고, 반장교육을 실시하고, 각 20명씩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이어 생산지 방문과 발기인 집중교육을 하고 창립하는 순이었다.

각 생협 이사회가 매달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농운동의 소개 차원의 교육과 발기인 교육 등을 통해 생협의 전반적인 내용과 결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생협과 마을의 도농결연은 다양한 방식(우산동 여름자연학교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미비하였다. 우리농의 교육활동은 생협 창립을 위한 신자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9) 1998년

1998년은 IMF 시대의 본격적인 여파가 한해 동안 전 국민들을 움츠리게 하고 전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된 한해였다. 특히 농업분야는 전반적인 소비정책의 위축과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농자재 값과 유가의 상승으로 곳곳에서 영농포기와 야반도주 사태가 일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 설상가상으로 엘니뇨현상에 의한 기상조건의 악화는 영농일정의 차질과 생산량의 감소 및 농산물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특히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농업부분의 전반적인 개혁희생의 희망을 기대했던 농민들에게 농가부채 경감조치 등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환경농업육성법의

35) 레지오 마리아에, 평신도 사도직,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제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회원총회(2월 26일)를 통해 신입회장단을 꾸린 광주교구연합회는 생명공동체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하였다. 전국본부차원의 생산자교육에 중심활동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교육이수증을 받았다. 또한 하계연수회와 외부위탁교육(자연농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의식함양에도 노력하였다. 인근지역의 성당(영광, 해남 등)을 돌면서 생명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화와 생명운동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1998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를 통해 농민들과 귀농자에게 생명운동의 뜻과 생명농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³⁶⁾ 생태귀농학교는 생명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였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주최로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 연합회가 주관하였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과 회의를 통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함평, 진도, 고흥에서 회의(주례회의, 월례회의)가 정례화되었다. 그리고 개별회원들은 산재한 채로 있었고 군협의회 체계가 잘 구성되지 않아, 실제 활동에서는 '연합회-군협의회-분회' 체계가 아닌 '연합회-회원' 체계 또는 '연합회-생활협동체' 체계로 움직였다. 회의 활동이 활발해 졌으며 특히 생활협동반 회의가 활성화되었다. 생명농업과 자연농업에 대한 교육, 하계연수회, 마을교육 등이 실시되었으며, 오리농기, 풍년기원제, 생산지방문 및 일손돕기, 농민주일 행사, 도농공동체 나눔잔치 등 행사를 많이 치루었다. 이런 일상활동과 생명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9월 15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농가부채탕감 전국농민대회(전농 주도)'에 참가하였다. 이처럼 가농회원들도 우리농운동이나 생명운동 뿐만 아니라 대정부투쟁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1998년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우리농 마을과 우리농 생협의 사례 창출 및 연대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농마을 3곳(함평 월호리, 진도 신동, 고흥 대서)을 지정하여 그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농 교구생산자위원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교구본부의 물류사업을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기로 하였다. 생협으로는 3월 8일에 광주 월산동성당에 달피생협이, 8월 28일에 치평동성당에 평화마을생협이 창립되었다.

소비자와 생협의 연대구축과 관련해서는, 생산 작목 및 품목별 출하량에 대한 완벽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오리쌀계약(124가마) 등을 통해 선수금제도와 계약량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동 숲고를 생협, 우산동 살리지기 생협, 되살이소공동체 등 3개의 공동체로 시작한 생협(소비자)대표자회의가 연간 열 번에 걸쳐 열렸으며 새로 생협이 생긴 곳과 생협을 준비하는 곳에서도 열렸다.

36) 1998년 5월 26일 광주전남 생태 귀농학교 1기 수료식이 있었다.(32명 수료).

10) 1999년

1999년에는 IMF경제한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농민들은 농가부채문제에 시달려야 했으며 협동조합 개혁을 둘러싸고 농민단체들이 양대진영으로 갈라져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11월말에는 WTO뉴라운드협상이 시작되어 농산물추가개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의 붕괴 우려를 낳게 했다.

가농과 관련해서는 3월의 주교회에서 상임 전국지도신부제의 폐지와 전국본부의 협의체 운영이 결정되었다. 전국 상임지도신부 대신 지도신부단 대표체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가농 전국본부는 각 교구본부의 협의체로서 전국 사무국을 존속시키게 되었다.

한편 농민회의 숙원사업인 농민회관 건립추진계획은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³⁷⁾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생산자 조직의 위상 격하는 조직적 과제 실천에 큰 문제였다. 분회체계(생활협동반)의 확립과 군 협의회 구축을 활동의 방향으로 설정했음에도 단 하나의 분회도 늘어나지 않았다. 1989년 5월까지 회원가입 농민이 많았지만 전농으로 통합되어 가면서 1989년 중반부터 1991년까지 신규가입 회원은 없었다. 1992년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용호마을의 4명이 회원으로 신규가입하였고, 1997년에 4명, 1999년에 1명 등 신규가입하는 회원이 별로 없었다. 물론 2001년 이후 회원가입이 늘어난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생활공동체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귀농학교 등을 통해 새로운 회원을 발굴해 냈으며, 기존회원과 새로운 교육(귀농학교 등)을 통해 발굴된 회원들의 유기적 결합을 이루어내려고 하였다. 각급교육 및 회의의 정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개인과제 실천과 공동과제 개발 등 조직적 회합은 미흡하였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확산일로에 있었다. 광주대교구연합회에서는 그동안 도시분당의 각종 모임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과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생명공동체운동에 대한 교육과 본당생활공동체 조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러한 활동 위에서 소공동체(출자)로서 광주되살이(92.5), 동부되살이(93.5) 그리고 직영나눔터인 학운동생활공동체(95.5)와 본당생협(출자)으로는 살림지기 생활공동체(97.5 광주 우산동), 숲고을생활공동체(97.7 광주 임동), 달피생활공동체(98.3 광주 월산동), 평화마을생활공동체(98.8 광주 치평동), 운암골생활공동체(99.4 광주 운암동), 늘푸른생활공동체(99.7 북동), 산수동공동체(99.9) 등이 만들어져 10여개가 활동해 왔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도시생활공동체 모형(우리농생협, 소공동체)으로 시도되었다. 더 나아가 소비자대표자회의를 통해 조직적 결정과 운동의 원칙을 맞추어 나가게 되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37) 8월 25일, 준비위 구성원은 배삼태, 최강은, 최민석 신부, 양혁.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우리농 운영위(생산자 5명, 소비자 5명)를 구성해 냈다.

1998년에 124가마의 오리쌀 계약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에는 250가마를 계약하였으며, 함평의 오리쌀은 안정적인 생산, 소비 및 계약관계를 갖추어 갔다. 도시생활공동체의 확산과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은 소비자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각종 교류프로그램 실시로 연인원 1,000여명의 소비자가 행사(풍년기원제, 추수감사제)에 참여하거나 일손돕기, 생산지견학 등을 통해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였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한 함평 월호리의 풍년기원제 행사는 함평군까지 함께 하여 지역농업의 한 모형(친환경농업 시범지구)을 만들게 되었다. 상시적 일손돕기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일손돕기와 생산현장견학(영광 유정란 생산지, 제주 감귤농장, 곡성 닭·포도농장 등)을 통해 연인원 500여명이 상시적으로 생산지를 견학하고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특히 1999년 여름의 수해피해 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곡성 닭농장)을 방문하여 수해복구 및 수해성금 모금에 참여하였다.

더욱이 1999년에는 전국단위의 선진견학(일본연수)을 광주교구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전국의 우리농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다녀왔으며, 본부 회계 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생산량과 소비량의 예측을 통해 계약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전담 사제(최민석 신부)와 수녀가 배치(이진영 수녀, 사랑의 씨튼 수녀회)되어 되살이 소공동체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여,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의 운영위원회가 동대표 체계에서 조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광주 인근지역에서는 곡성과 영광 등 2곳에서 물류사업과 사안에 따라 행사참여 위주지만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고, 여수·순천지역은 순천 저전동에 생활공동체가 생겨났지만 지역적인 문제로 상시적인 교류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연대활동으로는 다양해진 환경관련 활동에 연대하였고, 전남지역 귀농학교를 주관하였으며, 농촌활동으로는 가톨릭대학연합과 가톨릭청년회의 농활학교와 농활, 신학생과 노틀담수녀회 등의 우리농 생산지 대상의 농촌활동이 있었다.

가농은 점차 농정활동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아직 농정 현안 대책(부채, 의보통합 등)에 대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에 그쳤다. 그리고 전조직적인 중심과제로 설정되었던 직접지불제 실시 및 확대운동은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서명자 중에 소비자가 많았다. 그래도 농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맺는말

1990년대 전남지역의 농민운동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광주전남연맹)의 주도 아래 각시군농민회가 벌인 다양한 투쟁들로 넘쳐났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각 시군농민회에서 버스를 동원하여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상경투쟁을 벌였고,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나 시위에도 수십, 수백명씩 결집하였다. 더욱이 각 시군지역에서 정부정책이나 UR협정에 대한 반대 및 재협상요구, 비준반대 투쟁, 그리고 시청, 군청이나 농협군지부 등을 향한 각종 농성, 집회, 차량시위, 야적투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각 면지회, 마을분회에서 뛰쳐나와 시군농민회 단위로 도청과 서울을 향한 결집투쟁을 벌였다. 아마도 갑오농민전쟁 때 보다도 더 광범하고 조직적이고 투쟁적인 봉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전농의 활동은 전지구적 자본의 침략과 그에 부응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이었다. 1990년대 전농 전남도연맹과 각 시군농민회를 축으로 한 농민운동은 1980년대의 산발적이고 자생적인 운동보다는 전농의 지휘 아래 조직적이고 순차적이며 동시다발적인 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운동은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지구적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농의 이러한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통일된 운동과 더불어 1980년대에 주요 운동세력이었던 기독교농민회는 이미 1988년부터 전체운동에 통합되었고 결국은 전농에 급속히 통합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기독교농민회는 이름만 유지하였고 교회 단위의 목회자 중심 활동에 머물렀다.

가톨릭농민회도 1990년대 초반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천주교회를 기반으로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 연합회는 우리밀살리기운동,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생명공동체운동 등을 향해 다양한 대안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전농이 투쟁활동에 집중하였다면 가농은 농민들의 일상에 접근하면서 도농직거래운동, 생명운동 등 다양한 대안적인 실험들을 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귀농운동까지 벌이면서 가농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점차 전농의 운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전농의 운동방향을 증식시키도록 하고 있다. 전농이 경직될 때 가농이 오히려 유연하고 활성화되어 왔다.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전국단위에서는 가농이 나서서 전농과 다른 농민단체(예를 들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이를 중재하면서 농민단체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해 왔다.

참고문헌

- 가톨릭농민회 광주연합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광주본부 · 천주교광주교구 농민사목, 「한국가톨릭 농민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40년사, 1-2」(가톨릭농민회 광주연합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광주본부 · 천주교광주교구 농민사목, 2013).
- 김철규, 「한국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운동담론의 변화」, 『경제와 사회』34 (한울, 1997), 67-90쪽.
- 농민문제연구소, 「일어서는 농민 1-6호」(광주, 1991-1992).
- 윤수중,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형성과 도전」, 『농촌사회』 20-1 (농촌사회학회, 2010), 47-87쪽.
- 윤수중, 「농민운동의 전개와 새로운 과제」, 『농민과 사회』15 (농어촌사회연구소, 1997), 34-46쪽.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대의원대회 자료집 1999-2000」, (광주, 1999-2000).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대의원대회 자료집 1991-1998」, (광주, 1991-1998).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각군 농민회 소식 1,2,3호」, (광주, 1993).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농민전망대 1-9호」, (광주, 1992-1996).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라남도연맹 준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라남도연맹결성대회」, (광주, 1990).
- 전농 정책실, 「‘전농’ 결성과 농민운동의 방향」(전농, 1990).
- 정명채 · 민상기 · 최경환, 「주요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89쪽.
-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1966-1996」(서울, 1999).

